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대한지리학회지

Volume 51, Number 3 (Series No. 174), June 2016

Articles

- Assemblage and Its Geographical Implication..... Sook-Jin Kim (311)
- A Critical Study on the Landform Recognition of Daegu City as an Intermontane Basin
..... Jaeha Lee (327)
- An Assessment of the Conservation Status for Coastal Sand Dunes in Incheon: Focused on the Jung gu,
Ongjin gun in IncheonKyoungMoon Park · SungWoo Kim · TaeSun An (345)
- Mapping the Geographic Variations of the Low Birth Weight cases in South Korea:
Bayesian ApproachesYoung-hee Roh · Key-ho Park (367)
- A Study on the Effect of Administrative Districts Separation to the Changes of Population and
Industry in a Region: A Case Study on Goesan-gun and Jeungpyeong-gun, Chungcheongbuk-Do
..... Yeong-Jae Shin (381)
- Changes in the Occupational Structure and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Distribution
in Korea.....So Hyun Park · Keumsook Lee (401)
- Creative Place-making for Regional Development in the Era of Glocalization
.....Byung Min Lee · Kee Bom Nahm (421)
-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Rural Housing in Ulleungdo MountainsJeon Lee (441)
- Re-conceptualization of the Geography Curriculum Towards Global CitizenshipGapcheol Kim (455)



대한지리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제51권 제3호 (통권 174호) 2016. 6

논문

- 이상블라주의 개념과 지리학적 함의..... 김숙진 (311)
- 대구 산간분지 지형 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재하 (327)
- 인천광역시 연안 해안사구 보전현황 평가 연구: 중구, 옹진군을 중심으로
..... 박경문 · 김성우 · 안태선 (345)
- 우리나라 저체중아 출생의 공간적 변동성 지도화: 베이지언적 접근..... 노영희 · 박기호 (367)
- 행정구역 분리가 지역의 인구와 산업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충청북도 괴산군과 증평군을 사례로 신영재 (381)
- 한국 직업구조의 변화와 고용분포의 공간적 특성 박소현 · 이금숙 (401)
-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지역발전을 위한 창조적 장소만들기..... 이병민 · 남기범 (421)
-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 이전 (441)
-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한 지리교육과정의 재개념화 김갑철 (455)



대한지리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Vol. 51, No. 3 June 2016

대한지리학회

아상블라주의 개념과 지리학적 함의

김숙진*

Assemblage and Its Geographical Implication

Sook-Jin Kim*

요약 : 최근 관계적, 물질적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아상블라주라는 개념은 현대 사회공간이론의 가장 친숙한 어휘가 되어가고 있다. 본 논문은 아상블라주 본연의 개념을 탐색하기 위해 먼저 개념의 전체적인 틀과 사유의 방식을 제공한 들뢰즈와 가타리의 작업에 주목한다. 유사개념과의 비교를 통해서 푸코의 장치 개념을 아상블라주의 한 유형으로 봄으로써 아상블라주가 탈영역화뿐만 아니라 (재)영역화라는 두 가지 모두의 성향에 의해 구성됨을 확인하였으며, 관계의 외재성은 아상블라주 이론이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과 같은 다른 형태의 관계적 사고와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상블라주는 분석적 측면에서 형성과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경험주의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고, 정치적 측면에서 아상블라주의 다양체(multiplicity)와 중첩결정에 대한 용인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다수의 정치적 프로젝트, 실천, 결과의 실질적 공존과 새로운 공간적 상상력에 개방적이라는 장점을 가진다.

주요어 : 아상블라주, 관계적, 물질적, 들뢰즈와 가타리, 장치, 행위자연결망 이론, 탈영역화, 재영역화

Abstract : Assemblage has become a popular concept in modern socio-spatial theories with relational and material turns.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concept of assemblage focusing on Deleuze and Guattari. By comparing similar concepts such as Foucault's apparatus and Actor-Network Theory, this article demonstrates that assemblage emphasizes not only deterritorialization but also (re)territorialization, and that the exteriority of relations is a critical aspect that differentiate assemblage from other relational spatial concepts. Assemblage can highlight the value of empiricism as an analytical tool, and be open to new spatial imaginations as well as multiple existences and possibilities of alternative political projects and practices.

Key Words : assemblage, relational, material, Deleuze and Guattari, apparatus, Actor-Network Theory, deterritorialization, (re)territorialization

1. 서론

최근 10여 년간 인문지리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아상블라주(assemblage)라는 개념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네트워크, 환경(millieu), 장치(apparatus), 콜라

주(collage)와 같은 개념과 부분적으로 연결되기도 하면서, 아상블라주라는 개념은 현대 사회공간이론의 가장 친숙한 어휘가 되어가고 있다. 아상블라주라는 용어는 지리학뿐만 아니라 고고학, 생태학, 미술사, 인문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인문지리학 내에서도 학자에 따라 다양한 방식

이 논문은 2013학년도 건국대학교 연구년교원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paper was written as part of Konkuk University's research support program for its faculty on sabbatical leave in 2013).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Geography Department, College of Science, Konkuk University), sjkim@konkuk.ac.kr

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상블라주 개념을 사용하는 연구들은 ‘사회적인 것’을 물질적으로 이중적이며, 실천에 기반하고 있는, 창발적(emergent)이고 과정적인 것으로 재정의하고자 하는 시도에서이다(McFarlane, 2009).

지리학에서의 이상블라주와의 조우는 네트워크적 사유에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적 사유가 자본의 현대적 지위에 의해 모양 지워지기 시작하면서 관계성의 기능적이고 환원적인 버전을 제공하게 되었고, 차후의 주장들이 삶의 자본주의적 관리와 결탁하게 되면서, 많은 연구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덜 획기적이지만 확실한 대안이 되는 이상블라주적 사유는 사회적인 것의 구성과 조직을 좀 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이해함으로써 다른 질문, 이슈, 개입, 정치를 배제하는데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상블라주적 사유는 생명정치, 글로벌 바이러스, 전쟁, 감시, 사회운동, NGOs 등의 다양한 성향들을 단순히 네트워크화된 조직, 연결, 분포의 형태와 동의어로 간주하는 세계화와 자본주의의 담론에 연루되고 있는 네트워크의 인식론적 함의를 바꿔 놓는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상블라주적 사유가 신경과학, 전자공학, 진화생물학과 자가적응형 시스템의 이론들, 양자 물리학과 수학적 모델링, 마케팅과 디지털 자본으로부터 유래한 매우 전문화된 지식에서 나오거나 이들 지식과 합성되었기 때문인데, 이런 모든 지식들은 통상적인 네트워크 개념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다(Dewsbury, 2011; Delanda, 2006). 따라서 이상블라주 관점에서의 사유는 흐름, 연결, 생성(becomings)에 의해 특징 지워지고, 작동 논리가 구조보다는 접혀짐(folds)에, 선형적이기 보다는 더 복잡하고, 변증법적이기 보다는 더 순환적이고, 전체주의적(totalising)이기 보다는 더 창발적이 세계에 모든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관계적 전환(relational turn)과 물질적 전환(material turn)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있는 지리학에서도 이상블라주 개념은 행위자연결망 이론(ANT, Actor-Network Theory)과 함께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언어(language), 재현(representation), 담론(discourse)이 1990년대의 주요 개념이었다면, 이상블라

주, 행위자연결망, 물질성(materiality)은 2000년대의 주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의 결과로서 지리학에서 의미에 대해 심취해 있었다면, 이제 물질성 - 객체, 신체, 물질 - 에 대한 관심으로 다시 방향이 옮겨갔다고 할 수 있다. ‘지리학의 재유물론화(rematerializing geography)’에 대한 요구는 정치지리(Dittmer, 2014; Meehan *et al.*, 2013; Squire, 2015), 페미니스트 지리학(Colls, 2012; Slocum, 2008), 도시지리학(Lees, 2002), 사회문화지리(Jackson, 2000; Whatmore, 2006), 자원지리(Bakker and Bridge, 2006) 또는 GIS(Leszczynski, 2009)와 같은 지리학의 세부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상블라주적 사유는 이러한 물질적인 것, 또는 사회-물질적인 것의 평가 복원에 선두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Muller, 2015). 특히 지리학에서 이상블라주 개념의 도입은 이분법적 존재론에서 관계적 존재론으로의 전환(Castree, 2003)에서 들뢰즈(Deleuze)의 철학을 받아들인 시그널이라 할 수 있다(Dewsbury, 2011).

이상블라주 개념을 적용한 수많은 연구의 홍수 속에서 연구자마다 이상블라주의 개념의 적용범위와 이해하는 방식에 다소간 차이가 있다는 인식하에, 본 논문은 이상블라주 본연의 개념을 탐색하기 위해 먼저 개념의 전체적인 틀과 사유의 방식을 제공한 들뢰즈와 가타리(Deleuze and Guattari)의 작업과 시각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상블라주와 유사한 개념으로 또 다른 포스트구조주의적 접근법 중 하나인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장치(apparatus)개념, 그리고 최근 지리학뿐만 아니라 과학기술학, 사회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유의 방식으로 또 분석적 도구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ANT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이상블라주 개념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탐색 과정 중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경험연구들을 소개하면서 이상블라주가 어떻게 사유의 방식으로 지리학 연구에 공헌을 할 수 있는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상블라주 개념에 천착하기 전 지리학에서 이상블라주의 개념을 도입하게 된 맥락으로서 관계적 전환과 물질적 전환을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2. 관계적 전환, 물질적 전환, 그리고 이상블라주

1) 관계적 전환

이상블라주 개념의 등장과 광범위한 적용은 지리학에서의 관계적 전환과 물질적 전환이라는 큰 흐름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리학에서의 관계적 전환은 공간, 장소, 스케일, 네트워크와 같은 지리학의 중요개념들에 대한 고민과 이론화 작업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유클리드적 기하학에 근거한 절대적 공간관에서는 공간과 그것을 구성하는 물질 또는 사회적 과정은 엄밀히 구분되며(따라서 공간은 독자적이며 이들을 담는 용기에 해당), 물질적 대상들과 사회적 과정은 이 공간에 어떤 작용도 가하지 못하며 그런 의미에서 이 공간은 절대적이다. 이에 반해, 상대적 공간관에서는 공간은 이들을 구성하는 물질 또는 사회적 과정과의 관계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다르게 규정된다(Jones, 2009).

이러한 상대적 공간 개념에 대해 하비(Harvey, 1973)는 일찍이 좀 더 미묘한 구분을 한 바 있다. 오직 대상들이 존재하고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존재한다는 아인슈타인적 상대적 공간 개념과 라이프니츠(Leibniz)의 방식을 따른 관계적 공간이라 명명한 공간개념이 그것이다. 라이프니츠의 방식을 따라 하비는 관계적 공간을 “한 대상이 자기 안의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한에서만 그 대상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런 의미에서 대상들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설명한다(Harvey 1973, 13). 하비가 이러한 관계적 공간 개념을 제안한 이유는 아인슈타인적 상대적 공간 개념은 사회적 현상과 현실의 문제를 설명할 경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착안한 데 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서처럼 물리적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속력(시간)과 질량에 따라 다른 공간이 구성된다는 관점에서는, 공간의 관찰자나 측정자가 준거 틀(예를 들어 비용거리, 시간거리, 수단거리 등)을 달리함으로써 상이한 상대적 위치와 공

간을 나타내게 된다. 즉 다양한 공간의 생산과 구성이 가능한 것이다. 하비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구성되고 이해된 공간들을 일관되게 통합하려 할 때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임동근 역, 2008; 이현재, 2012). 즉, 상대적 공간 개념에서는 원칙적으로 다양한 관계에 따라 상이하게 공간이 구성되지만, 특정 한 가지 관계(다시 말하면, 한 가지 준거 틀)를 선택하는 경우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구성하는 다른 관계들은 배제할 수밖에 없어진다. 그 결과 관찰자 또는 연구자들은 상대적 공간 개념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관계들을 동시에 고려하기가 불가능한 것이다(임동근 역, 2008, 196).

이에 반해, 관계적 공간 개념은 다양하고 복잡한 다수의 관계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임동근 역, 2008).¹⁾ 각각의 모나드(monad, 무엇으로도 나눌 수 없는 궁극적인 실체)가 전 우주를 자기 안에 포함한다는 라이프니츠의 철학처럼, 관계적 공간에서 “한 대상은 자기 안에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를 이미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계적 공간 개념 안에서 행위자의 위치는 하나의 중요한 대표적 관계를 통해 단편적으로 정해지기 보다는 행위자가 관계된 다양한 관계들을 응축하고 있는 지점으로 이해된다(이현재 2012, 236). 예를 들어, 가정이라는 공간은 자본주의 축적체제에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곳이거나 아니면 성적 이분법에 근거한 사적인 혹은 여성의 공간으로 상대적으로, 단편적으로 상징될 것이 아니라, 그 둘 모두가 중첩되어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생성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공간이다(이현재, 2012, 237).

이러한 관계적 공간 개념은 기존의 인본주의 지리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본질주의적 장소 개념에도 균열을 내었다(박배균, 2010). 매시(Massey, 1993; 1997)는 ‘진보적 장소감(progressive sense of place)’과 ‘지구적 장소감(global sense of place)’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장소를 경계가 지워진 고유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장소를 개방적인 것으로 보고 장소 안에서 또는 장소를 통해서 존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실천, 관계의 산물로 볼 것을 역설했다.²⁾ 관계적 공간 개념은 포스트구조주의 학자

들의 연구를 통해 1990년대 후반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천착되었다(박경환, 2014). 특히 쓰리프트(Thrift, 1996; 2004; 2008)의 작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는 사회과학 전반의 문화적 전환과 맞물린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이라는 흐름에서 공간에 대한 관계적 사유를 발전시켰다. 그는 탈근대 페미니스트 학자인 버틀러(Butler, 1990)³⁾의 수행성(performativity) 개념을 정교화 함으로써 비재현적(non-representational) 공간을 사유하였다(Crang and Thrift, 2000; Thrift, 2008). 즉 그는 기존의 역사주의적 발전과 진보 개념, 그리고 사회 현상의 이면에 추상적 구조가 있다고 가정하는 습관을 문제시하며, 어떤 것을 대신하는 이미지가 지로서 ‘재현’을 포기하며 대신 감정과 정동(affect), 실천, 수행에 의해 공간이 생성됨을 주장한다(Thrift, 2004). 쓰리프트의 공간론은 공간에 대한 위상학적 개념으로의 이동을 함의하기도 한다. 사회현상 이면에 있는 것으로 가정되는 추상적 구조의 존재와 행위자와의 이분법적 관계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그에게 거시와 미시, 글로벌과 로컬과 같은 스케일 개념은 문제적이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사회(공간)을 수많은 실천과 비재현적 수행이 형성하는 시공간적 네트워크로 볼 것을 제안한다. 관계적 공간 개념, 위상학적 공간개념으로의 이동은 ANT와 아상블라주적 사유의 등장으로 보다 진일보하는데 이들의 등장은 물질적 전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2) 물질적 전환

198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사회과학 전반의 문화적 전환은 담론과 의미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해석학적, 해체적 접근과 같은 생산적인 방법론을 가져옴과 동시에 지리학적 분석에 새로운 메타포(예를 들어, 언어, 담론, 재현, 텍스트로서의 경관)를 제공하였다. 또한 문화적 전환은 인식론적 사고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사실로 당연시 여기거나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이는 많은 것들(예를 들어 인종이나 젠더)이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생산된 개념으로 실재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것이다(Saldanha, 2007; Robbins and Marks 2010). 이 과정에

서 이러한 구성과정의 부화 장치(인큐베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차별적인 영역 또는 현실의 범주로서 ‘사회적인 것(the social)’은 별개의 자율적인 것으로 다뤄지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당연시 여겨지던 진실의 근원은, 사회적 존재의 해석적 능력 밖에 있는 물질적 영역에서 발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물질적인 것, 인간 이상의 것(more-than-human), 또는 비인간(non-human)의 것은 사회지리학의 분석에서 소거되게 된 것이다(Robbins and Marks, 2010, 178). 그러나 물질적인 것이 인문지리학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포스트구조주의 학자들은 모든 담론들이 제도과 실행에서 구체화됨을 보여줬고(Foucault, 1980), 맑시스트 지리학자와 급진적 실재론자들은 노동과정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강조해왔다(Smith, 1996; 김숙진, 2010; 김숙진, 2006). 이러한 분야에서의 연구들은 물질적 조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 경제적, 사회적 조건들에 대한 기회를 침해하거나 생산하는지 관심을 유지해 왔다. 또한 문화생태학, 정치생태학, 위험연구 같은 분야에서는 토양, 토지 피복, 물의 흐름, 에너지, 폐기물과 같은 비인간 조건들을 이해하기 위한 지속된 노력을 견지해 왔다(Robbins and Marks, 2010, 178; Robbins, 2004). 그러나 이러한 지리학 분야들에서도 자연주의적 설명전략을 탈자연화하려는 시도에서 물질적인 것을 설명에서 분리해 내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more than human’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분야에서조차 자연적 설명은 특정 결과와 지식의 사회적 뿌리를 탐구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자연과사회 연구뿐만 아니라 문화지리, 도시지리, 페미니스트지리 등에서 ‘물질적인 것(the material)’의 부활이 목격되는데 이는 사회역사적 구성에 있어 물질적인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Bakker and Bridge, 2006).⁴⁾ 인간 경험의 본질과 비인간에 의한 상호구성에 대한 지리학적 관심은 사회적 것과 물질적인 것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이라 명명되어 2004년 Environment and Plan-

ning A 특집호(vol.36)로 논의되기도 했다.

이러한 관심은 관계론적 존재론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물질적 관심사에 대한 공간을 만드는 이론적 작업의 급증을 동반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물과 인간, 그리고 물질 존재와 경험이라는 더 넓은 세계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철학적 전통(들뢰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주장한 것처럼 실재의 영역(세계)과 재현의 영역(책), 주관성의 영역(저자)의 삼분법적 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이상블라주는 이러한 각각의 질서로부터 나오는 어떤 다양체(multiplicity) 간의 연결을 구축하는 것이다(Deleuze and Guattari, 1987, 25; Robbins and Marks, 2010, 179에서 재인용).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계속되는 이론적 탐험과 관계론적 지리학에 대한 급증하는 연구 아젠다는 ‘물질적 전환’에 대한 장을 마련했고, ‘more-than-human’ 지리학의 전조가 되었다.⁵⁾ 이러한 접근법은 담론보다는 실천(practice), 의미보다는 정동(affect), 정체성보다는 지식(knowledge)을 강조한다.

3. 이상블라주

1) 들뢰즈-가타리적 이상블라주

이상블라주는 프랑스의 철학자인 들뢰즈와 가타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개념이다. 『앙티오이디푸스(Anti-Oedipus)』(1983)에서는 욕망기계⁶⁾라는 개념에 가려졌지만, 후속작이면서 가장 잘 알려진 『천개의 고원(A Thousand Plateaus)』(1987)에서 개념이 정교화되었다. 들뢰즈는 우리의 존재론적 세계관에서 행위 능력(agency)에 대한 주관적 개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욕망, 영토, 철학, 신체, 이동에 관해서 경계 지워진 사유들을 해체하기 위해 이상블라주라는 개념을 소개했다(Deleuze and Guattari, 1987). 들뢰즈는 이상블라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것은 수많은 이종적 조건으로 구성되는 다양

체(multiplicity)인데 이것은 다양한 특성들—즉 나이, 성, 통치(reigns)—을 가로질러 그들 간의 연결(liaisons), 관계(relations)를 수립한다. 그래서 이상블라주의 유일한 단위는 공동 기능하는 그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공생(symbiosis)이며, 동조(sympathy)이다. 그것은 분파(filiations)라기 보다는 동맹(alliances), 합금(alloy)이며, 세습(successions) 또는 혈통(lines of descent)이 아닌 전염(contagions), 유행병(epidemics), 바람(wind)이다 (Deleuze and Parnet, 1987, 69; Muller, 2015, 28에서 재인용).”

즉, 이상블라주는 이종적인 개체들이 한동안 일을 같이 하도록 정렬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행위능력은 이상블라주의 각 구성원의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무리, 즉 사물의 환경 또는 특정한 배열방식의 것인데, 이들을 통해 작용력과 궤적이 부여되고 변형된다(Bennet, 2005, 461). 들뢰즈와 가타리에게는 미리 결정된 위계가 존재하지 않고, 이상블라주의 이면에 있는 그 어떠한 조직적 원칙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개체들—인간, 동물, 사물, 물질—은 우선 같은 존재론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Muller, 2015). 그러나 그로즈(Grosz 1994, 167)가 언급한 것처럼, ‘세계가 계층이 없고 완전히 평평하다기보다는, 위계가 물질과 물질의 본성과 가치의 결과라기보다는 이질적인 물질들의 조직 방식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상블라주 개념을 좀 더 분석적인 차원에서 보기 위해서는, 4가(tetravalency)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듀스버리(Dewsbury, 2011)는 들뢰즈-가타리적 이상블라주 개념을 어떻게 실행할지 중요한 열쇠는 바로 이 4가 개념을 통해 작업하는 것이라 한다. 4가는 화학과 생물학에서 나온 개념으로 요소나 분자를 결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원자가를 의미하는데, 이상블라주는 이러한 결합의 4가지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기계적 내용물(machinic content), 집합적 표현(collective expression), 영역화(territoriality), 탈역역화(deterritorialization). 이와 같은 4가지 유형의 원자가로 구성된 4가 체계는 두 개의 축을 따라 작동한다. 첫째 축은 신체, 행동, 열망(내용물)이 혼합된 기계적

이상블라주와 행동과 진술(표현)의 언술의 집합적 이상블라주의 그것 사이에 작동하며, 둘째 축은, 영역화를 안정화시키는 분할선(lines of articulation)과 탈영역화의 탈주선(lines of flight)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상블라주 개념은 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설명을 위한 아이디어들의 체계라기보다는 임시적인 분석적 도구였다(Muller, 2015). 들뢰즈와 가타리는 어떤 측면에서도 거대이론을 추구하지는 않은 것이다.⁷⁾ 따라서, 이상블라주는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있다(Dewsbury, 2011, 149).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상블라주의 특징을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Muller, 2015).

1. 이상블라주는 관계적이다. 이상블라주는 새로운 전체를 형성하기 위해 함께 모인 다양한 개체들의 배열이다. 중요한 점은 들뢰즈에게 이상블라주는 외재성의 관계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이것은 대상들(인간, 물체 등)이 그들 간 관계로부터 자율성을 가진다는 것을 함의한다. 둘째, ‘구성부분들의 특성이 전체를 구성하는 관계를 설명하지 않는다’(Delanda, 2006, 10).
2. 이상블라주는 생산적이다. 이상블라주는 새로운 영역적 조직, 새로운 행위, 새로운 표현, 새로운 행위자와 새로운 실체를 생산한다. 이는 이상블라주가 주로 모방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즉 세계에 대한 재현이 아니라는 것이다.
3. 이상블라주는 이종적이다. 이상블라주에는 어떤 것이 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 지배적인 개체가 무엇인지에 관한 추정이 없다. 따라서 자연-문화 이분법을 넘어서는 사회-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Bennett, 2010).
4. 이상블라주는 탈영역화(deterritorialisation)와 재영역화(reterritorialisation)의 역동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탈영역화/재영역화는 이상블라주의 중심 축이다. 이상블라주에서 재영역화되는 가장자리가 안정화되고, 탈영역화의 최첨단이 그것을 휩쓸어 간다(Deleuze and Guattari, 1987, 88). 이상블라주

는 그들이 나타날 때 영역을 설정하고 유지하지만 또한 계속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변형되며, 붕괴된다.

5. 이상블라주는 욕망이다. ‘욕망은 선천적으로 단편적이고 분열된 부분적 개체들을 지속적인 흐름과 연결시킨다(Deleuze and Guattari, 1983, 6). 그래서 이상블라주는 물질적(corporeal) 요소를 갖는다.

이상블라주에 대한 좀 더 섬세한 탐색은 다른 개념들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2) 푸코의 장치(apparatus)개념과의 비교

푸코는 18세기부터 유럽인들에게 권력이 기존의 착취적이고 폭력적인 주권과 극심한 감시와 규율권력의 관례화를 보완하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았다. 여기서 푸코는 근대 사회와 국가는 중요한 사건들(출생, 사망, 추수, 이익, 범죄, 온전한 정신)의 규칙성(regularity)을 통치하고 정상화하는 영역과 같은 공간에 초점을 맞추는 ‘안전장치(apparatus of security)’의 생산자라기보다는 생산물임을 보여준다. 들뢰즈에게 이상블라주처럼, 푸코에게 장치는 동계의 개념들 - 행위(conduct), 제도, 환경(milieu), 레짐(regime), 통치성 - 속에서 나타난다. 그는 이와 같은 근대적 형태가 목회자와 그 행위에 대한 고대의 개념까지 거슬러 올라갈 뿐만 아니라 외교적-군국주의와 넓은 의미의 감시활동의 전통에 까지 미치는 계보를 보여주었다. 특히 후자를 설명하면서 장치라는 용어 대신 이상블라주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세력의 역동성에 기초하여 정의된 정치적 논리를 이행하기 위해, 서양사회는 세력의 합리화에 근거하여 이해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이상블라주를 마련했다. 이 두 가지는 군사적-외교 장치와 경찰 장치이다(Foucault, 2007, 296; Legg, 2011, 129-130에서 재인용).”

이상블라주와 장치의 애매모호한 혼용은 그 다음의 강의⁸⁾에서도 계속되는데, 외교와 전문적 군대를

첫 번째 기술적 아상블라주라고 일컫는데 대해, ‘경찰’을 국가 이성에 따른 새 통치술로서 두 번째 기술적 아상블라주로 묘사한 것이 그것이다. 레그(Legg, 2011)에 따르면, 푸코는 아상블라주라는 용어를 체계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번역과 연구 심포지엄 등을 통한 들뢰즈와의 협업으로 몇몇 용어와 개념들을 받아들였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장치와 아상블라주는 같은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한 것인가? 달리 표현하자면 장치를 앞 절에서 살펴본 아상블라주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푸코가 아상블라주를 사용한 예를 보면, 흔히 그렇듯 탈영역화 또는 불안정화의 사건 또는 과정을 가리키기 위해 아상블라주를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장치와 아상블라주는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가?

레그(2011)는 아감벤(Agamben)과 들뢰즈가 푸코의 장치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탐색함으로써 아상블라주 개념과의 관련성에 대해 천착하였다. 아감벤은 푸코가 1977년 장치 개념을 완전히 이중적인 일련의 담론, 제도, 형태, 규제, 법, 진술서 또는 도덕적 명제로 기술했던 것을 지적한다. 이러한 장치의 형성은 구체적 긴급 상황에 대응하여 전술적인 방법으로 기능하는데, 권력의 작동에 각인될 뿐만 아니라, 지식의 제한에 연결되기도 한다. 아감벤(2009)은 장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나는 장치를 생명체의 제스처, 행동, 의견, 또는 담론을 담아내고, 특정 목적에 맞추며, 결정하고, 가로막으며, 형체를 만들며, 조정하거나 고정시키는 능력을 가진 어떤 것이라고 부른다.”(Agamben, 2009, 14; Legg, 2011, 130에서 재인용)

여기서 장치, 생명체, 주체는 연계된다. 아감벤의 1998년 연구에 따르면, 장치는 조에(zoe, 그냥 살아 있음 혹은 생물적 생명)가 바이오스(bios, 사회적, 정치적 생명)가 되는 기제로 이해된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거대한 현대의 장치의 축적과 확산에 대응할 것인지 질문을 던지며 포획된 것들을 ‘신성모독’(대상을

원래의 용도로 되돌리는 것)을 통해 해방시킬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근대 장치들로 인해 이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아감벤의 글을 읽으면, 장치는 그 이중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상블라주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나 곧 구속(entrapment)의 기제가 된다(Legg, 2011, 130).

이러한 아감벤의 장치에 대한 해석은 들뢰즈의 것(1992)과 비교가 된다. 들뢰즈의 장치에 대한 해석은 거의 아상블라주와 비슷하다. 처음부터 들뢰즈는 장치를 ‘엮혀있고, 다중선형적인 앙상블’이라 정의한다(Deleuze, 1992, 159). 각각은 다른 본성을 가진 라인들을 가지며, 이들은 갈라지거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들뢰즈가 생각하는 장치는 -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 가시성(visibility), 명확한 진술(enunciation), 힘(force), 주관화(subjectification)의 측면을 가지며, 장치들의 작동이 제한되지 않는다. 전지적 선견지명을 가지고 명령, 점유하기보다, 장치들은 뒤죽박죽되며 서로 섞여, 주체성을 생산하는데, 이러한 주체성은 탈주하여 다른 다양성에 재삽입되기도 하며, ‘새로움’에 대한 계속적인 재고를 하게 된다(Deleuze, 1992, 162-3; Legg, 2011, 130에서 재인용). 장치들이 매우 역동적이고 복잡하다면, 왜 푸코가 저항의 승리가 아닌 권력의 승리를 쓰는 걸로 읽히는지 들뢰즈는 궁금해 했다. 들뢰즈는 장치들의 라인들이 두 그룹으로 나뉜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지층화(stratification), 또는 퇴적의 라인들이고, 둘째는 현재 또는 창의성으로 이끄는 라인들이다. 푸코가 첫 번째 기술한 것과 관련이 있는 이유는 그것들이 푸코 저서의 주제들이기 때문이고, 저서들에서 다루지 않는 두 번째는 주로 그의 인터뷰와 행동주의의 주제였기 때문이다(Legg, 2011, 130).

아감벤과 들뢰즈의 장치에 대한 해석에서, 장치는 어원적으로 그리고 계보학적으로 규제와 통치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지만, 그들의 다양체(multiplicity)는 필연적으로 오해, 저항, 비행의 공간을 열어놓는다.⁹⁾ 아상블라주 이론의 유용성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안정성이 불안정성만큼 조합된다(assembled)는 것이다. 레그(2011)는 장치를 아상블라주의 한 유형으로 봐야 하지만 재영역

화, 줄무늬(단층 조선), 스케일링, 통치의 경향이 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제안한다. 이상블라주와 통치성 연구를 함께 사유하는 시도에서 명백한 것은 들뢰즈가 이상블라주가 무질서, 평활화(smoothing), 탈영역화, 단기적 효과와 탈스케일링(de-scaling)뿐만 아니라 질서와 홈패임(striation), 재영역화, 장기적인 효과, 스케일링으로 이어짐을 보여준다는 점이다.¹⁰⁾ 같은 맥락에서 듀스버리(Dewsbury, 2011)는 영역화를 안정화시키는 분할선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이는 탈주선이 좀 더 자주 회자되는 상황에서 들뢰즈의 이상블라주는 항상 유동적이고, 파괴적이고, 끊임없이 활동적인 것으로서 부적절한 비판을 받기 때문인데, 이는 이야기의 절반에만 해당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상블라주적 사유는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며, 비위계적인 방식으로 영역화와 탈영역화라는 두 가지 모두의 성향에 의해 구성되고 이를 통해 영역을 주장한다.

3) ANT와의 비교

1980년대 과학지식의 생산과 과학논쟁을 설명하기 위해 발전된 ANT는 사실상 들뢰즈와 가타리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은 것이기에 ANT와 이상블라주는 개념과 주장에서 많은 유사점을 공유한다(김숙진, 2010; 박경환, 2014). 먼저, ANT 역시 인간과 비인간 개체들의 관계가 새로운 행위자와 새로운 방식의 행위를 생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ANT에서는 모든 개체들이 - 그것이 원자이건 정부이건 - 애초에 똑같은 존재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들 간에 수립된 관계(associations)에 따라 누가 다른 개체보다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라투르(Latour, 2005)는 ANT를 관계의 사회학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상블라주적 사유와 유사하게 ANT는 사회-물질의 과정적인 특성을 강조한다. 사회적인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끊임없는 질서를 향한 시도가 있을 뿐이다. 또한 ANT와 이상블라주적 사유 모두 권력과 정치의 공간적 차원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¹¹⁾ 왜냐하면 두 접근법 모두 어떻게 특정한 방식으로 질서가 나타

나며, 어떻게 다소간 불안정한 방식으로 이들이 결합하며, 공간에 걸쳐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공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는지, 또 어떻게 서로 허물어지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Muller, 2015; McFarlane, 2011).

이러한 유사점에 근거하여 일부 연구자들은 ANT와 이상블라주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거나, ANT를 구성하는 개체와 부분들의 일시적 묶음 상태를 단지 묘사하기 위해 이상블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는 이상블라주가 좀 더 철학적이거나, ANT는 경험적 연구에 적용 가능한 좀 더 구체적인 개념적, 방법론적 장치를 제공해 실증적인 측면이 강한 이상블라주의 전우쯤으로 여기기도 한다(Muller, 2015).¹²⁾ 그렇다면 이 두 개념 사이에 어떤 의미 있는 차별점은 없는 것인가? 최근 이상블라주를 분석의 핵심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차용한 연구들의 증가는 이상블라주 개념이 ANT와 가지는 차별성에 주목한 결과로 보인다.

이상블라주 이론이 ANT와 다른 형태의 관계적 사고와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은 바로 ‘관계의 외재성(the exteriority of relations)’이다. 들뢰즈는 사회적 질서(social order)의 견고성과 변형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것으로 바로 관계가 그들의 조건에 외부적이다(‘relations are external to their terms’)는 점을 든다. 보통은 관계를 특정 형태의 접촉과 교환을 통해 원자적 개체들 간에 형성되는 2차적 연결로 보거나, 개체들은 그들의 관계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즉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관계의 변화는 관련된 사물을 변화시키게 된다. 그러나 들뢰즈는 관계에 대한 대안적 개념을 제안한다. 사물, 또는 개체는 그것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조건 지워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계는 관련된 조건(terms)으로부터 자율성을 가진다. 들뢰즈에게 이상블라주라는 용어는 이종적인 부분들이 특정 형태를 지닌 일시적이고 개방된 전체(whole)로 되는 상호작용을 기술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블라주는 일련의 구성 부분들로 환원되지 않고, 유기적 통일체로 인식되지 않는, 다양한 몸체의 할로킨 재킷 또는 패치워크인 것이다(Anderson et al., 2012, 176-177).

들뢰즈에게 이상블라주의 통일성(unity)은 다양한 부분들이 매끄럽게 또는 격렬하게 동종성으로 포괄되는 유기체적 통일성 또는 전체 시스템의 통일성이 아니다.¹³⁾ 들뢰즈는 이상블라주의 내적 역동성이라는 개념을 유지하면서 불균질적인 모든 요소들이 모여 들게 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즉, 들뢰즈는 관계들이 필연적으로 어떤 유기체를 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종적인 개체들이 어떤 형태의 일시적인 관계로 되는 과정을 강조한다. 정리하자면, 이상블라주는 차이를 가로질러 존재하는 일련의 개체들의 일시적 유지(holding)임과 동시에, 관계와 조건들의 변화에 따른 이동과 변동의 계속적인 과정인 것이다(Anderson *et al.*, 2012, 177).

여기까지 보면, 이상블라주의 특성은 ANT와 흡사한 점이 많다. 실제로 라투르(2005)는 ANT가 네트워크 관계(association)를 추적하는 작업에 선행하는 그 어떤 선형적인 관계의 형태를 상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라투르의 ANT와 이상블라주 이론 모두 사회-공간 관계가 어떤 고정된 형태의 것으로 선형적으로 환원되는 것에 대하여 주저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ANT처럼 이상블라주는 그 구성부분들로 환원되지 않는 창발적, 복합적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바로 위에 언급한 ‘관계의 외재성’에서 드러나며 독립체의 특성(properties)과 능력(capacities)의 구분에 의해 설명된다.¹⁴⁾ 조건이 변하지 않더라도 관계가 변할 수 있다는 들뢰즈를 인용하며 Delanda(2006)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강조한다.

“외재성의 관계는 구성부분의 특성(properties)이 전체를 구성하는 관계를 결코 설명할 수 없고, 관계는 관계가 구성부분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관계가 성립되는 [구성 부분]의 특성을 관계의 원인으로 가질 수 없다(Delanda, 2006, 10-11).”

다른 관계적 사고의 경우, 구성부분들 간의 결합이 현재 모습의 전체를 만드는 데 논리적으로 필수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는 반면, 이상블라주의 경

우 이러한 관계를 우연적으로만 필수적으로 본다. 행위자연결망도 그것의 구성부분들을 완전히 동화시키는 이음새 없는 매끄러운 전체가 되어, ANT가 수행하는 서술(설명) 외부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Delanda, 2006). 즉, ANT는 행위능력(agency)이 관계(associations)의 형성을 통해 유발되는 중재된 성취물이라 주장하는데 이 관계들의 외부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개체는 전체(aggregates)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행위자연결망을 생산하기 위한 협력자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이 되는 것은 관계를 통해 무엇이 정치적으로 되는가의 문제이다. 물질의 정치적 중요성은 주어지기보다, 관계적이고 실행적이며 우연한 성취물인 것이다. 그러나 외재성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이상블라주적 사유는 이상블라주의 구성부분들이 관계의 외부에 고유한 특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들이 이상블라주에 영향을 미치고 이상블라주의 형태를 좌우한다고 상정한다. 이상블라주적 사유는 예측이 불가능하며 구성부분들의 특성을 넘어서는 일련의 개방적 능력을 상정한다(Anderson *et al.*, 2012, 179-181). 그 결과 관계를 통해 세계를 보는 ANT는, 관계의 외부에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모양지우는 것들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¹⁵⁾ 이런 점에서 이상블라주의 핵심적 개념인 ‘관계의 외재성’으로부터 시작함으로써 형식화된 연합과 방대한 비형식화된 영역간의 구분을 극복할 수 있다. 즉, 독립체는 우연적으로만 필수적인 관계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이 관련된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독립체들은 그러한 관계/조건들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는다. 반면에, 독립체들은 어떤 한 이상블라주에서 떨어져 나가 또 다른 이상블라주의 부분이 될 수 있다(Delanda, 2006).

4. 지리학 연구에서 이상블라주가 가지는 함의

지금까지 개념적인 측면에서 이상블라주의 함의

와 다른 유사 개념과의 차별성에 천착하였다면, 이 절에서는 아상블라주 개념을 적용한 몇몇 주요한 경험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아상블라주가 가지는 분석적, 정치적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아상블라주의 분석적인 측면에서의 이점은 경험주의의 가치를 재조명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맥캔(McCann, 2011)에 따르면 경험주의는 상세한 경험적 연구가 이론의 아래에 있는 어떤 것, 개념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체험의 우위성에 대한 강조는 더더욱 아니다. 그 보다는 로즈(Rose, 1999)가 언급한 바와 같이 경험주의란 발명의 방법론, 즉 조우의 대상으로서 개념의 발명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라는 것이다(McCann, 2011, 145에서 재인용). 그것은 특정 사례들의 독특한 요소들에 대한 존중을 통해 작은 차이들과 약한 일반성을 그려내는데 주목하는 방법인 것이다.

아상블라주 개념은 무엇보다 형성(formations)과 과정(processes)을 증시한다는 측면에서 아상블라주 개념을 적용한 분석적 연구는 경험주의의 가치를 재조명하는데 적격이다. 택지개발기본계획을 둘러싼 구성요소들의 이질성을 강조한 맥걸크와 다울링(MacGuirk and Dowling, 2009)의 연구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들은 호주 시드니의 택지개발을 도시 신자유주의의 상징적 표현으로 보는 경향, 그리고 도시 현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 우선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추동하는 성향 모두에 반대한다. 이들은 택지개발 기본계획이 다양한 기관과 행위자, 실천들의 아상블라주를 통해 실현되는 다수의 프로젝트와 논리들로 생겨난 사회적 형성임을 강조하기 위해 아상블라주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 개념을 통해 그들은 신자유주의적 후퇴라는 획일적 설명(즉 거대이론이 추구하는 일반성)보다는 주택개발의 잠정성(provisionality)과 어떻게 이러한 개발이 상호작용하는 실천들과 행위자, 기관들의 ‘덜 일관된(less than coherent)’ 결과물이 되는지를 기술할 수 있었다. 즉, 앤더슨 등(Anderson *et al.*, 2012, 175)이 주장하듯이, 아상블라주가 견고한 질서를 생산하는 구성의 과정, 전체주의적 실천과 과정들로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의 사실상 실제적 비결정성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의 사례인 것이다.

맥캔(McCann, 2011)은 도시 정책 이동성의 측면에

서 어떻게 로컬 정책 행위자가 최상의 정책 모델과 실행에 대한 학습을 통해 글로벌 커뮤니티와 관계를 맺는지, 어떻게 이러한 모델들이 동원되고, 변화되는지, 이러한 이동성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조건 지워지는지, 이들이 어떻게 특정한 장소를 모양 짓는지에 주목했다. 맥캔은 위상학이라는 개념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상블라주라는 개념을 차용함으로써, 어떻게 주요 행위자와, 아이디어, 기술들이 도시에 생산적으로 참여하게 되는지, 또 한 장소의 행위자가 자신의 로컬 정책들을 구성할 때 다른 곳의 모델을 언급함으로써 부재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존재하게 되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부재의 실질적 존재’는 라투르가 얘기한 ‘멀리 떨어져서 작동하기(act at a distance)’의 예가 된다.

그는 벤쿠버의 불법마약으로 인한 피해 완화 정책을 들뢰즈와 가타리가 지칭한 바 있는 ‘진정한 발명품(veritable inventions)’으로 규정한다. 왜냐하면 이 정책은 노동 - 지역내부와 외부에서 사람, 제도적 역량, 전문지식, 모델, 기법, 기술, 정치적 자양물, 활력(sustenance)을 의도적으로 불러 모음 - 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즉, 가깝거나 먼 곳으로부터의 자원의 모음, 즉 아상블라주를 통해 미래에 대한 대안전 비전과 이러한 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그 자체로 권력이 드리워진, 정치적 과정이라는 것이다. 모여든 부분들이 새로운 장소에서 어떻게 결합이 될지에 대한 선택이 협상되고, 경쟁이 이루어지며, 선택이 이루어진 뒤, 또 다시 협상이 더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상블라주의 정치’는 ‘모범예시(exemplar)의 정치’를 수반하는데 여기에서는 아상블라주를 구성하는 특정 부분들과 관계(즉, 이상적으로 여겨지거나 성공한 사례)에 우선순위가 주어지게 된다. 이것이 벤쿠버의 마약 피해 완화 정책의 경우에서도 특정 도시나 국가 이름이 붙여진 채로 모범예시 실천 논의에 더 잘 스며드는 실천의 ‘모델들’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정치적 측면에서의 이점은 아상블라주의 ‘다양체와 중첩결정에 대한 용인’이 특정한 연구 또는 투쟁의 대상(예를 들어 벤쿠버의 약물 정책)을 통해 벌어지는 다수의 정치적 프로젝트, 통치의 양식, 실

천, 결과의 실질적 공존에 개방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정치적 지향성은 깁슨-그라함(Gibson-Graham, 1996)의 헤게모니적 단일체로서의 자본주의에 대한 반근본주의적 시각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맥캔(McCann, 2011)과 같은 류의 분석은 다른 헤게모니적 단일체인 마약과의 전쟁(과거 벤쿠버의 약물 정책)을, 흔히 그렇게 보이는 것과는 달리, 내적으로 일관성이 있지도 않고, 완벽하지 않은 여러 집단과 이해들에 의해 구성된, 우연적 이상블라주로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연구자뿐만 아니라 변화를 모색하는 도시 정책가, 사회운동가들에게 이상블라주적 사유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또한 복수의 형태로서의 도시 이상블라주를 상징하는 것, 다시 말해서 도시성이 만들어지는 일종의 성취물이라면, 그것은 또한 다양한 형태의 도시성을 상상할 수 있는 - 진보적이건 급진적이건 보수적이건 배태적이건 간에 - 가능성의 결정적인 영역일 수 있다. 이상블라주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도시성이 실상과 가능성간의 작용으로서 성취되는 다수의 실천들에 주목하게 하는데, 그럼으로써 비판적 이론과 비판적 도시성의 폭넓은 역사에 반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능동적이고 이질적인 노동과 자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창발적이고 과정적이며 물질적인 도시이며, 이들은 지속적으로 상상되어지며 다른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McFarlane, 2011, 652).

이상블라주의 '다양체'에 대한 용인은 공간성 차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지리학적 연구에 있어 이상블라주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공간적 상상력과 실천에 개방적이라는 점이다. 관계적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관계적 공간에 관해 천착한 많은 연구 성과들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제습 등(Jessop *et al.*, 2008)은 사회공간 관계의 다형적이고(polymorphic), 다차원적인 특성을 인식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사회-공간 관계를 특정한 한 형태로 귀속시키는 오류를 범한다. 즉, 이들은 네 가지 차원의 사회-공간 관계 - 영역, 장소, 스케일, 네트워크 - 를 인식하며 각각은 그것과 관련된 사회공간적 구조화 원칙과 사회공간 패턴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물론 제습 등(2008)의 시도는 어느 정

도 실재론적 측면을 가미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 세계가 변동성에 의해 갈라진다고 보는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상블라주와 어느 정도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제습 등(2008)의 경우 사회-공간 관계를 일련의, 이미 알려져 있고 합의가 이루어진 패턴과 원칙, 형태로 환원한다는 점에 있다. 즉, 영역, 장소, 스케일, 네트워크의 네 가지 측면과 다른 패턴이나 원칙, 형태에는 한정된 가능성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상블라주는 형성의 과정을 중요시하고, 관계적 형태나 형성에 관한 선행적 주장을 하지 않는다. 이상블라주의 시작점은 일련의 이상적인 형태가 어떻게든 조직되는 중립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바로 '맥락'이며, 일시적 통일성이 이중적인 현상의 조합(agencement)으로 나타나는 조건이다. 즉, 이상블라주가 추구하는 것은 질서가 나타나고 다양성과 변형 가운데에서도 그 질서가 지속되는 특정한 방식에 대한 설명인 것이다(Anderson *et al.*, 2012, 176).

영국 중앙정부와 주요 도시지역인 남동부지역 간에 권력의 재편성을 통한 밀튼 케인즈(Milton Keynes)의 형성을 연구한 앨런과 코크레인(Allen and Cochrane, 2007; 2010)의 연구는 이런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들의 연구는 지역 거버넌스의 영역적 다중스케일성을 강조해 온 기존 연구를 관계적, 위상학적 방향으로 이끈 선구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정치적 행위자, 공공, 사적 행위자들의 이상블라주에 기반한 위상학적 관점을 통해 어떻게 분산된 형태의 거버넌스가 공간적으로 불연속적인 지역을 생성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이상블라주는 중앙정부와 로컬정부의 요소들이 기존의 스케일이나 네트워크 개념이 함축하는 것처럼 지역의 '위'에서, '아래'에서, 또는 '옆'에서 작동하기 보다는 지역 안에서 '머무르게(lodged)'되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공간적 확대(extension)보다는 공간적 내포(intension)에 대한 선호, 위상학에 대한 선호에 있어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접근법이 국가의 위계적 권력이 재스케일화되거나 재분배되기보다는 어떻게 공간적 범위(reach)의 관점에서 재조립되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관련된 정치에 대한 이상블라주적, 위상학적 이해는 더욱더 복잡한 제도

적 배열이 펼쳐지는데 있어 새로운 권위의 등장 뒤에 무엇이 놓여있는지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특정한 공간적 개념에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블라주를 폭넓은 서술어로 갖는 것은 새로운 공간성을 인식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다양한 공간적 상상력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지닌다 하겠다.

5. 결론

최근 관계적 존재론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인 것’이라는 개념에 대한 재고찰과 재정의의를 가져왔다. 사회적인 것은 독특하고, 구별되며, 명확히 다른 범주의 실재(reality)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 그것은 라투르가 얘기하는 움직임, 이동, 변형, 번역, 등록의 이름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정의는 권력이 담긴 사회현상이 단일한 개념적 요소, 위치 또는 사물이라기보다 물체, 신체,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세계의 결과물이라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물과 인간, 그리고 물질 존재와 경험이라는 더 넓은 세계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철학적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이상블라주 지리학’이라 불릴 만큼 현대 사회공간이론의 핵심 개념으로 부상한, 들뢰즈와 가타리로부터 소환된 이상블라주의 지리학적 함의를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들뢰즈-가타리의 용어로 이상블라주는 정태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사물과 인간, 물질들의 조우와 관계의 혼성물을 배열, 조직하는 것을 함께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상블라주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상블라주는 주로 세 가지의 상호 연관된 과정들을 강조하기 위해 쓰여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이상블라주는 모임, 분산의 과정을 강조한다. 특히 여기서는 분산되기도 하고 뒤엎혀 복잡하고 임시적인 사회물질적 실천들을 모이게 하고 재모이게 하는 노동에 주목한다. 이 과정에서 이상블라주는 자연스럽게 공간성과 시간성을 드러낸다. 사물과 인간, 물질, 그리고 이들의 부분들은 특정

한 국면에 한데 모이다가 이내 분산하거나 재정렬하며, 장소에 따라 그리고 관점에 따라 그 모양을 바꾼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이상블라주 개념에서 탈영역화와 재영역화를 통해 이를 설명한다. 둘째, 이상블라주는 행위능력을 사회적인 영역에 있는 것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관계의 효과로 설명한다. 이상블라주의 장점은 세계의 변화 잠재력에 대한 세심한 배려인데, 이것은 변화가 단지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만 의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부분이고, 습관을 통해 우리가 매일 에워싸는 세계의 물질성을 통해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또한 이상블라주는 시간에 따라 다른 정도로 서로를 횡단하거나 사로잡으며 스스로 이상블라주를 뛰어넘는 복잡하고 불균등한 궤적을 함축하는데, 이런 측면은 이상블라주에서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놓여있는지, 이것들이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관한 질문에 미시적인 경험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이상블라주는 결과로 생긴 형성물이라기보다는 창발성을 함축한다. 이상블라주의 장점은 권력을 복수의 공존으로 바라보는데 있다. 즉, 이상블라주는 중앙권력이나 균등하게 배분된 권력보다는 권력을 항상 변형되는 복수로 본다(Li, 2007; McFarlane, 2009).

이러한 측면에서 이상블라주 개념과 푸코의 장치 개념과의 관계설정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장치는 어원적으로 그리고 계보학적으로 규제와 통치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지만, 이상블라주와 장치 개념을 함께 사유하는 시도에서 장치를 이상블라주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은 매끄러운 공간, 탈영역화로만 주로 대변되는 이상블라주에 대한 인식에서 질서와 재영역화, 장기적인 효과, 스케일링의 가능성을 재조명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와 더불어 관계의 외재성은 이상블라주 이론이 ANT와 같은 다른 형태의 관계적 사고와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다. 이것은 대상들이 그들 간 관계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구성부분들의 특성이 전체를 구성하는 관계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의한다. 따라서 이상블라주적 사유는 예측이 불가능하며 구성부분들의 특성을 넘어서는 일련의 개방적 능력을 상정한다.

경험연구를 통해서 본 이상블라주가 가지는 지리

학적 함의는 먼저 분석적 측면에서 형성과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경험주의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다는 점, 정치적 측면에서 이상블라주의 ‘다양체와 중첩 결정에 대한 용인’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다수의 정치적 프로젝트, 통치의 양식, 실천, 결과의 실질적 공존에 개방적이라는 점이다. 이상블라주의 ‘다양체’에 대한 용인은 공간성 차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이상블라주적 사유는 관계적 사고에 의해 드러난 다양한 종류의 공간적 개념 - 영역, 흐름, 네트워크, 지역, 리즘, 스케일 등 - 중 특정한 공간적 상상력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이상블라주적 접근은 어떻게 이러한 공간적 형태와 과정들이 집결되고, 장소에 유지되며, 특정 가능성을 열거나 닫는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관한 설명에 주안점을 두며, 다양한 공간적 상상력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지닌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상블라주 개념이 세계를 이해하는 극적으로 다른 방식을 구성하는 반면, 계속 늘어나는 차별화되지 않는 이상블라주가 제시되어, 결과적으로 단편적 전용과 증범위 이론화로 귀결되는 위험한 경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 1) 그러나 하비의 관계적 공간 개념은 사회적 행위자가 물리적 대상보다 더 복잡한 시공간적 관계를 갖는다고 우위에 뒀으로써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의 대칭적 존재론에 근거한 ANT나 이상블라주적 사유와는 차이를 보인다.
- 2) 매시는 장소에 대한 보다 최근의 저작(2005)에서 이러한 장소에 관한 관계론적 개념을 더욱 발전시켰다.
- 3) 버틀러는 기존 페미니즘 이론가들의 섹스-젠더 이분법을 비판하면서 여성이 계층과 인종 등 개인의 여러 측면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구성된 복잡다단한 사회적 구성물이라 역설했다. 즉 그녀에 따르면 젠더는 수행적인 것이다 (Butler, 1990).
- 4) 가령 문화지리학에서 일상생활과 소비의 문제를 다룬다거나(Crang, 1996), 도시지리학에서 도시의 삶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흥미의 재개는 건조환경의 물질적 조건에 대한 관심을 의미한다. 페미니스트들의 구체화된 경험에 대한 연구는 신체의 사회-물리적 장소, 그리고 물질적 장소에 기반한 신체의 위치성을 다루는 것이다.

- 5) 로빈과 마크(Robbins and Marks, 2010)는 이상블라주 지리학이라는 용어를 최근의 ‘more-than-human geography’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성에 있어 물질적 요소의 역할에 주목하는 다양한 접근법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즉 라투르의 행위자연결망 이론, 하라웨이의 페미니스트지리학 외에도 맵스의 신진대사론, 미첼의 계보학적 연구도 포함한다.
- 6) 들뢰즈와 가타리의 ‘욕망 기계(desiring machines)’는 일종의 이상블라주이다. 엔트로피를 불러일으키며 해체하는 것은 그러한 기계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이상블라주는 유한하지만 특정한 또는 구별적인 수명, 즉 시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이상블라주는 본질적 특성이 없다. 이상블라주는 차이를 생산하며, 모든 질적인 차이점의 토대이자 표현이다(Marcus and Saka, 2006).
- 7) 그러나 이상블라주 이론을 구성하려는 노력들이 존재한다. 대표적 인물로 Delanda(2006) 참조.
- 8) 통치성이라는 개념은 1976년부터 1979년까지 진행된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에서 주로 발전되어 레그(legg, 2011)는 통치성과 관련된 장치 개념을 이들 강의 내용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 9) 장치를 이상블라주와 동일시하는 들뢰즈의 시각과 달리 다른 학자들은 여전히 이 두 개념사이의 차이에 주목한다. 즉, 장치, 레짐 또는 통치 기술과 같은 푸코의 개념들과는 달리, 이상블라주는 결과로 생긴 형성물이라기 보다는 창발성을 함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상블라주는 푸코의 인식론적 사유보다 더욱 복잡적이고 일시적인 설립체임이 강조되는 것이 그것이다(Dewsbury, 2011).
- 10) 엘든(Elden, 2009, xxvii)은 세계화와 탈역역화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들뢰즈와 가타리가 계속되는 탈역역화와 재역역화의 복잡한 양상을 항상 강조해 왔음을 지적한다.
- 11) ANT의 위상학적 공간개념으로서의 의의에 대한 최근 연구로 최병두(2016) 참조.
- 12) 가령, 계산의 중심(centre of calculation), 올리콥티콘(Oligopticon), 블랙박스, 불변의 이동물, 번역, 또는 오버플로우(넘침)와 같은 용어들은 관계의 형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ANT의 주요 이론가들은 이러한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점이 ANT가 경험적 연구에 적용하기 쉽도록 만들었다.
- 13) 이 점은 유기체적 비유에 의존하는 사회정치적 구성 모델들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시스템 이론이나 분자생물학, 정보 이론과 같은 유기체 모델들은 그것이 사회적인 것이건, 생물학적이건, 정보이건 간에 유기체의 경계라는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시스템 이론에서는 사회적 시스템 또는 생물학적 시스템의 기관들은 유기체의 경계를 강화하도록 기능한다(Anderson *et al.*, 2012, 177).

- 14) 데란다(2006)는 독립체의 특성과 능력을 구분함으로써 이상블라주의 부분과 전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구성부분의 특성이 주어지고 알려지더라도, 그것의 능력은 개방적이고 예측불가능하다. 특성은 실질적이고 실재적인 상태인 반면, 능력은 특성으로부터 추론될 수 없는 일련의 개방적인 잠재력을 형성한다. 이는 능력이 다른 상호작용하는 대상의 특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구성요소들의 특성에 의존하면서도, 특성들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Delanda, 2006, 11).
- 15) 라투르가 관계의 외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관계(associations)와 함께 라투르는 아직 형식화되지 않고, 도량형적 사물에 관여되지 않았으며, 다루어지지 않고, 조사되지도 않았으며, 동원되지도 않은, 주관화되지 않은 것을 상징하기 위해 '이상한 형태의 플라즈마(strange figure of plasma)'라는 용어를 언급했다(Latour, 2005, 244).

참고문헌

- 김숙진, 2006, “생태환경공간의 생산과 그 혼종성(hybridity)에 대한 분석: 청계천 복원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9(2), 113-124.
- 김숙진, 2010,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통한 과학과 자연의 재해석,” 대한지리학회, 45(4), 461-477.
- 박경환, 2014, “글로벌 시대 인문지리학에 있어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의 적용 가능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7(1), 57-78.
- 박배균, 2010, “장소마케팅과 장소의 영역화: 본질주의적 장소관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3), 498-513.
- 이현재, 2012, “다양한 공간개념과 공간 읽이의 가능성 - 절대적, 상대적, 관계적 공간개념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3(4), 221-248.
- 임동근(역), 2008,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문학과 과학사(Harvey, D., 2006, Spaces of Global Capitalism, Verso, New York).
- 최병두, 2016, “행위자-네트워크이론과 위상학적 공간 개념,” 공간과사회, 25(3), 125-172.
- Agamben, G., 2009, *What is an apparatus? And other essays*,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
- Allen, J. and Cochrane, A., 2007, Beyond the territorial fix: Regional assemblages, politics and power, *Regional Studies*, 41(9), 1161-1175.
- Allen, J. and Cochrane, A., 2010, Assemblages of state power: topological shifts in the organization of government and politics, *Antipode*, 42(5), 1071-1089.
- Anderson, B., Kearnes, M., McFarlane, C., and Swanton, D., 2012, On assemblages and geography, *Dialogues in Human Geography*, 2(2), 171-189.
- Bakker, K., and Bridge, G. 2006, Material worlds? Resource geographies and the ‘matter of natur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0(1), 5-27.
- Bennett, J., 2010, *Vibrant matter: a political ecology of things*,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NC.
- Braun, B., 2006, Environmental issues: global natures in the space of assemblag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0(5), 644-654.
- Butler, J., 1990, *Gender Trouble*, Routledge, New York.
- Castree, N., 2003, Environmental issues: relational analogies and hybrid politic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7, 203-211.
- Colls, R., 2012, Feminism, bodily difference and non-representational geographie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7(3), 430-445.
- Crang, M. and Thrift, N., 2000, *Thinking Space*, Routledge, New York.
- DeLanda, M., 2006, *A new philosophy of society: assemblage theory and social complexity*, Continuum, London.
- Deleuze, G., and Guattari, F., 1983, *Anti-Oedipus*, Translated by Brian Massumi,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Deleuze, G., and Guattari, F., 1987, *A Thousand Plateau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Deleuze, G., and Parnet, C., 1987, *Dialogues*,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 Deleuze, G., 1992, What is a dispositif, in Armstrong, T. J., (eds.) *Foucault: philosopher*, Harvester Wheatsheaf, New York, 159-168.
- Dewsbury, J-D, 2011, The Deleuze-Guattarian assemblage: plastic habits, *Area*, 43(2), 148-153.
- Dittmer, J., 2014, Geopolitical assemblages and complexit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8(3), 385-401.

- Elden, S., 2009, *Terror and territory: The spatial extent of sovereignt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Foucault, M., 1980,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Harvester Press, Brighton.
- Foucault, M., 2007,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lectures at the College de France 1977-78*, Palgrave Macmillan, Basingstoke.
- Gibson-Graham, J. K., 1996, *The end of capitalism (as we knew it): a feminist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Blackwell, Cambridge, MA.
- Grosz, E., 1994, *Volatile bodies: toward a corporeal feminism*,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 Harvey, D., 1973, *Social Justice and the City*, Edward Arnold, London.
- Jackson, P., 2000, Rematerializing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Social & Cultural Geography*, 1(1), 9-14.
- Jessop, B., Brenner, N., and Jones, M., 2008, Theorizing sociospatial relation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8, 389-401.
- Jones, M., 2009, Phase space: geography, relational thinking and beyond,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3(4), 487-506.
- Latour, B., 2005, *Reassembling the social*,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Lees, L., 2002, Rematerializing geography: the 'new' urban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6(1), 101-12.
- Legg, S., 2011, Assemblage/apparatus: using Deleuze and Foucault, *Area*, 43(2), 128-133.
- Leszczynski, A., 2009, Rematerializing GIScienc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7(4), 609-615.
- Li, T. M., 2007, Practices of assemblage and community forest management, *Economy and Society*, 36(2), 263-293.
- Marcus, G.E., and Saka, E., 2006, Assemblage, *Theory, Culture & Society*, 23(2-3), 101-109.
- Massey, D., 1993, Power-geometry and a progressive sense of place, in Bird, J., Curtis, B., Putnam, T. and Tickner, N. (eds.), *Mapping the Futures: Local Cultures, Global Change*, Routledge, London, 59-69.
- Massey, D., 1997, A global sense of place, in Barns, T. and Gregory, D. (eds.), *Reading Human Geography*, Arnold, London, 315-323.
- Massey, D., 2005, *For Space*, Sage, London.
- Massey, D., 2011, A counterhegemonic relationality of place in McCann, E. and Ward, K., (eds.), *Mobile urbanism: cities and policy-making in the global ag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MN, 1-14.
- McCann, E., 2011, Veritable inventions: cities, policies and assemblage, *Area*, 43(2), 143-147.
- McFarlane, C., 2009, Translocal assemblages: space, power and social movements, *Geoforum*, 40(4), 561-567.
- McFarlane, C., 2011, The city as assemblage: dwelling and urban spac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9, 649-671.
- McGuirk, P. M., and Dowling, R. 2009, Neoliberal privatisation? Remapping the public and the private in Sydney's masterplanned residential estates, *Political Geography*, 28(3), 174-185.
- Meehan, K., Shaw, I., Graham, R., and Marston, S. A., 2013, Political geographies of the object, *Political Geography*, 33(March), 1-10.
- Muller, M., 2015, Assemblages and Actor-networks: Rethinking socio-material power, politics and space, *Geography Compass*, 9(1), 27-40.
- Robbins, P., 2004, *Political ecology: A critical introduction*, Blackwell, New York.
- Robbins, P., and Marks, B., 2010, Assemblage Geographies, in Smith, S., Plain, R., Marston, S.A. and Jones III, J.P., (eds.), *The SAGE Handbook of Social Geographies*, 176-194, SAGE, LA.
- Rose, N., 1999, *Powers of freedom: reframing political thought*,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Saldanha, A., 2007, *Psychedelic White: Goa Trance and the viscosity of ra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Slocum, R., 2008, Thinking race through corporeal feminist theory: divisions and intimacies at the Minneapolis Farmers' Market, *Social & Cultural Geography*, 9(8), 849-869.

김숙진

- Smith, N., 1996, The production of nature, in Robertson, G., Mash, M., Tickner, L., Bird, J., Curtis, B., and Putnam, T., (eds.), *FutureNatural: Nature/Science/Culture*, Routledge, New York, 35-54.
- Squire, V., 2015, Reshaping critical geopolitics? The materialist challeng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41(1), 139-159.
- Thrift, N., 1996, *Spatial Formations*, Sage, London.
- Thrift, N., 2004, Intensities of feeling: towards a spatial politics of affect, *Geographiska Annaler Series B*, 86, 57-78.
- Thrift, N., 2008, *Non-Representational Theory: Space, Practice and Affect*, Routledge, New York.
- Whatmore, S., 2006, Materialist returns: practising cul-

tural geography in and for a more-than-human world. *Cultural Geographies*, 13, 600-609.

교신: 김숙진, 05029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이메일: sjkim@konkuk.ac.kr)
Correspondence: Sook-Jin Kim,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Science, Konkuk University,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KOREA 05029 (e-mail: sjkim@konkuk.ac.kr)

최초투고일 2016. 6. 3

수정일 2016. 6. 18

최종접수일 2016. 6. 25

대구 산간분지 지형 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재하*

A Critical Study on the Landform Recognition of Daegu City as an Intermontane Basin

Jaeha Lee*

요약 : 우리는 수많은 지리 오개념들로써 우리나라나 세계를 잘 못 이해하고 그릇된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모른다. 사회적으로 한번 구성된(만들어진) 그러한 오개념들은 세대를 거치며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거나 학습됨으로써 지속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대구 산간분지라는 오개념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지리학자 타무라(1933)와 타다(1940)에 의해 만들어지고, 식민지 이후에는 많은 한국의 지리학자들(교수와 교사)과 언론인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확산돼 온 것이다. 국제지형학회에서 편찬한 지형학 백과사전에서 산간분지 정의에 의하면, 대구의 예전의 역사적 관찰구역뿐 아니라 오늘날 광역시역에서도 중심 평야지역은 주위 사방팔방 중에서 북과 남쪽 방향(북쪽, 북동쪽, 북서쪽 일부, 남쪽, 남동쪽)만 산지와 구릉지로 둘러싸여 있어 산간분지 지형이라고 볼 수 없다. 대구는 남과 북 방향에 산지가 잘 발달해 있지만 동서로는 금호강 하류에 위치한 덕에 외려 평야 지형이 잘 발달한 개방적인 평야 혹은 평원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대구 산간분지 도시라는 지형 인식이 하루빨리 교정되고, 또한 한국과 세계에 관한 수많은 지리 오개념들에 대해 학계의 관심과 더불어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대구시, 산간 분지, 지형 인식, 지리 오개념, 일본 지리학자, 한국 지리학자

Abstract : We may have an incorrect view of Korea and the world by misunderstanding them with a number of geographic misconceptions. Such misconceptions constructed socially tend to perpetuate through reproducing and learning repeatedly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Daegu city is in the intermontane basin.' It is also identified that this geographic misconception had constructed (made) by two Japanese geographers (Tamura, 1933; Tada, 1940)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have been reproduced and diffused by many Korean geographers (professors and teachers) as well as journalists in the post-colonial days. In terms of the definition of an intermontane basin in the Encyclopedia of Geomorphology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morphologists, Daegu seems not to be a basin city but to be a plain city, since the central plain of Daegu is surrounded by higher terrain like mountains and hills only on the north and south directions of all sides, and also it is well developed thanks to its location where the downstream of the Geumhogang river flows from east to west. This paper hopes that the landform recognition as 'Daegu intermontane basin city' should be corrected as soon as possible, and also many geographic misconceptions will be studied actively for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Korea and the world.

Key Words : Daegu city, intermontane basin, landform recognition, geographic misconceptions, Japanese geographers, Korean geographers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경북대학교 사회과학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eejha@knu.ac.kr

1. 서론

우리가 알고 있거나 사실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지리 개념 가운데는 그릇된 오개념(misconceptions)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세계로 나가는 큰 꿈과 포부를 펼치라며 자주 들었던 ‘오대양(五大洋)과 육대주(六大洲)’라는 세계지리 개념이 그러하다. 하지만 오대양이 공식화된 것은 최근에서이다. 국제수로기구(IHO)는 세계 바다를 오랫동안 4대양(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양(Arctic ocean))으로 구분·인정해 오다가 2000년 회의에서 남반구 위도 60도 이상의 해역에 대해 ‘남극양(Southern ocean)’의 이름을 부여했었다. 대륙의 구분 개념도 구별하는 기준에 따라 4~7 대륙으로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이 중에서 오늘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륙 개념은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남극(Antarctica), 유럽, 호주(Australia)으로 나눈 7대주라고 한다. 또한 우리는 사막이라고 하면 남·북회귀선에 많이 분포하는 사막들에서 나타나는 매우 적은 연 강수량(250mm 미만)과 연중 뜨거운 햇볕과 같은 특징을 강조하거나 연상하며 모두를 고온(hot) 사막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나, 실은 남극 대륙과 같이 연 강수량 100mm 이하이지만 빙상(氷床)으로 덮여 있는 한랭(cold) 사막도 있다. 이러한 지리 오개념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그것들이 사회적으로 부정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도(만들어져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거나 학습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고향땅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가 한국의 대표적인 분지 지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부정확한 오개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오래전에 한 적이 있다. 대구의 남쪽 앞산에서 내려다 본 대구시가지는 남쪽과 북쪽 방향은 산지로 가로막혀 있지만 동·서는 경산 땅과 낙동강으로 개방돼 있다. 그럼에도 대구 분지 도시라는 개념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관련 문헌자료에서 엄연한 사실로 기술되고 재생산돼 왔다. 그동안 대구시가 발행한 『대구시사(大邱市史)』(1973; 1995)를 비롯해 정부부처(건설부, 국토교통부)의 『한국지지: 지방편 3』(1985)와 『한국지리지: 경

상편』(2005),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1991)와 두산의 『두산세계대백과사전』(1996) 등에서 대구분지 지형을 비중 있게 적시하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지리학 연구논문에서도 제목에 대구분지를 명시하며 기정사실로 수용하고 있다.

중등학교 교과서도 대구 분지 지형이라는 개념을 재생산해 왔으며, 나아가 분지 지형이 대구의 특수한 기후 현상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설명·기술하고 있어 분지 도시임을 인식시켜왔다. 7차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한국지리』교과서로 편찬돼 2003~2011년에 사용되었던 8종 중 2종은 지형 단원에서 대구를 침식분지 지형의 대표적 지역의 하나로 예시하였고, 5종은 기후 단원에서 소우(少雨)·혹서지(酷暑地)로서 대구의 특수한 기후 현상의 원인을 분지 지형의 탓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언론매체는 분지 지형이 대구의 여름철 이상고온을 비롯하여 다른 여러 현상에도 원인이 되고 있다는 또 다른 파생적 오개념을 생성하고 확산시켜왔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4개 일간지 신문(경향, 동아, 매일경제, 한겨레)의 1920~1999년간 기사에 대한 ‘대구분지’ 키워드 검색에 의하면, 분지 지형이 대구의 혹서의 주된 원인이라는 기사 24건, 혹한(酷暑)의 원인 5건, 대기오염의 심화 원인 2건, 벼락이 많은 원인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대구분지의 지세와 기후가 대구 사람들의 강직(剛直)하고 폐쇄적이며 보수적인 기질(氣質)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이른바 ‘인성의 분지 결정론’과 같은 기사도 4건이 검색되었다. 이 밖에 최근에는 ‘분지적 사고론’까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¹⁾

대구 분지 지형과 관련 오개념들은 그것이 개념화된 이후 비판적으로 논의되거나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이 오직 반복적으로 재생산되어 온 탓에 우리 사회의 대다수는 사실적 정(正)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리 오개념과 관련한 한 외국 연구논문에서도 미국의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구의 위치, 지형 등과 관계된 수많은 자연지리 오개념들은 각급 학교에서 교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교육됨으로써 세대에 영속화된 것이라면서, 학생들의 바른 세계관을 위해 교사들이 그릇된 통념(myths)이나 속설을 폭로하

고 이를 교정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Nelson *et al.*, 1992).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대구 분지 지형도 오개념의 반복적 생산과 교육의 결과로 비롯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문제 인식을 토대로 분지 지형의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대구가 산간분지 지형을 이룬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과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산간분지와 관련 하위 지형단위에 대한 최근의 국내의 정의를 자세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를 위해서 산간분지의 정의를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정의를 기반으로 기존의 대구 산간분지 지형 인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대구 산간분지 지형 주장의 배경과 내용

1) 타무라 가즈히사(田村一久)의 주장

대구분지 지형은 일제강점기에 대구공립 여자고등 보통학교(현, 경북여자고등학교) 지리교사이었던 타무라 가즈히사(田村一久)가 1933년 저술한 '조선에 있어서의 향토 지리의 실례'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그는 '제1장 대구분지의 지형'을 시작하며 다음과 같이 개설(概說)하고 있다(田村一久, 1933, 1).

“대구분지는 …영남의 핵심을 흐르는 낙동강 중류로 흘러들어가는 금호강과 그 지류 신천(대구천)에 걸친 분지로, 북쪽 경계는 팔공산 봉우리들(八公連嶺)이 병풍처럼 서 있고 그 남쪽에는 여기에 병행(並行)하는 구조곡(構造谷)이 있고 더하여 남측에 (팔공연령의) 앞산(前山)들이 있다. 남쪽 경계에는 비슬산괴(毘瑟山塊)가 솟아 있다. …이리하여 남북 방향은 약 20km이지만 아주 뚜렷이 경계를 이루고, (분지의) 서쪽은 낙동강에 경계를 이룬다. 동쪽은 금호강의 연안 평야가 멀리 연장되어 있어 영천 평야와 적합한 지리적 구분을 못해 점이(漸移)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경산군 안심면의 평야를 경계로 삼는다. 분지상(盆地)에는 …구릉성 산지군(群), 선상지, 단구, 층적평야 등이 뒤섞여 있고 중앙부의 신천 범람원에 대구부(府)가 자리 잡고 있다.”

이어서 대구분지의 지형단위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그가 주장하는 대구분지의 분지상 또는 분지저(盆地底, basin floor)의 범위와 외연 경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구분지 지형의 분지상에 속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4개 지형단위를 열거하였다. 첫째는 주요 하천의 범람원으로, 당시 대구부 시가지(오늘날 대구 중구의 핵심부에 해당)가 자리한 신천 범람원을 비롯해 금호강, (경산의) 남천, 낙동강 변에 발달한 범람원 지역을 포함하였다. 둘째는 고도가 낮은 동·서부 구릉지로서, 당시 시가지 동쪽의 신천과 동촌 쪽 금호강 사이는 대부분이 넓고 완만한 침식곡(浸蝕谷)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연암산(134m)·모봉(159m)·216m 봉(현, 두리봉) 등도 있는 고도 약 50~200m 범위의 동부 구릉군(丘陵群)을 이룬다고 보았다. 그리고 시가지 서남쪽은 고도 50~150m 범위의 저평한 지역으로 시가지와 접하고 있는 달성산·동산·남산·오포대·수도산 등의 낮은 구릉지²⁾ 이외에 산 모양의 와룡산(299m)과 궁산(252m)도 발달해 서남부 구릉군을 형성한다고 했다. 셋째는 북·남쪽 경계 산지 산록부의 소하천 변에 발달한 선상지들로서, 현재 대구 동구에 속하는 해안·안심 일대, 남구와 달서구에 속하는 앞산·월배, 수성구 내환동과 옥수동에 속하는 고산 등에 형성된 복합 선상지를 예시하였다. 마지막은 북쪽 경계 산지의 소하천 변에 형성된 작은 침식평원으로서, 문암천(현, 동화천), 용암천(현, 불로천), 외천(현, 팔거천) 주변의 하안단구를 포함시켰다.

대구 분지의 외연 경계 지형에 대해서는 북쪽과 남쪽의 경계 산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북쪽 경계 산지로는 팔공 연산(八公連山)의 동남동쪽에 있는 초레봉(636m)에서 북으로 환성산(808m)·인봉(891m)을 지나서 서북서 방향으로 주봉(主峰) 팔공립(八公立, 1192m)을 거쳐 가산(901m)으로 이어지는 약 20km의 팔공산맥과 그 앞에 같은 방향으로 병

행하는 문암산(424m)·응봉산(현, 응봉, 624m)·압해산(현, 응해산, 507m)·도덕산(660m) 등으로 이어진 팔공 앞산 산열(八公前山山列)과 그 앞에 나타나는 고도 200~300m의 구릉군을 언급하였다. 남쪽 경계 산지로는 비슬산(1083m)을 주봉으로 해서 북으로 청룡산(792m)·산성산(653m)·앞산(695m) 등에 이르는 길이 약 20km의 비슬산괴를 비롯해 최정산(915m) 산괴와 용제산(현, 용지봉, 634m)을 주봉으로 대덕산(603m)·병풍산(568m)으로 이루어진 용제산(龍祭山) 산괴를 들었다.

이에 비해 분지지의 동서 방향은 대부분이 장기간의 삭박에 의해서 고도가 낮고 경사가 완만한 구릉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 분지의 경계를 불명료하게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남쪽의 비슬산괴와 북쪽의 팔공산괴 또는 팔공산맥에 의해 남북이 보다 협착(狹窄)된 오목(凹) 렌즈 모양의 분지 지형을 형성한다고 주장했다(田村一久, 1933, 20-21).

2) 타다 후미오(多田文男)의 주장

두 번째 주장은 도쿄(東京)대학 지리학과 지형학 교수였던 타다 후미오(多田文男)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는 1940년 발간된 『대구부사(大邱府史) 제3 특수편』에 ‘대구 분지의 지형’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서언(序言)에서 대구 분지는 대소(大小)로 나눠 볼 수 있다고 했다(多田文男, 1940, 3).

대구 분지의 소규모 범위는 금호강의 지류 신천에 연(沿)해 있는 충적평야에 한정된 것으로 남북 4km, 동서 3km의 작은 분지를 이룬다고 보았다. 그 범위의 크기로 볼 때 이는 당시 대구부 시가지(현, 대구 중구와 인접지)가 개발된 신천 범람원을 분지지로 삼고, 동으로는 동부 구릉군(현, 신천동과 범어동 일대의 70m급 구릉지), 서로는 달성산(현, 달성공원)·동산, 남으로는 연귀산·수도산, 북으로는 연암산·침산 등의 구릉지를 분지 경계로 간주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가 주장하고자 하는 대구 분지 지형은 대규모 범위를 말하는데 이는 타무라의 주장과 유사하다. 그도 대구 분지지의 범위로서 신천 범람원 주변의 낙동강 및

금호강변 평야는 물론, 동·서부 구릉지에 속하는 200~300m 고도와 100~200m 기복을 가진 구릉지까지를 포함해 보고 있다. 하지만 대구 분지 혹은 분지지의 외연 경계 지형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였다.

타다는 대구 분지의 남쪽은 경산에서 낙동강변의 위천동(현,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에 이르는 대략 동서(東西)로 달리는 급사면(急崖)³⁾과 그 남쪽의 용제봉·최정산·비슬산 산괴 등과 경계를 이룬다고 했다⁴⁾. 동북쪽은 능천산·문암산·압해산·도덕산을 이으며⁵⁾ 북서에서 동남으로 달리는 험준한 산맥과 같은 팔공산괴(八公山塊)와 경계를 이루고, 서쪽은 의봉산(535m, 고령군 운수면 소재)에서부터 (대구부의) 서북으로 달리던 (궁산, 와룡산, 함지산 등을 지칭하는) 산봉우리에 의해 한계를 지을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대구분지는 남쪽 경계선을 밀변으로 하고, 서쪽과 동북쪽의 경계선을 각각 한 변으로 하면 대략 삼각형의 산간분지를 이룬다고 하였다.

3) 홍경희의 주장

국내에서 두 번째로 창설된 대구사범대학(1951년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으로 변경) 지리학과에 1948년 4월에 부임한 홍경희 교수는 한국인 최초로 대구분지를 주장한 학자이다. 그녀는 1966년 출판한 『대구시: 도시지리학적 연구』라는 학술서에서 대구 지형이 분지임을 두 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제1장 대구의 총괄적 지위’에서 ‘제1절 대구의 도시 성격’에 대해 10가지를 열거하는 가운데, “첫째, 내륙도시의 성격이 현저하다”라고 하면서 “대구는 해안 거리 약 100km의 내륙에 있어 동북부와 남부가 높은 산지에 가리어지고, 서쪽이 비교적 개방된 나팔상의 분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 내륙분지의 위치는…대구의 현저한 내륙성 기후를 규정하고…”라고 기술하며 내륙분지임을 강조한 바 있다(홍경희, 1966, 13).

또한 홍경희는 ‘제2장 자연적 기반’의 ‘제3절 지형’을 다루며 전술한 타무라와 타다의 견해에 근거하여 대구 지형은 산간분지의 특색을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홍경희, 1966, 73-88). 대구분지의 지형단위에 대해서는 타다의 견해와 거의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기

술하고 있다.

“광의의 대구분지는 남은 경산에서 낙동강 강변의 위천동에 달하는 거의 동서(東西)의 급애(急崖)에 의하여 그 남방의 용제봉·최정산·비슬산의 산괴와 경계되고, 동은 도덕산·암해산(현, 응해봉)·문암산·능천산을 연(連)하여 북서에서 남동으로 달리는 험조(險阻)한 산맥에 의하여 팔공산괴와 경계되며, 서는 의봉산에서 북서로 달리는 구릉지에 의하여 경계 지어진 거의 삼각형의 산간분지를 말한다. 그 남북 및 동서의 최대 직선거리는 각각 33km 및 26km이다. 분지상은 200~300m의 평균 고도를 가지는 구릉지와 낙동강 금호강 및 신천에 의하여 형성된 범람원으로 되어있다. 이 범위 내에서 현 시역(現市域)의 동서남북의 경계를 지우고 있는 것은 대체로 환성산·와룡산·백악산·문암산이다.”

이러한 주장은 대구 도시연구에서 타다의 대구분지 주장을 수용한 것이어서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 홍경희의 견해는 도시지리학자이었음에도 대구와 한국 지리학계에서의 위상으로 말미암아 대구분지 지형의 확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

된다.

4) 조화룡의 주장

지형학자 조화룡은 1995년 발간된 대구시사 제1권의 ‘제3장 지형’에서 대구분지 용어가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그 지형적 범위를 확실히 한 보고는 별로 없었다고 하면서, 대구분지의 지형 단위에 대해 고찰을 시도했다. 그는 대구분지를 대·소 두 개의 지형단위로 설정해 분지임을 밝히고 있다.

좁은 범위의 대구분지는 동쪽은 수성구 남부의 지산동에서 수성구 북부의 만촌동으로 향하며 분포하는 지산(211m)·두리봉(217m)·모봉(150m)·형제봉(190m) 등의 비교적 낮은 구릉에 의해 경계되고, 서쪽은 와룡산(299m)에 의해 막혀있다고 했다. 동북과 북쪽은 팔공산괴의 능천산(476.2m)에서 용암산(381.5m)·문암산(431.4m)을 거쳐 북서방향으로 이어지는 응봉(458m)·응해산(516m)·도덕산(660m)·함지산(284m)으로 이어지며 연결된다. 그리고 남쪽은 비슬산괴의 북쪽 가장자리인 대덕산(584m)·앞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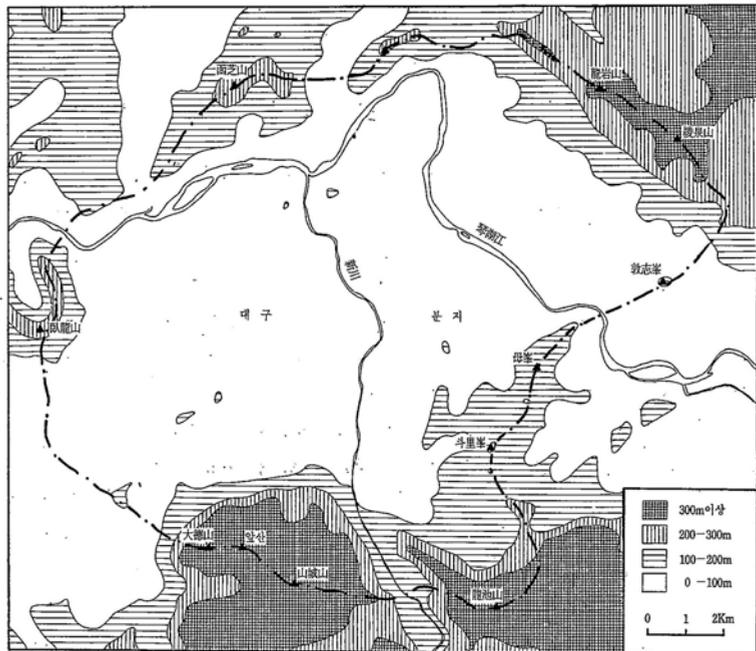


그림 1. 대구분지(협의)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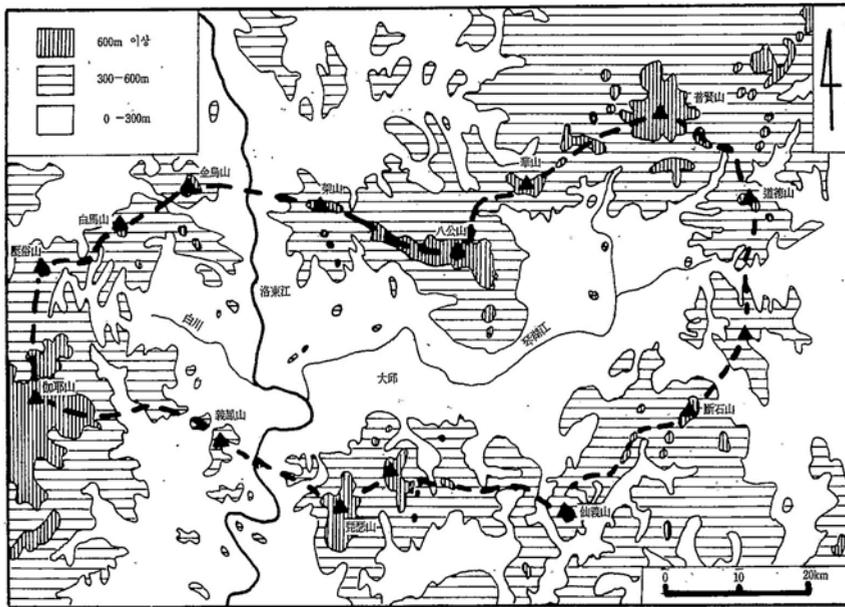


그림 2. 대구분지(광의)의 범위

(660m)·산성산(653m)을 비롯해 법니산(348m)·용지봉(634m) 등의 산지를 경계로 설정하였다(그림 1).

넓은 범위의 대구분지는 가운데 대구시역을 두고 동쪽으로 금호강 유역과 서쪽으로 낙동강 지류인 백천 유역까지를 포괄한 광대한 지형단위로 설정하였다(그림 2). 지방자치단체 구역으로는 가운데 대구광역시역을 두고 동쪽으로 경산시와 영천시를 포함하고 서쪽으로 달성군(1995년 3월 1일에 대구광역시에 편입됨),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일부에 미치는 지역이다.

5) 그 밖에 지리학자들의 주장

그 밖에 다수의 자연지리학(지형학 전공) 지리학자들도 대구 분지 지형을 주장하거나 무비판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한국의 1세대 지형학자로 볼 수 있는 권혁재는 저서(한국지리)에서 “비가 적고 여름 기온이 높은 대구분지는 특수 지역으로 취급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대구 분지 지형을 당연시하였다(권혁재, 1987, 134). 국내 지형학자 중 산간분지 또는 침식분지에 관한 연구를 가장 많이 한 장재훈은 대구분지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침식분지의 하나로 간주하였고, 우리나라의 분지를 평면 형태에 따라 세 가지 유형(폐쇄형 분지, 하곡지 관통형 분지, U자 개방형 분지)으로 분류한 바 있다. 그는 과거 대구는 남부와 북부가 산지로, 동부와 서부는 저기복 구릉지로 둘러싸인 분지였으나, 도시화가 확대된 90년대 말 현재는 서울처럼 한 쪽 방향 즉, 동쪽이 넓게 열린 U자 개방형의 분지라고 주장하였다(장재훈, 1997, 1-3).

대구에서 교수로 활동하였거나 재직 중인 학자들도 대구 분지 지형에 동의하고 있다. 김우관은 『한국지리지방편 3』의 대구지할시 편에서 타다 후미오와 홍경희의 대구분지 견해를 수용하여 관련 내용을 비중 있게 기술하였다(김우관, 1985, 161-163). 전영권은 대구는, 조화룡의 협의의 대구분지 범위 설정에서처럼, 남쪽으로는 비슬산괴의 대덕산-앞산-산성산-법니산-용지봉, 북쪽으로는 팔공 산지, 동쪽으로는 지산-두리봉-모봉-형제봉, 그리고 서쪽은 와룡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라고 하였다(전영권, 2003, 20-29). 손명원은 금호강 유역 분지를 6개의 지형단위(보현산지, 팔공산지, 비슬산지, 영천분지, 경산분지, 대구분지)로 구획하며 대구분지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손명원, 2006). 그리고 황상일도 3편의 논문제목에 대구분지를 명시하고 있을 만큼 당연시하였다(황상일·윤순옥, 1998; 1999; 윤순옥·황상일, 2009).

3. 산간분지와 관련 하위 지형단위의 정의

1) 산간분지

자연지리학 분야에서 지형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지형학 혹은 지형 지리학에서는 일정 지역의 땅 모양이 세숫대야(basin)처럼 가운데가 함몰된 요지(凹地) 형태의 커다란 지형단위(geomorphological unit)를 분지(basin, 盆地)라고 일컫는다. 이러한 분지 지형은 지구 표면의 육지와 해양지에서 함께 발달해 있는데, 육지 상의 분지는 대륙의 주요 산맥과 대지(plateau)에서 지반운동으로 형성된 타림(Tarim)이나 그레이트 베이슨(Great Basin) 등과 같은 소수의 대규모 내륙분지(inland basin)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은 산간분지(intermontane basin)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산간분지에 대해 국내 지리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국내에서 분지 지형에 관해 가장 많은 연구논문을 발표한 장재훈은 산간분지를 “형상적으로 주위가 산지로 완전히 둘러싸인 평지”라고 정의하였다(장재훈, 1985, 59). 하지만 그는 한국의 산간분지 형태 분류에서는 정의와 동일한 의미의 ‘폐쇄형 분지’ 외에, 주위 사면(四面) 중 한 방향에서 넓은 하곡지(河谷地)가 발달한 ‘하곡지 관통형’과 평야 지역으로 연속되며 개방된 ‘U자형의 개방형’도 분지 지형으로 간주하였다(장재훈, 1987, 140; 1997, 5-8). 그리고 국내 일부 자연지리학자들이 편찬한 자연지리학 사전에서는 산간분지를 “산간 지방 즉, 산지 사이에 발달한 분지로서, 그 형성 원인은 주로 (기반암의) 차별 침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한국지리정보연구회, 2004, 170).

이에 비해 외국 학자들의 정의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유럽, 북미, 일본 등의 지형학자들이 주축

으로 1989년 창립한 국제지형학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morphologists)는 회원들의 협업으로 2004년 지형학 백과사전을 발간하였다. 여기서 산간분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Migoñ, 2004, 573-574). 첫째, 산간분지의 분포는 다양한 모양과 규모를 띠며 고지대(uplands)와 높고 낮은 산지에서 일반적으로 잘 나타난다. 둘째, 산간분지는 사방팔방(四方八方, all sides)이 높은 지형(higher terrain)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셋째, 산간분지에서 배수는 분지저(盆地底, basin floor) 즉, 평야를 형성한 좁은 하곡(narrow valley)의 하천에 의해 이루어진다. 넷째, 산간분지의 경계를 이루는 주변 사면(marginal slope)과 분지저 사이에는 경사 급변점(sharp junction)이 존재한다. 다섯째, 산간분지 성인의 대부분은 기반암의 암질과 구조선(structural line)에 따른 차별적 삭박작용과 침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내의 지형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산간분지는 분지저에 해당하는 일정한 크기의 평야가 좁은 하곡을 제외하고 사방팔방으로 고지대, 산지 등의 더 높은 지형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단위를 뜻하는 학술분야(지리학)의 전문용어인 것이다.

2) 산간분지의 하위 지형단위

위에서 규정한 산간분지 지형의 정의만으로는 산간분지 지형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산간분지 지형은, 분지저는 평야, 그 외연(外緣)은 고지대, 산지 등의 지형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 판단 여부는 관련 지형단위 각각의 정의와 더불어 이를 가름하는 객관적인 최소 기준으로 파악해 봐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고지대는 지형학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가 아닌 일반 용어여서 영미권의 영어 사전적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전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정의는 “하천 연변의 저지대(lowlands) 즉, 평야 또는 평지보다 고도가 높은 구릉지, 산지, 경사지(slope), 대지 등의 뜻”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지대의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산간분지의 외연 경계 지형은 산지 뿐만 아니라 당연히 구릉지, 대지 등도 포함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간분지의 분지저가 되는 평야 지형을 비롯해 외연 경계 지형을 형성하는 산지, 구릉지, 대지 등과 같은 하위 지형단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위해 각각의 정의와 최소 기준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평야

영미의 주요 영어사전에서는 대체로 평야(plain) 또는 평지를 육지에서 평평한 지역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미국지리협회(NGS) 산하의 미국지리교육재단(National Geographic Education)의 온라인 백과사전에서도 “평야를 비교적 평탄한 넓은 육지지역”으로 규정하고, 지구 육지의 주요 지형의 하나로서 세계 육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며, 대표적인 평야지형인 초원평야, 범람원, 해안평야의 각각에 대해서 주제로 다루고 있다. 특히 산간분지인 경우 분지저가 될 수도 있는 범람원에 대해서는 “범람을 받기 쉬운 육지 지역으로 하천의 제방 보다 더 높은 고도에 있는 평탄한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근 세계의 우수 언론기관 등에 온라인 과학정보 제공 업체로 유명한 Advameg(2000년 창업)의 과학백과사전의 지형 편에서는 “평야를 평평하거나 완만한 기복이 있는 저지대(lowland)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평야와 대지의 중요한 차이에 대해서는 “평야는 어느 한 방향(측면)에도 가파른 내리막 경사지(steepest sides)가 없고, 주변 경관 또는 지역에 비교하여 저고도(low elevation)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형 형성 과정에서 대지처럼 용기가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첨언하였다. 그리고 미국 농무부 자연자원보전청(USDA-NRCS)이 2013년 4월 이후 제공하고 있는 ‘NSSH (The National Soil Survey Handbook, 국가 토양조사편람) Part 629: 지형 및 지질 용어집(Glossary of Landform and Geologic Terms)’에서는 “평야에 대해 저고도에 있는 크고 작은 평탄한 저지 지역을 일컫는 일반 용어로서, 주변 지역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저고도에서 나타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들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평야는 해발고도가 낮은 저고도에 있는 비교적 넓은 육지이되 동시에 기복이 완만한 평탄한 땅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로써 사용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제지형학회의 지형학 백과사전에서는 평야를 주제로 포함하지도 않고 있으며, 어떠한 견해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아마도 세계의 육지에 분포하는 평야의 분포, 해발고도, 기복, 규모 등에서 현격한 지리적 차이가 나타나고, 이에 대한 지역 간의 인식의 차이도 매우 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국내 자연지리학 사전에서는 평야를 “기복이 작고 평탄하며 비교적 낮은(150m 내외) 토지이다. 성인으로는 침식평야와 퇴적평야로 구분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한국지리정보연구회, 2004, 660).

(2) 산과 산지

산은 일반적으로 주위의 육지보다 현저히 고도가 높은 봉우리 형태를 가진 상당한 규모의 지형을 지칭한다. 산은 지구의 지형 가운데 세계인들이 다양한 이유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왔음에도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산에 대한 정의는 없다. 이는 세계의 산이 각 지역에서 매우 다양한 모양과 지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다 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영국의 산지 지형학자 Gerrard는 산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가장 자주 사용된 기준들은 고도, 부피(volume) 또는 규모, 상대적 기복, 경사도, 개석 밀도(ruggedness or density of dissection), 간격(spacing), 연속성(continuity) 등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산지(mountain regions)에 대한 생태학적 관심과 접근이 많이 요구되므로,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고도, 상대적 기복, 수평적 규모 또는 면적(area)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범세계적인 고산대(alpine zone) 산지 혹은 산지 범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Gerrard, 2014).

우리는 산과 산지를 같은 의미로 혼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의 산(a mountain)과 복수의 여러 산들로 이루어진 산지(a mountain area or region)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어서 그 정의에서도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표 1은 산이나 산지에 대한 세계의 주요 학자와 국가 및 국제기구의 정의 요소와 기준들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산 혹은 산지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최저 고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고, 300m로 수렴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변화는 최근에 지표면 30 arc-seconds grid(약 30×30km) 단위로 경사와 국지적 고도차(elevation range)를 생성하는 글로벌 디지털 고도 모델(DEM)을 활용해 전 세계의 산지를 대상으로 지형 자료를 분석할 수 있게 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된다.

유엔 환경계획(UNEP)의 산지보전 감시센터(WCMC)는 2002년에 세계 산지생태계의 환경 변화 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함의를 담은 보고서 'Mountain Watch'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Blyth 등 6인의 저자들은 Kapos 등 5인(Kapos *et al.*, 2000)이 고도와 경사의 결합을 기반으로 '세계 산지 지도'를 개발하며 사용한 6등급의 세계 산지분류와 기준을 그대로 수용하며 7등급을 추가하였다(Blyth *et al.*, 2002, 74). 여기서 세계의 최저등급 산지는 고도 300~1000m와 반경 7km의 국지적 고도차(local elevation range) 300m 초과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도 과거 한때 지질조사국(USGS)에서 설정했었던 산의 기준(고도 1000feet 이상)을 다

시 사용하기 시작했다. 미국 농무부 자연자원보전청(USDA-NRCS)의 'NSSH part 629: 지형 및 지질 용어집'(2013년 판)에서는 산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산 꼭대기가 300m(약 1000feet)를 초과하는 일련의 산들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한편 최근에 국내 지형학계에서도 국제적 흐름을 인지하고 고도 300m 이상을 산지로 간주하고, 남북한 산지의 분포 특성에 대해 지형학적 분석을 시도해 주목된다(탁한명 등, 2013).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산에 대한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정의와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국내 산지 통계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산림청의 산지정보시스템에서도 산과 산지에 대한 정의는 찾아 볼 수 없다(www.forestland.go.kr). 그리고 자연지리학 사전에서도 산은 "고도 개념을 우선하여 주변지역(평지, 구릉)보다 높은 자연지형을 가리키고", 산지는 "기복이 뚜렷하고 주위의 저평한 지역과 명백한 산록에 의해 구별되는 지표의 일부로서, 평지, 대지, 구릉지에 비해 기복이 크고 급경사의 부분이 뚜렷하며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한국지리정보연구회, 2004, 270-274). 우리나라는 산림이 국토 면적의 3분의 2에 달할 만큼 산지가 다른

표 1. 산과 산지의 정의 요소와 기준

Price(1981)	산: 고도 높은 지형, 국지적 기복(300m 이상), 급사면
Messerli and Ives(1997)	산: 고도 500m 이상
영국, 아일랜드	산: 고도 약 610m(2000 feet) 이상
Brunsdon and Allison(1986)	산지: 상대적 기복 700m 이상
Gerrard(2014)	고산대 산지: 고도 1000m 이상, 상대적 기복 500m 이상, 면적 100km ² 이상
Kapos <i>et al.</i> (2000)	산지(최저등급): 고도 300~1000m, 반경 7km 국지적 고도차 300m 초과
이탈리아(1952, 1995)	산지: 지역 면적 80% 이상이 고도 600m 이상, 지역의 고도차 최소 600m
불가리아(1993)	산지: 지역(자치단체)의 70% 이상이 고도 600m 이상, 최고·최저점 간 고도차 400m 이상
프랑스(1961)	산지: 지역 면적의 80% 이상이 고도 600m 이상, 최고·최저점 간 고도차 400m 이상
미국 농무부 자연자원보존청(USDA-NRCS, 2013)	산지: 최고봉 고도 300m 초과하는 다수의 산과 계곡
유엔 환경계획(UNEP-WCMC, 2002)	산지(최저등급): 고도 300~1000m, 반경 7km 국지적 고도차 300m 초과

자료: Gerrard(2014), Kapos *et al.*(2000), UNEP-WCMC(2002), USDA-NRCS(2013), 서정원 등(2008), Wikipedia Website 등에서 발췌 작성.

지형단위에 비해 많고 넓게 발달해 있다. 따라서 관계 기관은 산지 관리 정책이나 산림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우리의 산과 산지에 대한 합당한 정의와 엄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통계정보를 구축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3) 구릉과 구릉지

영영 사전에서는 구릉에 대해서 대체로 지표면의 자연적 고지(高地)로서 산보다 낮고 경사가 덜할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단일의 구릉(hill)이나 집단적 의미의 구릉지(hills)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정의와 기준은 없다. 일부 국가에서는 구릉(지)과 산(지)의 지형적 차이를 구분하려고 노력하였다.

위키피디아(Wikipedia) 백과사전에 의하면, 영국의 지리학자들은 역사적으로 고도 300m 이하의 고지를 구릉(지)으로, 그 이상을 산(지)으로 간주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최고봉(summit)의 고도 600m 이상을 산지로, 그 이하를 구릉지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서도 과거에 한동안 고도 1000feet(304.8m) 이상을 산으로 정의하였고, 이보다 낮은 것을 구릉(지)으로 간주한 적이 있다.

최근 미국정부에서는 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 자연자원보존청(USDA-NRCS)의 지형 및 지질 용어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릉은 주변의 저지(lowlands)보다 30~300m 더 높고, 대체로 둘러싸는 사면(bounding slopes)과 둥근 형태의 정상부 땅(a summit area)을 가지고 있으며, 사면 경사는 대체로 15°를 초과하는 고지(elevated area)를 일컫는 일반 용어라고 하였다. 또한 구릉은 단일 형체(mass)로 나 집단으로 출현하기도 하며, 국지적 기복의 크기에 따라 저 구릉(30~90m)과 고 구릉(90~300m)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국내 자연지리학 사전에선 구릉(지)을 평야와 산지의 접이 지형으로 간주하고, 주로 평지의 주위나 산지의 전면(前面)에 잘 분포하는 지형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국내 구릉지의 기복량은 대부분 150m 이하이고

경사도는 15° 미만이라고 하였다(한국지리정보연구회, 2004, 65-66).

(4) 대지

대지(臺地, plateau)는 평야, 구릉지, 산지와 함께 네 가지 주요 지형의 하나로 그 형태적 측면을 강조하여 고원(高原, tableland)이라고도 한다. 주요 영영 사전에서는 대지를 “최소한 한쪽 면(one side)이 주변지역 보다 급격히 높고 평탄하며 광활한 지역”이라는 정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고지에 형성된 비교적 평평한 넓은 지역”으로 기술하고 있다. 미국지리교육재단(NGE)의 백과사전에서도 전자의 정의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지는 지형학 전문용어이지만 그 정의에서는 견해의 차이가 뚜렷하다. 미국 Advameg 사의 과학백과사전의 지형 편에서는 대지에 대해 “주변 지역보다 1500feet(475m) 이상 고도에 형성된 비교적 평평한 대규모 광활 지역이지만 한쪽 면 이상이 가파른 사면(steep slope)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비해 미국 농무부 자연자원보존청(USDA-NRCS)의 ‘지형 및 지질 용어집’에서는 대지의 고도를 훨씬 낮게 보고 있다. 이 기관은 미국 지질학연구소(American Geological Institute)에서 편찬한 ‘지질학 용어 사전’에 근거하여 대지를 “부근의 낮은 지형보다 지표면의 고도가 100m 이상 더 높고 거의 평탄한 광대한 지역으로서 일반적으로 한쪽 면 이상에서 가파른 내리막 사면이 발달해 있다”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국내 자연지리학 사전에서는 “해발고도 600m 이상, 기복 150m 내외인 비교적 고도가 높고 넓은 면적의 평탄한 지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한국지리정보연구회, 2004, 137).

3) 본 연구의 산간분지 정의

본 연구는 대구 지방의 지형이 산간분지로서의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학술적으로 재검토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타당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간분지를 구성하는 하위 지형단위(subordinate landform unit)

인 평야, 산지, 구릉지, 대지 등 각각의 정의에서 규정된 최소 기준을 바탕으로 산간분지의 개념적 정의를 재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산간분지의 분지지에 해당하는 평야의 범위는 분지지를 관통하는 하천을 따라 발달한 평야의 표고(해발고도)가 상이하므로 지역에 따라 그 고도 기준도 상이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자연지리학 사전에서는 평야의 고도 한계를 150m 내외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저고도(low elevation)를 강조할 뿐 구체적인 고도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세계 도처에 평야의 고도가 너무나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평야의 고도 기준은 각 지역에 발달한 저지대의 고도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규정함이 합리적이다. 대구 지역의 평야는 대부분 금호강과 신천 주변에 발달한 범람원으로서 해발고도 75m 이하라고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광역시와 같은 소지역 지형의 전체적인 고도와 기복 등을 파악해 보는 데 무리 없는 1:50,000 지형도와 등고선의 계곡선(고도 100m 간격)을 참조하여, 고도 100m 이하의 지형을 분지지에 해당하는 평야 또는 평지로 간주하고자 한다.

산은 정상 봉우리의 고도가 300m 이상이면서 사방으로 가파른 사면이 발달해 있는 지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정의에서 산의 최저 고도는 300m 이상으로 나타났다. 산지의 국지적 또는 상대적 기복은 300~700m가 주장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산지의 범위 확정보다는 개별적인 산의 연속적인 분포 유무에 초점이 있으므로 산지의 기복은 고려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구릉과 구릉지는 평야와 산의 정의 및 기준을 고려하여 평야보다 훨씬 고도가 높은 300m 미만의 정상부 땅을 가진 고지대(upland, highland)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러한 근거는 국내의 영어사전 정의에서 보편적으로 구릉을 산보다 낮고 완만한 지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대지(고원)의 정의는 “부근의 낮은 지형보다 100m 이상의 높은 고도에 발달한 비교적 평탄하고 광대한 지표면으로서, 최소한 한쪽 사면에서 가파른 사면이 있는 지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대지의 정의에 나

타난 상이한 고도 기준에도 불구하고 미국 농무부 자연자원보전청과 미국 지질연구소의 견해를 수용한 것은 우리나라의 지형조건에도 잘 부합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대표적인 대지 지형의 하나인 진안고원은 전북 진안군을 중심으로 인근의 무주, 장수군에도 걸쳐 있는 해발고도 300m 내외의 평탄지를 말한다. 또한 이 고원의 서쪽 경계지대 일부에서는 평야지대인 완주군 소양면과 진안군 부귀면 사이에 약 200~300m의 고도 차이가 있는 가파른 사면이 형성돼 있다는 사실이 잘 반증해 주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산간분지의 개념 요소와 관련된 하위 지형단위의 최소 요건 기준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산간분지를 정의하고자 한다. 산간분지는 ‘분지저 즉, 해발고도 100m 미만 평야 지역이 이를 형성한 좁은 하곡(河谷)를 제외하고는 사방팔방으로 고도 300m 이상의 산지, 고도 100m 이상~300m 미만의 구릉지, 주변지역 보다 100m 이상의 고도를 가진 대지 등의 고지대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하지만 본 연구지역에서는 대지 지형이 출현하지 않아 적용하지 않는다.

4. 대구 산간분지 지형 인식의 문제점과 비판

1) 문제점 논의

여기서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산간분지 개념에 의하여 대구 산간분지 지형을 주장한 3인의 견해에 대해 각각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타무라 가즈히사(田村一久)의 대구 분지 지형 인식은 산간분지의 지형학적 정의는 물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의의 기준에도 합치하지 않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적인 문제점은 대구의 분지저 범위로서 낙동강, 금호강, 신천 등의 범람원 이외에 동·서부 100~300m 고도의 구릉지까지 포괄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더 중요한 문제점은 분지저의 남·북은 비슬·팔공산괴를 그 외연 경계로 삼았으나, 동·서는 둘러

싸는 산지가 없어 당시 대구지역에서 크게 벗어난 경산군의 안심 평야와 달성군의 낙동강을 경계로 설정했다고 하였음에도 대구의 지형이 분지라는 주장을 폈다는 점이다.

타다 후지오(多田文男)는 앞서 주장한 타무라의 대구분지 외연 경계 설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의식한 듯 대구분지의 형태를 장방형이 아닌 삼각형으로 인식하고, 애써 대구의 3면(남, 서, 동북쪽)이 산지로 둘러싸인 산간분지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3면 중 서쪽 면으로 설정한 (고령군의 의봉산에서 대구부 서북방향으로 궁산·와룡산·함지산에 이르는) 구릉성 산지는 그림 3과 4에서 보는 바, 낙동강 주변의 형성된 광활한 평야 속에 점상(點狀)의 산발적 분포에 지나지 않고, 더욱이 남쪽과 동북쪽 면의 사이 즉, 동쪽에는 금호강을 따라 양안에 금호평야가 발달돼 있어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또한 그는 분지저 범위에 서부지역에서와 달리 동부(현, 수성구)에 발달한 고도 100~300m의 형제봉, 모봉, 두리봉, 지산 등의 구릉지를 그 일부로 간주하였다. 이 밖에 평야가 발달한 대구 서쪽 지역의 경계 설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당시 달성군과 낙동강을 건너 위치한 고령군의 의봉산을 분지 지형단위 분석에 포함하는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

조화룡의 대구분지 지형단위 분석은 일본 학자들의 것에 비해 진전되었다. 그는 대구분지를 협의와 광의의 지형단위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협의의 대구분지는 고도 100m 미만의 평야를 분지저로 한정하고 주변 지형과의 경사 급변점이 나타나는 구릉지나 산지를 따라 분지 지형의 외연 경계를 설정한 것이다. 이것은 본 연구의 산간분지 정의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분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분지저의 서쪽과 동쪽은 산간분지의 외연 경계를 설정하기에 어려울 만큼 구릉지와 산지 발달이 미약함에도 대구를 산간분지 지형으로 간주하고 주장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그림 1, 3).

그는 협의의 대구분지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념화한 것으로 짐작되는 광의의 대구분지 지형 분석에서는 전자의 것과 달리 분지저 범위에 고도 100~300m의 구릉지를 포함시키고, 300m 이상의 산

지를 따라 그 외연 경계를 설정하는 모순적 기준을 적용하였다(그림 2). 무엇보다도 광의의 대구분지는 대구의 중심 시가지(중·서·남·북·동·수성구)가 주로 발달한 금호강 하류 유역을 중심으로, 시역을 크게 벗어나서 서쪽으로는 대구 인근의 낙동강 본류 유역(칠곡군, 대구 달서구·달성군 대부분, 고령군 일부)과 그 지류인 백천 유역(성주군)을, 그리고 동쪽으로는 금호강 상·중류 유역(영천, 경산시)과 형산강의 지류인 대천 유역(경주시 건천읍, 서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구 인근 낙동강 본류의 동·서 지류에 형성된 금호강·백천 유역 분지를 중심으로 대구의 산간분지 지형단위를 분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간분석 범위를 놓고 자연 및 인문지리 관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아 보인다. 그럼에도 이 지형단위는 동쪽 경계와 서북·서남쪽의 낙동강 본류 유역에 산지 발달이 취약해 산간분지의 형태적 조건을 잘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2) 비판과 대안

앞 장에서 살펴 본 대구 산간분지를 주장한 3인의 문제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점은 각각 산간분지의 개념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과 또한 산간분지 지형단위를 설정하기 위한 공간분석 범위도 상이하며 무리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 지역의 지형이 산간분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두 가지 점에 대한 통일성 있는 원칙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하나는 산간분지는 지리학의 전문용어인 만큼 그 개념적 정의에 충실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간분지를 분지저에 해당하는 고도 100m 미만의 평야 지역이 이를 형성한 좁은 하곡(河谷)를 제외하고는 사방팔방으로 산지(고도 300m 이상)와 구릉지(100m 이상~300m 미만)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정의하고 분석에 적용한다고 했다. 이에 의하면 대구지방의 산간분지 여부는 중심 시가지에 해당하는 평야의 주위에 산지와 구릉지가 어느 정도로 발달돼 있는가가 분석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서 대구의 평야가 사방팔방으로 산지와 구릉지로 둘러싸이는 것

으로 분석되면 그 평야는 분지저가 되면서 분지지형을 형성한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특정 방향에 산지 발달이 많은 평야지역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지방의 지형적 특성은 기본적으로 그 지방의 관할구역과 경계지대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지방의 지형이 분지 형태인지 아닌지, 그리고 분지이거나 아니라면 어떤 지형적 특징이 있는지는 대구의 관할구역 내 지형 분석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특히 산간분지를 구성하는 산지, 평야 등의 하위 지형단위는 여러 지역에 걸쳐 연속적으로 발달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대구지방의 지형적 특성 혹은 정체성(산간분지 지형)을 분석하고 확인하는 데에 여러 타 지방을 포함시키거나 형태적으로 유사한 하천유역 분지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대구의 산간분지 지형단위 확인은 관할구역과 하위 지형단위가 겹쳐있는 인접 지방(시·군)의 가까운 경계지대까지만 포함하여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구가 산간분지에 속한다는 사실을 재생산하거나 강조하기 위해 하천유역 분지(대구 인근의 금호강·백천 유역 분지)와 같은 넓은 공간단위로 분석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된다. 유역 분지(drainage basin, river basin)는 하나의 하천에서 망상(網狀)으로 발달·연결된 수로로 지표수가 흘러들고 수렴하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을 뜻한다. 또한 유역 분지는 최고 지점과 최 외곽 능선의 최고점에 의해서 다른 유역 분지와 분수계 혹은 경계를 이루며 분리되고 있음으로 분지의 대부분은 유수(流水)의 작용에 의해 형성된 침식지형이기도 하다. 엄밀한 의미에서 유역 분지는 일단의 침식사면(hillslopes)과 하계망(drainage network) 혹은 하천 수로라는 두 가지 하위 지형단위(landform units)로 구성된 개념인 것이다. 하지만 유역 분지는 침식사면보다는 하계망의 의미를 더 강조하여 유역 혹은 유역권(catchment (area), watershed⁶⁾, drainage area)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 지형단위(geomorphological unit)로서 보다는 수문학적(水文學的)인 물 공급과 생태조사 연구를 위한 주요한 경관단위(landscape unit)로서 자주 사용

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Goudie *et al.*, 2004, 272-274). 그러므로 대구 산간분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역 분지의 범위로 확대하여 본 것은 다소 상이한 개념의 지형단위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면적이 넓은 금호강·백천 유역 분지에는 대구, 경산, 영천, 성주, 칠곡 등의 여러 고을 혹은 지방이 일찍부터 상이한 지리적 위치에서 상이한 지역사회로 발달돼 왔음에도, 이들을 대구분지 영역으로 포괄해 보는 것은 각 지방의 지리·역사적 정체성은 물론 주민 정서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원칙으로 대구의 분지 지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후자의 원칙은 관할구역의 변천에 따라 분석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구는 1914년부터 도시행정구역에 대해 별도의 부제(府制)가 실시됨에 따라 오늘날 대구 중구를 중심으로 전국 12부(府) 중 하나의 도시로서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⁷⁾. 이후 대구는 1917년, 1938년, 1958년, 1963년, 1981년, 1995년에 걸쳐서 관할구역을 개편해 왔다. 하지만 대구의 도시 역사에 따른 관할구역의 공간범위 변천은 1981년 7월 1일 직할시 승격 전후 시기에서 가장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대구 시역은 1914년 7.6km²에서 1938년에 달성군의 수성·달서·성북면이 편입되어 115.68km², 1958년 463.19km²로 크게 확장되었다가 1963년에 농촌지역(282.77km²)이 다시 달성군에 환원됨으로써 1981년 6월까지 오랫동안 178.32km²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직할시 승격과 동시에 대구는 경산군의 안심읍과 고산면, 달성군의 월배·성서읍과 공산면, 칠곡군의 칠곡읍을 편입해 시역을 455.78km²로 확장하고, 1995년에는 대구광역시로 출범하면서 달성군 전역(화원읍, 가창·다사·하빈·옥포·논공·현풍·유가·구지 등 8면) 426.59km²를 편입하여 시역이 883.56km²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할시 이전인 예전의 역사적 관할구역⁸⁾과 이후 오늘날 광역시 관할구역과의 현격한 공간범위를 감안해 각각의 구역과 경계지대를 중심으로 산간분지 지형단위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역사적 관할구역은 구시가지인 중구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평야 지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평야

가 사방(四方: 남·북·동·서)과 사隅(四隅: 남동·남서·북동·북서)의 팔방(八方)에서 산지와 구릉지 등의 고지대로 둘러싸이는지를 국토지리정보원의 최신 수치지형도(2012년) 상의 고도 값으로 외연 경계 지대를 살펴보기로 한다(그림 3). 중구의 동쪽 방향으로는 평야 지형에서 경사 급변점이 나타나는 형제봉(190m), 모봉(159m)과 같은 저고도 구릉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금호강 유역의 금호평야(안심평야, 경산 평야)로 이어져 산간분지로서의 외연 경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쪽의 남부 방향(서구 남측지역)과 남서쪽(달서구)도 예전의 월배 평야를 지나 낙동강 건너편의 다산 평야(고령군)로 이어지는 광활한 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서쪽의 북부와 북서쪽에서는 와룡산(295m)·잡산(198.5m)

등의 구릉지가 발달해 있으나 잔구(monadnock)처럼 분포해 있어 분지의 확연한 외연 경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쪽과 북동쪽은 함지산(287.7m)·도덕산(660.8m)·응해산(526m)·응봉(456m)·문암산(431.4m)·능천산(492m)등으로 이어진 이른바 환상 산맥의 일부가 외연 경계지대를 형성하고, 배후에는 팔공산과 혹은 팔공산지(초례봉-환성산-인봉-팔공산-가산)가 발달해 있다. 남쪽과 남동쪽은 대덕산(546m)·앞산(660.3m)·산성산(650m) 등의 앞산산괴, 법니산(348.5m)·용지봉(629m)·대덕산(599.5m) 등의 용지산괴, 지산(231m)·무학산(203m)·두리봉(210m) 등의 낮은 구릉지로 둘러싸여 있고, 배후에는 비슬산(1083m)과 최정산(880m) 등이 솟아 있다. 그리고 오늘날 대구광역시 관할구역과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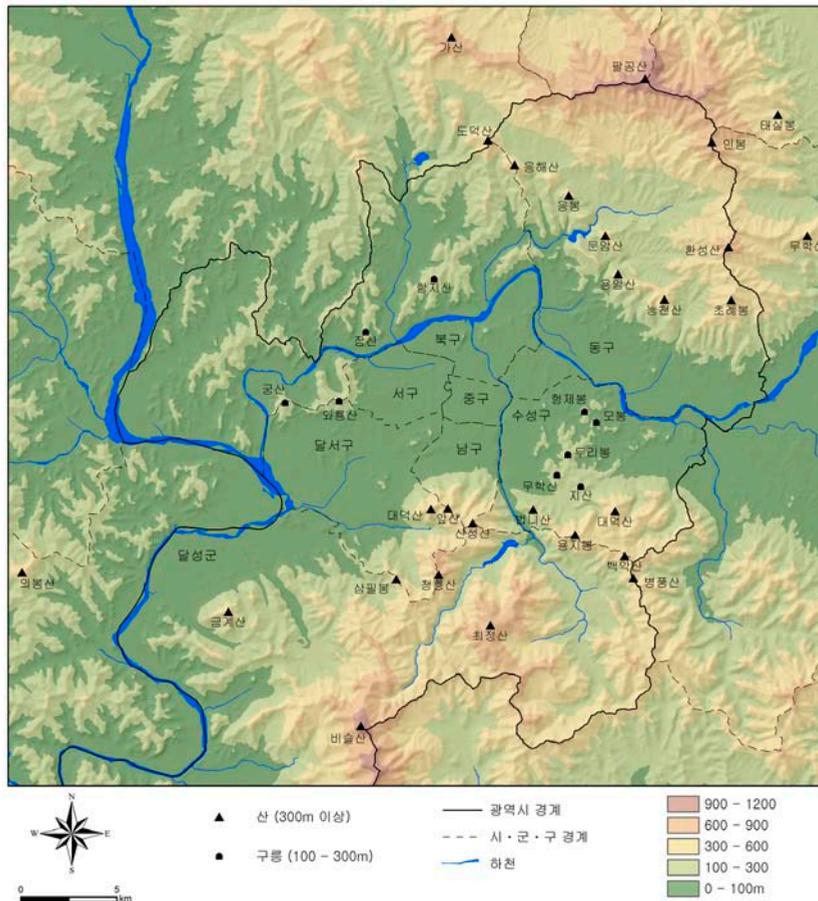


그림 3. 대구시 역사적 관할구역과 경계지대의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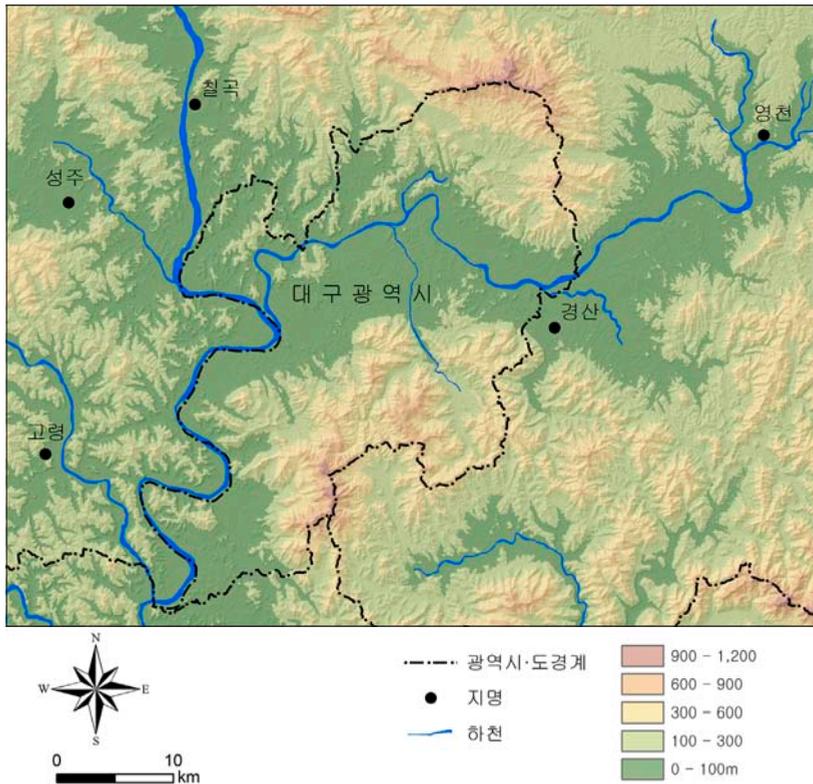


그림 4. 대구광역시 관할구역과 경계지대의 지형

계지대 지형을 중심으로 분지 지형단위를 검토해 보아도, 지역의 북쪽, 북동쪽, 남쪽, 남동쪽, 북서쪽 일부는 산지와 구릉지로 둘러싸이지만, 나머지 방향은 평야 지형이 발달하여서 산간분지의 기본 형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그림 4).

요컨대, 대구지방의 역사적 관할구역은 물론 최근 확장된 대구광역제도 팔방(남, 남동, 북, 북동)과 북서 일부만이 연속적인 고지대(산지, 구릉지)로 둘러싸여 있어 국제지형학회의 관점과 개념 정의에 의하면 산간분지 지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사실로 알고 있거나 믿어 왔던 대구 분지 도시라는 인식도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리 오개념의 하나로서 하루빨리 부정되고 교정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우리는 수많은 지리 오개념들로서 우리나라나 세계를 잘 못 이해하고 그릇된 관점으로 보고 있을지 모른다. 사회적으로 한번 구성된(만들어진) 그러한 오개념들은 세대를 거치며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거나 학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구 분지 지형도 오개념의 반복적 생산과 교육의 결과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문제를 토대로 분지 지형의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 대구의 지형이 분지 혹은 산간분지라고 주장한 타무라 가즈히사(田村一久, 1933), 타다 후미오(多田文男, 1940), 홍경희(1966), 조화룡(1995) 등의 관련 문헌을 엄밀히 검토하고, 아울러 이를 재생산하는 교과서(고등학교 한국지리)와 주요 일간지 신문기사도 살펴보

았다. 대구 산간분지라는 오개념도 소수의 전문 지리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관련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지리학자들(교수, 교사)과 언론인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확산돼 온 것이 확인되었다.

지형이나 지형단위에 대한 최근 국제지형학계나 관계 기관의 동향과 견해를 수렴하여 본 연구에서는 “산간분지를 분지저에 해당하는 고도 100m 미만의 평야 지역이 이를 형성한 좁은 하곡(河谷)을 제외하고 사방팔방으로 산지(고도 300m 이상)와 구릉지(100m 이상~300m 미만)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정의하고, 대구의 예전의 역사적 관할구역과 오늘날 광역시역을 대상으로 산간분지 지형단위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대구의 중심 평야지역은 주위 사방팔방 중에서 사방(북쪽, 북동쪽, 남쪽, 남동쪽)과 북서 일부만이 산지와 구릉지로 둘러싸여 있어 산간분지 지형이라고 볼 수 없다. 대구는 북과 남 방향에 산지가 발달돼 있지만 동서로는 금호강 하류에 위치한 덕에 외려 평야 지형이 잘 발달해 있는 개방적인 평야 혹은 평원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대구분지라는 지리 오개념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또 다른 파생적 오개념을 생성하여 대구의 거주 환경과 지역민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이미지를 낳기도 한다. 즉, 대구는 분지라서 여름철에 너무 더워 살기 힘들지 않느냐 라든지, 심지어 대구 사람들은 분지에 갇혀 살아서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기질이 많으며 사고(思考)도 그렇게 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지난 80여 년간 우리가 사실인 것처럼 알고 있는 대구 분지도시라는 지형 인식은 하루빨리 부정되고 교정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한국과 세계에 관한 수많은 지리 오개념에 대해서 학계의 관심과 더불어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주

1) 이는 2010년 3월 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대구시·경상북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세종시 수

정안’에 따른 ‘TK 역차별 논란’을 겨냥해서 “분지적 사고를 하면 안 됩니다. 비록 분지라고 해도 사고는 분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YTN뉴스, Posted : 2010.3.6.01:51). 이에 대해서 이계성 논설위원은 대구 지역민의 유난한 폐쇄성과 보수성이 분지 지리적 특성 탓이라고 보는 견해가 적지 않라며 ‘분지적 사고론’으로 표현하였고(한국일보 2010.3.7. 일자), 김종구 논설위원은 분지적 사고는 ‘분지에 사는 사람들은 소견이 좁고 폐쇄적이라는 속설’에서 나온 발언으로 짐작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한겨레 2010.3.9. 일자).

- 2) 이는 오늘날로 보면 달성산은 달성공원, 동산은 동산동 청라언덕, 남산은 예전에 아미산으로 불렸던 반월당 관덕정 뒤편에 있는 언덕, 오포대(午砲臺)는 일제강점기에 정오를 알리는 대포가 있었던 예전의 연귀산(連龜山)으로 제일중학교 교정, 수도산은 예전의 기린산 혹은 삼봉산으로 남구 이천동 대봉 배수지 등과 같은 고도 100m 미만의 낮은 구릉지를 일컫는다.
- 3)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으나, 당시 경상군 고산면(현, 대구 수성구)의 삼덕동에 위치한 대덕산에서부터 동으로 용지봉·산성산·앞산·청룡산·삼필봉·금계산(달성군 옥포면과 논공읍 사이 소재) 등으로 이어지는 산지의 북쪽 급사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 4) 이 가운데 용제봉(龍祭峯) 산괴는 앞서 언급된 용제산 산괴를 바꿔 호칭한 것이다. 한편 타다는 대구 남쪽의 여러 산악 정상부에는 평탄면(平坦面)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용제봉 산괴에 속하는 백악산(白岳山, 560m)에서는 고도 400m 이상에 평탄지가 발달해 있으며 여기엔 논농사가 이루어지는 지전동(池田洞, 현, 범물동 진밭골)이라는 마을이 형성돼 있다고 기술했었다(多田文男, 1940, 13-14.).
- 5) 이에 대해서 타다는 팔공산괴를 둘러싸는 도덕산(600m)·암해산(현, 응해봉, 507m)·응봉(448m)·문암산(426m)·능천산(380m)·(초례봉)·무학산(593m)·태실봉(460m) 등으로 이어진 이른바 고리 모양의 산지를 환상(環狀) 산맥이라고 이름 하였다(多田文男, 1940, 12).
- 6) watershed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분수령 혹은 분수계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데 비해 미국에서는 유역권의 뜻으로도 함께 사용한다(<http://www.dictionary.com/browse/watershed>).
- 7) 1886년(고종 33) 우리나라는 오늘날 지방행정체제의 근간이 된 13도로 개편됨에 따라 경상도는 남북으로 나뉘지고, 경상북도는 감영이 있는 대구군을 비롯한 41개 군을 새로이 설치·관할한다. 대구군은 1910년(융희 10) 동일한 행정구역이 대구부(府)로 승격된다. 이때 부는 29개 면(面) 260개 동(洞)으로 구성돼 있었다. 1911년 11월에는 동상(東上)면과 서상(西上)면이 대구면(面)으로 통폐합된다. 그리고

1914년에 다시 부제(府制)개편이 단행돼 대구부는 도시적 성격이 강한 대구면(당시 면적은 7.6km²으로 2016년 5월 현재 대구 중구 면적 7.06km²과 비슷함)으로 대폭 축소되고, 나머지는 수성, 가창, 공산, 해안, 하빈, 다사, 성북, 달서, 성서, 월배, 화원, 옥포 등 12개 면으로 통폐합되어 신설된 달성군으로 편입된다. 이때 인접한 현풍군의 4개 면(논공, 현풍, 유가, 구지)도 통합된다. 한편 당시 대구부 인구는 7,920호에 31,949명이었다.

8) 이 구역은 구시가지(舊市街地, old town)였던 대구광역시 중구를 중심으로, 동서 방향으로는 형제봉에서 와룡산, 남북은 앞산·범니산에서 함지산·문암산 등의 사이에 해당하는 시가지 지역으로서 1981년 7월 1일 대구직할시 승격 이전의 관할구역과 대체로 일치한다. 대구의 역사와 더불어 일찍부터 대구시역으로 편입된 오래된 대구 시역이므로 역사적 관할구역이라고 명명했다.

참고문헌

- 권혁재, 1987, 한국지리, 법문사.
- 김민성, 2013, “교사들이 인지하는 고등학생들의 한국지리 오개념,” 대한지리학회지, 48(3), 482-496.
- 김우관, 1985, “1)지질 및 지형,” 한국지리:지방편 3, 건설부 국립지리원, 161-163.
- 김종욱·주경식·엄정훈·강진우·이종식·서민철·심승희·김학희·신동화, 2003,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학사.
- 김주환·홍현철·신현종·김진수, 2003, 고등학교 한국지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대구시사편찬위원회, 1973, 대구시사(제3권), 대구시.
- 대구시사편찬위원회, 1995, 대구시사 제1권(통사), 대구광역시.
- 대한지리학회, 1985, 한국지리: 지방편 3, 건설부 국립지리원.
- 대한지리학회, 2005, 한국지리지: 경상편,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두산동아백과사전연구소, 1996, 두산세계백과사전(Doopedia 백과사전), 두산.
- 박희두·손용택·이동환·장덕환·우옥택·윤기원·한경찬·홍용기, 2004, 고등학교 한국지리, 천재교육.
- 서정원·진준현·유병일, 2008, 지역개발과 산지법의 실태, 국립산림과학원.
- 손명원, 2006, “금호분지 내 지리관광자원의 자연지리학적 배경,”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2), 202-214.
- 손 일, 2008, “산간분지의 형태기하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반도 남부를 대상으로,” 한국지형학회지, 15(4), 17-28.
- 윤순옥·황상일, 2009, “대구분지의 화분분석과 홀로세 후기 기후 환경변화,” 한국지형학회지, 16(4), 47-59.
- 이기은, 2005, 대구 분지의 지형 분류,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용·김훈기·강용진·서원명·최부현·최유진·이태규, 2003, 고등학교 한국지리, 법문사.
- 이승호·정환영·강대균·김한재·이재은, 2003, 고등학교 한국지리, 두산.
- 이재하, 2014, “CHAPTER 03 지표공간의 특성,” 대구경북의 이해, 대구경북학회·대구경북연구원, 양서원, 121-160.
- 장재훈, 1985, “한국의 침식면과 산간분지에 관한 연구,” 응용지리, 8, 59-78.
- 장재훈, 1987, “한국의 산간 분지에 관한 지형 연구,” 성신연구논문집, 25, 137-151.
- 장재훈, 1997, “침식분지의 형태와 발생과정에 관한 연구,” 사진지리, 6, 1-16.
- 전영권, 2003, 전영권의 대구지리, 도서출판 신일.
- 조성호·박선희·박철웅·육한석·이경택·채기병·최원길, 2003, 고등학교 한국지리, 대한교과서.
- 조화룡, 1995, “제3장 지형,” 대구시사 제1권(통사), 대구광역시, 37-51.
- 조화룡·한주성·서태열·임준목·심정규·마경목·박승운·권종원, 2003, 고등학교 한국지리, 금성출판사.
- 탁한명·김성환·손일, 2013, “지형학적 산지의 분포와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8(1), 1-18.
- 한국지리정보연구회, 2004, 개정판 자연지리학사전, 한울.
-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 홍경희, 1966, 대구시:도시지리학적 연구, 대구시.
- 황만익·최은식·장 호·진기문·박병석·유대환·탁송일·황완길, 2003, 고등학교 한국지리, 지학사.
- 황상일·윤순옥, 1998, “대구분지의 자연환경과 선사 및 고대의 인간생활,” 대한지리학회지, 33(4), 469-486.

- 황상일·윤순옥, 1999, “대구분지의 선사 및 고대 인간생활에 미친 Holocene 자연환경변화의 영향.” 한국고고학보, 41, 1-36.
- Blyth, S., Groombridge, B., Lysenko, I. Miles, L. Newton, A., 2002, *Mountain Watch*, UNEP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Cambridge, UK.
- Brunsdon, D. and Allison, R. J. 1986, Mountain and highlands, in Fookes, P. G. and Vaughan, P. R.(eds.). *A Handbook of Engineering Geomorphology*, Surrey University Press, Guildford, 150-165.
- Gerrard, A. J., 2014, *What Is Mountains?: Background Paper to Definition of Mountains and Mountain Regions*, World Bank Group, Washington, D. C.
- Goudie, A. S.(ed.), *Encyclopedia of Geomorphology Vol.1*,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morphologist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Gregory, K. J., and Lewin, J., 2014, *The Basic of Geomorphology: Key Concepts*, Sage Publication, London.
- Kapos, V., Rhind, J., Edwards, M., Price M. F., Ravilious, C., 2000, Developing a map of the world’s mountain forests, in Price, M. F. and Butt, N.(eds.), *Forests in Sustainable Mountain Development: A state-of-knowledge Report for 2000*, CAB International, Wallingford, 4-9.
- Körner, C. and Ohsawa, M., 2005, Chapter 24 Mountain systems, in Hassan, R., Scholes, R., Ash, N.(eds.), *Ecosystems and Human Well-being: Current State and Trends, Volume 1*, Islandpress, Washington, D. C., 681-716.
- Körner, C., Paulsen, J., Spehn, E. M., 2011, A definition of mountains and their bioclimatic belts for global comparisons of biodiversity data, *Alp Botany*, 121, 73-78.
- Messerli, B. and Ives, J. D. (eds.), 1997, *Mountains of the World: A Global Priority*, Parthenon, London.
- Migoń, P., 2004, Intermontane basin, in Goudie, A. S.(ed.), *Encyclopedia of Geomorphology Vol.1*,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morphologist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573-574.
- National Geographic Society, 1989, *Exploring Your World The Adventure of Geography*, National Geographic Society, Washington, D. C.
- Nelson, B. D., Aron, R. H., and Francek, M. A., 1992, Clarification of selected misconceptions in physical geography, *Journal of Geography*, 91(2), 76-80.
- Price, L. W., 1981, *Mountains and Ma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Price, M. F., Jansky, L., Iatsenia, A. A., 2004, *Key Issues for Mountain Areas*,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Tokyo.
- 多田文男(Tada, F.), 1940, “大邱盆地の地形”, 大邱府史第三特殊編, 大邱府, 1-14.
- 田村一久(Tamura, K.), 1933, 朝鮮に於ける 郷土地理の 實例, 大和商會印刷所出版部, 京城.
- 디지털진안문화대전, 진안고원, <http://jinan.grandculture.net/Content?local=jin>
- Advameg, Science Encyclopedia, landforms, <http://www.scienceclarified.com/landforms/>
- National Geographic Education, plain, <http://education.nationalgeographic.com/encyclopedia/plain/>
- National Geographic Education, plateau, <http://education.nationalgeographic.com/encyclopedia/plateau/>
- The Free Dictionary, definition of upland, <http://www.thefreedictionary.com/Upland>
- USDA-NRCS, NSSH Part 629:Glossary of Landform and Geologic Terms, http://www.nrcs.usda.gov/wps/portal/nrcs/detail/soils/ref?cid=nrcs142p2_054230#00
- Wikipedia, hill, <https://en.wikipedia.org/wiki/Hill>
- Wikipedia, mountain, <https://en.wikipedia.org/wiki/Mountain>
- Wikipedia, upland and lowland, [https://en.wikipedia.org/wiki/Upland_and_lowland_\(freshwater_ecology\)](https://en.wikipedia.org/wiki/Upland_and_lowland_(freshwater_ecology))
- 교신: 이재하, 41566,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지리학과(이메일: leejha@knu.ac.kr)
- Correspondence: Jaeha Lee,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80 Daehakro, Bukgu, Daegu, 41566, Korea (e-mail: leejha@knu.ac.kr)

최초투고일 2016. 6. 7
수정일 2016. 6. 20
최종접수일 2016. 6. 26

인천광역시 연안 해안사구 보전현황 평가 연구: 중구, 옹진군을 중심으로

박경문* · 김성우** · 안태선***

An Assessment of the Conservation Status for Coastal Sand Dunes in Incheon: Focused on the Jung gu, Ongjin gun in Incheon

KyoungMoon Park* · SungWoo Kim** · TaeSun An***

요약 : 본 연구는 인천시 중구, 옹진군 연안에 분포하고 있는 해안사구의 분포 현황 및 특성조사를 바탕으로 보전현황 평가를 실시한 연구이다. 인천시의 경우 서해 연안을 따라 형성된 해안선의 길이가 1,053km에 달하고 있어 어느 지역자치단체 못지않게 해안사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내 해안사구의 분포나 특성, 관리 현황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인천시 일부 연안을 대상으로 해안사구 추가도출 기준 설정을 통해 21개소의 해안사구를 추가 도출하고, 이들 해안사구에 대한 특성분석과 정량적 평가를 통해 인천시 해안사구 보전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 및 평가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해안사구, 보전 현황, 분포 특성, 평가체계, 특성분석

Abstract : This paper is a research that investigated the distribution and status of coastal sand dunes spread along the shoreline of Ongjin-gun, Jung-gu in Incheon and evaluated their conservation status. In Incheon, the length of coastline along the West Sea shoreline is 1,053km. thus leading to an assumption that coastal sand dunes are dispersed their as many as other regional local government. However, there are no enough basic data on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and the management status of other areas besides the 5 places on the list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onsidering this fact, this paper additionally drew 21 coastal sand dunes in the shoreline of Incheon, including the 5 places on the list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rough the standard of coastal sandhill selection. The additionally selected aimed to propose how to develop basic materials on the conservation status of coastal sandhills in Incheon through characteristic analysis by sandhill and qualitative evaluation.

Key Words : coastal sand dune, conservation status, distribution characteristic, evaluation system, analysis of characteristics

본 연구는 인천발전연구원 2013년 기본과제 “인천연안 해안사구 관리방안” 일부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협성대 도시공학과 박사수료(Ph.D. Candidate in Department of Urban Planing & Engineering, Hyupsung University), mpak09@empal.com

**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Research fellow,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watershed@idi.re.kr

*** 협성대 도시공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Planing & Engineering, Hyupsung University), ats@uhs.ac.kr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해안사구는 해안모래의 저장고로서 기후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열대 저기압에 의한 태풍, 대규모 폭풍해일과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일차적으로 이를 저지시켜 대피시간을 늘려주는 방재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국립환경과학원, 2011).

또한, 해안사구는 지하수의 저장고로서 빗물에 의해 습지가 형성되어 농업용수나 식수의 공급처가 되기도 하며, 담수생태계를 보호하는 기능과 함께 희귀한 동식물 서식처로서 생물 종 다양성 및 생태계 가치의 증대에 기여한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는 이러한 해안사구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사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대부분의 사구지역이 해수욕장, 도로, 군부대시설, 골재채취장, 위락시설, 농경지 등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간척, 매립, 관광객의 증가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해안사구가 훼손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결국 해안 침식의 증가, 사빈(沙濱) 모래면적의 감소,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더불어 침수위험성 증가 및 해변의 관광지로서의 가치손실로 인한 지역주민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해안사구의 훼손에 대해 최초 KBS(2000) 환경스페셜 다큐멘터리 방영¹⁾ 이후, 국내에서는 국정감사(2001)²⁾를 통해 해안사구 보전 대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안사구 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2002년 ‘해안사구 보전·관리 지침’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03~2011년까지 해안사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정보 구축을 위해 전국의 해안사구 실태를 파악해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등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내 해안사구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해안사구 보전에 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해안사구에 대한 보호 및 보전을 위한 관리방안 또는 관리 지침 등과 같은 관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이다.³⁾ 이는 두가지 측면에서 기인하는데, 첫째는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안사구 목록 외 해당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해안사구 분포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둘째는 해안사구별 보전 현황 및 특성에 대한 조사, 분석이 수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 일부 연안을 대상으로 해안사구의 분포 현황 및 특성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보전현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추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해안사구 보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 기초자료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인천시 연안에 분포하고 있는 해안사구를 파악하고, 해안사구별 특성에 기인한 보전현황 평가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3단계의 연구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1단계는 인천시 중구, 옹진군 연안에 분포하고 있는 해안사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천시는 서해 연안을 따라 형성된 해안선의 길이가 1,053km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목록에 5개소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천 연안에 추가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해안사구 분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단계는 인천시 중구, 옹진군에 분포하는 총 21개소(환경부 목록 4개소, 본 연구 도출 17개소)의 해안사구에 대한 보전 현황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보전현황 특성은 크게 사구 형태 및 규모적 특성, 토지이용 및 경관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해안사구별 특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였다.

3단계는 인천시 중구, 옹진군에 분포하는 해안사구별 보전현황 특성을 바탕으로 보전현황 평가를 실시하였다. 해안사구 평가 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사구의 형태 및 규모적 특성(30), 사구의 보전적 측면 경관요소(30), 사구의 훼손적 토지이용(40)으로 구성하였으며, 양호(80점 이상), 보통(60~80점), 훼손(60점 미만)으로 구분하여 사구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해안사구 분포 현황 및 특성에 관한 DB 구축과 분

석은 인천시 수치지도(1:5,000), 항공사진(1:25,000), google earth 지도, 농촌진흥청 한국토양정보시스템 토양지도 등을 Arc Gis 9.3, Auto Cad 2010 등의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인천시 연안 해안사구 분포 현황

1) 국내 해안사구 분포 현황

환경부(2002) ‘해안사구 보전·관리지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 133개의 해안사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33개의 사구는 환경부의 자체적인 사구보전 상태 기준에 따라 보통, 양호, 파괴로 구분하여 국내 해안사구를 구분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003~2011년까지 ‘전국 해안사구 정밀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133개 사구 외 17개소의 해안사구가 추가적으로 발굴·조사되어 국내에는 현재까지 총 150개의 사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같은 추가조사에 의해 해안사구의 목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천시 해안사구의 경우 환경부의 ‘해안사구 보전·관리지침(2002)’ 목록 상 강화군에 위치한 동막사구 1개소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행한 ‘전국 해안사구 정밀조사’에 덕적도(서포, 빗지름) 2개소, 대청도(옥죽동, 시탄동) 2개소 등 총 4개소가 추가 조사되어 2013년 현재에는 총 5개 사구가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1. 국내 해안사구 분포 현황(환경부)

사구 길이	지역	갯수	기존 환경부 목록(02년)			환경부 추가조사 (03년~11년)
			양호	보통	파괴	보전등급 구분 없음
계		150(17)	19	63	51	17
2km 이상	경기·인천	-	-	-	-	-
	충남	9(1)	신두 외 3개소	몽산포, 청포대,	꽃지, 신탄	소항
	전북	3	-	장신, 광승, 명사십리	-	-
	전남	6(5)	-	송현	-	비금도의 4개소
	강원	14(1)	동호 외 3개소	봉포 외 6개소	송정, 망상	양양(가평)
	경북	2(1)	고래불	-	-	평해
	경남	-	-	-	-	-
	제주	2	-	신양, 금면	-	-
1km ~ 2km	경기·인천	3(2)	-	-	방아머리(1)	덕적도(서포), 대청도(옥죽동)
	충남	18(1)	구례포 외 3개소	학암포 외 7개소	만리포 외 4개소	원산
	전북	3	-	고사포	동호, 구시포	-
	전남	8(1)	-	송석 외 3개소	가계, 사정, 사구미	자은도(백산)
	강원	10	항목	화진포 외 4개소	속초 외 3개소	-
	경북	6	후정, 구산, 곡강	화진	망양, 관성	-
	경남	-	-	-	-	-
	제주	1	사계	-	-	-

1km 미만	경기·인천	5(2)	-	-	동막 외 2개소	덕적도(밭지름), 대청도(사탄동)
	충남	17	-	사목 외 8개소	천리포(1), 천리포(2) 외 5개소	
	전북	3	-	-	변산, 상록, 모항	-
	전남	16(3)	-	덕산, 모사 외 5개소	홀통, 증의 외 4개소	비급도(찾구지), 오봉, 우이도
	강원	9	공현진	반암, 남향진, 옥계, 용화	오호, 죽도 외 2개소	-
	경북	4	-	봉산, 칠포	장사, 하서	-
	경남	2	-	-	상주, 송정	-
	제주	9	-	곽지, 협재 외 4개소	이호, 평대, 함덕	-

주: 표 간의 밑줄이 있는 해안사구는 인천시 관내에 위치한 해안사구임.

() 안의 숫자는 '03년~'11년 “전국 해안사구 정밀조사”에 의해 추가 발굴된 해안사구임.

2) 인천시 연안 해안사구 추가 도출 방법

환경부의 해안사구 분포자료에 의하면, 인천은 강화군 1개소 옹진군 대청도 2개소, 덕적도 2개소 등 총 5개소가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 해안연안의 규모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인천시 관내 도서지역 연안에 위치한 해안사구는 더욱 많이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의 해안사구 목록 외 추가적인 해안사구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에 의해 인천시 관내 해안사구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분포현황 조사대상 도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시 중구 일부 도서 및 옹진군 관내 도서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외 인천시 해안연안 지역의 제외이유는 내륙지역의 경우 도시화로 인해 해안사구의 형태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제외하였고, 강화군의 경우 접경지 군사지역 산재 등으로 인한 자료 취득의 한계 등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유인도서로서 해안사구의 규모적 측면에서 최소 해안선이 500m 이상인 지역으로 해빈과 전사구의 형태가 잔존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경부(2002) ‘해안사구 보전·관리지침’에 따르면, 해안사구는 해빈-전사구-전사구배후지대-2차사구-사구습지를 이루는 것을 해안사구의 일반형태로 제시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빈-전사구 또는 전사구 및 전사구 배후지대의 형태만 갖춘 지역이라 할지라도 해안사구로 간주하였다(그림 1, 2).

해빈-전사구(전사구 배후지대)까지의 형태를 갖춘 경우까지 사구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인천시 연안의 해안사구로 인정한 근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사구의 형태적 측면에서 환경부(2002)의 해안사구 목록 중 평가등급이 양호, 보통, 파괴 중 평가등급이 보통인 사구 63개를 대상⁴⁾으로 google earth를 통해 형태적 특성을 파악해 보았다.

분석결과, 환경부 모식도에서 나타난 해빈-전사구-전사구배후지대-2차사구-사구습지-배후산지까지의 완전한 형태를 갖는 사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63개 해안사구 모두 해빈-전사구 또는 해빈-전사구-전사구배후지대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파악⁵⁾되었다. 이의 결과는 본 연구의 인천시 연안도서 해안사구 연구대상 범위로서의 해빈-전사구(전사구배후지대)의 형태적 및 규모적 사구범위 설정의 근거가 되었다.

또한, 해빈-전사구(전사구배후지대)까지의 범위 설정은 이들 사구범위가 사구의 형성 매커니즘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환경적, 생태적, 방재적 기능의 최일선 공간이자 보전가치가 가장 높은 공간⁶⁾이므로 인천시 연안 해안사구 선정의 최소범위로 설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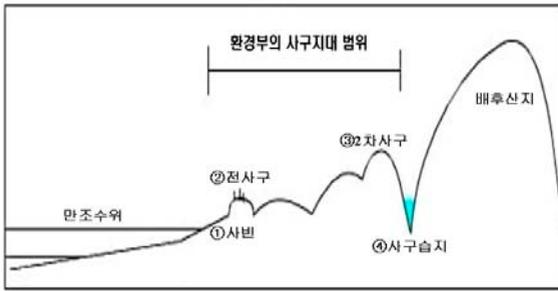


그림 1. 환경부의 사구지대 범위

출처: 환경부(2002), “해안사구 보전 관리지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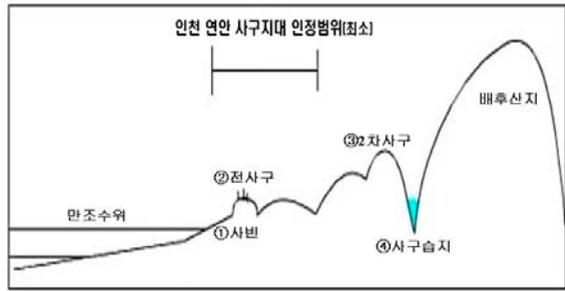


그림 2. 본 연구의 인천시 연안 사구지대 범위

출처: 환경부(2002), “해안사구 보전 관리지침”, 1
해안사구 모식도 저자 수정.

표 2. 인천시 연안 해안사구 조사대상 선정기준

구분	조사대상 선정 기준	관련 자료
위치	중구 일부 도서 및 옹진군 관내 도서 연안	- google 위성사진 - 인천시 토지정보과 1:5,000 항공사진(2012) - 농촌진흥청 토양지도
규모적 특성	해안선 길이 500m 이상	
형태적 특성	해빈-전사구-전사구 배후지대	
지질	표토심의 토질이 사질(沙質)	

셋째, 심토의 토질이 ‘사질(沙質)’인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해안사구의 표토심의 토질은 대개 사질이다. 항공사진으로는 해빈-전사구-전사구 배후지대의 형태를 파악할 수는 있으나 그 지역이 실제 사구인지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항공사진은 일차적으로 형태로서의 사구지역의 잠재가능 지역을 찾고, 농촌진흥청의 한국토양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토양지도를 이용해 심토의 토성이 사질인 지역을 최종적으로 인천시 관내 해안사구 분포현황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표 2).

3) 인천시 연안 해안사구 분포 현황

인천 연안 해안사구의 분포현황 추가조사대상 선정 방식인 유인도서이며, 해안선이 500m 이상인 지역으로 해빈-전사구-전사구배후지대의 형태를 갖추면서 심토의 토성이 사질인 지역을 대상으로 해안사구를 도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도출결과, 중구 일부 도서에는 5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옹진군 접경지역인 서해 5도에 8개, 접경도서 외 지역에 8개소로 총 21개소의 해안사구(총 연장 20.5km)가 있는 것으로 조사·분석되었다. 이는 환경부 목록에 기재된 옹진군의 해안사구 4개소를 포함한 결과이다(그림 3).

3. 인천시 연안 해안사구 특성 조사

1) 형태 및 규모적 특성 조사

인천시 중구, 옹진군 연안도서의 사구형태 및 규모적 특성은 먼저 사구형태로 환경부(2002) ‘해안사구 보전·관리지침’에서 구분한 해안사구 모식도에 근거하여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인천시 해안사구 21개소의 형태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규모적 특성은 항공사진과 수치지도, ArcGIS 9.3 등을 이용하여 사구의 해안선 길이, 해빈-전사구(전사구 배후지대)까지의 최대 폭과 최소 폭, 사구의 면적 등을 조사하여 규모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구의 형태 및 규모적 측면의 분석결과, 사구형태적 측면에서 환경부 모식도에 부합하는 사구는 옹진군 대청리 옥죽동 사구로 2차사구까지의 형태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외 사구의 경우 모두 전사구 또는 전사구 배후지대까지의 사구의 형태적 특성을 보였다.

표 3. 인천시 연안(중구, 옹진군) 해안사구 분포 현황

구분	위치	사구 명칭	해안선 길이(km)	비고	
중구	덕교동 마시안 해변	덕교	1.8		
	남북동 용유도 해변	용유	1.2		
	을왕동 왕산 해변	왕산	0.7		
	무의동 하나개 해변	하나개	0.7		
	무의동 실미도 해변	실미	0.8		
옹진군	서해 5도 접경 도서	백령면 진촌리 사곶 해변	사곶	2.4	환경부 목록 환경부 목록
		백령면 진촌리 용기포	진촌(1)	0.9	
		백령면 진촌리 하나 해변	진촌(2)	1.1	
		백령면 진촌리 어릿골 해변	진촌(3)	0.5	
		백령면 연화리	연화	0.8	
		대청면 대청리 옥죽동 해변	옥죽동	1.6	
		대청면 대청리 시탄동 해변	시탄동	0.7	
	연평면 연평리 새마을 해변	연평	0.6		
	접경 도서 외 도서	북도면 장봉리 오암 해변	장봉	1.0	환경부 목록 환경부 목록
		영흥면 외리	외리	1.0	
		자월면 자월리	자월	0.5	
		자월면 승봉리 이일레 해변	승봉	0.9	
		덕적면 서포리 서포 해변	서포	1.0	
덕적면 진리 밧지름 해변		밧지름	0.6		
덕적면 굴업리	굴업	0.5			
자월면 이작리 큰플안	이작	1.2			
해안사구 총 연장			20.5		



그림 3. 인천시 연안(중구, 옹진군) 해안사구 위치 및 분포

표 4. 인천시 연안(중구, 옹진군) 해안사구 형태 및 규모적 특성 조사결과

구분	사구 명칭	사구 형태 범위	해안선 길이(km)	면적(m ²)	해빈 폭(m)		해빈-전사구(m)		해빈-개발지 최소거리(m)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중구	덕교	전사구	1.8	703,505	15	25	20	60	25	
	용유	전사구	1.2	274,379	15	30	25	45	25	
	왕산	전사구	0.7	103,277	30	50	40	60	30	
	하나개	전사구	0.7	198,157	30	60	30	120	30	
	살미	전사구 배후지대	0.8	219,783	25	70	40	75	40	
옹진군	서해 5도 접경 도서	사곶	전사구 배후지대	2.4	2,605,955	20	100	40	105	40
		진촌(1)	전사구 배후지대	0.9	104,589	10	30	20	45	-
		진촌(2)	전사구 배후지대	1.1	106,048	10	25	25	35	-
		진촌(3)	전사구 배후지대	0.5	239,527	10	25	25	35	-
		연화	전사구 배후지대	0.8	234,014	15	40	25	40	-
		옥죽동	2차사구	1.6	853,959	50	250	60	340	50
		시탄동	전사구 배후지대	0.7	100,349	50	70	50	110	140
		연평	전사구 배후지대	0.6	35,199	15	25	30	40	30
		접경 도서 외 도서	장봉	전사구 배후지대	1.0	81,579	30	45	35	40
	외리		전사구 배후지대	1.0	103,236	15	30	40	65	40
	자월		전사구 배후지대	0.5	101,607	50	80	50	100	50
	승봉		전사구(일부 배후지대)	0.9	184,759	15	80	15	85	25
	서포		전사구 배후지대	1.0	336,753	50	150	55	175	160
	밭지름		전사구 배후지대	0.6	103,413	20	100	25	100	220
		굴업	전사구 배후지대	0.5	115,823	35	60	40	90	200
이작		전사구	1.2	98,316	15	40	15	40	-	

사구의 규모적 특징을 살펴보면, 해안선 길이가 가장 긴 사구는 백령면 진촌리의 사곶사구로 2.4km를 나타냈고, 가장 짧은 길이를 갖는 사구는 덕적면 굴업리의 굴업사구가 0.5km의 길이를 나타냈다.

사구의 면적은 백령면 사곶사구가 가장 넓은 2,605,955m²로 파악되었고, 옹진군 대청면 옥죽동 사구와 중구 덕교사구가 각각 853,959m², 703,505m²로 50만m²가 넘는 대형사구로 파악되었으며, 연평, 이작, 장봉 사구의 경우 각각 35,199m², 81,579m², 98,316m²로 10만m² 미만의 소규모 사구로서의 면적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호한 사구의 형태파악을 위해 전사구까지의 거리(해수면으로부터 초본식생 또는 목본식생지대의 경계부까지의 거리)의 최대 폭을 조사한 결과, 최대 폭이 가장 긴 사구는 대청도 옥죽동 사구로 600m의 길이를 나타냈고, 백령도 진촌(3), 연평도 연평사구가

각각 25m씩으로 가장 짧은 최대 폭을 나타냈다.

사구 형태의 훼손파악을 위해 해빈으로부터 개발지역까지 가장 짧은 거리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개발지역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은 사구는 중구 덕교, 옹진군 용유, 승봉사구가 각각 25m길이를 나타냈고, 개발지역까지의 거리가 100m 이상으로 인위적 간섭에 의한 훼손이 적게 가해진 사구는 옹진군 밧지름(220m), 굴업(200m), 서포(160m), 시탄동(140m)사구로 나타났다. 또한, 옹진군 백령면의 진촌(1), 진촌(2), 진촌(3), 덕적면의 이작사구는 개발지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위적 간섭에 의한 사구형태의 훼손이 가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 토지이용 및 경관적 특성 조사 결과

인천시 연안도서 해안사구 토지이용 및 경관적 특

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구 보전적 요소와 사구 훼손적 요소를 구분하여 조사 항목을 선정하였다. 사구 보전적 요소는 모래지대, 초본 식생, 관목식생, 하천 및 농수로, 습지 등 5개 항목이며, 사구 훼손적 요소는 개발지역, 도로, 경작지, 군사시설, 나대지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사구의 토지이용 및 경관적 특성 파악을 위해 구분한 조사항목별 포함사항은 표 5와 같다.

인천시 연안 해안사구 21개소에 대한 토지이용 및 경관적 특성 조사는 해안사구별 항공사진을 추출한 후, 수치지형도 상에서 상기 조사항목에 대한 토지이용 및 경관적 특성 유형별 패치작업(patch work)을 실시하였다(그림 4). 이를 통해 우선 각 해안사구별 토

지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수치지형도 상에서 해당 유형별 패치의 면적을 산출하여 정량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이들 해안사구지대들은 각각의 분포지역 여건에 따라 토지이용 및 경관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부록 참고).

중구의 용유도에 위치한 사구는 덕교, 용유, 왕산 등 총 3개로 모두 해수욕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사구를 형성해야 하는 해변의 언덕형성 지대에 해수욕장 관련 위락시설, 도로 및 주차장 건설, 음식점 및 각종 상업시설이 다수 입지해 있어 사구의 훼손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적인 해안사구 훼손 요소인 개발지역 및 도로 비율이 3개 사구 모두 30% 이상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입증된다. 무의도의 경우 도로 및 주차장 건설이 전사구 지대에 행해지지 않았으나 전사구 및 전사구 배후지대에 해수욕장 관련 위락시설, 음식점 및 각종 상업시설, 경작지 등이 입지해 있어 사구의 훼손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웅진군 접경도서인 서해5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개발행위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 양호한 사구보전 현황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해 5도 사구의 분포 지역별 토지이용 및 경관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백령도는 총 5개의 사구가 있으며 사곶, 진촌(1) 사구를 제외한 사구에서 접경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군사시설과 관련된 토지이용 특성이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는 전사구가 형성되는 지대에 철책과 교통호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사람의 접근성이 떨어짐에 따라 군사시설 외 사구를 훼손하는 개발행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사곶, 진촌(1), 진촌(3) 사구의 경우 군사시설을 경계로 전사구 배후지대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대개의 사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작지로의 사구활용(면적비율 30% 이상)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대청도의 경우 옥죽동 사구와 시탄동 사구 모두 모래나지의 면적이 넓게 나타나고 있어 매우 양호한 사구의 형태적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개발행위 지역도 전사구 배후지대에 기존의 자연부락과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 외에 해변-전사구 주변일대에 개발

표 5. 토지이용 및 경관적 특성 조사항목별 포함 내용

구분	포함 내용	
사구 보전적 요소	모래지대	해빈 및 모래나지
	초본식생	갯그렁 등 1m 이하의 초본
	관목식생	곰솔 및 송림 등 1m 이상의 나무
	하천 및 농수로	하천, 농수로 및 배수로
	습지	저수지 및 물 웅덩이
사구 훼손적 요소	개발지역	토지피복을 바탕으로 주거지역, 건축물 및 그 밖의 인공건조물
	도로	일반도로 및 농로
	경작지	논, 밭, 과수원 등의 농경활동 지역
	군사시설	군부대 지역, 철책선 및 교통호 등
	나대지	뚜렷한 토지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지역으로 잡종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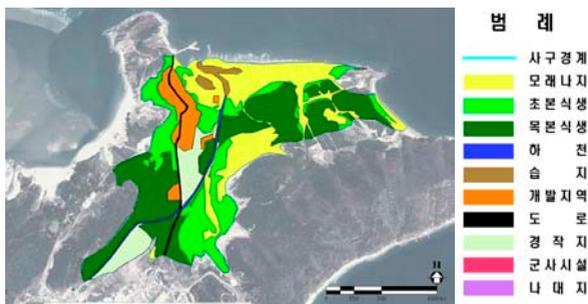


그림 4. 토지이용 현황조사: 웅진군 옥죽동 사구 예시

로 인한 인공건조물이 없어 사구의 보전상태가 매우 양호한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연평도의 연평사구는 모래나지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개발행위

로 인한 인공건조물의 면적은 그다지 넓지 않아 개발로 인한 사구의 훼손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분석되었다.

표 6. 인천시 중구, 옹진군 관내 해안사구 경관 및 토지이용 조사 결과

(단위: m², ()는 %)

구분	사구 명칭	총면적	사구보전적 측면 경관요소					사구훼손적 측면의 토지이용					
			모래나지	초본식생	목본식생	하천	습지	개발지역	도로	경작지	군사시설	나대지	
중구	떡교	703,505 (100.0)	173,390 (24.6)	15,037 (2.1)	247,533 (35.2)	697 (0.1)	13,910 (2.0)	212,143 (30.2)	23,993 (3.4)	16,802 (2.4)	-	-	
	용유	274,379 (100.0)	60,443 (22.0)	5,845 (2.1)	9,641 (33.0)	-	6,048 (2.2)	73,886 (26.9)	13,867 (5.1)	22,250 (8.1)	-	1,399 (0.5)	
	왕산	103,277 (100.0)	37,532 (36.3)	2,615 (2.5)	4,666 (4.5)	-	-	34,987 (33.9)	9,981 (9.7)	476 (0.5)	-	13,020 (12.6)	
	하나개	198,157 (100.0)	71,959 (36.3)	4,168 (2.1)	55,476 (28.0)	2,313 (1.2)	27,450 (13.9)	16,902 (8.5)	4,631 (2.3)	-	-	15,258 (7.7)	
	실미	219,783 (100.0)	63,581 (28.9)	14,554 (6.6)	65,217 (29.7)	-	-	9,786 (4.5)	5,309 (2.4)	61,336 (27.9)	-	-	
옹진군	서해 5도 접경 도서	사곶	2,605,955 (100.0)	207,799 (8.0)	15,697 (0.6)	234,367 (9.0)	33,858 (1.3)	16,712 (0.6)	140,996 (5.4)	100,893 (3.9)	1,657,955 (63.6)	-	197,678 (7.6)
		진촌(1)	104,589 (100.0)	11,849 (11.3)	32,116 (30.7)	1,132 (1.1)	1,497 (1.4)	737 (0.7)	-	2,857 (2.7)	35,398 (33.8)	-	19,003 (18.2)
		진촌(2)	106,048 (100.0)	27,300 (25.7)	2,348 (2.2)	60,680 (57.2)	-	-	-	-	-	15,720 (14.8)	-
		진촌(3)	239,527 (100.0)	5,559 (2.3)	938 (0.4)	13,113 (5.5)	8,326 (3.5)	4,464 (1.9)	997 (0.4)	10,135 (4.2)	183,376 (76.6)	8,463 (3.5)	4,156 (1.7)
		연화	234,014 (100.0)	25,878 (11.1)	140,732 (60.1)	4,829 (2.1)	4,550 (1.9)	3,166 (1.4)	3,439 (1.5)	-	8,592 (3.7)	42,828 (18.3)	-
		육죽동	853,959 (100.0)	260,997 (30.2)	190,520 (22.0)	251,419 (29.3)	12,554 (1.5)	15,795 (1.8)	58,558 (6.6)	11,008 (1.3)	64,116 (7.3)	-	-
		시탄동	100,349 (100.0)	21,490 (23.8)	11,288 (10.3)	29,729 (27.2)	1,865 (1.7)	-	26,167 (23.9)	4,568 (4.2)	7,610 (7.0)	-	2,200 (2.0)
	연평	35,199 (100.0)	10,879 (30.9)	10,188 (28.9)	7,904 (22.5)	-	-	1,613 (4.6)	3,032 (8.6)	1,229 (3.5)	-	354 (1.0)	
	접경 도서 외 도서	장봉	81,579 (100.0)	48,994 (60.1)	4,564 (5.6)	21,006 (25.7)	-	-	844 (1.0)	3,484 (4.3)	2,687 (3.3)	-	-
		외리	103,236 (100.0)	39,682 (38.4)	27,304 (26.4)	18,896 (18.3)	-	-	2,423 (2.3)	-	12,618 (12.2)	-	2,313 (2.2)
		자월	101,607 (100.0)	46,533 (45.8)	34,892 (34.3)	11,783 (11.6)	-	-	734 (0.7)	5,156 (5.1)	2,509 (2.5)	-	-
		승봉	184,759 (100.0)	35,431 (19.2)	27,239 (14.7)	102,844 (55.7)	-	-	11,540 (6.2)	-	-	-	7,705 (4.2)
		서포	336,753 (100.0)	78,875 (23.4)	28,650 (8.5)	193,748 (57.5)	-	-	19,037 (5.7)	-	-	-	16,443 (4.9)
밭지름		103,413 (100.0)	32,662 (31.6)	7,387 (7.1)	16,731 (16.2)	-	-	6,697 (6.5)	-	-	-	39,936 (38.6)	
굴업	115,823 (100.0)	31,601 (27.3)	8,315 (7.2)	69,040 (59.6)	-	-	1,986 (1.7)	-	-	-	4,881 (4.2)		
이작	98,316 (100.0)	53,238 (54.1)	1,030 (1.1)	41,131 (41.9)	-	-	-	-	-	-	2,917 (2.9)		

용진군 접경도서인 서해5도를 제외한 지역의 사구는 총 8개소로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북도면의 장봉사구, 영흥면 외리사구, 자월면 자월사구 및 승봉사구는 해빈-전사구 지대에 일부 정주 가옥과 경작지, 도로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개발행위로 인한 사구의 훼손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덕적도 서포 사구 및 맞지름 사구는 해빈-전사구까지 일체의 개발행위 없이 모래나지의 보전이 잘 이루어져 있으며, 두터운 초본 및 목본식생지대가 전사구 배후지대에 위치한 몇몇 정주 가옥과 명확한 구분을 이루고 있어 양호한 사구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덕적면의 굴업사구, 자월면의 이작사구 또한 인간의 간섭에 의한 개발행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상태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6).

4. 인천시 연안 해안사구 보전현황 평가

1) 평가방법 고찰

현재 국내에는 해안사구에 대한 공인된 정량적 평가체계 없이 환경부(2002) “해안사구 보전·관리지침”에서 제시한 해안사구 상태에 따른 양호, 보통, 파괴의 3가지 구분에 의해 해안사구 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2002)의 평가는 평가구분에 대한 근거가 매우 미약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⁷⁾

국내에서는 정량적 해안사구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구축 차원에서의 영상(항공사진, 위성사진 등) 및

표 7. 명현호(2010)의 해안사구생태계 건강성 평가 지표 기준

등급	평가점수	식생분포 면적	패치 풍부도 (개수)	종 다양도	일정 면적당 생물량	사구식물 종수	도시화 기준 (귀화식물의 출현 정도)
I (절대보전 지역)	24~30	>20,000㎡	>17	>2.0	>400g/㎡	>20	0~1.0
II (보전지역)	20~23	15,000~20,000㎡	14~17	1.8~2.0	400g/㎡~300g/㎡	18~20	1.1~2.0
III (보전/이용지역)	16~19	15,000~10,000㎡	10~13	1.5~1.7	300g/㎡~200g/㎡	15~17	2.1~3.0
IV (이용/관리지역)	12~15	10,000~5,000㎡	6~9	1.2~1.4	200g/㎡~100g/㎡	12~14	3.1~4.0
V (이용 조정지역)	>12	<5,000㎡	0~5	0~1.1	<100g/㎡	0~11	>4.0

자료: 명현호(2010), 건강성 평가를 통한 해안사구생태계 보전·관리방안 연구, 177.

표 8. 최희경(2010)의 해안사구 평가를 위한 조사항목

구분	조사항목 수	조사 항목
경관생태학적 조사 항목	7개	조사지역 면적, 사구의 장축 길이, 사구의 평균 폭, 해빈의 길이, 해빈의 평균 폭, 해안선의 연장, 도로(포장) 밀도,
경관요소별 면적과 비율 조사 항목	11개	인공요소(5), 경작지, 나대지, 사구해변, 암반, 습지, 하천 또는 강, 연안초본식생, 연안 교목 및 관목 식생, 연안 삼림(곰솔 및 송림), 연안식물 외 식생(5)

자료: 최희경(2010), 동해안 사구의 보전 현황 평가, 109-110에서 조사항목 내용 저자 정리.

주: () 안의 숫자는 조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개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세부항목의 표기 생략.

토지피복 분석에 의한 해안사구의 식생분석(한갑수 등, 2010), 지형분석(서종철 등, 2002), 인위적 간섭에 의한 사구훼손 분석(이윤구 등, 2011) 등의 연구가 행해졌으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안사구의 정량적 평가까지 수행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명현호(2010)와 최희경(2010)의 연구가 환경부(2001) 평가방식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정량적 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먼저 명현호(2010)의 연구는 환경부(2001)의 해안사구 목록 133개소 중 동해안 12개소, 남해안 8개소, 서해안 13개소의 해안사구를 대상으로 해안사구 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① 사구 식생 분포면적, ② 패치 풍부도, ③ 종 다양도, ④ 일정 면적당 생산성, ⑤ 사구식물 풍부도, ⑥ 도시화 기준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항목별 5점 만점 기준의 정량적 분석 결과에 따라 5개 등급으

로 구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표 7).

그러나 명현호(2010)의 평가기준은 해안사구 식생 요소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 본 연구의 해안사구 특성 조사가 사구요소별 점유면적에 기반하여 수행되어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현호(2010)의 평가기준은 고려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한편, 최희경(2010)의 연구는 동해안의 총 31개의 해안사구를 대상으로 평가함에 있어 평가영역을 크게 사구역과 해안경관역으로 구분하여 사구의 경관 생태학적 특성 요소 7개, 현존식생도를 활용한 경관 요소별 면적 및 비율 항목 11개를 설정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표 8).

이들 총 18개 조사항목은 사구의 보전현황평가 및 기능평가의 2개의 평가영역에 따라 총 7개의 평가항목으로 재정리되며, 7개 평가항목은 5점 척도의 평가

표 9. 해안사구 보전현황 평가를 위한 평가배점과 기준(예)

구분	평가항목	평가배점 및 기준				
		1	2	3	4	5
자연요소	사구지형 보전상태	10% 미만	10-20%	20-40%	40-60%	60% 초과
인공적인 요소	개발지역	30% 초과	20-30%	15-20%	10-15%	10% 미만
	경작지	20% 초과	10-20%	5-10%	2-5%	2% 미만
	해변이용 현황	35% 초과	25-35%	15-25%	5-15%	5% 미만
해안사구 식생	곰솔 및 송림	10% 미만	10-20%	20-30%	30-40%	40%초과
	관목식생	없음	잠재적 출현	1% 미만	1-5%	5% 초과
	초본식생	5% 미만	5-10%	10-15%	15-20%	20% 초과

자료: 최희경(2010), 동해안 사구의 보전 현황 평가, 13에서 발췌 정리.

표 10. 해안사구 기능평가를 위한 평가배점과 기준(예)

구분	평가항목	평가배점 및 기준				
		1	2	3	4	5
개발 및 이용가치	개발지역	30% 미만	10-15%	15-20%	20-30%	30% 초과
	경작지	2% 미만	2-5%	5-10%	10-20%	20% 초과
	해변이용 현황	5% 미만	5-15%	15-25%	25-35%	35% 초과
보전가치	사구지형 보전상태	10% 미만	10-20%	20-40%	40-60%	60% 초과
	곰솔 및 송림	10% 미만	10-20%	20-30%	30-40%	40% 초과
	관목식생	없음	잠재적 출현	1% 미만	1-5%	5% 초과
	초본식생	5% 미만	5-10%	10-15%	15-20%	20% 초과

자료: 최희경(2010), 동해안 사구의 보전 현황 평가, 15에서 발췌 정리.

기준에 의거하여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하는 조사 및 평가체계를 이루고 있다(표 9, 표 10).

최희경(2010)은 상기의 평가체계를 기반으로 사구 구역과 해안경관역으로 구분하여 동해안 사구를 평가하였다. 평가 방식은 사구의 보전현황 평가 및 기능평가 모두 사구지형 보전상태 항목에 가중치 3을 적용하고, 해안사구 식생 요소의 곱슬 및 송림, 관목 식생, 초본식생 항목에 가중치 2를 적용하며, 개발지역, 경작지, 해변이용 현황 항목에 가중치 1을 적용함

표 11. 해안사구 평가등급별 기준(예)

평가항목	평가기준(비율)
매우양호(Excellent)	70% 이상
양호(Good)	60% 이상
보통(Normal)	50% 이상
훼손(Damage)	40% 이상
매우훼손(Very Damage)	40% 미만

자료: 최희경(2010), 동해안 사구의 보전 현황 평가, 14.

표 12. 환경부(2001) 해안사구 평가와 최희경(2010)의 해안사구 평가 결과 비교(일부 예시)

사구 명칭	환경부 (2001)	최희경 (2010)		비고
		사구보전 현황 평가	사구기능 평가	
황목	양호	매우 양호	양호	일치
하시동	양호	매우 양호	매우 양호	일치
동호	양호	양호	보통	판단 불가
송죽	양호	양호	양호	평가 일치
오봉	양호	훼손	훼손	평가 불일치
반암	보통	양호	보통	판단 불가
남향진	보통	양호	양호	평가 불일치
옥계	보통	양호	훼손	평가 불일치
용화	보통	매우 양호	매우 훼손	평가 불일치
화진포	보통	양호	양호	평가 불일치
오호	훼손	훼손	훼손	평가 일치
죽도	훼손	양호	훼손	판단 불가
안진	훼손	-	매우훼손	판단 불가
호산	훼손	보통	훼손	판단 불가
속초	훼손	매우 훼손	매우 훼손	평가 일치

자료: 최희경(2010), 동해안 사구의 보전 현황 평가, 74에서 평가 비교내용 저자 일부 발췌 정리.

주: 1) 총 32개소 사구 중 15개 사구만 일부 발췌 소개.

으로써 총점이 60점 만점이 되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구별 평가점수/총점(60점)의 비율로 변환하여 평가하고 있다.⁸⁾

이같은 평가방식에 의해 도출된 동해안 해안사구별 평가결과는 상기 평가방식에 근거한 최종점수의 비율의 총합 구분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동해안 사구 31개소의 평가결과를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표 11).

상기 평가방식 및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를 살펴본 결과, 환경부(2001)의 평가와 최희경(2010)의 평가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⁹⁾되었다. 환경부(2001)의 평가결과와 최희경(2010)의 평가결과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사구는 10개, 다른 사구는 7개로 나타났다, 이하 14개 사구는 동일과 다름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웠다. 14개 사구는 최희경(2010)의 연구가 환경부(2001)의 3등급 체계와는 다르게 5등급 체계로 평가하고 있어 환경부 3등급 체계와의 동일성 또는 차별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표 12).

2) 인천시 연안 해안사구 평가기준

해안사구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 결과, 국내에는 해안사구 평가와 관련된 공인된 평가체계가 없어 선행연구마다 자체적인 평가체계에 의해 해안사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평가항목의 구성, 평가기준, 평가등급의 구분 등이 선행연구자의 조사특성에 기인하여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내의 해안사구 평가에 관한 여건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연안 해안사구 현황특성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해안사구 보전 현황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평가항목의 구성은 해안사구의 형태 및 규모적 특성 5개 항목, 해안사구 보전적 측면 경관요소 특성 3개 항목, 해안사구 훼손적 토지이용 특성 4개 항목 총 12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사구별 평가를 위한 각각의 배점은 상기한 선행 해안사구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해안사구의 형태 및 규모적 특성 30점, 해안사구 보전적 측면 경관요소 특성 30점, 해안사구 훼손적 토지이용 특성 40점 등으

로 총점 100점 만점으로 구분하였다. 다만, 각 요소 특성에 따른 가점 또는 감점요소를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먼저 보전적 측면 경관요소 특성 항목 중 ‘하천 및 습지’의 면적에 따른 가점은 하천 및 습지를 통한 해안사구 생태계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가점(3)을 부여하였고, 훼손적 토지이용 특성 항목 중 ‘나대지’는 추후 개발가능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감점(5)을 부여하였으며, ‘농경지’와 ‘군사시설’의 경우 이들 토지이용이 추후 사구훼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사구의 규모적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제한요소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감점(3)을 부여하였다.

이같은 인천시 연안도서 해안사구 평가방식은 최희경(2010) 연구와 현황조사 및 특성분석에 있어서 중복 및 유사점이 많지만, 평가방식에 있어서는 차별성을 갖는다. 최희경(2010)의 연구는 사구 식생에 대한 가중치가 지나치게 높은 측면이 있다. 이는 사구 식생에 대한 중요성에는 동의하나 사구의 보전 현황 파악과 원활한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사구의 현존 상태, 특히 전사구의 보전상태(규모적 특성 등)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며, 개발규모(인공적 토지이용)가 사구의 보전가치 평가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식생 관련 평가 점수는 낮추는 반면, 사구의 규모적 특성과 인공적인 훼손여부에 관한 평가점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

표 13. 인천시 연안 해안사구 평가 기준(안)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사구의 형태 및 규모적 특성	사구의 면적(㎡)	10
	해안선 길이(km)	5
	해안선-해빈의 최대폭(m)	5
	해안선-전사구까지의 최대거리(m)	5
사구의 보전적 측면 경관요소	해안선-개발지역까지의 최소거리(m)	5
	모래나지의 비율(%)	15
	초본 및 목본 식생의 비율(%)	15
사구의 훼손적 토지이용 요소	추가배점 항목: 하천 및 습지의 면적(㎡)	3
	개발지역 및 도로 면적 비율(%)	40
	차감배점항목(1): 경작지의 비율(%)	-3
	차감배점항목(2): 군사시설의 유, 무	-3
	차감배점항목(3): 나대지의 비율(%)	-5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상기 부분에 있어서 최희경(2010) 연구의 평가방식을 보완하고 연구의 차별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3) 부문별 평가

(1) 사구형태 및 규모적 특성평가

인천시 연안 도서 해안사구의 형태 및 규모적 특성 평가배점은 총 30점으로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총 30점의 배점기준에, 사구의 양호한 형태와 규모를 반영하는 ‘사구면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점으로 배점을 정하였고, ‘해안선 길이’, ‘해안선-해빈까지의 최대 폭’, ‘해안선-전사구까

표 14. 형태 및 규모적 특성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사구의 형태 및 규모적 특성 항목	사구의 면적(㎡)	10	50만㎡ 이상
		8	30만㎡ 이상 50만㎡ 미만
		6	20만㎡ 이상 30만㎡ 미만
		4	10만㎡ 이상 20만㎡ 미만
		2	10만㎡ 미만
	해안선 길이(km)	5	2.0km 이상
		4	1.0km 이상 2.0km 미만
		3	0.8km 이상 1.0km 미만
		2	0.5km 이상 0.8m 미만
		1	0.5km 미만
	해안선-해빈의 최대폭(m)	5	100m 이상
		4	75m 이상 100m 미만
		3	50m 이상 75m 미만
		2	25m 이상 50m 미만
		1	25m 미만
해안선-전사구까지의 최대거리(m)	5	100m 이상	
	4	75m 이상 100 미만	
	3	50m 이상 75m 미만	
	2	25m 이상 50m 미만	
	1	25m 미만	
해안선-개발지역까지의 최소거리(m)	5	100m 이상이거나 개발지역이 없는 경우	
	4	50m 이상 100 미만	
	3	30m 이상 50m 미만	
	2	20m 이상 30m 미만	
	1	20m 미만	

표 15. 형태 및 규모적 특성 평가결과

구분	사구 명칭	사구 면적 (㎡)		해안선 길이 (km)		해빈 폭 (m)		해빈-전사구 폭 (m)		해빈-개발지 최소 거리(m)		평가 점수 합계	
		면적	배점	길이	배점	최대폭	배점	최대폭	배점	최소 거리	배점		
중구	덕교	703,505	10	1.8	4	60	3	60	3	25	2	22	
	용유	274,379	6	1.2	4	35	2	45	2	25	2	16	
	왕산	103,277	4	0.7	2	65	3	60	3	30	3	15	
	하나개	198,157	4	0.7	2	60	3	120	5	30	3	17	
	실미	219,783	6	0.8	3	70	3	75	4	40	3	19	
용진군	서해 5도 접경 도서	사곶	2,605,955	10	2.4	5	80	4	105	5	40	3	27
		진촌(1)	104,589	4	0.9	3	45	2	45	2	-	5	16
		진촌(2)	106,048	4	1.1	4	30	2	35	2	-	5	17
		진촌(3)	239,527	6	0.5	2	25	2	35	2	-	5	17
		연화	234,014	6	0.8	3	40	2	40	2	-	5	18
		옥죽동	853,959	10	1.6	4	300	5	340	5	50	4	28
		시탄동	100,349	4	0.7	2	100	5	110	5	140	5	21
		연평	35,199	2	0.6	2	25	2	40	2	30	3	11
	접경 도서 외 도서	장봉	81,579	2	1.0	4	45	2	40	2	30	3	13
		외리	103,236	4	1.0	4	30	2	65	3	40	3	16
		자월	101,607	4	0.5	2	80	4	100	5	50	4	19
		승봉	184,759	4	0.9	3	80	4	85	4	25	2	17
		서포	336,753	8	1.0	4	150	5	175	5	160	5	27
		밭지름	103,413	4	0.6	2	100	5	100	5	220	5	21
		굴업	115,823	4	0.5	2	60	3	90	4	200	5	18
이작	98,316	2	1.2	4	40	2	40	2	-	5	15		

지의 최대거리', '해안선-개발지역까지의 최소거리' 등의 항목에 관해서는 상호 간 중복개념이 있는 관계로 5점씩 균등하게 배점을 주어 평가하고자 하였다 (표 14).

사구형태 및 규모적 특성평가 결과, 옥죽동(28점 이하 '점'생략), 사곶(27), 서포(27)사구 순으로 형태 및 규모적 측면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평(11), 장봉(13), 왕산(15), 이작(15)사구 순으로 상대적으로 평가결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결과는 면적이 넓은 사구일수록 형태 및 규모적 특성평가 결과가 높으며, 사구의 면적이 작을수록 형태 및 규모적 특성평가 결과가 낮게 나타나는 면적에 비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15).

(2) 보전적 측면 경관요소 특성평가

인천시 연안 해안사구의 보전적 측면 경관요소 특성평가 배점은 총 30점에 추가배점항목을 설정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총 30점의 배점은 사구원형의 양호한 보전과 복원의 원활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모래나지의 비율'과 사구 식생의 근간이 되는 '초본 및 목본 식생의 비율'이 높을수록 각각 15점 만점에 가깝도록 배점을 주고 평가하였다. 또한, 사구의 경관 및 생태계의 풍부함 측면에서 하천과 습지의 면적 합이 일정 수준(10,000㎡)을 넘을 경우 추가배점을 주도록 기준을 설정하였다 (표 16).

사구의 보전적 측면 경관요소 특성평가 결과, 옥죽동 사구가 추가배점까지 포함된 33점으로 매우 양호한 보전적 경관요소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나

표 16. 보전적 측면 경관요소 특성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사구의 보전적 측면 경관요소	모래나지의 비율 (%)	15	30% 이상
		12	20% 이상 30% 미만
		9	10% 이상 20% 미만
		6	5% 이상 10% 미만
		3	5% 미만
	초본 및 목본 식생의 비율 (%)	15	40% 이상
		12	30% 이상 40% 미만
		9	20% 이상 30% 미만
		6	10% 이상 20% 미만
		3	10% 미만
	추가배점 항목	3	하천과 습지의 면적 합이 10,000㎡ 이상 시

개, 연평, 외리, 자월, 이작사구 역시 각각 30점으로 보전적 경관요소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진촌(9), 사곶(12), 왕산(18)사구의 경우 사구의 보전적 경관요소 평가결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17).

(3) 훼손적 측면 토지이용 특성평가

인천시 연안도서 해안사구의 훼손적 측면 토지이용 특성평가 배점은 총 40점에 차감배점 항목을 설정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총 40점의 배점은 '개발지역 및 도로면적 비율'이 낮을수록 만점에 가까울수록 배점을 주고 평가하되 경작지, 군사시설, 나대지가 일정 면적을 초과할 경우 차감배점

표 17. 보전적 측면 경관요소 특성 평가결과

구분	사구 명칭	사구보전적 측면 경관요소						평가 점수 합계	
		모래나지		초본 및 목본식생		추가배점 항목			
		면적비율(%)	배점	면적비율(%)	배점	하천 및 습지	배점		
중구	덕교	24.6	12	37.3	12	14,607	3	27	
	용유	22.0	12	35.1	12	-	-	24	
	왕산	36.3	15	7.0	3	-	-	18	
	하나개	36.3	15	30.1	12	29,763	3	30	
	실미	28.9	12	36.3	12	-	-	24	
옹진군	서해 5도 접경 도서	사곶	8.0	6	9.6	3	50,570	3	12
		진촌(1)	11.3	9	31.8	12	-	-	21
		진촌(2)	25.7	12	59.4	15	-	-	27
		진촌(3)	2.3	3	5.9	3	12,790	3	9
		연화	11.1	9	62.2	15	-	-	24
		옥죽동	30.2	15	51.3	15	28,349	3	33
		시탄동	23.8	12	37.5	12	-	-	24
		연평	30.9	15	51.4	15	-	-	30
	접경도 서의 도서	장봉	60.1	15	31.3	12	-	-	27
		외리	38.4	15	44.7	15	-	-	30
		자월	45.8	15	45.9	15	-	-	30
		승봉	19.2	9	70.4	15	-	-	24
		서포	23.4	12	66.0	15	-	-	27
		빛지름	31.6	15	23.3	9	-	-	24
		굴업	27.3	12	66.8	15	-	-	27
이작	54.1	15	43.0	15	-	-	30		

을 주도록 기준을 설정하였다(표 18).

사구의 훼손적 측면 토지이용 특성평가 결과, 웅진군에는 옥죽동 사구를 포함한 8개 사구가 40점으로 개발에 의한 사구의 훼손이 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중구 내 위치한 사구의 경우 실미사구(40)를 제외하면, 사구 내 행해진 개발면적 비율이 타 사구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훼손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19).

한편, 중구의 사구들은 현재에도 훼손이 많이 진행되어 있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용유·무의개발)이 기수립되어 있는 지역으로 추후, 사구의 보전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매우 우려스러운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표 18. 훼손적 측면 토지이용 특성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사구의 훼손적 토지 이용 요소	개발지역 및 도로 면적 비율(%)	40	10% 미만
		30	10% 이상 20% 미만
		20	20% 이상 25% 미만
		10	25% 이상 30% 미만
		5	30% 이상
	차감 배점 항목	경작지	3
군사 시설		3	군사시설에 대한 토지이용이 있는 경우
나대지		5	나대지 면적비율이 전체 면적의 5% 이상인 경우

표 19. 훼손적 측면 토지이용 특성 평가결과

구분	사구 명칭	사구훼손적 측면 토지이용								평가 점수 합계	
		개발 및 도로면적		차감 항목							
				경작지		군사시설		나대지			
면적 비율(%)	배점	면적비율(%)	배점	유/무	배점	면적비율(%)	배점				
중구	덕교	33.6	5							5	
	용유	32.0	5							5	
	왕산	43.6	5					12.6	-5	0	
	하나개	10.8	30					7.7	-5	25	
	실미	6.9	40							40	
웅진군	서해 5도 접경 도서	사곶	9.3	40	63.6	-3			7.6	-5	32
		진촌(1)	2.7	40	33.8	-3			18.2	-5	32
		진촌(2)	0.0	40			유	-3			37
		진촌(3)	4.6	40	76.6	-3	유	-3			34
		연화	1.5	40			유	-3			37
		옥죽동	7.9	40							40
		시탄동	28.1	10							10
		연평	13.2	30							30
	접경 도서 외도 서	장봉	5.3	40							40
		외리	2.3	40							40
		자월	5.8	40							40
		승봉	6.2	40							40
		서포	5.7	40							40
맞지름	6.5	40					38.6	-5	35		
굴업	1.7	40							40		
이작	0.0	40							40		

(4) 평가 종합

인천시 연안 해안사구 종합평가 기준은 총점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사구를 보전가치가 높은 사구로 평가하여 '양호' 등급으로 구분하였고, 60점~80점 사이의 평가를 받은 사구를 보전가치가 '보통'인 등급으로, 60점 미만의 사구를 복원이 시급한 '훼손' 등급으로 평가하였다(표 20).

상기의 종합평가 기준에 의거한 인천시 연안 해안사구 21개소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는 양호등급이 11개소, 보통등급이 6개소, 훼손등급이 4개소로 정리되었다.

인천시 중구, 옹진군의 해안사구 중에서 양호등급은 중구의 실미사구(83)를 제외하고는 모두 옹진군에 속해 있으며 옥죽동사구(100), 서포사구(94), 자월사구(89), 외리사구(86), 굴업사구(85), 이작사구(85) 등

이다. 훼손등급은 옹진군 시탄동사구(55)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구에 속해 있으며 왕산사구(33), 용유사구(45), 덕교사구(55) 등이다. 또한 보통등급의 해안사구는 중구의 하나개사구(72)를 제외하고는 모두 옹진군에 속해 있으며 연화사구(79), 사곶사구(71), 연평사구(71), 진촌(1)사구(69), 진촌(3)사구(60) 등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해안사구 종합평가 결과, 환경부

표 20. 인천시 연안 해안사구 종합평가 기준

구분	평가기준
양호	80점 이상
보통	60점 이상~80점 미만
훼손	60점 미만

표 21. 인천시 연안 해안사구 종합평가 결과

구분	명칭	사구의 형태 및 규모적 특성 평가 점수	사구의 보전적 경관요소 특성 평가점수	사구의 훼손적 토지이용 특성 평가점수	총계	평가 등급	비고		
중구	덕교	22	27	5	54	훼손			
	용유	16	24	5	45	훼손			
	왕산	15	18	0	33	훼손			
	하나개	17	30	25	72	보통			
	실미	19	24	40	83	양호			
옹진군	사곶	27	12	32	71	보통	환경부 정밀조사 수행사구		
	진촌(1)	16	21	32	69	보통			
	진촌(2)	17	27	37	81	양호			
	진촌(3)	17	9	34	60	보통			
	연화	18	24	37	79	보통			
	옥죽동	28	33	40	100*	양호			
	시탄동	21	24	10	55	훼손			
	연평	11	30	30	71	보통			
	접경 도서 외 도서	장봉	13	27	40	80		양호	환경부 정밀조사 수행사구
		외리	16	30	40	86		양호	
		자월	19	30	40	89		양호	
		승봉	17	24	40	81		양호	
		서포	27	27	40	94		양호	
맞지름		21	24	35	80	양호			
굴업		18	27	40	85	양호			
이작	15	30	40	85	양호				

* 옥죽동 사구의 평가 총점은 101점이나 100점 만점 적용으로 1점 가감함.

의 정밀조사가 수행된 사구 중에서 옥죽동사구, 서포사구, 밧지름사구는 ‘양호’등급으로 평가되었으나 시탄동사구는 개발면적이 넓고, 사구의 확장고 형태의 보전을 사전에 저지하는 콘크리트 옹벽 등이 있어 토지이용 특성 평가 점수가 낮아 ‘훼손’ 등급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의 평가기준 적용을 통해 드러난 특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인천시 중구, 옹진군 연안을 대상으로 해안사구 분포 현황 및 특성분석에 기반한 해안사구별 보전현황 평가를 통해 추후, 광역시 차원의 해안사구 보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천시 연안의 규모적 특성 상 해안사구가 더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중구, 옹진군을 대상으로 환경부의 ‘해안사구 보전·관리지침(2002)’ 및 ‘해안사구 정밀조사(2003~2011)’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개소 외 상기 지역 내 추가적으로 분포하고 있을 해안사구를 추가도출 하고자 하였다. 이의 기준은 해안선 길이, 해변-전사구(전사구 배후지대)와 같은 형태적 특성과 지질학적 특성으로 토질이 ‘사질(砂質)인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4개소를 포함하여 총 21개소를 추가적으로 도출하였다.

추가 도출된 해안사구 21개소를 형태 및 규모적 특성, 경관 및 토지이용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이들 자료를 기반으로 정량적인 평가체계에 기반한 보전현황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방식은 공인된 해안사구 평가방법이 없어 선행연구자들의 평가방식 고찰을 통해 인천시 연안 해안사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체계를 마련,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종합평가 결과, 인천시 중구, 옹진군 연안의 해안사구 중 ‘양호’등급의 사구는 총 11개소로 파악되었고, ‘보통’등급은 6개소로 파악되었으며, ‘훼손’등급

은 4개소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환경부(2002)의 ‘해안사구 보전·관리지침’내 인천시 관내 사구평가와 상호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해당 지침 내에는 본 연구에서 평가한 21개소 사구에 해당하는 평가결과가 없어 선행연구자들과 같이 평가결과를 상호 비교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환경부(2002) 목록 외 인천시 연안에 분포하고 있는 해안사구를 체계적인 기준에 의해 추가도출 한 점, 추가 도출된 해안사구별 특성 조사 분석에 근거한 합리적 평가체계에 따른 종합평가 실시를 통해 추후 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해안사구 보전·관리 전략을 위한 사전 기초자료 구축 및 평가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한편으로 본 연구는 공간적 범위의 광범위성 및 군사시설 산재로 인한 자료습득의 어려움 등으로 강화군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여 인천시 연안 전체에 대한 해안사구 조사 및 분석, 평가를 수행하지 못한 점, 연구대상 지역의 현장조사가 병행되지 못해 보다 상세한 기초자료에 기반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못한 점 등은 한계를 갖는다.

끝으로 향후에는 본 연구결과의 한계를 고려하여 인천시 지역차원에서는 현장조사가 병행된 조사 및 분석자료 구축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해안사구 평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내에 공인된 해안사구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가 없어 연구자들마다의 연구 관점 및 특성에 따라 평가체계가 구성, 평가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국내 해안사구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보전·복원·이용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의 토대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주

1) 환경스페셜(2000.1.17) “모래언덕의 비밀-해안사구 그 최초의 보고서”에서 태안읍 일대 연안에 위치한 해안사구에 대한 훼손과 그로 인한 거주민 피해 등에 대해 보도한 바 있으며, 방영 이후 해안사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

- 저 해안사구 보전에 관한 사항이 2001년도 국정감사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 2) 환경노동위원회(2001), '200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정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은 '서해안 개발시 해안사구 보전'(33쪽), '태안 해안사구의 보전대책 필요'(53쪽) 항목이었다.
 - 3) 17개 특·광역시·도 중 연안지역을 가지고 있는 시·도 및 산하 연구원의 해안사구 관련 조례·지침 마련 또는 연구수행 등의 실태파악 결과, 충남발전연구원의 '신두리 해안사구 보전 관련 연구' 1건과 강원발전연구원의 '안인 해안사구 관리계획 수립' 1건 외 관련 정책추진실적을 파악할 수 없었다.
 - 4) 평가등급이 보통인 사구가 일반적인 사구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5) 해빈-전사구-전사구배후지대까지의 사구범위를 갖는 사구지역은 57개소, 해빈-전사구까지의 범위를 갖는 사구는 6개소(강원 봉포, 용화, 경북 칠포, 제주 괘지, 협재, 표선)로 파악되었다.
 - 6) 전사구는 폭풍 및 해일의 1차 저지선 역할을 함으로써 배후의 취약지역과 농경지를 보호하고, 적절한 풍속과 풍향에 의한 자연적인 모래퇴적 및 공급의 펌프역할을 하는 곳으로 전사구 지대의 보전이 양호해야 사구의 역동적인 변형이 가능하고, 사구형태 보전 및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전사구 지역이 과도한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경우 사구의 형태가 사라지며, 사구가 갖는 방재적, 생태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소가 사구멸실과 동시에 교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되기도 한다.
 - 7) 환경부(2001), "우리나라 해안사구 실태파악과 보전관리 방안 연구", 11쪽에 보면, 해안사구 평가를 ① 사구에 개발된 곳이 있어도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양호', ② 개발에 의하여 훼손된 상태가 비교적 작으면 '보통', ③ 개발에 의하여 대부분 원형이 훼손되었으면 '파괴'로 분류,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그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 8) 예를 들어 평가점수가 30점이라면 사구평가점수는 평가점수(30)/총점(60)에 의해 50%의 평가비율을 갖게 되는 것이다.
 - 9) 최희경(2010)의 등급구분인 매우양호, 양호를 환경부(2001) 등급구분인 양호로, 보통은 보통으로, 매우훼손과 훼손을 환경부 등급구분인 훼손으로 3등급화 해서 살펴보았다.

참고문헌

- 국립환경과학원, 2011, 자연방파제 해안사구, 환경부.
- 김종덕 외, 2005, 우리나라 모래해안의 실태와 환경관리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남혜정, 2005, 해안 지역의 환경 변화와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명현호, 2010, 건강성 평가를 통한 해안사구생태계 보전 관리방안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서중철, 2002, "원격탐사와 GIS기법을 이용한 신두리 해안사구지대의 지형변화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1), 98-109.
- 유근배(역), 2007, 해안보호, 한울출판사.
- 육근형 외, 2008, 연안완충공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윤한삼 외, 2010, "우리나라 해안사구 분포 현황과 기능 특성에 관한 고찰," 수산해양교육연구, 22(2), pp.180-194.
- 이윤구, 2011, 인간 간섭에 의한 해안 환경 변화 연구: 강릉시 사빈 해안을 사례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동호·박지훈, 2009, "충남 연안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안지형 평가,"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9(1), 73-95.
- 제종길, 2001, 우리나라 사구 실태파악과 보전·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부.
- 조두성, 2006, 한국 해안사구의 토양환경과 식물군락의 생태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지연, 2005, "신두리 해안사구를 둘러싼 갈등 분석," 월간 해양수산, 제246호, 5-15.
- 최희경, 2010, 동해안 사구의 보전 현황 평가,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갑수 외, 2010, "항공사진을 활용한 양양 해안사구 지역의 토지피복 변천 분석,"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3(2), 107-118.
- 환경노동위원회, 2001, 200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환경부.
- 환경부, 2002, 해안사구 보전·관리 지침.
- 환경부, 2008, 서해안(웅진)의 자연적으로 유실된 연안사구, 사빈의 침식영향분석 및 복원관리기술개발.
- 환경부, 2008, 전국 해안사구 정밀조사 보고서: 대청도(옥죽동, 시탄동), 고성(동호).

환경부, 2009, 전국 해안사구 정밀조사 보고서: 덕적도 (서포지, 밧지름사구), 임자도(대광사구).

KBS 환경스페셜(2000.1.17), 모래언덕의 비밀-해안사구 그 최초의 보고서.

Kutiel, P., 2001,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Mediterranean coastal sand dunes in Israel. *Journal of Coastal Conservation*, 7(2), 183-192.

McLachlan, A., 1990, The exchange of materials between dune and beach systems, In: Nordstrom K., Psuty, N. and Carter, B.(editors), *Coastal Dunes: Form and Process*, John Wiley & Sons Chichester, 201-215.

Phillips, M.R., Abraham, E.J., Williams, A.T., House, C., 2007, Function analysis as a coastal management tool: the South Wales coastline UK, *Journal of Coastal Conservation*, 11(3), 159-170.

Rhind, P., Jones, R., 2009, A framework for the manage-

ment of sand dune system in Wales, *Journal of Coastal Conservation*, 13(1), 15-23.

Shanmugam, S., Barnsley, M., 2002, Quantifying landscape-ecological succession in a coastal dune system using sequential aerial photography and GIS, *Journal of Coastal Conservation* 8(1), 61-68.

교신: 안태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72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이메일: ats@uh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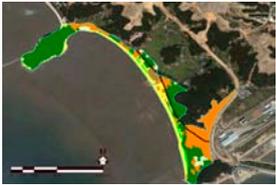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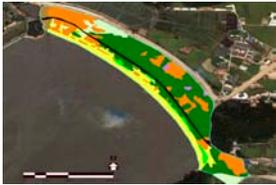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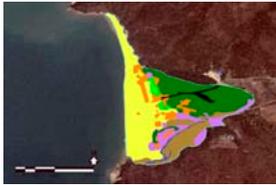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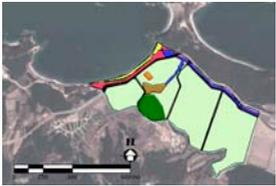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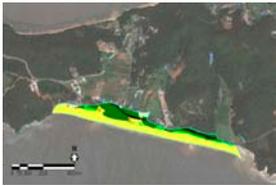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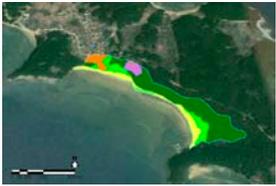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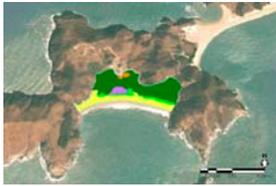
Correspondence: TaeSun An,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 Engineering, Hyupsung University, 72 Choeruback-Ro, Bongdam-Eup, Hwaseong-Si, Gyeonggi-Do, Korea (e-mail: ats@uhs.ac.kr)

최초투고일 2016. 5. 12

수정일 2016. 6. 7

최종접수일 2016. 6. 13

[부록] 인천시 연안 해안사구별 토지이용 현황 분석 도면

 〈중구 덕교사구〉	 〈중구 용유사구〉	 〈중구 왕산사구〉	 〈중구 하나개사구〉
 〈중구 실미사구〉	 〈옹진군 사곶사구〉	 〈옹진군 진촌사구(1)〉	 〈옹진군 진촌사구(2)〉
 〈옹진군 진촌사구(3)〉	 〈옹진군 연화사구〉	 〈옹진군 옥죽동사구〉	 〈옹진군 시탄동사구〉
 〈옹진군 연평사구〉	 〈옹진군 장봉사구〉	 〈옹진군 외리사구〉	 〈옹진군 자월사구〉
 〈옹진군 승봉사구〉	 〈옹진군 서포사구〉	 〈옹진군 밧지름사구〉	 〈옹진군 굴업사구〉
 〈옹진군 이작사구〉	<p>범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구경계 모래나지 초본식생 목본식생 아천 습지 개발지역 도로 경작지 군사시설 나대지 	없음	없음

Mapping the Geographic Variations of the Low Birth Weight cases in South Korea: Bayesian Approaches

Young-hee Roh* · Key-ho Park**

우리나라 저체중아 출생의 공간적 변동성 지도화: 베이지언적 접근

노영희* · 박기호**

Abstract : This study reviewed and compared methods for mapping aggregated low birth weight (LBW) and geographic variations in LBW in South Korea. Based on this review, we produced LBW maps in South Korea. Standardized mortality/morbidity ratios (SMRs) and crude mortality rates have been widely used for many years in epidemiological research. However, SMR-based maps are likely to be affected by sample size of unit area. Therefore, this study adopted a model-based approach using Bayesian estimates to reduce noisy variability in the SMR. By using a Bayesian model, we can calculate a statistically reliable RR values. We used the full Bayes estimator, as well as empirical Bayes estimators. As a result, variations in the two Bayes models were similar. The SMR-based statistics had the largest variation. The result maps can be used to identify regions with a high risk of LBW in South Korea.

Key Words : spatial epidemiology, spatial statistics, bayesian analysis, disease mapping, low birth weight (LBW), standardized mortality/morbidity ratio (SMR)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저체중아 출생 집계 자료를 공간적으로 지도화하기 위한 기법들을 검토·비교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LBW 지도를 작성하였다. 표준화사망률이나 조사망률 등은 의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표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화사망률은 집계 단위의 샘플 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언 기법을 활용하여 샘플 수에 따른 통계적 변동성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험적 베이지언 기법과 풀 베이지언 기법을 모두 활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유사한 통계량을 산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SMR 기반의 통계량은 높은 분산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따른 통계 지도는 우리나라 저체중아 출생의 높은 위험도를 가지는 지역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어 : 공간역학, 공간통계, 베이지언 분석, 질병 지도화, 저체중아, 표준화(유병률)사망률

* Invited Research Fellow, Division of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Korea Environment Institute, yhroh@kei.re.kr

**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khp@snu.ac.kr

1. Introduction

According to data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South Korea (2012), the proportion of low birth weight (LBW) and multiple births are increasing over time. Between 2004 and 2010, LBW rates increased 25% from 4.1% to 5%. Ylppö (1919) originally defined LBW as infants weighing less than 2,500 grams. In 1950,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dopted a figure of less than 2,500 grams as a universal definition of LBW (WHO, 1950). LBW is a well-known risk factor for increased infant morbidity and mortality. LBW has become the second leading cause of death among infants, after premature birth (Valero De Bernabé *et al.*, 2004). By school age, children with a LBW are more likely than those with a normal birth weight to have mild learning disabilities, attention disorders, developmental impairments, and breathing problems, such as asthma (Shiono and Behrman, 1995).

Many studies have analyzed the potential risk factors for LBW including socio-economics, smoking, maternal age, and educational level (Chomitz *et al.*, 1995; Rush and Cassano, 1983; Shiono and Behrman, 1995; Valero De Bernabé, 2004). Maternal age is considered a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birth outcome and is thought to represent a mother's biological or psychosocial preparedness for childbearing (Geronimus, 1996). Mothers over 35 years old have a higher chance to get a LBW infant when it compares to mothers aged 20 to 29 years old (Berkowitz *et al.*, 1990). According to the Bureau of Statistics in South Korea (2015), the average age for a person to marry has been increased in recent years. The age for a man's marriage was 32.4 years in 2014, up from 29.3 in 2000. In addition, the age for a woman's marriage was 29.8 years in 2010, up from 26.5 in 2000. Reasons for delayed marriage include trends for increasing number of women with active participation in economic and social fields, high educational level of women, and changing

social attitudes to marriage.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the average maternal age has also been increased. According to Song and Choi (1999), the average maternal ages in South Korea were 27.9 and 30.8 in 1995, 2008, respectively. They also reported that the proportion of advanced maternal age women in South Korea increased about three times between 1995 and 2008 (4.7% to 14.3%).

The research on LBW in South Korea has been predominantly focused on causes of LBW and developmental problems associated with LBW rather than disease mapping. Maps can depict the incidence and relative risk (RR) rates of LBW with visualization techniques. Disease mapping can also be utilized to assess our needs for health alerts or to formulate hypotheses and models involving potential covariates. Using a series of statistical choropleth maps, we examined the geographical patterns of LBW in South Korea. When calculating the RR for the area-specific aggregated data,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variance of RR according to the sample size. SMR is calculated by the ratio of the observed value divided by the expected value. Therefore, if the number of sample is small, SMR statistics have large variance. To compensate for this point, we calculate statistically reliable RRs by utilizing the Bayesian techniques. The study that utilizes Bayesian techniques in epidemiological field can be found in the Roh and Park (2014).

In Section 2, we present a spatio-temporal overview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birth counts. Then, we provide a brief review of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to estimate epidemiological rate values, such as RR rates. Bayesian model-based estimates are discussed in detail. In the next section, we calculated statistically reliable risks using Bayesian model-based estimates such as Poisson-Gamma and full Bayes model. The results of calculation were used to produce statistically reliable risk maps. In addition, we made the difference maps between SMR and Bayesian model-based methods.

2. Materials and Methods

1) Materials

Vital statistics on births were obtained from the birth records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South Korea. Each record contains information on infants, such as date of birth, location, weight, sex, and data on mothers including education, job, and age. The temporal range of this study encompassed 3 years from the beginning of January 2008 to the end of December 2010. LBW datasets were spatially aggregated according to geographical units. South Korea consisted of 249 Si-Gun-Gu levels of administrative districts in 2009. The average area of these districts is about 402 km², but each area of district has a great difference. For example, Jung-Gu within the Busan is the smallest of the districts (3 km²), and Hongcheon-gun within the Gangwon-do is the largest (1,817 km²).

Utilizing a variety of area information, we can create a cartogram. Cartogram is one of the effective mapping techniques to present statistics with distortion of area information of each region. By taking advantage of the

cartogram, we can easily compare the statistics of each region with amount of distortion. By doing so, we can detect the regions where have high risk values. As shown in cartogram in Figure 1, birth counts show a great range of variability throughout the areas. We made maps of LBWs in 2008 (panel (a)) and cartogram of newborn babies with the same coloring scheme in (a) (panel (b)). The legends in (a) and (b) are the same. As shown in the cartogram (b), birth counts in South Korea were concentrated in metropolitan areas and major cities include Gwangju, Busan, and Daegu. The birth counts, LBW cases, crude rates, and SMR of each administrative area are summarized in Table 1. LBWs seemed to increase slightly during the three years. The crude birth rate indicates the number of live births per 1,000 populations per year. Based on crude rates, 50 newborn babies were classified as LBW on average (approximately 5%). SMRs are commonly computed in the field of spatial epidemiology. The SMR is a ratio of the observed count within an area to the expected count based on the “at-risk” population (Lawson, 2006). A ratio greater than 1.0 suggests an excess risk. SMR had a range of values from 0.11 to 2.13 in 2009.

Figure 2 represents histograms and density plots of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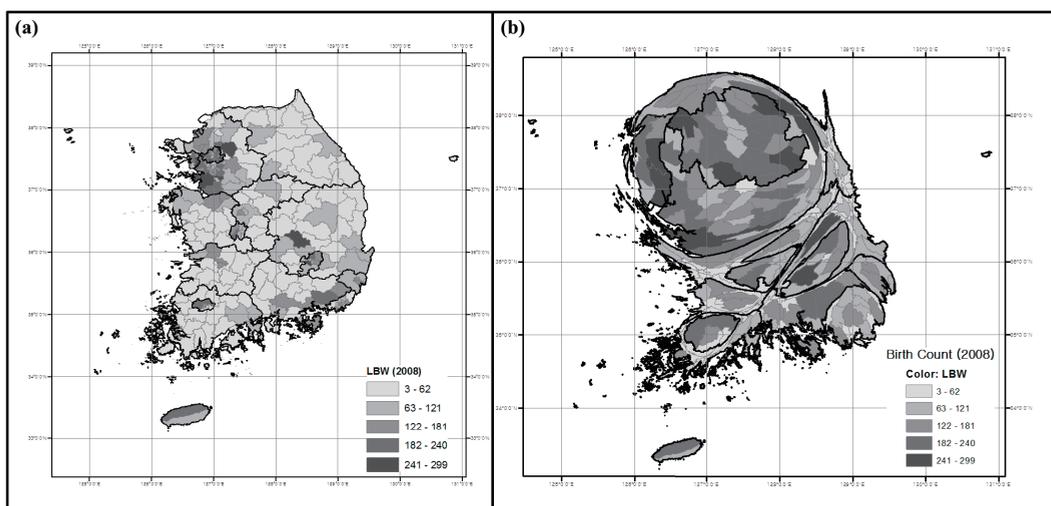


Figure 1. Maps of LBW in South Korea (a) The number of LBW in South Korea, (b) Cartogram of birth cou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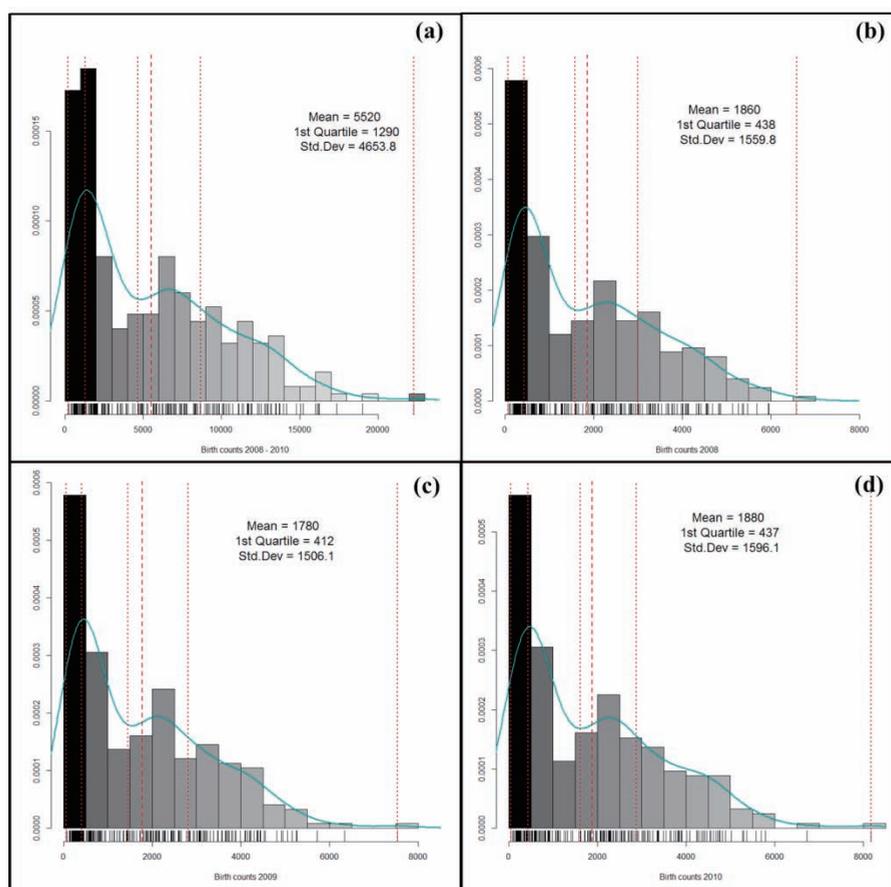


Figure 2. Birth counts in South Korea ((a) counts of 3 year aggregates, (b) 2008, (c) 2009, (d) 2010. The darkest bar represents 1st quartile range and the dotted line represents quintiles, the dashed line represents mean, and the curve represents the density)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birth count

Statistics	Birth counts			LBW cases			Crude rate*			SMR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minimum	76	63	50	3	1	2	16	5	24	0.331	0.110	0.476
median	1592	1453	1632	73	74	79	48	49	50	1.003	0.997	0.992
mean	1871	1787	1888	91	88	95	50	50	50	1.028	1.020	1.000
maximum	6610	7542	8207	301	358	428	87	5	91	1.783	2.128	1.816

* Crude rate is per 1,000 babies

birth counts in 2008, 2009, 2010, and 3 years data. In each plot, x axis represents the number of newborn baby and y axis represents the density of newborn baby. As

seen in the graph, the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newborn baby does not follow a normal distribution. There are many areas with small number of newborn baby.

For these reasons, we have to use the statistically reliable model, such as Bayesian model-based estimates to calculate the reliable relative risk.

2) Adjusting and transforming prevalence data

Observing the number of cases alone does not provide any information on the disease risk of a population. Observed values must be compared to expected values. The SMR is a common way to measure relative risks (RR). A RR over 1 suggests an increased risk of that outcome in the exposed group. The SMR can be a useful approximation of RR when the excess in mortality is consistent across all age groups (Symons and Taulbee, 1980). The SMR and its statistical significance are usually estimated and mapped for each region (Costello *et al.*, 1974; Elsen *et al.*, 1992; Meliker *et al.*, 2007). However, estimates of SMRs often show a large variability. Small population areas tend to present extreme RR estimates, and it will stand out on the map (Bernardinelli and Montomoli, 1992). Incidence rates often suffer from the ‘Small Number Problem.’ The variance of rate depends on the size of the denominator when the nominator is rare events. In the Small Number Problems, if the denominator is small, variance of rate will be large. If the denominator is large, variance of rate will be small. The Small Number Problem occur various geographic areas where the population is sparse or the numerator is a rare event. If this occurs, small random fluctuations of variable may cause large fluctuations in the resulting percentage, ratio, or rate (Kennedy, 1989).

To develop statistically robust model-based estimations, researchers have been utilized information from global mean and Bayes approaches. Clayton and Kaldor (1987) proposed a model-based Bayesian approach. According to this study, unknown RRs are modeled collectively as a spatial stochastic process. Since then, a number of related studies have been published (Marshall, 1991; Mollie and Richardson, 1991; Richardson *et al.*,

2004). According to Bayesian model-based approaches, each area has an estimated RR, which is a compromise between its SMR and inferences from information obtained from all of the areas combined. Such approaches reduce risk estimates and result in stabilized maps with better epidemiological interpretation (Bernardinelli and Montomoli, 1992). One way to account for spatial associations is to define a neighborhood in i -th area and to use the neighborhood to set prior parameters for θ_i ; θ_i is the RR risk in i -th region. Then, θ_i is estimated by shrinking the disease rates toward the neighborhood mean, instead of a global mean (Marshall, 1991). The results of local shrinkage are produced by local estimators in each area.

(1) SMR

Due to the fact that it has simple computational procedure, the SMR is the most widely used standardization statistic in risk ratio assessments in the field of public health. The SMR can be interpreted as a ratio of the observed to expected numbers of cases. The expected number of case is determined by the standard population. The average risk rate of a national aggregate population is often employed as a standard. The SMR is a maximum likelihood estimate of the RR under a Poisson model of the observed number of disease occurrences. Within a map of n regions, O_i denotes the observed case in i -th region, E_i is the expected count in i -th region, and θ_i is the RR risk in i -th region. We assume that the expected counts are known constants.

$$O_i = \theta_i \sim \text{Poisson}(E_i \theta_i)$$

$$\hat{\theta}_i \equiv \text{SMR}_i = O_i / E_i$$

The observed count in the i -th region is assumed to be a Poisson distribution, with mean $E_i \theta_i$, and the likelihood $L(\theta)$ and log-likelihood $l(\theta)$ of $\{O_i\}$ is given by:

$$L(\theta) = \prod_i^n \frac{\exp(-E_i \theta_i)}{O_i!} \{E_i \theta_i\}^{O_i} = \prod_i^n \text{Poisson}(O_i; E_i \theta_i)$$

$$L(\theta) \propto \prod \theta_i^{O_i} \cdot \exp\left(-\sum E_i \theta_i\right)$$

$$l(\theta) = \ln L(\theta) = \sum O_i \ln \theta_i - \sum E_i \theta_i$$

(2) Bayesian methods

Empirical Bayes statistics are calculated using penalized log-likelihood maximization. Empirical Bayes information is derived from a model of a reference population. The full Bayesian method utilizes simulations of the joint posterior distribution. One of the strengths of this approach is that it allows for precise assessments of uncertainty. Instead of a point estimate of the expected mean and its variance, it generates a distribution of likely values using a prior distribution. This enables variance to be calculated more accurately (Persaud *et al.*, 2010).

For example, in the following basic framework for a Bayesian analysis (Marshall, 1991), suppose that $\theta = (\theta_1, \dots, \theta_n)$ are the risks to be estimated at N areas and $y = (y_1, \dots, y_n)$ are the numbers of diseases in populations of size n_1, \dots, n_N . In the Bayesian approach, inferences about θ are based on the posterior distribution $P(\theta|y)$ of θ , which is obtained by combining the likelihood with the prior via Bayes' rule (Carriquiry and Pawlovich, 2004). As the posterior distribution is a product of a likelihood and prior distribution, it describes the behavior of parameters after data have been observed and prior assumptions have been made. The posterior distribution is defined as follows:

$$P(\theta|y) = \frac{L(y|\theta)g(\theta)}{C}$$

$$\text{where } C = \int_p L(y|\theta)g(\theta)d\theta$$

Where $g(\theta)$ is the joint distribution of the vector θ . This distribution $g(\theta)$ can be specified as a proportional-ity, $p(\theta|y) \propto L(y|\theta)g(\theta)$.

Computational problems have hindered the application of the full Bayes approach, but recent developments

in Bayesian analysis, mainly in the area of a Monte Carlo technique called the Gibbs sampler, provide a means of overcoming these difficulties. Clayton (1989) and Besag *et al.* (1991) proposed the application of the Gibbs sampler in disease mapping for the first time. Using the posterior distribution, we can compute points and intervals of estimates, thereby accessing uncertainty in risk maps. Based on a comparison of empirical and full Bayes estimators, Bernardinelli and Montomoli (1992) concluded that the latter has advantages due to its ability to quantify uncertainty in parameters in the model.

To determine whether different estimators produce different values, we applied empirical and full Bayesian model-based approaches to RRs to calculate reliable risk statistics. To verify the level of stabilization, we depicted risk statistics, and compared variability of SMR and Bayes estimates through the difference maps.

3. Results

1) Geographical visualization of relative risks using an empirical Bayesian model

We calculated model-based SMRs using the Poisson-Gamma prior model of parameters. Figure 3 and 4 depict the maps produced with the empirical Bayes Poisson-Gamma model. For comparison, the SMR maps are included in this figure. In addition, the red circles indicate the high RR regions. We assume that the RRs $\{\theta\}$ are iid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and they follow a gamma distribution with a scale parameter α and shape parameter v . Conditional on θ_i , the observed deaths O_i are Poisson variates with expectation $\theta_i E_i$ (Clayton and Kaldor, 1987). In Bayesian estimation, if there is small variance in the crude rate, then it will remain unchanged relatively. In contrast, if there is a large variance in the estimation of the crude rate, it will show strong shrink-

age toward the overall mean. For this reason, the map with the Poisson-Gamma estimator is shrunk toward the overall mean when it compares to a map of SMR. As shown in Figure 3 and 4, empirical Bayes estimates

of RRs show smaller variations than the SMR. Extreme SMR estimates based on small populations have shrunk toward their global mean. However, extreme estimates based on large populations are maintai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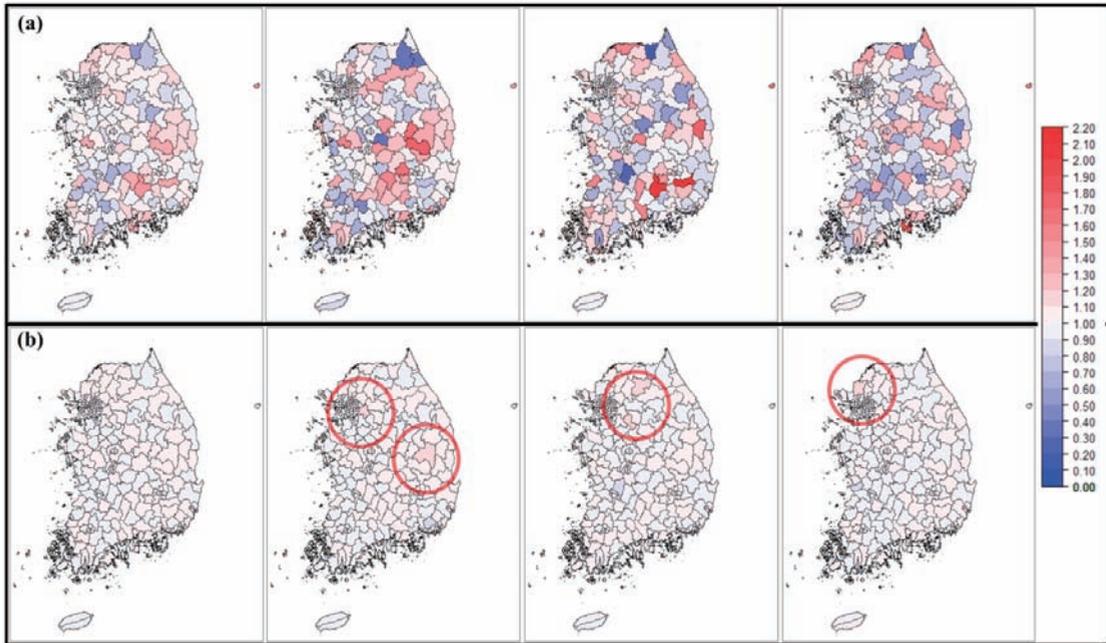


Figure 3. Maps of LBW relative risks ((a) SMR - from the leftmost panel, 3 years aggregates, 2008, 2009, and 2010, (b) Poisson-Gamma estimates - 3 years aggregates, 2008, 2009, and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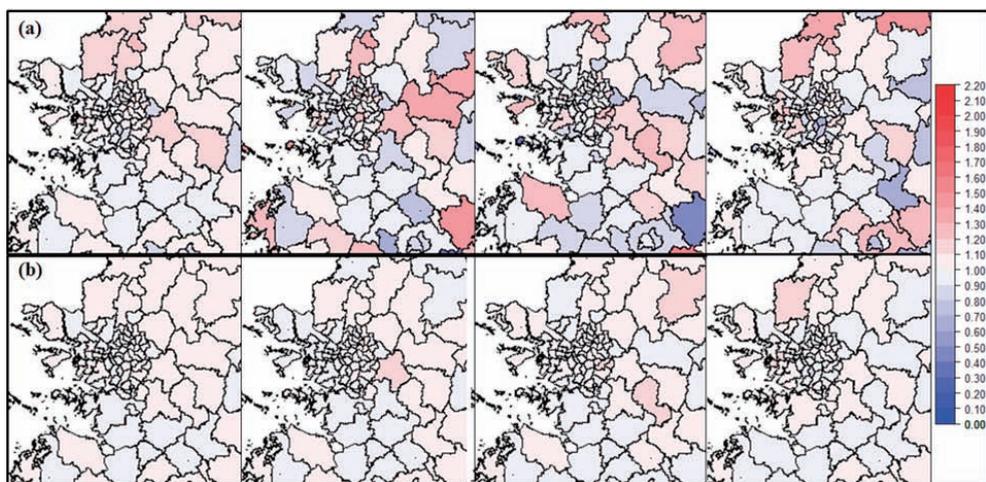


Figure 4. Maps of LBW relative risks - Enlarged map of the metropolitan area ((a) SMR - from the leftmost panel, 3 years aggregates, 2008, 2009, and 2010, (b) Poisson-Gamma estimates - 3 years aggregates, 2008, 2009, and 2010)

In 2008, the SMR values were high in Uiseong-gun, Seongju-gun, Yecheon-gun, Geochang-gun, and Cheongyang-gun. In the empirical Bayes map, they were high in Dongdaemun-gu, Gwangju-si, Jung-gu (Ulsan), Andong, Yangju-si regions. In 2009, SMR values were high in Cheongdo-gun, Hapcheon-gun, Yeongyang-gun, Ulleung-gun, Boeun-gun. Chuncheon-si, Seongnam-si Sujeong-gu, Seongnam-si Jungwon-gu, Daedeok-gu, and Icheon-si in the empirical Bayes map. In 2010, they were high in Namhae-gun, Jung-gu (Busan), Ulleung-gun, Hwacheon-gun, Goseong-gun regions. However, Bupyeong-gu, Paju-si, Nam-gu (Incheon), Jung-gu (Ulsan), Ulju-gun regions had high SMR values in the stabilized map. In the map with 3-year aggregated data, Ulleung-gun, Hapcheon-gun, Jung-gu (Busan), Uiseong-gun, Geochang-gun regions had high SMR values. However, in the empirical Bayes map, Jung-gu (Ulsan), Seo-gu (Daegu), Dongducheon-si, Nam-gu (Incheon), Gwangju-si regions had high SMR values.

2) Geographical visualization of the relative risks using full Bayesian modeling

The full Bayesian method uses a stochastic simulation technique called the Gibbs sampler, and the value of posterior distributions is obtained from the Markov chain Monte Carlo technique. We performed Gibbs sampling with a burn-in of 10,000 iterations, followed by 10,000 further cycles. We used 10,000 simulations of Markov chains after the 10,000 burn-in period to calculate the mean and median of the parameters. Figure 5 compares the various estimates obtained with the different estimators in 2008. The Poisson-Gamma model and full Bayesian technique produced very similar estimates in all the regions. Some extreme RRs, which suffer from small at-risk population, were effectively attenuated to the prior global mean.

3) Comparison of the results

Table 2 and Figure 6 depict the quintile differences between the SMR and the statistics of the Poisson-Gam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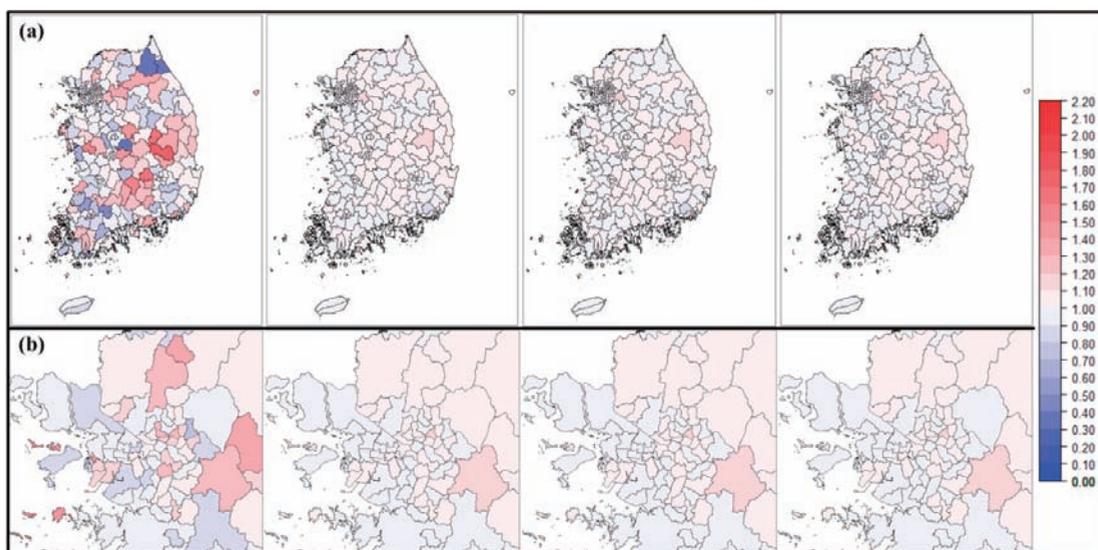


Figure 5. Comparison of SMR, Poisson-Gamma, full Bayes mean and median in 2008 ((a) from the leftmost panel, SMR, Poisson-Gamma, full Bayes mean and full Bayes median, (b) Enlarged map of the metropolitan area)

model. After calculating the SMRs and the statistics of Poisson-Gamma model, the regions were assigned to specific quintile classes according to their RRs. We calculated the differences in the quintile classes between SMR and the statistics of Poisson-Gamma model. As in the research of Pickle and White (1995), we compared and depicted the changes of the quintile classes between the methods to see the difference clearly. If the difference value is positive, it means that the value of SMR quintile class becomes smaller. It is caused by movement from a large quintile class to a small quintile class. In contrast, if the difference value is negative, it means that it moves toward a larger quintile class from a smaller quintile class. If the difference value is 0, it indicates that there is no movement between classes.

As shown in Table 2, more one-half of the quintile classes are unchanged. In most cases, after stabilization, quintile classes increased or decreased by just one class. In the 3 years aggregated data, the classes changed very little (67.5%) compared to each year's data. Relatively stable SMR values were calculated by increasing the number of samples through aggregating the 3 years of LBW data. Figure 6 depicts the quintile values and class changes in the 3 years aggregated data (left panels) and each of the data in 2008 (right panels). The cumulative curves of each quintile count are shown in the right lower corner of each panel. By applying the Bayesian method (2a and 2b), we calculated the reliable risk statistics of each region. The ranges of the Bayesian SMR decreased

and 2-quintile and 4-quintiles of SMR ranges were distributed around 1 (1.00, 1.01, and 1.03, respectively). In the difference map (3a and 3b), changes in the quintile class of the SMR with the 3 years' aggregated data were smaller than in the SMR of each year.

Table 3 shows the specific quantities of quintile change and the number of the region. The number of regions of positive and negative changes of quintile class is similar. Whether the region has positive change or negative change of class, in most cases, it moves between 1-quintile and 2-quintiles or it moves between 4-quintiles and 5-quintiles. The regions where class change occurs toward the center have a relatively small birth count. On the other hand, the regions where class changes occur toward the 1 or 5-quintile range have a relatively large number of births.

In the 3 years' aggregated data, Ongjin-gun, Jangsu-gun, Danyang-gun, Gurye-gun, and Muju-gun, moved from 1-quintile to 2-quintile after stabilization. In contrast, Guro-gu, Gwanak-gu, Yeongdeungpo-gu, Yongsan-gu, and Anseong-si moved from 2-quintile to 1-quintile. Seongdong-gu, Seocho-gu, Gangnam-gu, Seodaemun-gu, and Yeonsu-gu moved from 4-quintiles to 5-quintiles, and Ulleung-gun, Gunwi-gun, Cheongsong-gun, Yeongdeok-gun, and Bonghwa-gun moved from 5-quintiles to 4-quintiles. Yeongyang-gun moved from 5-quintiles to 3-quintiles, showing a 2-quintile change. In 2009, Gokseong-gun and Jangsu-gun showed 2-quintile class changes: 1-quintile to 3-quintiles. In

Table 2. The number of regions that changed their quintile classes

Statistics	Years	Quintile class changes				
		-2	-1	0	1	2
Difference of SMR and Poisson-Gamma model	3 years	0(0)	41(16.5)	168(67.5)	39(16)	1(0.4)
	2008	0(0)	53(21.3)	143(57.4)	53(21.3)	0(0)
	2009	2(0.8)	45(18.1)	153(61.4)	49(19.7)	0(0)
	2010	2(0.8)	58(23.3)	128(51.4)	61(24.5)	0(0)

* The numbers in parentheses refer to percentages (%)

Table 3. Counts of the areas with increased and decreased quintile classes

Quintile Changes (SMR to Poisson-Gamma model)		3 years	2008	2009	2010
Increased	1 to 2	13	19	17	22
	2 to 3	5	9	6	7
	3 to 4	6	5	4	6
	4 to 5	16	20	18	23
	1 to 3	0	0	2	2
	2 to 4	0	0	0	0
Decreased	3 to 5	0	0	0	0
	5 to 4	16	20	18	22
	4 to 3	5	5	4	6
	3 to 2	5	9	8	9
	2 to 1	13	19	19	24
	5 to 3	1	0	0	0
	4 to 2	0	0	0	0
3 to 1	0	0	0	0	

* Except for no changes

2010, Pyeongchang-gun and Ongjin-gun changed from 1-quintile to 3-quintiles. The regions shifted more than 2-quintile classes had a small LBW count or birth count. By acceptance of the global mean, large change of quintile class have occurred in these regions because of the small sample size. In addition, their ranks of the LBW and birth counts placed in the 1st quintile.

Table 4 summarizes the class frequencies of regions. The classes were divided into four with equal intervals of 0.5. If a risk value was greater than 1.5, it was classified as Class 4. Therefore, Class 4 regions can be considered to have a relatively high risk of LBWs. On the other hand, if the RR was smaller than 0.5, the region was classified as Class 1 (i.e., regions with a low relative risk of LBW). Some areas classified according to SMR values fell into Class 1 and 4. However, no regions were allocated to Class 1 or Class 4 when classifying regions with stabilized SMR. The regions assigned to Class 1 or 4 according to SMR had a small population and relatively low number of births. Due to the small number of population, the variability of SMR was relatively large. The sta-

bilized SMR statistics were weighted based on the global mean of the populations, so there are no regions classified as Class 1 or 4.

In 2008, there was a large variation between SMRs and the full Bayes model in Uiseong-gun, Inje-gun, Yangyang-gun, Seongju-gun, and Boeun-gun. In 2009, Cheongdo-gun, Hapcheon-gun, Yanggu-gun, Yeongyang-gun, and Jinan-gun showed large differences between before and after stabilization. In addition, there was a large difference before and after stabilization in Namhae-gun, Ulleung-gun, Jung-gu (Busan), Yeongyang-gun, Yanggu-gun in 2010 and in Ulleung-gun, Yanggu-gun, Hapcheon-gun, Jung-gu (Busan), Jinan-gun in the 3 year aggregated data. In most cases, large difference values between SMR and shrink value are observed in the regions where the population is small (i.e., a low birth rate). In general, the smaller the population, the larger the shrinkage. The comparison shows that the higher RR shrunk much more toward the overall mean in rural than in urban reg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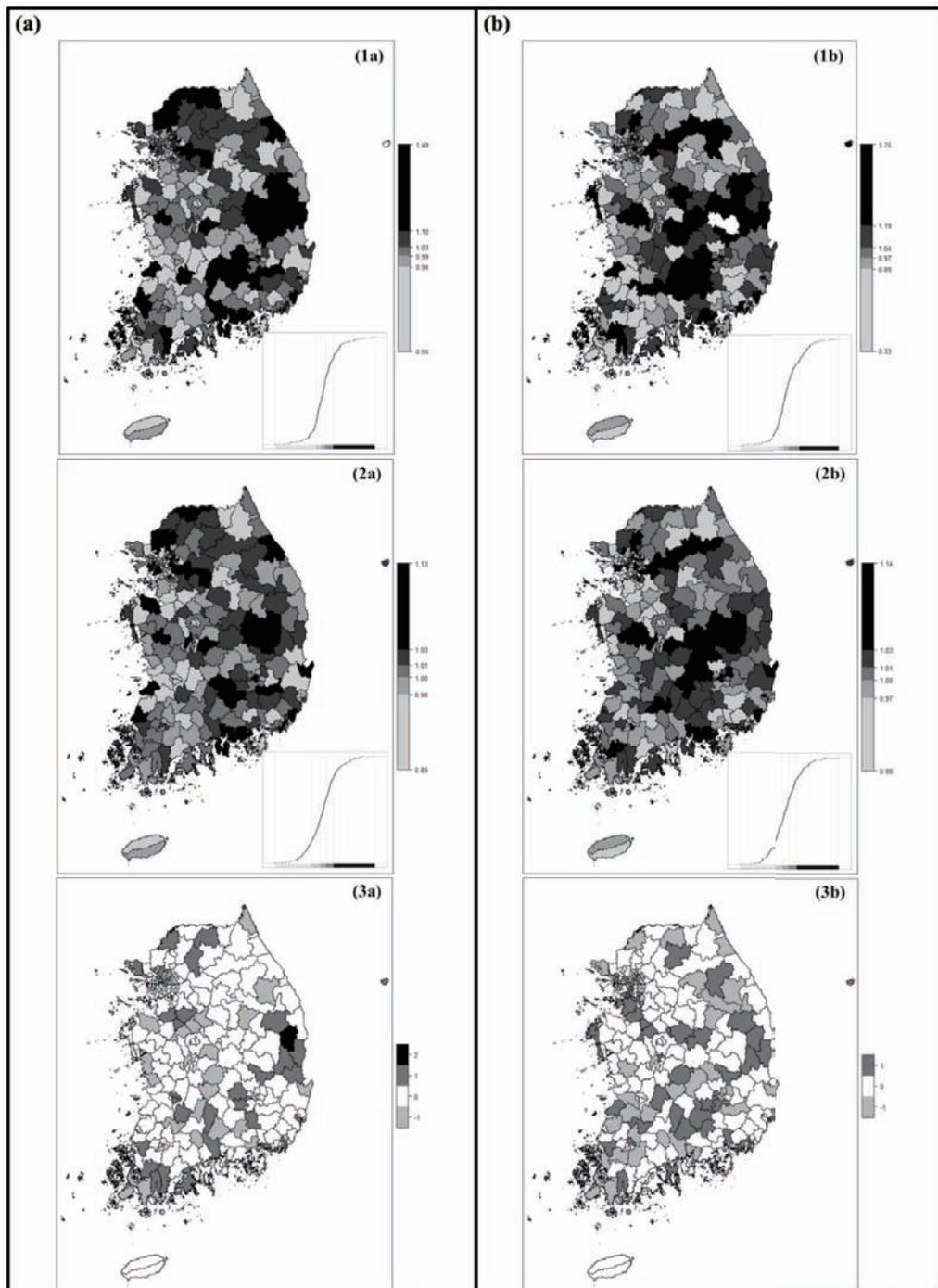


Figure 6. Mapping the differences of quintile classes based on the SMR and Bayes estimates ((a) 3 years aggregated data: (1a) SMR quintile map, (2a) quintile map of Poisson-Gamma model, (3a) Difference map, (b) 2008: (1b) SMR quintile map, (2b) quintile map of Poisson-Gamma model, (3b) Difference map)

Table 4. Classification of the regions according to the relative risk classes of LBW

		2008		2009		2010	
		SMR	Poisson-Gamma	SMR	Poisson-Gamma	SMR	Poisson-Gamma
Class 1	Under 0.5	4	0	4	0	2	0
Class 2	0.5 - 1	119	113	124	116	127	129
Class 3	1 - 1.5	121	136	111	133	117	120
Class 4	Over 1.5	5	0	10	0	3	0

4. Discussion

Mapping is an effective way to visualize counts or rates of health data. We can provide easy and interesting health contents when we make a map using the prevalence or mortality data in each unit area. The representation of epidemiological data using maps and subsequent analysis of maps are commonly used in the analysis of health statistics and spatio-temporal patterns. Area-specific estimates of risk can give suggestions on public health resource allocations by estimating the disease burden in specific areas. In addition, as in the John Snow's cholera maps, creating risk maps can be a clue to solve the hypotheses associated with health.

In this study, we produced prevalence maps of LBW in South Korea for the first time. SMRs are widely used to explain RRs in epidemiological fields. However, epidemiological maps and geographic visualization based on SMRs may give misleading of data due to a small number of cases or small populations in the study areas. Therefore, we used Bayesian models to calculate and depict statistically reliable risk estimates of LBW in South Korea. We used both empirical Bayes and full Bayes approaches for smoothing purposes. In addition, we compared maps of the posterior distribution of prevalence and the SMR.

We used the Poisson-Gamma model and full Bayesian methods. A Bayesian approach is warranted to accommodate the posterior means in epidemiological mapping studies. The use of the Bayesian model provided more

reliable estimates of RRs in small areas. To compare the variability and range of the statistics computed by each method, we calculated the difference between SMRs and model-based estimates. We visualized SMRs, model-based estimat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methods. The SMR method was the least efficient estimate of RRs. Bayesian approaches could be used to explore an excessive and low risk area with statistically reliable risk values. In this study, the result statistics and the variance of empirical and full Bayesian analysis were similar. Therefore, when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Occam's Razor, it would be more efficient to utilize the empirical Bayesian analysis.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study is that it highlights the need for disease mapping and the current status of LBW in South Korea. In addition, this research provides statistically reliable risk maps of LBW in South Korea for the first time. LBW maps can be used for detection of the areas that need to support medical assistance. The limita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it focused on creating LBW prevalence maps. Therefore, this research did not include the statistical grouping or clustering of homogeneous high or low risk regions. Futur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identify clusters of high- or low-risk regions of LBW prevalence in South Korea.

References

- 통계청, 2015, 201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Berkowitz, G.S., Skovron, M.L., Lapinski, P.H. and Berkowitz, R.L., 1990, Delayed childbearing and the outcome of pregnancy,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22, 659-664.
- Bernardinelli, L. and Montomoli, C., 1992, Empirical Bayes versus fully Bayesian analysis of geographical variation in disease risk, *Statistics in Medicine*, 11, 983-1007.
- Besag, J., York, J., and Mollie, A., 1991, Bayesian Image Restoration, with Two Applications in Spatial Statistics, *Annals of the Institute of Statistical Mathematics*, 43, 1-59.
- Bureau of Health Policy,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 2012 Family health service guide.
- Carriquiry, L. and Pawlovich, P., 2004, *From Empirical Bayes to Full Bayes: Methods for Analyzing Traffic Safety Data*, Iowa Library Services, URI: <http://publications.iowa.gov/id/eprint/13273>.
- Chomitz, V.R., Cheung, L.W.Y. and Lieberman, E., 1995, The role of lifestyle in preventing low birth weight, *The Future of Children*, 5(1), 121-138.
- Clayton, D.G. and Kaldor, J., 1987, Empirical Bayes estimates of age-standardized relative risks for use in disease mapping, *Biometrics*, 43(3), 671-681.
- Clayton, D.G., 1989, *A Monte Carlo Method for Bayesian Inference in Frailty Models*, University of Leicester Department of Community Health Technical Report, Leicester, U.K.
- Costello, J., Ortmeier, C.E. and Morgan, W.K.C., 1974, Mortality from lung cancer in U.S. coal miner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64(3), 222-224.
- Elsen, E.A., Tolbert, P.E., Monson, R.R. and Smith, T.J., 1992, Mortality studies of machining fluid exposure in the automobile industry I: A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22, 809-824.
- Geronimus, A.T., 1996, Black/white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age to birthweight: A population-based test of the weathering hypothesis, *Social Science & Medicine*, 42(4), 589-597.
- Kennedy, 1989, *The small number problem and the accuracy of spatial databases*, in Goodchild, M.F. and Gopal, S. eds., *Accuracy of Spatial Databases*, Taylor & Francis, U.K., London.
- Lawson, A.B., 2006, *Statistical Methods in Spatial Epidemiology*, 2nd ed., John Wiley & Sons Inc, UK.
- Lawson, A.B., Biggeri, A.B., Böhning, D., Lesaffre, E., Viel, J.F., Clark, A., Schlattmann, P. and Divino, F., 2000, Disease mapping models: an empirical evaluation, *Statistics in Medicine*, 19, 2217-2241.
- Lawson, A.B., Böhning, D., Biggeri, A., Lesaffre, E. and Viel, J.F., 1999, *Disease mapping and its uses*, in Lawson, A.B., Böhning, D., Biggeri, A., Lesaffre, E. and Viel, J.F. and Bertollini, R. eds., *Disease mapping and risk assessment for public health*, West Sussex, John Wiley & Sons, U.K.
- Lewis, G.H. and Johnson, R.G., 1971, Kendall's Coefficient of Concordance for sociometric rankings with self-excluded, *Sociometry*, 34, 469-503.
- Marshall, R.J., 1991, Mapping disease and mortality rates using empirical Bayes estimators, *Applied Statistics*, 40(2), 283-294.
- Meliker, J.R., Wahl, R.L., Cameron, L.L. and Nriagu, J.O., 2007, Arsenic in drinking water and cerebrovascular disease, diabetes mellitus, and kidney disease in Michigan: a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analysis, *Environmental Health*, 6(4), 1-11.
- Mollié, A. and Richardson, S., 1991, Empirical Bayes estimates of cancer mortality rates using spatial models, *Statistical in Medicine*, 10, 95-112.
- Mollié, A., 1999, *Bayesian and empirical Bayes approaches to disease mapping*, In *Disease Mapping and Risk Assessment for Public Health*, Lawson, A.B., Biggeri, A., Boehning D, Lesaffre E, Viel, J-F., Bertollini, R. (eds), Wiley, New York, 15-29.
- Persaud, B., Lan, B., Lyon, C. and Bhim, R., 2010, Comparison of empirical Bayes and full Bayes approaches for before-after road safety evaluation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42, 38-43.
- Pickle, L.W. and White, A.A., 1995, Effects of the choice of age-adjustment method on maps of death rates, *Sta-*

- tistics in Medicine*, 14, 615-627.
- Richardson, S., Thomson, A., Best, N. and Elliott, P., 2004, Interpreting posterior relative risk estimates in disease-mapping studies,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112(9), 1016-1025.
- Rush, D. and Cassano, P., 1983, Relationship of cigarette smoking and social class to birth weight and perinatal mortality among all births in Britain, 5-11 April 1970,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37, 249-255.
- Shiono, P.H. and Behrman, R.E., 1995, Low birth weight: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Future Child*, 5(1), 4-18.
- Song, S.H. and Choi, E.S., 1999, Clinical Observation on Delivery of Low Birth Weight Infa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5(2), pp.169-178.
- Symons, M.J. and Taulbee, J.D., 1980,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as approximation to relative risk*, Institute of Statistics Mimeo Series No.1294.
- Tobler, W., 1970, A computer movie simulating urban growth in the Detroit region, *Economic Geography*, 46(2), 234-240.
- Valero De Bernabé, J., Soriano, T., Albaladejo, R., Juarranz, M., Calle, M.E., Martínez, D. and Domínguez-Rojas, V., 2004, Risk factors for low birth weight: a review, *European Journal of Obstetrics & Gynecology and Reproductive Biology*, 116, 3-15.
- World Health Organization, 1950, *Expert Group on Prematurity. Final report*. Technical report series 27,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 Ylppö A., 1919, Zur physiologie, klinik, zum schicksal der frühgeborenen, *Zeitschrift für kinderheilkunde*, 24, 1-110.
- Young-hee Roh and Key-ho Park, 2014, A Comparative Analysis of SMR vs. Bayesian Modeling for Calculating Statistically Reliable Relative Risks and Disease Mapping, *한국지도학회지*, 14(2), 107-117.
- 교신: 박기호,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이메일: khp@snu.ac.kr)
- Correspondence: Key-ho Park,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South Korea, 08826 (e-mail: khp@snu.ac.kr)

Received March 14, 2016

Revised March 31, 2016

Accepted April 6, 2016

행정구역 분리가 지역의 인구와 산업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충청북도 괴산군과 증평군을 사례로

신영재*

A Study on the Effect of Administrative Districts Separation to the Changes of Population and Industry in a Region: A Case Study on Goesan-gun and Jeungpyeong-gun, Chungcheongbuk-Do

Yeong-Jae Shin*

요약 : 충청북도 괴산군과 증평군은 2003년에 행정구역이 분리되었다. 괴산군은 농촌, 증평군은 도시 지역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구역이 분리된 충청북도 괴산군과 증평군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충청북도 괴산군과 증평군의 변화를 인구와 최고지가, 산업별 종사자와 입지 계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괴산군의 인구는 감소, 증평군의 인구는 증가하였고, 최고지가의 상승률은 증평군이 더 높다. 2013년 기준으로 입지 계수를 보면, 증평군은 제조업과 생산자 관련 서비스업, 괴산군은 농업과 광업, 소비자 관련 서비스업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괴산군과 증평군의 지역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요어 : 행정구역 분리, 인구, 최고지가, 종사자, 입지 계수

Abstract : Goesan-gun and Jeungpyeong-gun, Chungcheongbuk-Do have been separated administratively since 2003. Goesan-gun is rural area, and Jeungpyeong-gun is urban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changes after the separ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Goesan-gun and Jeungpyeong-gun, Chungcheongbuk-Do). This study observed changes of Goesan-gun and Jeungpyeong-gun, Chungcheongbuk-Do based on population, the highest land value, employees and location quotient. Population of Goesan-gun has decreased, and that of Jeungpyeong-gun has increased. The highest land value of Jeungpyeong-gun has increased more than that of Goesan-gun. Observation of location quotient, with the location quotient of 2013 as a criterion, showed that manufacturing business and producer service business have developed in Jeungpyeong-gun, while agriculture and customer service business have developed in Goesan-gun. This result is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regional characteristic of Goesan-gun and Jeungpyeong-gun.

Key Words : separ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population, land value, employees, location quotient

* 잠신고등학교 교사(Teacher, Jamsin High School), syj7161@hanmail.net

1. 서론

1) 연구 목적 및 방법

지역의 변화를 다루는 것은 지리학의 주요 연구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인간의 주요 활동 무대인 지역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Chisholm, 1990). 따라서 지역의 환경이 변하게 되면, 지역의 경제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등 변하게 된다. 충청북도 괴산군과 증평군은 원래 같은 행정구역인 괴산군이었다. 그러나 1990년 12월 31일부터 충청북도 증평출장소로 독립 운영되면서 괴산군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증평 지역의 주민과 시민단체, 정치인들의 노력으로 2003년 8월 30일에 괴산군에서 증평군이라는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었다. 행정구역의 분리로 인해 증평군에서는 환영을, 괴산군에서는 우려¹⁾가 제기되었다.

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리적 또는 지역적 범위(손재식, 1991, 92)이며,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국토 공간을 구분한 지리상의 경계로 일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설정하였다(김안제, 1979, 559). 따라서 행정구역은 전통성과 역사성, 생활권, 지역 공동체 의식 등을 전제로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증평 지역에서는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 증평읍과 도안면을 증평군으로 분리하였다. 증평군이 분리되어 규모나 경제적인 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 정부는 지역의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기업가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지방 정부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잠재력을 찾아내야 한다. 따라서 지방 정부는 주민 및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보다는 지역과 같은 소규모 공간 단위가 중요한 경제 단위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는 지역의 상대적 중요성을 부각시켜 경쟁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을 신지역주의로 부르기도 한다. 신지역주의

의 등장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포드주의에서 포스트 포드주의로 전환되면서 지역의 경제적 부활을, 정치적 측면에서는 중앙집권에서 분권을 지향하는 지역의 정치적 부활을 의미한다(김용웅 등, 2003, 66-67). 세계화에 따른 신지역주의 경향은 각 국가 및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Swyngedouw, 1992).

행정구역이 분리 되면서 괴산군과 증평군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괴산군은 행정구역·인구·예산 등에서 축소가 이루어져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대로 증평군은 별도의 독립된 행정을 펼친 증평출장소로 운영되어 행정권은 충청북도에, 지방자치권은 괴산군에 있었던 관계로 지역 개발 등 지역을 위한 예산이 적어 지방자치의 사각지대로 불리어 왔다. 이에 따라 증평군으로 분리되면서 행정권 및 지방자치권이 생겼기 때문에 지역 개발을 위한 예산 집행이 편리해졌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두 지역은 행정구역의 분리로 지역의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지역 개발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괴산군과 증평군은 행정구역 분리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변하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정주 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행정구역 변화로 인해 이루어진 지역 변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본 연구는 행정구역 분리 이후의 지역 변화에 대한 사례 연구로, 괴산군과 증평군의 인구, 지가, 산업 구조를 통해 지역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지역을 행정구역이 분리된 충청북도 괴산군과 증평군으로 한정하고, 연구 방법으로 문헌 연구와 통계처리방법을 사용하였다. 변화를 살펴보는 지표로는 토지 이용 변화, 인구, 지가, 산업별 종사자이고, 산업별·지역별 특화 정도는 지리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지수중의 하나인 P. S. Florence가 만든 입지 계수(Location Quotient)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의 기준년도와 비교년도는 증평군으로 분리된 해인 2003년과 2014년, 지

가는 2004년과 2015년, 산업별 종사자는 2004년과 2013년의 통계를 이용하였다. 자료는 충청북도, 괴산군과 증평군의 통계연보와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였다.

2) 연구 지역

우리나라 중앙부에 위치한 괴산군과 증평군은 중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울과 2시간 이내에 연계가 가능한 지역이다(그림 1). 괴산군 면적은 842.4km²으로 1읍 10개면²⁾, 증평군은 괴산군의 1/10 정도인 81.8km²로 구리시(33.3km²), 계룡시(60.7km²), 울릉군(72.9km²) 이어 네 번째로 좁은 지역이며 1읍 1면(증평읍과 도안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괴산군은 70% 이상이 임야이고, 평균 해발고도는 약 250m로 산지가 많고 평야가 적어 농산물 생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풍부하지 못하다. 또한 논보다는 밭이 많으며, 고추와 고춧가루, 찰옥수수 등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되어 있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괴산군의 특산물이고, 화양계곡, 선유동 계곡, 쌍곡 계곡, 산막이 옛길 등은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들이 다(괴산군 홈페이지).

괴산군의 2004년 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을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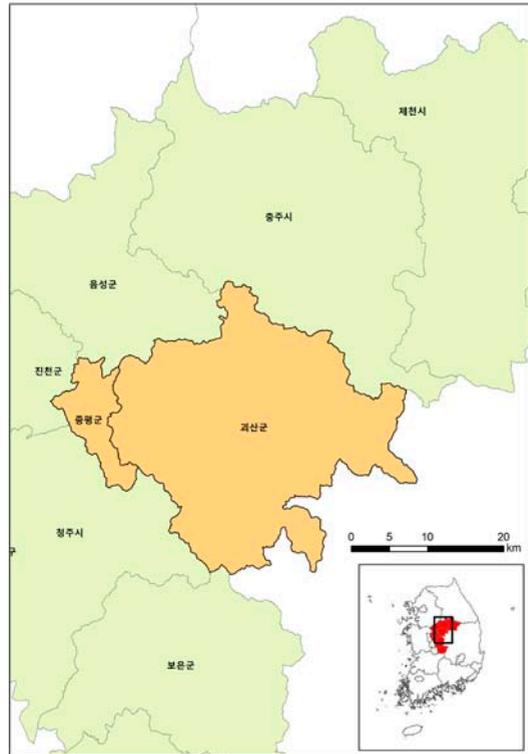


그림 1. 연구 지역

밭, 논, 과수원 등의 농지가 17.3%, 임야가 74.8%로, 임야와 농지를 합하면 92.1%이다. 반면에 개발된 지

표 1. 괴산군의 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 변화

(단위: km², %)

구분	계	밭	논	임야	과수원	대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도로	기타	
2004년	계	842.4	78.4	65.5	630.0	1.5	10.1	1.4	0.8	12.8	41.9
	구성비	100	9.3	7.8	74.8	0.2	1.2	0.2	0.0	1.5	5.0
2014년	계	842.4	75.1	60.4	625.0	2.4	11.5	2.2	1.1	20.0	44.7
	구성비	100	8.9	7.2	74.2	0.2	1.4	0.3	0.1	2.4	5.3

자료: 괴산군 통계 연보(2004; 2014)

표 2. 증평군의 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 변화

(단위: km², %)

구분	계	밭	논	임야	과수원	대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도로	기타	
2004년	계	81.8	10.4	15.4	41.3	0.3	3.5	0.4	0.3	2.8	7.4
	구성비	100	12.7	18.8	50.5	0.4	4.3	0.5	0.4	3.4	9.0
2014년	계	81.8	9.8	14.1	40.5	0.3	4.1	1.3	0.5	3.4	7.8
	구성비	100	12.0	17.2	49.5	0.4	5.0	1.6	0.6	4.2	9.5

자료: 괴산군 통계 연보(2004; 2014)

역은 2.9%로 대지 1.2%, 공장용지 0.2%, 도로 1.5%이다. 2014년의 농지는 16.3%이고, 임야까지 합치면 90.5%로 1.6%만이 다른 용도로 바뀌었다. 대지 1.4%, 공장용지 0.3%, 학교 용지 0.1%, 도로는 2.4%, 기타는 5.3%이다. 가장 많이 늘어난 토지 이용은 도로로 2004년에 비해 0.9%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표 1). 따라서 2004년 대비 괴산군은 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증평군은 37사단과 공수여단이 위치한 군사도시로, 인삼과 홍삼으로 유명하며, 태양광 산업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증평군의 2004년 토지 이용 현황을 보면, 논과 밭, 과수원 등 농지는 31.9%로 괴산군보다 많고, 임야는 50.5%로 적으며, 임야와 농지를 합치면 82.4%이다. 반면에 개발된 토지는 8.6%로 괴산군보다 많으며, 대지 4.3%, 공장용지 0.5%, 학교 용지 0.4%, 도로 3.4%이다. 2014년 농지 29.6%이고, 임야까지 합치면 79.1%로 3.3%가 다른 용도로 바뀌어, 괴산군보다 많이 바뀌었다. 대지는 5.0%로 0.7%, 공장용지는 1.6%로 1.1%, 학교 용지 0.6%, 도로 4.2%로 0.8%, 기타는 9.5%로 0.5% 증가하였다. 2004년에 비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공장 용지로 2004년에 비해 1.1% 증가하여 증평군에 공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따라서 증평군은 괴산군에 비해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 동향

1) 행정구역의 개편

행정구역의 개편과 관련된 연구는 지리학, 행정학,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 방법에는 편입, 통합, 분리 등이 있다. 행정구역은 주민 참여와 편리성, 행정의 능률성, 재정적 자주성, 정치·행정적 측면과 지역의 생활권, 지역 공동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개편해야 한다(정세욱, 1995, 751-753). 임석희(1994)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체계는 현재 주민의 실질적 공간체

계와 다르기 때문에 중심도시와 배후지의 통합, 생활권의 계층 체계와 행정 계층의 일치, 생활권의 범위와 행정구역의 일치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Smith(1995)에 따르면 행정구역의 개편은 기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갈등의 산물이다. 행정구역의 규모면에서 Tiebout(1965)와 Oates(1972)는 규모가 작아야 효율적이라 보았고, Alonso(1975)는 규모의 경제론 차원에서 지역의 규모가 커야 효율적이라고 보았다. 우리나라 역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부분적인 성과 밖에 거두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보면, 지방자치가 새로이 시작된 1995년 이전에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외국 사례와 관련 이론 소개가 주를 이루었고, 1995년 이후에는 행정구역의 개편 방향과 체계의 문제점, 행정구역 규모의 적정성, 통합의 장점과 단점 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논의는 통합 찬성론자(박희정, 1994; 박종관, 1999; 홍준현, 2005)와 행정구역 분리 찬성론자(이규환, 1994; 최준호, 2001; 김석태·이영조, 2004)로 나누어졌다.

1995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에는 통합 성과여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시·군 통합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본 연구(김재홍, 2000; 박종관·조석주, 2001)와 통합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본 연구(김동훈·정진현, 1996; 경기개발연구원, 1997; 김대원, 1999; 배인명, 2000; 이시원·민병익, 2005) 그리고 통합 효과를 양비론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연구(홍준현, 1997; 최재승, 1999; 최홍석·정재진, 2005)들이 있다.

시·군 통합으로 인한 공간적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신영재(1999)는 평택시를 사례로 한 평택시의 주민의 활동 공간이 과거의 평택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고, 손승호(2013)는 대도시권과의 거리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다르며, 통합된 지역 내에서도 도시지역은 인구가 증가하고, 농촌지역은 인구가 감소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신영재(2013)는 통합시인 평택시의 사례에서 지역에 따라서 농촌인 군 지역에서 공업 단지 등이 건설되면서 도시 지역보다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았다.

2) 지역의 변화

지역 간에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격차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나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역 간에 성장의 격차가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과 내재적 요인들의 차이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이 변화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 있다. 지역 변화와 관련된 연구에서 보면, 먼저 이벤트 사업의 유치로 인한 지역의 경제나 환경이 변하는 정도에 대한 연구이다. 특별 이벤트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연구는 호주의 에들레이드 그랑프리 자동차 경주대회에 관한 연구(Burns *et al.*, 1986)가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였고,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올림픽, 월드컵, 세계 박람회 같은 이벤트는 지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Long and Perdue, 1990; Cromption and Makay, 1994; Cromption, 1995; Dwyer *et al.*, 2004; 2005; Getz, 2005; Tyrrell and Johnston, 2001; Warnick *et al.*, 2015).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많지 않은 편이다. 2002년 월드컵 효과와 관련된 연구(이충기, 2003; Horne and Manzenreiter, 2004; Kim, Gursay, and Lee, 2006)와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된 연구(이정록 등, 2015)가 있다.

다음은 지역에 새로운 시설 입지나 환경 변화로 인해 지역이 변하는 경우이다. 산업 시설의 입지는 지역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산업 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연구로는 제철소 입지로 인한 지역의 변화에 대한 연구(이정록, 2000; 유성중, 2000)가 있다. 정성호(2006)는 1989년 이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에 의해 폐광조치 된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 변화와 개발 현황에 대한 연구에서 석탄 산업이 사양화되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인구의 외부 유출이 급증하여 지역 전체가 공동화되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신영재(2013)는 평택항 개항에 따른 배후 지역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평택항에 가까울수록 인구와 산업별 종사자의 증가율은 높았으나, 지가 상승률의 차이

는 크지 않았다고 보았다. 신용철(2014)은 충북 단양군 매포읍 사례 연구에서 시멘트 공업 발달에 따른 고용 및 인구분포 변화, 공장 건설로 인한 환경 변화, 충주댐 건설로 인한 공간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지역 변화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지역의 환경이 변화된 괴산군과 증평군의 행정구역 분리의 배경을 토대로 두 지역의 인구와 산업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3. 괴산군과 증평군의 행정구역 분리

1) 행정구역 분리 이유

행정구역은 국가에 의해 인위적, 계획적으로 설정된 형식지역이지만, 주민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하천, 호수, 산맥 등 주로 자연·지리적 조건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설정하였지만, 일제강점기에 식민 통치의 편의를 위해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다. 따라서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권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지역이 많이 생겼다.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은 지리적 환경이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편하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있다.

괴산군과 증평군의 분리 이유를 보면, 먼저, 괴산군과 증평군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통합되어 정체성과 동질성이 다르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시행된 행정구역 개편에서 괴산군은 연풍군, 괴산군, 청안군 등 3개의 군과 청주군 및 충주군 관할의 일부 지역을 합쳐서 만들었다. 이 당시 증평 지역은 청안군에 속해 있었으며,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괴산군으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증평군 주민들은 괴산군과 역사적 뿌리가 달라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했다. 두 번째는 지리적 조건으로, 예로부터 괴산군은 한강 유역, 증평군은 금강 유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생활권이 달랐다(그림 2). 괴산군은 충주와 같은 한강 유역으로 충주를 생활권으로, 증평군은 금강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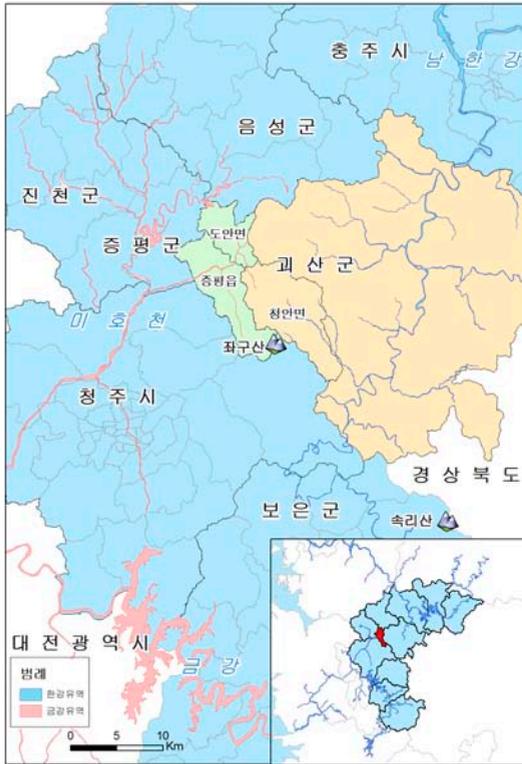


그림 2. 증평군과 괴산군의 하천 유역

역으로 청주를 큰 생활권으로 하는 지역이었다. 따라서 역사적 뿌리, 정체성, 동질성, 생활권이 다른 증평 지역이 괴산군에 속해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세 번째는 증평 지역의 증평출장소 설치 운영 때문이다. 괴산군에 속해 있던 증평 지역에 1990년 12월 31일 증평출장소³⁾가 설치 운영되었다. 증평출장소 지역의 행정권은 충청북도에, 지방자치권은 괴산군에 있었기 때문에, 증평 지역 주민들은 증평 지역에 행정 권한이 없는 괴산군수와 지방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증평 지역 주민들은 자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절름발이 지방선거에 불출마 및 참정권 포기를 결의하는 등 지방 선거 때만 되면 선거 회의론이 일어났다.

결론적으로 괴산군과 증평군은 다른 역사적 뿌리와 지리적 조건, 생활권이 다르고 증평출장소 체제로의 운영에 의한 자치권 행사의 무의미 등의 이유가 행

정구역 분리 이유로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행정구역 분리 운동은 증평 지역에서 시작하였다.

2) 증평 지역의 행정구역 분리 과정

충청북도 괴산군과 증평군이 분리된 지 10년이 넘었다. 증평군이 괴산군에서 분리된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증평군 설치운동 태동기(1963~1989년)이다. 1963년 1월 증평지역에서는 증평군 신설을 전제로 행정구역 개편 운동을 시작하였다(충청일보, 1963년 1월 24일). 이때 증평군 행정구역으로 구상했던 지역은 증평을 실생활권으로 하는 증평읍과 도안면 7개 리, 사리면 8개 리, 청안면 11개 리 진천군 초평면 11개리, 청원군 북이면 28개리, 음성군 원남면 1개리 등 7개 읍·면, 78개리에 면적은 311.26km²으로, 현재의 증평군 면적보다 4배나 넓다. 이 당시 행정구역 개편 여론조사 결과 95.4%의 찬성을 보였지만, 정부의 반대로 실패하였고, 1967년에도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했지만 실패하였다(증평군 설치 백서). 1970, 80년대에는 증평군 분리·독립 운동은 중단되었다가, 1989년 충청북도에 증평시 승격에 따른 추진계획서의 작성·보고 지시가 내려오면서 행정구역 개편 운동이 다시 시작되었다. 증평시 행정구역을 괴산군 사리면과 청안면, 청원군 북이면 일부와 진천군 초평면 일부 지역으로 설정하였고, 이들 지역의 인구가 시 승격 인구 기준인 5만을 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괴산군에서 ‘증평시 설치 계획서’를 작성해 충청북도에 보고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증평 지역에서는 행정구역 분리·독립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체제하에서의 특정시 추진 시기(1990~1998년)이다. 1990년 12월 31일 증평군 설치의 단초가 된 충청북도 증평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91년 2월 1일에 증평출장소가 개청되면서 시 승격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 당시 증평 지역 주민들의 시 승격을 주장한 이유는 1991년 당시 증평읍의 인구(31,339명)가 충북도내 12개 읍 중 인구가 가장 많았고, 대다수 주민들이 출장소 출범이 시 승격

전 단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괴산군과 생활권역과 정서가 다르며, 증평출장소의 행정권은 충청북도에, 지방 자치권은 괴산군에 있는 관계로, 지방선거의 무의미 등이다(증평군 설치백서). 이 당시 증평시 추진의 최대 걸림돌은 인구 기준이었다. 1991년 시 승격 기준인 5만 명에 19,000여 명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증평을 실생활권으로 하는 주변지역 편입을 추진하였다. 1998년 10월 증평출장소와 계룡출장소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특정시 추진 입법안을 발의하였지만,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되면서 실패하였다.

마지막으로, 증평군으로의 추진 방향 전환 및 설치(1999~2003년)이다. 이때 괴산군에서는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와 인구 부족 등의 문제로 증평시 추진이 어려워지자 괴산군으로의 환원을 주장하였고, 증평출장소 폐지 가능성과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지역에 증평출장소를 흡수하는 방안 검토 방안이 내려왔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증평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증평군으로 방향을 전환하였고, 증평군 설립 촉구 범주민 결의 대회와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다. 증평 주민들은 괴산군으로의 환원은 절대 반대이고, 증평을 생활권으로 하는 지역을 증평군으로 신설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면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국회, 충청북도, 각 정당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탄원서를 전달하였다.

증평시민단체에서는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권이 없는 괴산군수와 지방의원 참정권 포기 선언을 하였으며, 2002년 대선후보자에게 충청북도의 시민 단체와 연계하여 '증평군 독립 자치단체 실현'을 충북의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충청북도의 대선 공약으

로 확정하였다. 2002년 4월에 증평과 계룡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역 인사들은 '증평군과 계룡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였다. 괴산군에서는 증평군 설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 2003년 4월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 행사위 통과,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되었고, 2003년 4월 30일에 법률안이 가결되어 선포되었다(증평군 설치백서). 증평군 분리·독립의 역사지리적 의미는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괴산군으로 편입된 행정구역을 생활권 기준으로 되돌린 것이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지역 정치인, 시민단체, 주민들의 노력을 통해 의원 입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행정구역이 분리되면서 괴산군에서는 인구 및 면적의 감소로 예산이 감소되었으며, 증평군에서는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증평군은 증평출장소 체제로 운영되었을 때는 예산의 규모도 작았고,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했다. 또한 증평군으로 독립되면서 군 단위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복지 시설 설치로 공무원 증원이 이루어졌고, 새로이 시작하는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 등 빠른 변화가 나타났다.

4. 괴산군과 증평군의 인구 및 지가 변화

1) 인구 변화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대도시와 가까운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

표 3. 괴산군의 인구 및 성별·연령별 인구 변화

구분	2003년			2014년		
	남(명, %)	여(명, %)	계(명, %)	남(명, %)	여(명, %)	계(명, %)
0~14세	2,652(13.0)	2,434(12.2)	5,086(12.6)	1,528(7.8)	1,506(8.0)	3,034(7.9)
15~64세	14,300(69.9)	12,375(62.0)	26,675(66.0)	13,305(68.3)	10,841(57.5)	24,146(63.0)
65세 이상	3,496(17.1)	5,154(25.8)	8,650(21.4)	4,655(23.9)	6,516(34.5)	11,171(29.1)
계	20,448(50.6)	19,963(49.4)	40,411	19,488(50.8)	18,863(49.2)	38,351

자료: 괴산군 통계 연보(2004년), 2014년 인구는 괴산군 홈페이지(2014.12.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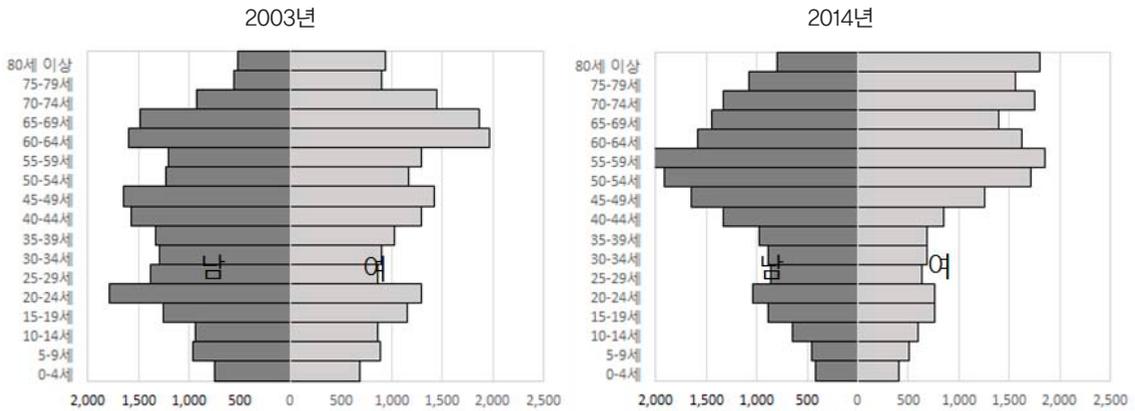


그림 3. 괴산군의 인구 피라미드 변화

자료: 증평군 통계 연보(2004년), 2014년 인구는 증평군 홈페이지(2014.12.31 기준)

역의 인구는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괴산군과 증평군이 분리된 해인 2003년을 기준으로 하고, 2014년을 비교년도로 하여 두 지역의 인구 성장률과 성별·연령별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괴산군과 증평군의 인구 변화가 충청북도의 중심지인 청주시의 도청과 두 지역의 군청과의 최단거리⁴⁾가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충북 도청과 괴산군청과의 거리는 42.1km이고, 증평군청과의 거리는 20.4km이다.

(1) 괴산군

괴산군은 2003년 40,411명, 2014년은 38,351명으로 5.1%(2,060명) 감소하였다(표 3). 괴산군은 충청북도 도청소재지인 청주시와의 거리가 42.1km로 증평군보다 멀고, 2014년의 토지 이용 현황을 보면 임야와 농지를 합하면 90.5%로 전통적인 농촌에 해당된다. 따라서 충청북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청주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약하며 정주 기반이 약하여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2003년 괴산군의 성별 비중을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485명이 많아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보면 유소년층(0-14세)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지만, 청장년층(15-64세)에서는 남초 현상, 노년층(65세이상)⁵⁾에서 여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괴산군의 유소년층은 12.6%(5,086명), 청장년층에서 남자는

69.9%(14,300명), 여자는 62%(12,375명)로 7.9% 차이가 난다. 노년층은 21.4%이고 여초 현상을 보이고 있다(표 3). 괴산군의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는 전통적인 농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그림 3).

괴산군의 2014년 인구는 2003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유소년층과 청장년층은 각각 4.7%, 3% 감소하였으나, 노년층은 7.7% 증가하여 29.1%로 초고령화 사회⁶⁾가 되었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전통적인 농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03년 대비 2014년의 괴산군의 인구는 감소하였고,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에서 유소년층과 청장년층이 감소하였으나 노년층은 증가하였으며, 노년층 비율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따라서 괴산군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증평군

증평군의 2003년 인구는 31,310명, 2014년 인구는 34,771명으로 11.1%(3,461명) 증가하였다(표 4). 청주시와의 거리는 20.1km로 괴산군보다 가까운 증평군은 임야를 포함하면 79.1%, 대지 등 도시적 토지이용을 하는 곳도 8.6%로 괴산군(4.2%)보다 높다.

증평군의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의 비중 변화를 보면, 2003년에는 전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390

표 4. 증평군의 인구 및 성별·연령별 인구 변화

구분	2003년			2014년		
	남(명, %)	여(명, %)	계(명, %)	남(명, %)	여(명, %)	계(명, %)
0~14세	3,310(20.9%)	3,158(20.4%)	6,468(20.6%)	2,807(15.7%)	2,666(15.7%)	5,473(15.8%)
15~64세	11,328(71.5%)	10,297(66.6%)	21,625(69.1%)	12,988(72.9%)	11,358(67.0%)	24,346(70.0%)
65세 이상	1,212(7.6%)	2,005(13%)	3,217(10.3%)	2,026(11.4%)	2,926(17.3%)	4,952(14.2%)
계	15,850(50.6)	15,460(49.4)	31,310	17,821(51.3)	16,950(48.7)	34,771

자료: 증평군 통계 연보(2004년), 2014년 인구는 증평군 홈페이지(2014.12.31 기준)

명이 많아 괴산군과 마찬가지로 차이가 미미하다. 유소년층의 성별 차이는 거의 없고, 청장년층은 남초, 노년층에서는 괴산군과 마찬가지로 여초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령별 분포에서는 괴산군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증평군의 2003년 유소년층은 20.6%(6,468명), 청장년층은 69.1%(21,625명)로 괴산군보다 높다. 그러나 노년층은 10.3%(3,217명)로 괴산군보다 낮다.

증평군은 2003년 대비 2014년의 인구는 증가하였고, 유소년층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청장년층과 노년층의 비율은 증가하여 괴산군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03년 대비 유소년층의 비율은 4.8% 감소하였으나, 청장년층 0.9%, 노년층은 3.9% 증가하였다. 이는 출산율 저하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서나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이다. 따라서 증평군은 괴산군과는 달리 도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

는 인구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고 있다(그림 4).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증평군의 인구는 증가하였고, 유소년층은 감소, 청장년층과 노년층은 증가하고 있어 청주시와 가까운 도시의 성격을 지닌 지역이라 할 수 있다.

(3) 괴산군과 증평군의 통근·통학 인구

2010년의 괴산군과 증평군의 통근·통학 인구를 보면(표 5), 괴산군은 통근·통학하는 19,413명 중 17,882명(92.1%)은 같은 군내에서, 1,504명(7.8%)은 다른 지역으로 통근·통학을 한다. 반면에 증평군은 18,014명 중 12,453명(69.1%)은 같은 군내에서, 5,531명(30.7%)은 다른 지역으로 통근·통학한다.

따라서 증평군은 괴산군에 비해 다른 지역으로 통근·통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것은 증평군이 괴산군보다 충청북도에서 일자리와 고등학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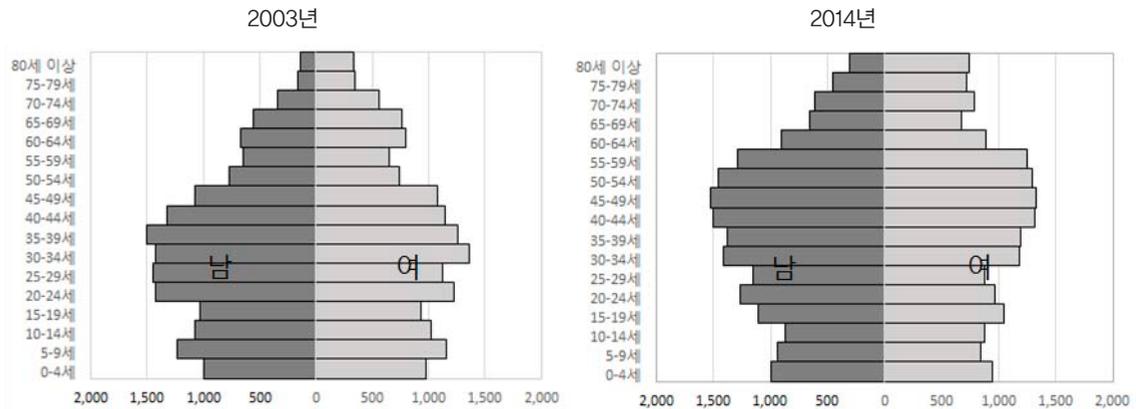


그림 4. 증평군의 인구 피라미드 변화

자료: 증평군 통계 연보(2004년), 2014년 인구는 증평군 홈페이지(2014.12.31 기준)

표 5. 괴산군과 증평군의 통근·통학 인구(2010년)

구분		괴산군	증평군
12세 이상 인구		28,595명	26,432명
미 통근·통학		9,182명	8,418명
통 근 · 통 학	같은 군내	17,882명	12,453명
	다른 시·군	1,267명	5,110명
	다른 시·도	237명	421명
	통근·통학지 미상	27명	30명
계		19,413명	18,014명

자료: 괴산군, 증평군 통계연보(2011년)

가장 많은 청주시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평 지역은 청주시의 위성도시의 성격을 지닌 지역이라 볼 수 있다.

2) 지가 변화

지가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괴산군과 증평군이 분리된 직후인 2004년과 2015년의 지역별 최고지가의 상승률을 살펴 보았다. 2004년 괴산군(1,500,000원)과 증평군(2,200,000원)의 최고지가 차이는 700,000원이다. 2015년 증평군의 최고지가는 2,430,000원으로 2004년 대비 10.5% 상승하였으며, 괴산군의 최고지가는 1,520,000원으로 2004년에 비해 1.3% 상승하여, 두 지역 간의 최고지가 차이는 910,000원으로 2004년에 비해 차이가 더 커졌다(표 6).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괴산군의 인구는 감소한 반면, 증평군의 인구는 증가하였다. 둘째, 토지 이용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괴산군에 비해 증평군의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

표 6. 괴산군과 증평군의 최고지가 변화 단위: 원/㎡

구분	2004년	2015년	지가 증가율
괴산군	1,500,000	1,520,000	1.3%
증평군	2,200,000	2,430,000	10.5%

자료: 2004, 2015년 표준지 공시지가

고 있다. 셋째, 충청북도의 중심지인 청주시와의 거리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이다. 청주시와 증평군 사이에는 자동차 전용도로⁷⁾가 건설되어 있어 청주와의 시간 거리가 더욱 단축되었다.

5. 괴산군과 증평군의 산업별 종사자 변화

괴산군의 면적은 842.4km², 증평군은 81.8km²로 괴산군이 10배 이상 넓다. Lineberry(1970)는 행정구역의 규모가 작으면 지방자치에 지역 주민 참여도 쉽고, 지방공공재의 공급 수준을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공급 비용의 공정한 분배도 가능하다고 보았고, Tiebout(1965, 1972)와 Oates(1972)도 작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행정구역의 규모는 지역 개발 정책 수립 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1980년대에 지역 생활권⁸⁾을 설정하여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균형개발을 위해 각 지역의 잠재력을 살리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괴산군과 증평군은 농촌도시 생활권에 해당한다. 농촌도시 생활권은 읍급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생활권으로 인구 감소를 줄이기 위해 중심도시의 접근성 향상과 취업 기회 및 교육시설의 확충에 치중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계화 영농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에 적합한 산업 유치,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확충 등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농촌중심도시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하고,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기본 복지 시설을 설치하고, 중심도시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노선 버스 확대, 도로 건설 등에 주력해야 한다(김용웅 등, 2003, 538).

괴산군과 증평군은 농촌중심도시 생활권 지역으로 규모와 지역별 특성을 살린 개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발굴하고, 도시 수준의 생활환경 시설을 제공하고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춘 지역

사회의 경제적 거점지역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지역 주민,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

1970년대 원유 파동과 그에 따른 세계의 경기 침체로 인한 탈공업화로 인해 1, 2차 산업은 감소하고, 3차 산업은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조업은 넓은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가가 싸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3차 산업은 중심성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나 도시의 중심에 입지하고 있다(Hartson, 1980).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소득 증가, 노령화 사회 및 복지 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인한 공공부문의 역할 증가 및 서비스 수요 증가, 기업을 위한 서비스 수요 증가 때문이다(Bryson et al., 2004).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소비자 관련 서비스업은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생산자 관련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역에서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은 종사자가 근무하는 업종은 도소매업이고, 다음은 숙박·음식점업이다(이희연, 2014, 524-526). 지역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건이 변하면 지역의 특성도 변할 것이다. 행정구역이 분리된 괴산군은 행정구역의 축소 및 인구 감소가 이루어졌고, 증평군은 작지만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분리·독립하면서 인구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괴산군과 증평군의 2004년과 2013년 산업대분류별 사업체⁹⁾의 지역별 종사자수와 입지 계수를 비교하여 괴산군과 증평군의 산업별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 2004년 괴산군과 증평군의 산업 특성 비교

2004년 괴산군 산업별 종사자 중에서 제조업 종사자(31%)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은 숙박·음식점업(13.2%), 도매·소매업(11.3%) 순이다. 괴산군에서 입지계수 1 이상으로 특화된 산업은 9개이고, 가장 높은 업종은 농업·임업·어업(4.63)이고, 다음은 광업(2.65)이며, 소비자 관련 서비스업인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2.46), 통신업(1.61), 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1.26), 숙박 및 음식점업(1.15),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9)가 특화되어 있다(표 7).

2004년 증평군의 종사자를 보면, 괴산군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종사자(26.9%)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 도매·소매업(16.5%), 숙박·음식점업(12.6%), 교육 서비스업(10.3%) 순으로 특화 정도가 높아 괴산군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에서 종사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도소매업이고, 다음은 숙박·음식점업이다. 증평군에서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순이지만, 괴산군은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순으로 증평군과 다르다. 이것은 괴산군에 유명한 관광지가 많이 있어 숙박 시설이 많기 때문이다. 증평군에서 특화된 산업은 10개로 괴산군보다 1개가 많다. 입지계수가 가장 높은 것은 농업·임업·어업(2.67)이지만, 괴산군에 비해 낮은 편이다.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1.41), 교육서비스업과 광업(1.21), 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1.18), 도매·소매업(1.13), 숙박·음식점업(1.0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7).

종합적으로 괴산군과 증평군의 산업별 종사자 비중과 특화 정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괴산군과

표 7. 2004년 괴산군, 증평군 산업별 종사자 및 입지계수

구분	2004년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군	
	종사자수(명,%)	종사자수(명,%)	입지계수	종사자수(명,%)	입지계수
농업·임업·어업	1,187(0.3)	108(1.2)	4.63	61(0.7)	2.67
광업	1,076(0.2)	56(0.6)	2.65	25(0.3)	1.21
제조업	119,892(27.3)	2,677(31.0)	1.14	2,274(26.9)	0.99

신영재

전기·가스·수도 사업	1,927(0.5)	24(0.3)	0.63	40(0.5)	1.08
건설업	26,684(6.1)	308(3.6)	0.59	238(2.8)	0.46
도매·소매업	64,140(14.6)	981(11.3)	0.78	1,396(16.5)	1.13
숙박·음식점업	50,690(11.5)	1,142(13.2)	1.15	1,064(12.6)	1.09
운수업	22,483(5.1)	195(2.3)	0.44	338(4.0)	0.78
통신업	3,258(0.7)	103(1.2)	1.61	65(0.8)	1.04
금융·보험업	15,309(3.5)	305(3.5)	1.01	305(3.6)	1.04
부동산업·임대업	8,840(2.0)	22(0.3)	0.13	154(1.8)	0.91
사업서비스업	16,529(3.8)	54(0.6)	0.17	129(1.5)	0.41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17,802(4.0)	860(9.9)	2.46	481(5.7)	1.41
교육 서비스업	37,532(8.5)	717(8.3)	0.97	872(10.3)	1.2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17,747(4.0)	381(4.4)	1.09	288(3.4)	0.84
오락·문화·운동 관련 산업	9,628(2.2)	93(1.1)	0.49	153(1.8)	0.83
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	25,210(5.7)	627(7.2)	1.26	574(6.8)	1.18
계	439,934	8,653		8,457	

자료: 2004 기준 충청북도 사업체 조사 보고서

표 8. 2013년 괴산군, 증평군 산업 대분류별 종사자 및 입지계수

구분	2013년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군	
	종사자수(명,%)	종사자수(명,%)	입지계수	종사자수(명,%)	입지계수
농업·임업·어업	2,183(0.4)	152(1.3)	3.41	45(0.4)	1.09
광업	737(0.1)	40(0.3)	2.66	-	-
제조업	166,728(28.2)	3,316(27.5)	0.97	3,614(32.4)	1.15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2,107(0.4)	23(0.2)	0.54	57(0.5)	1.43
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환경복원업	3,594(0.6)	118(1.0)	1.61	81(0.7)	1.19
건설업	31,624(5.3)	826(6.8)	1.28	378(3.4)	0.63
도매·소매업	74,916(12.7)	1,374(11.4)	0.90	1,615(14.5)	1.14
숙박·음식점업	61,599(10.4)	1,648(13.7)	1.31	1,267(11.4)	1.09
운수업	26,102(4.4)	346(2.9)	0.65	374(3.4)	0.76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5,853(1.0)	99(0.8)	0.83	77(0.7)	0.70
금융·보험업	16,245(2.7)	264(2.2)	0.80	259(2.3)	0.85
부동산업·임대업	11,665(2.0)	89(0.7)	0.37	239(2.1)	1.09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3,458(2.3)	149(1.2)	0.54	80(0.7)	0.3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20,990(3.5)	85(0.7)	0.20	185(1.7)	0.47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25,981(4.4)	944(7.8)	1.78	477(4.3)	0.97
교육 서비스업	47,119(8.0)	895(7.4)	0.93	931(8.3)	1.0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40,055(6.8)	902(7.5)	1.10	658(5.9)	0.87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11,370(1.9)	107(0.9)	0.46	214(1.9)	1.00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29,183(4.9)	691(5.7)	1.16	606(5.4)	1.10
계	591,509	12,068		11,157	

자료: 2013 기준 충청북도 사업체 조사 보고서

증평균에서 특화 정도가 높은 산업은 1차인 농업·임업·어업과 광업이지만, 괴산군의 특화 정도가 더 높다. 제조업은 괴산군(1.14)에서는 특화되어 있지만, 증평균(0.99)에서는 특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괴산군에서는 소비자 관련 서비스업이 특화되어 있는데, 이는 괴산군이 1읍·10개면으로 이루어져 증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증평균은 1읍·1면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지역이지만, 괴산군 사리면과 청안면, 청주시 북이면, 진천군 초평면 등 다른 행정구역의 주민들이 증평균을 상권으로 이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이재원, 2005). 따라서 교육 서비스업과 도매·소매업(1.13)에서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2013년 괴산군과 증평균의 산업 특성 비교

괴산군의 2013년 전체 종사자는 12,068명으로 2004년 대비 39.5%(3,415명) 증가하였다(표 8).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27.5%로 가장 높으나, 2004년 대비 줄었다. 다음은 숙박·음식점업(13.7%), 도매·소매업(11.4%) 순으로, 2004년 대비 순위 변화는 없다.

2004년 대비 2013년 종사자는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7.8%)과 교육 서비스업(7.4%)은 감소,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7.5%)과 건설업(6.8%), 운수업(2.9%)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생산자 관련 서비스업인 금융업, 부동산업·임대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의 비중은 여전히 낮다. 이는 괴산군이 전형적인 농촌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2013년 괴산군에서 입지계수 1 이상인 산업은 8개로 2004년에 비해 줄었다. 입지계수가 가장 높은 것은 농업·임업·어업(3.41)으로, 괴산군은 고추, 찰옥수수, 사과, 배추 등 친환경 특산물로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광업(2.66),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1.78), 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1.61), 숙박·음식점업(1.31), 건설업(1.28),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1.16),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0) 등 1차산업과 소비

자 관련 서비스업에서 특화되었다. 괴산군은 농산물과 함께 화양계곡, 선유동 계곡, 쌍곡 계곡, 산막이 옛길 등 자연과 어우러진 관광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숙박·음식점업의 입지계수가 높아졌다.

증평균의 2004년 대비 종사자는 2,700명이 증가하였고, 제조업 종사자(32.4%)가 가장 많고, 입지계수도 1 이상으로 특화되면서 공업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도매·소매업(14.5%), 숙박·음식점업(11.4%), 교육서비스업(8.3%),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5.9%),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5.4%) 순으로 괴산군과 다른 순위를 보이고 있다(표 8).

2013년 증평균에서 입지계수 1 이상인 산업은 10개로 2004년과 같으며 괴산군보다 2개가 많다. 입지계수는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1.43), 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환경복원업(1.19), 제조업(1.15) 순으로 높다. 제조업이 증평균의 특화 산업이 된 것은 증평균이 괴산군에서 분리되면서 자체적으로 공업단지¹⁰⁾를 유치하고 개발하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다음은 도매·소매업(1.14),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1.10), 숙박·음식점업(1.09), 부동산업·임대업(1.09), 교육서비스업(1.05) 순이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증평균은 괴산군 사리면과 청안면, 진천군 초평면의 일부 지역과 청주시 북이면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권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증평균의 일부 주민과 고등학교 학생들은 청주시를 통근·통학권으로 하고 있는 도시적 성격을 지닌 지역이다.

결론적으로 2013년 괴산군은 1차 산업 및 소비자 관련 서비스업이 발달하였고, 증평균은 제조업과 생산자 관련 서비스업과 소비자 관련 서비스업이 고르게 발달해 있다. 이와 같이 이유는 괴산군은 면적도 넓고 1읍·10개 면의 하위 단위의 행정구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이다. 증평균은 면적도 좁고, 1읍·1면의 소규모 행정구역이고, 다른 행정구역의 주민들까지 증평균을 상권으로 이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6. 괴산군과 증평군의 세부 산업 비교

본 장에서는 2013년 기준 괴산군과 증평군의 산업을 세부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표 9, 10). 비교 산업은 괴산군이나 증평군에서 입지계수가 1 이상이거나, 전체 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이 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9. 괴산군과 증평군의 1, 2차 세부 산업 종사자 비교

(단위: 명)

구분		괴산군	증평군
농업	작물재배법	70	
	축산업	37	39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서비스업	35	3
계		107	39
광업	비금속광물광업(토사석광업)	40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857	814
	음료 제조업	46	4
	섬유제품 제조업	243	3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5	3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01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4	4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1	5
	가구 제조업	2	13
	기타 제품 제조업	17	16
	계	1,306	987
중화학공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73	65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09	298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688	73
	1차 금속 제조업	38	161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83	7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42	2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27	5
	계	1,768	701
첨단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115	1,50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24
	전기 장비 제조업	111	171
	기타기계 및 제조업	16	29
	계	242	1,926

자료: 2013 기준 충청북도 사업체 조사 보고서

1) 농업 및 광업, 제조업

괴산군과 증평군의 농업, 광업, 제조업의 산업별 종사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9). 2013년 괴산군에서 특화 정도가 가장 높은 농업 종사자 142명 중에서 70명이 작물재배법에 종사하고 있다. 괴산군은 고추, 찰옥수수, 사과, 배추 등 친환경 특산물로 유명한 지역이다. 다음으로 높은 광업에서는 비금속광물광업 중 토사석광업 종사자가 가장 많다.

2013년 제조업 종사자를 보면, 괴산군에서는 경공업과 중화학 공업 종사자, 증평군에서는 첨단 관련 산업 종사자가 많다. 괴산군의 경공업 종사자는 1,306

표 10. 괴산군과 증평군의 3차 산업 비교

(단위: 명)

구분		괴산군	증평군
도매·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9	54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26	393
	소매업; 자동차 제외	829	1,168
계		1,374	1,615
숙박·음식점업	숙박업	413	121
	음식점업 및 주점업	1,235	1,146
계		1,648	1,267
부동산업·임대업	부동산업	86	222
	임대업; 부동산 제외	3	17
	계	89	239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조정 서비스업	20	21
	사업지원 서비스업	65	164
	계	85	185
교육 서비스업	초·중·고 교육기관	784	691
	일반교습학원	31	127
	기타교육기관	80	113
	계	895	931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365	221
	사회복지 서비스업	537	437
계		902	658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304	156
	수리업	124	161
	기타개인 서비스업	263	289
	계	1,797	1,589

자료: 2013 기준 충청북도 사업체 조사 보고서

명으로 식료품 제조업 종사자(875명)가 가장 많고, 섬유제품 제조업(243명)이 많고, 증평군의 경공업 종사자는 987명으로 식료품 제조업 종사자가 814명으로 가장 많다. 따라서 괴산군과 증평군에서 경공업은 식료품 제조업이 가장 발달해 있다.

중화학공업 역시 괴산군이 증평군보다 더 발달하였다. 괴산군의 중화학공업 종사자는 1,768명으로 증평군(701명)보다 2배 이상 많고,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688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73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42명) 등이 발달하였고, 증평군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98명), 1차 금속 제조업(161명)이 발달하였다.

첨단 관련 산업 종사자는 증평군(1,926명)이 괴산군(242명)보다 8배 정도 많다. 증평군은 괴산군에서 분리된 지 10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평군에서 자체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타난 결과이다. 첨단 관련 산업 중 증평군에서 종사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502명)과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24명)이다.

2) 3차 산업

2013년 지역별 3차 산업 종사자를 보면(표 10), 도매·소매업 종사자는 괴산군(1,374명)보다는 증평군(1,615명)이 많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괴산군은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증평군은 소매업(자동차 제외) 종사자가 더 많다. 괴산군은 증평군보다 행정구역이 넓고, 행정지역도 많아 도매업이 발달했고, 증평군은 좁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도매업이 발달한 청주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소매업이 발달하였다.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는 괴산군(1,648명)이 증평군(1,267명)보다 많다. 숙박업 종사자는 괴산군(413명)이 증평군(121명)보다 3배 이상 많고, 음식점업 및 주점업 종사자는 비슷하다. 이는 유명한 관광지가 괴산군에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임대업은 증평군(239명)이 괴산군(89명)보다 종사자가 많다. 자가분포에서 살펴보았듯이 증평군이 괴산군보다 최고지가 비싸고, 청주와의 거리도 가깝다. 또한 인구밀

도도 높기 때문이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역시 증평군의 종사자가 더 많다. 이것 역시 부동산 및 임대업과 같은 이유라 할 수 있다.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역시 증평군(931명)이 괴산군(895명)보다 많다. 증평군은 고등학생들이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로 통학할 수 있는 통학권이고, 괴산군은 청주로 통학하기는 다소 먼 거리이기 때문이다. 초·중·고 교육 기관 종사자는 괴산군(784명)이 증평군(691명)보다 많지만, 일반교습학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종사자는 증평군이 더 많다. 이는 괴산군의 유소년층(3,034명)보다 증평군(5,473명)이 많기 때문이다.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과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종사자는 괴산군이 증평군보다 많다. 이는 괴산군의 면적이 넓고 예하의 행정지역과 기관이 많기 때문이다.

7. 요약 및 결론

충청북도 괴산군과 증평군은 2003년에 행정구역이 분리된 지역이다. 괴산군은 1읍 10개면, 증평군은 1읍 1면으로 이루어졌다. 괴산군과 증평군은 농촌중심 도시이지만, 괴산군은 농촌, 증평군은 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괴산군은 충청북도 도청소재지이면서 인구가 가장 많은 청주시와의 거리가 42.1km, 증평군은 20.4km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2004년 대비 2014년 토지 이용 현황을 보면 괴산군은 1.6%, 증평군은 3.3%가 용도 변경되었고, 특히 증평군은 2004년 대비 공장 용지가 1.1% 증가하여 공장이 많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증평군은 괴산군에 비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 분리 이후 괴산군과 증평군의 인구와 지가, 입지 계수를 통한 산업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 대비 2014년 괴산군의 인구는 감소하였고, 증평군은 증가하였으며, 괴산군은 전형적인 농촌, 증평군은 도시 성격을 지닌 지역이다. 괴산군은 농촌 지역으로, 유소년층과 청장년층은 감소, 노년층은 증가하는 농

촌형 인구 피라미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증평군은 유소년층은 감소하고, 청장년층과 노년층은 증가하는 도시형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다른 지역으로 통근·통학 비율 또한 증평군이 높다. 따라서 인구 변화 및 피라미드 구조, 통근·통학 비율을 볼 때, 괴산군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 증평군은 도시적 성격을 지닌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둘째, 2004년과 2015년의 최고지가는 괴산군보다 증평군이 비싸고, 2004년 대비 최고지가의 상승률도 증평군이 높다. 2004년 대비 2015년 괴산군의 최고지가는 1.3%(1,500,000원→1,520,000원) 올랐으며, 증평군은 10.5%(2,200,000원→2,430,000원)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괴산군은 인구가 감소하고, 증평군은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괴산군은 농촌, 증평군은 도시 성격을 지닌 지역이다.

셋째, 2004년 괴산군과 증평군에서 공통으로 특화된 산업은 농업·임업·어업과 광업, 소비자 관련 서비스업이고, 특화 정도는 괴산군이 높다. 두 지역에서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제조업이지만, 입지계수는 괴산군(1.14)이 증평군(0.99)보다 높다. 넷째, 2013년 특화 정도에서 괴산군은 농업 및 소비자 관련 서비스업이 높고, 증평군은 제조업과 생산자 관련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는 2004년과는 다른 결과이다. 괴산군은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증평군은 교육 서비스업과 도매·소매업 등에서 우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2013년 세부 산업에서는 괴산군은 작물 재배업과 토사석광업, 경공업과 중화학 공업과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숙박업 등 소비자 관련 산업이 발달하였고, 증평군에서는 첨단 관련 산업인 전기·전자·통신 공업과 생산자 관련 서비스업이 발달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괴산군과 증평군의 지역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괴산군은 증평군에 비해 면적이 넓고 1읍·10개 면의 행정구역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관련 서비스업이 발달하였고, 증평군은 소규모의 행정구역이지만, 괴산군에 비해 접근성과 중심성이 높고, 다른 행정구역의 주민들이 증평군을 상권으로 이용하고 있고, 청주와의 거리

가 가까워 통근·통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괴산군과 증평군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괴산군은 한강수계인 달천의 풍부한 수량을 이용하여 수산식품 산업거점 단지과 내수면 양식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단지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내수면 양식 생산과 수산물 판매, 관광 산업 등이 어우러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증평군은 청주시와 자동차 전용도로가 건설되어 시간거리가 단축되었다. 이로 인해 건설 중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제2의 증평산업단지의 분양이 완료되었고,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괴산군과 증평군은 각각의 지역이 지니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개발하면, 인구 및 지가, 산업 구조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주

- 1) 괴산군에서는 인구 등에서 괴산군의 절반을 차지하는 증평 지역의 독립이 괴산군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증평군 설립, 괴산은 어찌란 말인가?, 우리는 증평의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 괴산군 분군되면 5년 후에는 1만 명도 안 남는다, 국회의원은 각성하라 시대의 역행이다, 괴산군민 다 함께 총궐기하자” 등의 구호를 앞세워 증평군의 분리·독립이 괴산군을 3만이 조금 넘는 기초자치단체로 전락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증평군 설치 백서).
- 2) 괴산군은 괴산읍, 감물면, 문광면, 불정면, 사리면, 소수면, 연풍면, 장안면, 청안면, 청천면, 칠성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 3) 지방자치법 106조(출장소)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증평출장소는 괴산군청과 원거리이기 때문에, 원격지 주민의 민원 편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졌다. 출장소는 고유 사무는 거의 없고, 주로 행정 협약을 통해 위임·위탁을 받아 실질적으로 시·군과 같이 독자적으로 종합 행정을 수행하는 일반 행정기관이다. 증평출장소는 충청북도 출장소로서 도 업무는 위임사무였고, 괴산군과 증평읍·도안면 업무는 위탁사무였다. 이로 인해 증평출장소장 직인은 없고, ‘괴산군 수전용인’ 또는 ‘증평읍장(도안면장)전용인’을 사용해야 했다. 또 증평출장소 지역 내에 있는 괴산군의 군유재산은 매각할 경우, 증평출장소장의 동의를 얻도록 행정협약서를 괴산군과 체결하였다(증평군 설치 백서).

- 4) 충청북도 중심지인 청주시에 있는 도청과 군의 행정 중심지인 군청까지의 최단거리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거리이고, 거리 계산은 <http://map.daum.net/>에서 하였음을 밝혀둔다.
- 5) 인구지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연령별 구성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연령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연령 구분은 보통 0-14세는 유소년 인구(유소년층), 15-64세는 청장년층(생산연령 인구), 65세 이상은 노년인구(노년층)으로 구분한다(한주성, 2007, 160).
- 6)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14% 이면 고령화 사회, 14-20% 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한주성, 2007, 168-170).
- 7) 청주~증평 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2013년 12월30일 오후3시에 개통되었다. 청주~증평 간 자동차 전용도로 개통으로 증평에서 청주와의 통행 시간이 30분에서 20분 이내로 단축되었다.
- 8) 지역생활권은 모든 주민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취업, 교육, 사회·문화·복지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족적인 공간 단위로, 취업 기회와 서비스 기반을 갖춘 도시와 이를 이용하는 주변 배후지로 구성된다. 지역생활권 설정은 지역 내 생산 기반의 확충과 취업기회의 확대를 통한 인구의 지방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생활권 개발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권별로 중소규모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둘째, 생활권 내 주민에게 문화적이고 편리한 생활여건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중심도시의 중심성을 강화한다. 셋째, 지역생활권 조성의 선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 내 접근도의 개선에 치중한다. 넷째, 지역생활권의 개발은 단순한 사회경제적 조건의 개선이나 물적 기반의 확장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역전통 문화의 창달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 위하여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보전·계승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귀속감을 높일도록 한다(김용웅 등, 2003, 534).
- 9) 산업체 대분류에서 2004 기준 사업체 조사보고서는 2000년에 시행된 개정 기준, 2013 기준 사업체 조사보고서는 2009년에 개정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기 때문에 업종에 차이가 있다.
- 10) 증평군에는 증평산업단지, 증평 2, 3산업단지가 증평군으로 분리·독립된 이후에 건설되고 있다. 증평군청에서는 산업단지에 입지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많은 혜택 약속, 입지하는 업체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증평산업단지는 2009년 완공되어 100% 입주하여 가동중에 있다.

참고문헌

- 경기개발연구원, 1997, 경기도 도·농 복합시의 행정수요 분석과 기능재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평택시를 중심으로.
- 국토해양부·한국감정평가협회, 2004년,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 요령.
- 김대원, 1999, "통합시의 생산성 증대 효과 분석," 한국행정학보, 33(3), 327-344.
- 김동훈·정진현, 1996, "도농통합형 행정구역개편의 효과 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7, 235-277.
- 김석태, 이영조, 2004, "광역시·도 통합론 비판과 그 대안으로서 광역거버넌스의 가능성," 한국행정논집, 16(4), 691-711.
- 김안제, 1979, 환경과 국토, 박영사.
- 김용웅·차미숙·강현수, 2003, 지역발전론, 한올아카데미.
- 김재홍, 2000,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정부의 효율성 변화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9(2), 47-62.
- 박종관, 1999,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종관·조석주, 2001, "시·군 통합에 의한 행정구역개편 정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2(3), 57-77.
- 박희정, 1994, "시·군 통합 이후의 지역발전과제," 지방행정, 43, 20-68.
- 배인명, 2000, "시·군 통합의 성과 평가: 재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9(1), 139-161.
- 손승호, 2013, "인구 규모의 변화를 통해 본 도농통합시의 차별적 성장,"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1) 통권 38, 85-98.
- 손재식, 1991, 한국지방자치의 진통, 박영사.
- 신영재, 1999, 통합시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도 평택시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영재, 2013, "평택항 개항에 따른 배후지역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3), 416-435.
- 신용철, 2014, "시멘트 공업지역의 공간 변화: 충북 단양군 매포읍을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3(1), 59-79.
- 유성중 2000, "광양제철소의 입지와 지역경제의 변화,"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3(2), 63-80.
- 이규환, 1994, “시·군 통합의 도시정책,” 도시문제, 313, 24-38.
- 이시원·민병익, 2005, “시·군 통합의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간 관계유형 분석,” 지방정부학회보, 9(4), 367-388.
- 이정록, 2000, “광양만권의 공업화와 지역경제의 변화,” 국토계획, 35(2), 175-186.
- 이정록, 이철, 나주몽, 2015,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여수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8(2), 137-151.
- 이재원, 2005, 행정구역과 생활권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충기, 2003, “월드컵 외국인 방문객의 실제 관광지출액 추정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관광학연구, 26(4), 11-26.
- 이희연, 2014, 경제지리학, 법문사.
- 임석희, 1994, “한국행정구역 체계의 문제점과 개편의 방향,” 대한지리학회지, 53, 65-83.
- 정세욱, 1995, 지방행정학, 법문사.
- 정성호, 2006, “폐광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개발: 태백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7(2), 219-249.
- 최재승, 1999, “시군통합의 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 경기대학교 인문사회과학논집, 43(1), 335-354.
- 최준호, 2001, “수면 위로 떠오른 광역시·도 통합문제,” 지방자치, 149, 24-29.
- 최홍석·정재진, 2005, “도농통합의 재정적 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19(4), 145-172.
- 한주성, 2007, 인구지리학, 한올아카데미.
- 홍준현, 1997, “시·군 통합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의 효과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8(2), 59-90.
- 홍준현, 2005, “시·군 통합이 지역 내 및 지역 간 균형성장에 미친 효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1), 299-324.
- 괴산군, 증평군 홈페이지.
- 충청일보, 1963년 1월 24일자.
- 희망21증평협의회, 2008, 증평군 설치백서.
- 2004년 괴산군 통계연보.
- 2004년 증평군 통계연보.
- 2004 기준 충청북도 사업체 조사보고서.
- 2013 기준 충청북도 사업체 조사보고서.
- Alonso, W., 1975, The Economics of Urban Size, J. Fridman & W. Alonso, eds., *Regional Policy: Readings in Theory and Applications*, The MIT Press, Cambridge, 437-439.
- Bryson, J., Daniels, P. and Warf, B., 2004, *Service Worlds. People, Organizations, Technologies*, Routledge, London.
- Burns, P. A., Hatch, J. A. and Mules, T. I., 1986, *The Adelaide Grand Prix: The Impact of a Special Event*, Center for South Australian Economic Studies, Adelaide.
- Chisholm, M., 1990, *Region in Recession, Restructuring and Resurgence?*, Unwin Hyman, London, 5-17.
- Crompton, J. I., 1995, Economic Impacts of Sports Facilities and Events: Eleven Sources of Misapplication, *Journal of Sport Management*, 9(1), 14-35.
- Crompton, J. I. and Makay, S. L., 1994, Measuring the Economic Impacts of Festivals and Events: Some Myths, Misapplications and Ethical Dilemmas, *Festival Management and Event Tourism*, 2(1), 33-43.
- Dwyer, L., Forsyth, P. and Spurr, R., 2004, Estimating Tourism's Economic Effects: New and Old Approaches, *Tourism Management*, 25(3), 307-317.
- Dwyer, L., Forsyth, P. and Spurr, R., 2005, Estimating the Impacts of Special Events on the Economy, *Journal of Travel Research*, 43(4), 351-359.
- Getz, D., 2005, *Event Management and Events Tourism* (2nd. ed.), Elmsford, Cognizand Communication Corporation, NY.
- Hartson, T., 1980, *Interpreting the city: An Urban Geography*, John Wile & Sons, New York.
- Horne, J. D. and Manzenreiter, W., 2004, Accounting for Mega-Events Forecast and Actual Impacts of the 2002 Football World Cup Finals on the Host Countries Japan/Korea,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39(2), 187-203.
- Kim, H. Y., Gursoy, D. and Lee, S., 2006, The impacts of the 2002 World Cup on South Korea: comparisons of pre-and post games, *Tourism Management*, 27(1), 86-96.
- Lineberry, Robert L., 1970, Reforming Metropolitan Governance: Requiemor Reality, *The Georgetown Law Journal*, 58, 676-678.

- Long, P. T. and Perdue, R., 1990, The Economic Impacts of Rural Festivals and Special Events: Assessing the Sparila Distribution Expenditures, *Journal of Travel Reseach*, 28(4), 10-14.
- Oates, W. E., 1972, *Fiscal Federalism*, Harcourt Braco Javanovich, New York, 11-13.
- Smith, 1995, B. C., *Decentralization: The Territorial Dimension of the State*, George Allen & Unwin, London, 201-206.
- Swyngedouw, E. A., 1992, The Mammon Quest: 'Globalization' Interspatial Competition and the Monetary Order, the Construction of New Scales, in Dunford, M. and Kafkalas, G.(eds.), *Cities and Regions in the New Europe*, Belhaven Press, London, 39-67.
- Tiebout, C. M., 1965,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Oct.), 416-424.
- Tiebout, C. M., 1972,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in Edel, M. and Rothenberg, J(eds), *Readings in Urban Economics*, MacMillian Publishing Co, 513-523.
- Tyrrell, T. J. and Johnston, R. J., 2001,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ssessing Direct Economic Impacts of Tourist Events: Destinations, and Causes of Expenditures. *Journal of Travel Reseach*, 40(1), 94-101.
- Warnick, R. B., Bojanic, D. C. and Xu, F., 2015, Using a Trade Market Analysis Technique to Refine Measurements for Economic Impacts Analysis of Special Events, *Journal of Travel Reseach*, 54(1), 52-65.
<http://map.daum.net/>
- 교신: 신영재, 05502, 서울시 송파구 잠실로 24, 잠신고등학교(이메일: syj7161@hanmail.net)
- Correspondence: Yeong-Jae Shin, Jamsin High School 24 Jamsil-ro, Songpa-gu, Seoul 05502, Korea (e-mail: syj7161@hanmail.net)

최초투고일 2016. 2. 5
수정일 2016. 3. 2
최종접수일 2016. 6. 18

한국 직업구조의 변화와 고용분포의 공간적 특성

박소현* · 이금숙**

Changes in the Occupational Structure and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Distribution in Korea

So Hyun Park* · Keumsook Le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급속한 산업화과정 이후 후기산업화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과정과 외환위기, 금융 위기 등 사회경제적 격동기를 거쳐 온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직업구조 및 직업분포에 나타나는 변화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직업구조의 시계열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대응일치분석을 통해 직업구조의 제속성인 취업인구의 사회-인구통계적 특성과 직업의 상호관계를 파악한다. 특히, 고용분포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크기와 성격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한국의 직업구조는 사회구조 및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빠른 속도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반면 전문직과 단순직으로의 이원화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취업인구의 사회-인구통계적 속성과 직업과의 대응관계에서 차원1의 비정직값을 통해 본 직업과의 관계는 산업, 성/학력, 지역(시군구), 성/연령 속성 순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출산율 저하, 인구고령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등으로 취업인구의 구성에 큰 변화가 예견되는 우리사회에서 국가적 차원의 인력의 수급대비 및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정책의 방향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주요어: 직업구조, 취업인구, 사회-인구통계적 특성, 다차원척도법, 대응일치분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the occupational structure of employment in Korea during the last three decades, in which have transformed from industrialized economy to knowledge-based economy very rapidly as well as having experiences of both IMF and financial crisis. For this purpose, we analyze the trends occupational distribution and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occupational structure of employment since 1980. By applying correspondence analysis of Multidimensional Scaling(MDS) methods, we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the employed persons by occupation and their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group, educational attainment, industry, region. We found the occupational structure of Korea has been changed dramatically with the socio-economic transformations during the last four decades. In particular, the occupational (job) structure has been highered in general. However, it has also been dualized extremely into two groups, one is the specialized-skilled-white color jobs and the other is the simple-unskilled-blue color job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as the importation basis for the provision of labour supply and employment policy plan at the national level as well as at the local level.

Key Words: occupational structure, employment populatio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multidimensional scaling, correspondence analysis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박사수료(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sohyunpk5@hanmail.net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kslee@sungshin.ac.kr

1. 서론

사회변화와 공간변화는 서로 밀접하게 엮여 있다(Massey, 1984). 경제 및 기술변화와 함께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가 하면 기존의 일자리는 줄어들거나 소멸되는 현상으로 세계경제지도가 바뀌고 있으며 그 변화의 정도와 속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Moretti, 2012).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의 하나로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직업구조 및 경제지도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과정을 거쳐 후기 산업화 사회와 지식정보사회로 진입은 산업을 구성하는 인적자원의 직업역량과 기술수준에 대한 변화요구로 이어지면서 직업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간단히 직업의 수에서도 감지된다. 직업사전이 처음으로 발간된 1969년만 하여도 우리나라 직업 수는 약 3천여 개에 불과하였으나 산업화를 거치면서 1986년, 직업 수는 약 9천여 개로 증가하였고 이후 시대의 필요에 따라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면서 2014년 말 기준, 총 11,440개로 조사되었다(한국고용정보원, 2015).

특히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고 이를 전후한 시기의 산업구조와 취업자의 직업구조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하여 ‘한 우물’과 ‘평생직장’으로 대표되던 전통적인 직업개념이 사라지고, 평생에 걸쳐 여러 번의 직업을 거칠 확률도 높아졌다. 또한 인구고령화로 직업나이도 무너지면서 은퇴 후 재취업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등 ‘양코르 커리어’를 추구하는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청년층 구직자와 함께 경쟁을 벌이고 있다(Freedman, 2007).

사회경제적 변화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노동인력의 수급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는 곧 직업역량과 구성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예컨대,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구조라 하더라도 지식과 정보에 의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로 변화하면서 생산위주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등 지식기반 고용을 창출하게 되고, 이는 노동인력의 직업구성과 위치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경우 취업자가 산업구조 상으로 ‘제조업’에 속할지라도 맡은 업무가 연구개발이라면 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분류된다. 산업과 직업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산업구조가 유사하더라도 직업구조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산업분석과 함께 직업분석도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이러한 접근시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Thompson and Thompson, 1985; Markusen, 2004; 구교준·조광래, 2011).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직업단위의 인력구조의 관점보다는 사업체단위의 산업구조에 초점을 두고 있거나 직업구조에서도 특정직종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을 저하, 인구고령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등으로 취업인구의 구성에 큰 변화가 예견되는 우리 사회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직업구조의 변화 방향을 파악하는 작업은 향후 인력수급 대비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역별로 노동시장의 크기와 성격이 다르고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노동인력인 취업자의 성, 연령, 학력 수준 등 인구집단별 경제활동의 내용과 성향의 차이로 인구통계학적 구조에 따라서도 직업분포의 특성이 달라진다. 인적자원의 구성으로서 취업인구의 직업구조 및 분포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파악함에 있어 취업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산업구조, 그리고 지역의 공간구조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직업은 직업통계의 공식분류체계인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능수준에 따라 총 9개의 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는 구조를 따르되, 직업의 인구통계학적 구조, 직업별 산업구조, 지역의 공간구조의 관계 측면에서 직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한다. 특히 지난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급진적 산업화과정에서 후기산업화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및 1990년대 말 IMF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

기 등 사회경제적 격동기를 거쳐 오는 동안 한국의 직업구조 및 분포에 나타나는 변화와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직업구조의 시계열적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직업구조의 제 속성인 취업인구의 사회-인구통계적 특성과 직업과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응일치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지역별 산업구조와의 교차비교 및 분포를 통해 노동시장의 크기와 성격을 분석한다.

2. 직업구조에 대한 연구동향

산업과 고용의 지리를 사회 및 경제적 구조와 연결 지어 설명하려는 Massey(1984)의 시도 이후 노동의 공간적 분포와 과정 및 직업에 대한 지리적 연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직업지리학의 개념이 소개되고 직업에 대한 지리학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직업에 관한 연구는 직업능력, 직무분석, 직무만족, 직업의식, 이직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직업구조, 직업분류, 직업이동, 직업변동 등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에 속한다(이영대, 1999; 한상근, 2005의 직업연구 동향 참고).

다음 표 1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직업연구를 구분, 정리한 것이다¹⁾. 이 기간 동안 직업관련 연구는 총 2,519건으로 집계되는데 이 가운데 직업교육, 직업훈련, 직업기술교육(훈련), 직업재활과 관련된 연구가 684건(27.2%)이고, 직업윤리, 직업가치 내지는 직업관, 직업의식, 직업(직무)만족 등 직업의 심리·정서적 측면을 논의한 연구와 직업지위 또는 직업위세, 직업계층 등 사회적 측면에서 직업을 연구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직업연구는 941건(37.5%)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협의의 직업연구를 보면 직무분석과 직업능력 등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전망과 유망직업의 경우 조사연구를 중심으로 국책연구기관²⁾ 등을 통해 지속적

으로 진행되어 왔다. 반면 직업구조, 직업분류에 관한 연구진행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평생직장의 붕괴, 이전직의 증가로 직업이동에 관한 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연구 가운데 지리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성장과 분포, 격차 등을 다룬 연구(김현재, 1989; 서종국, 1998; 이희연, 1993; 이현영 등, 2014), 둘째,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직업별 분포의 특성을 다룬 연구(한주성, 1998; 노시학, 2000; 정연주, 2001; 조현미, 2007), 셋째, 구직, 취업과 관련한 인구이동 및 분포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그 결정요인(권상철, 2000; 안영진, 2001; 2013; 박추환·김명수, 2006; 박삼옥 등, 2008; 문남철, 2010; 2011; 2013; 강영걸, 2012; 김동현 등, 2012; 이현욱, 2013; 이현재, 2014; 이정현·이희연, 2015; 이원호, 2016)을 파악한 연구, 아울러 이로 인한 직주분리 현상(한주연, 1989; 하성규·김재익, 1992; 노시학·손종아, 1993; 김재익·전명진, 1996; 김형태, 2009; 김승남, 2014; 손승호, 2015)을 고찰한 연구들로 정리된다. 지리학 관련 분야에서는 직업의 분포와 직업을 위한 지역 간 이동을 다룬 연구가 적지 않으며, 최근에는 직업관련 심리·정서적 측면을 다룬 연구(양정미 등, 2011; 이태희·김려은, 2011)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서구에서 직업구조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계층구조와 연관시켜 논의한 사회학적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Blau and Duncan, 1967; Parkin, 1971; Sewell and Hauser, 1975; Bibb and Form, 1977; Reeve, 1977; Feathermann, 1981; Kalleberg, 1988; Bidwell, 1989; Ganzeboom *et al.*, 1991; King, 1992; Crompton, 1993; Murphy and Welch, 1994; Zawacki, 1999; Eric and Pager, 2001; Chan and Goldthorpe, 2004). 주로 소득, 교육수준과 직업의 관계를 계층(계급)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국내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직업구조를 논의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화이트/골드칼라로 지칭되는 직업군을 비롯한 전문직 등 직업계층의 특성을 논의한 연구를 들 수 있

다(강신태, 1976; 정근식, 1984; 심윤중 등, 1987; 김지섭, 1994; 차종천, 1998; 신광영·이성균, 1999; 서문기, 2004; 이중희, 2005; 임창규·유인진, 2011; Yoo *et al.*, 2014; 최은영·홍장표, 2014).

그 외, 직업구조에 관한 연구는 주로 현대사회의 변화(도시화, 산업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설명하는 설명변수로서 사용되곤 했다(김현재, 1989; 이기석, 1990; 정이환, 1992; 김기환, 1993; 이원호 2002). 또한, 특정산업의 직업구조(유경희, 1985; Devinat, 1999; Freeman and Aspray, 1999; Cusumano, 2004; 유규창 등, 2005; 한상근, 2005; 심규범, 2009)를 다룬 연구도 있다. 특히, 정보사회로의 진전에 따른 정보관련 직업구조(김원동, 1992; 장창원·이상준, 1999; Feser, 2002; 권기욱·조주은, 2007) 및 정보관련 직업분포의 패턴을 파악한 연구가 일부 존재한다(이희연, 1993; 조동기·조희경, 2002). 마지막으로 특정인구집단의 직업구조를 다룬 연구도 있다(Hodson and Sullivan, 1996; 한주성, 1998; Hirsh, Macpherson and Hardy, 2000; 박경숙, 2002; 진미석 등, 2003; 조가원, 2014).

이상으로 기존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국내 직업연

구에서 직업구조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함을 알 수 있다. 직업구조에 대한 연구라고 하지만 계층적 차원에서의 연구, 특정산업 또는 특정인구집단의 직업구조에 관한 연구이며 공간적 측면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더욱 미흡한 편이다. 이는 산업통계와 달리 직업통계의 경우 공식집계자료가 부족하고 다양하지 못해 실증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이기도 하다. 직업구조를 다룬 일부의 연구마저도 주로 유망직업을 전망하거나 특정직업의 직무 분석을 위한 직업구조 전반에 대해 개괄한 수준에 불과하다.

직업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 특징과 추이를 분석한 소수의 연구로 김현재(1989), 홍두승 등(1999)과 방하남 등(2011)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김현재(1989)는 1960-1985년간 5개 직업군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도시규모별 직업구조의 변화를 사무관련직의 증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는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관리자, 사무 종사자를 모두 합쳐 사무관련직으로 보았다. 홍두승 등(1999)과 방하남 등(2011)도 시계열 구간의 차이일 뿐, 6개(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농림수산업)의 직업분

표 1. 직업관련 연구의 구분 및 연구동향(2005-2015)

(단위: 건)

구분	관련연구 문헌 수	주요 연구대상	
직업교육훈련	684	직업교육, 직업훈련, 직업기술교육(훈련), 직업체험, 직업재활	
심리·사회적 측면 (외재적 접근)	941	직업탐색, 직업선택(선택), 직업흥미, 직업가치(관), 직업태도, 직업윤리, 직업의식, 직업(직무)만족, 직업계층, 직업위세, 직업지위	
경제적, 협의의 측면 (내재적 접근)	직업구조(직업구성)	21	직업구조, 직업구성, 직업군
	직업분류	12	직업분류, 직업군집화/유형화
	직업정보(직업세계) 직업전망(유망직업)	41	직업정보, 직업세계, 직업사회, 직업전망, 유망직업, 직업변동(변화)
	직업이동(이전직)	69	이직, 전직, 경력이동, 직업이동
	취업(구직)	69	취업, 재취업, 구직, 입직
	직업능력(직업기술)	183	직업기초능력, 직업스킬, 지식
직무분석	332	직무분석, 직무개발, 직업전문성	
기타	164	직업생활(적응), 직업지도, 직업상담, 직업안정(유지) 등	
계		2,519	

류를 기준으로 하여 직업구조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들 역시 직업자료를 재구성할 때 과거와의 자료 연결성을 위하여 일부 직업군을 한 데 묶어 분석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분석시점과 달리 현 시점에서 이러한 범주화는 각 직업군의 특성이 간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³⁾.

3. 한국 직업구조의 변화양상과 추이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직업구조의 변화추이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특징을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직업구조는 계층(class)의 의미와 구성(composition)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서 대분류기준은 직능수준(skill level)에 따른 분류로 이미 계층성을 띠고 있고⁴⁾, 각 직업별 사회-인구통계적 구성분포의 변화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연구와 달리 각 시기별 직업자료의 재구성에서 직업군의 통합을 배제하였다. 직업군을 한 데 묶어 분석할 경우, 현재 직업분화에 따른 각 직업군의 분포특징과 변화추이를 면밀하게 진단하는데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직업군의 통합재구성 없

이 모든 직업, 즉 직종별 변화추이를 성별, 연령별, 학력수준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비추어 우리나라 직업구조의 전반적인 변화추이를 분석한다. 아울러 현재의 산업별·지역별 직업분포도 함께 교차 비교하여 살펴본다.

다음 그림1은 1980년부터 2015년까지의 직업별 취업인구 구성분포의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이다⁵⁾. 지난 35년간 우리나라 직업구조의 변화추이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급격한 증가세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급격한 감소세라 할 수 있다. 또한 '사무 및 관련 종사자'의 구성비도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서비스 종사자'의 비중은 다소 증가세를 보였지만 '판매 종사자'는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의 생산관련 직종은 외환위기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아 2000년에 일시적으로 취업인구의 감소세를 보였지만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관리자'의 경우 동일한 직능수준이 요구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달리, 2000년 이후 취업인구의 직업별 분포에서 비중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2는 이 그룹에 통합된 직업군을 세분화한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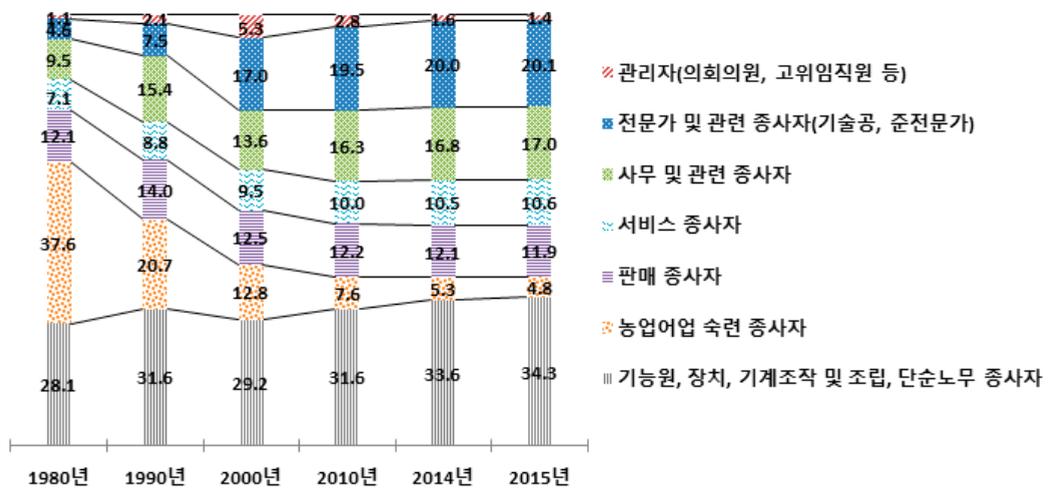


그림 1. 직업별 취업인구 분포 추이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 1990, 2000,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2014, 2015)」

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의 통합구성비는 1980년 28.1%에서 1990년 31.6%로 증가세를 보이다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 29.2%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0년 31.6%, 2015년 기준 34.3%로 전체 취업인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단순노무 종사자’는 1995년 6.8%, 2005년 7.6%에서 2010년 10%를 넘어서며, 2015년 기준 13.2%의 비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1995년 대비 2015년의 증가율은 무려 182.0%에 달한다. 반면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비중은 감소-정체 상태를 보이며 2015년 기준 9.0%를 차지하였고,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1995년 11.2%에서 정체 내지는 소폭 증가세에 머물며 2015년 기준 12.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그룹 직업의 증가세는 ‘단순노무 종사자’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취업인구의 직업분포에서 ‘단순노무 종사자’는 두드러진 증가폭을 보이며 ‘사무 종사자’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난 30여 년간 전체 취업인구의 직업구조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직능을 요구하는 직업인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가장 낮은 수준의 직능을 요구하는 직업인 ‘단순노무 종사자’가 전체 직업군에서 무려 3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4, 5는 이를 다시 직업별 성, 연령, 학력수준의 인구통계학적 구조에서 분포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먼저 직업별 성별구조를 보면(표 3) 1985년 당시만 하여도 남녀 모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산업화로 지속

표 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분포 추이

직업군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201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8.1	31.6	13.8	10.5	10.1	8.9	8.8	9.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1.2	11.2	11.7	12.2	12.0	12.1
단순노무 종사자			6.8	7.5	7.6	10.5	12.9	13.2
계	28.1	31.6	31.8	29.2	29.4	31.6	33.6	34.3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2014), 2015」

표 3. 직업별 성별구조 및 분포추이

직업군	남성				여성			
	1985	1995	2005	2015	1985	1995	2005	2015
관리자	1.9	6.3	5.3	2.4	0.1	0.6	1.0	0.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2	18.2	18.3	18.0	5.8	14.7	20.2	22.8
사무 종사자	12.8	9.8	15.3	15.6	11.1	15.1	18.3	18.9
서비스 종사자	5.8	15.3	5.8	6.3	11.8	27.9	16.0	16.4
판매 종사자	12.7		9.2	10.1	12.4		14.0	14.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6.1	12.6	9.1	5.0	40.1	21.0	13.3	4.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4.4	17.1	13.7	13.5	18.7	7.9	4.3	2.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3	15.2	18.3		5.5	6.1	3.7
단순노무 종사자		6.5	8.1	11.1		7.3	6.8	16.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1985, 1995, 2005)」, 「경제활동인구조사(2015)」

적인 급감 추세를 보이면서 2015년 기준 각각 5.0%, 4.5%의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경우 1985년 당시 '관리자' 다음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고학력화, 지식기반화의 영향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면서 2015년 기준 남녀 각각 18.0%, 2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지난 35년 간 매우 높은 급증세를 나타냈다. 남녀의 직업선호 차이에 따라 남성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구성비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서

비스 종사자'의 경우 여성의 구성비가 남성보다 항상 높다. '사무 종사자'에서 여성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18.9%)을 차지하고 있고 남성은 1995년 비중 감소세를 보인 후 다시 소폭 증가하여 2015년 기준 15.6%를 차지하고 있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성별 관계없이 급증세를 보여 왔고 지난 10년간 여성 증가율(49.1%)이 두드러진다.

표 4는 직업별 연령구조 및 분포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980년 당시만 해도 취업인구 가운데 30대(15-

표 4. 직업별 연령구조 및 분포추이

직업군	15-19세				20-29세				30-39세			
	1980	1995	2005	2014	1980	1995	2005	2014	1980	1995	2005	2014
관리자	0.0	0.0	0.1	0.0	0.2	0.9	0.4	0.2	1.4	4.8	2.6	0.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3	7.1	8.7	6.9	5.8	23.3	29.6	29.9	5.8	20.9	25.2	30.2
사무 종사자	9.3	26.6	16.2	11.4	15.4	23.4	27.0	24.6	10.3	11.3	21.9	26.8
서비스 종사자	7.5	16.7	19.1	34.3	7.3	17.8	9.1	13.2	8.0	21.6	8.9	7.1
판매 종사자	4.9		12.3	23.7	10.1		10.3	11.9	16.2		11.3	10.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3.8	4.7	1.5	0.8	24.4	3.7	1.1	0.7	28.7	6.9	2.4	0.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3.3	16.2	4.3	0.8	36.9	14.4	7.5	4.4	29.6	16.4	11.2	7.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3.8	30.8	5.3		12.4	11.3	8.2		12.6	11.4	9.9
단순노무 종사자		4.9	6.9	16.7		4.0	3.7	7.0		5.4	5.1	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직업군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980	1995	2005	2014	1980	1995	2005	2014	1980	1995	2005	2014
관리자	1.9	6.9	5.6	2.0	1.7	5.9	6.1	2.9	0.8	3.2	3.0	1.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5	13.9	16.0	21.5	3.3	9.8	11.1	11.6	1.9	5.3	4.9	5.2
사무 종사자	6.6	6.3	13.9	17.8	3.6	4.1	8.3	9.5	0.9	1.5	2.6	3.2
서비스 종사자	7.3	24.2	12.0	9.7	5.6	18.3	10.9	13.6	2.8	9.4	4.2	8.2
판매 종사자	14.2		12.4	13.7	12.0		11.2	12.6	8.1		7.4	9.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5.4	13.7	6.3	1.8	61.9	32.2	16.5	5.5	80.8	65.6	56.1	24.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0.1	15.0	12.4	10.9	11.9	10.6	10.8	11.9	4.7	3.7	3.7	6.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2.0	13.6	13.0		7.6	12.9	16.3		2.1	4.7	10.4
단순노무 종사자		8.1	7.8	9.5		11.5	12.2	16.0		9.1	13.4	3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 1995, 2005)」; 「경제활동인구조사(2014)」

39세)까지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등 생산관련 직종에 높은 취업분포를 보였고 40대 이상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비중이 높았다. 1995년, 청년층(15-29세) 5명 중 1명 이상은 '사무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중장년층(30-59세)은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로의 취업분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취업인구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65.6%)'로 나타났다. 2005년, 취업인구 중 15-19세는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30.8%)'가 가장 많았고 20-49세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로의 취업분포가 가장 높았다. 50-59세는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2.9%)'와 '단순노무 종사자(12.2%)'로의 취업분포가 가장 높았다. 여전히 60세 이상 취업인구의 절반 이상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56.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취업인구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15-19세 취업인구는 '서비스 종사자(34.3%)'가 가장 많았고 20-49세는 2005년 이후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로의 취업분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59세도 2005년 이후로 취업인구 중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6.3%)'와 '단순노무 종사자(16.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은 2005년까지 취업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이었으나 2014년 '단순노무 종사자(31.4%)'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직업의 연령구조를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는 20-49세의 젊은층이 유입되고 다시 나이가 들면 유출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지난 35년간 60세 이상의 연령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경우 20-30대 취업인구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젊은층의 생산관련 직종 기피현상을 엿볼 수 있다.

표 5는 직업별 학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각 직업을 활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직능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학력수준의 제한이 있어 각 직종별 학력수준의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학력수준 향상으로 모든 직업군에서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취업인구가 증가하였다.

중졸 이하 학력계층의 취업분포는 1980년부터 2005년까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2014년에는 '단순노무 종사자'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취업인구는 1980년 당시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

표 5. 직업별 학력구조 및 분포추이

직업군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980	1995	2005	2014	1980	1995	2005	2014	1980	1995	2005	2014
관리자	0.2	0.9	1.0	0.2	1.3	3.9	2.7	0.7	7.1	9.9	5.9	2.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6	1.9	1.4	0.8	4.7	10.8	7.4	7.0	35.8	49.5	39.3	39.8
사무 종사자	2.3	2.2	2.9	1.2	26.1	16.2	14.8	12.4	28.7	17.5	25.2	27.3
서비스 종사자	8.2	21.2	12.0	13.5	7.9	24.4	12.9	14.4	4.0	11.9	6.1	5.8
판매 종사자	12.0		8.8	8.9	16.8		14.9	16.4	11.9		8.9	9.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1.2	33.6	33.8	20.5	11.8	5.2	5.1	3.3	3.1	1.3	1.3	1.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5.6	17.1	11.7	10.6	31.5	17.3	14.4	12.3	9.5	5.2	5.8	4.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1.4	12.4	11.9		16.2	19.0	18.9		3.2	5.2	5.6
단순노무 종사자		11.8	16.0	32.4		5.9	8.8	14.6		1.5	2.3	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1980, 1995, 2005)」; 「경제활동인구조사(2014)」

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가 31.5%의 비중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은 사무 종사자(26.1%)였다. 1995년 고졸 취업인구는 '서비스, 판매 종사자'인 경우가 24.4%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사무 종사자'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16.2%의 비중으로 많았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고졸 취업인구는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졸 학력자의 구성비 증가세보다 대졸 학력자의 증가세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이 직업군에서도 고학력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 198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대졸 이상 취업인구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직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이고 그 다음은 '사무 종사자'로 1995년 구성비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2014년 기준 27.3%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수준과 관계없이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4년 기준 고졸(약 148만 명)과 중졸 이하(약 146만 명)의 단순노무 종사자는 대졸 이상(약 36만 명) 단순노무 종사자보다 약 4배가량 많았지만 단순노무 종사자 중 대졸이상 학력자도 지난 20년간 무려 약 5.8배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2014년 기준 산업·직업별 취업인구 분포

표 6. 산업·직업별 분포(2014)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 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 사자	장치, 기 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계
농·림·어업	0.2 (0.8)	0.4 (0.1)	0.6 (0.2)	0.0 (0.0)	0.0 (0.0)	92.1 (98.2)	0.1 (0.1)	0.3 (0.2)	6.3 (2.8)	100.0
광공업	2.2 (24.2)	10.2 (8.7)	20.1 (20.3)	0.3 (0.4)	2.1 (2.9)	0.0 (0.1)	17.2 (33.3)	36.0 (51.0)	11.9 (15.7)	100.0
전기·가스증기 수도사업	7.1 (1.5)	21.4 (0.4)	33.3 (0.6)	1.2 (0.0)	1.2 (0.0)	0.0 (0.0)	7.1 (0.3)	16.7 (0.5)	11.9 (0.3)	100.0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3.4 (0.8)	3.4 (0.1)	16.1 (0.3)	1.1 (0.0)	3.4 (0.1)	0.0 (0.0)	4.6 (0.2)	46.0 (1.3)	21.8 (0.6)	100.0
건설업	4.1 (18.4)	10.0 (3.5)	13.4 (5.6)	0.1 (0.1)	0.7 (0.4)	0.3 (0.4)	47.6 (38.1)	9.9 (5.8)	13.9 (7.6)	100.0
도매 및 소매업	0.7 (7.1)	6.4 (4.8)	15.3 (13.4)	0.3 (0.4)	61.9 (75.5)	0.0 (0.1)	2.3 (4.0)	1.7 (2.1)	11.3 (13.0)	100.0
숙박 및 음식점	1.1 (5.8)	0.9 (0.4)	1.6 (0.8)	69.2 (53.8)	8.8 (5.9)	0.0 (0.0)	1.4 (1.3)	0.2 (0.2)	16.7 (10.7)	100.0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8 (4.3)	22.5 (9.3)	17.9 (8.8)	0.8 (0.7)	2.2 (1.5)	0.0 (0.0)	2.6 (2.5)	42.2 (29.3)	10.9 (7.0)	100.0
금융·보험	4.4 (9.3)	9.1 (1.5)	51.3 (10.0)	0.5 (0.1)	33.0 (8.9)	0.0 (0.0)	0.2 (0.1)	0.1 (0.0)	1.4 (0.4)	100.0
부동산 임대업 및 기술, 사업지원 서비스	1.4 (9.6)	30.8 (16.3)	25.3 (15.9)	4.0 (4.0)	3.8 (3.3)	0.3 (0.7)	3.5 (4.2)	5.7 (5.0)	25.1 (20.7)	100.0
공공·개인·사회 서비스업 및 기타	1.2 (18.4)	44.9 (55.0)	16.6 (24.1)	17.3 (40.3)	0.7 (1.4)	0.1 (0.6)	5.7 (16.0)	2.3 (4.7)	11.2 (21.4)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4)」

를 교차 비교하였다(표 6)⁷⁾. 먼저 산업별 직업분포를 보면, 광공업의 경우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36.0%의 구성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가스중기 수도사업은 사무 종사자(33.3%)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46.0%의 구성분포를 나타냈다.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42.2%의 구성비를 차지한다. 금융 및 보험업에는 사무 종사자(51.3%)가 절반을 상회하였고, 부동산 임대업 및 기술,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30.8%로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공공·개인·사회서비스업 및 기타서비스업 역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44.9%)'의 취업분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직업단위의 취업구조에서 산업분포를 보면, 관리자는 '광공업'과 '건설업' 내 취업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공공·개인·사회서비스업 및 기타(44.9%)'와 '부동산 임대업 및 기술, 사업지원 서비스업(30.8%)'에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사무 종사자는 '금융 및 보험업'에 절반이 넘는 51.3%가 분포하고 있다. 서비스 종사자는 '숙박 및 음식점(69.2%)'에 판매 종사자는 '도매 및 소매업(61.9%)'에 압도적인 취업분포를 나타냈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속한 산업은 '농·림·어업'으로 98.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의 경우 '건설업(38.1%)'에의 취업분포가 높았고, 광공업도 33.3%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광공업에 51.0%가 분포하고 있다.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공공·개인·사회서비스업 및 기타(21.4%)에 높은 분포를 보였다.

특히, 직업별 산업분포에서 광공업이 차지하는 구성비의 감소세와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구성비의 증가세를 관측할 수 있다. 직업별 산업분포에서 '관리자'의 경우 광공업 30.6%(95)→25.8%(05)→24.2%(14)과 건설업 20.7%(95)→19.2%(05)→18.4%(14) 내 구성비에서 두드러지는 감소세를 나타냈고, '사무 종사자'의 산업분포에서도 광공업의 구성비는 30.0%(05)→20.3%(14)로 급격한 감소세, 단순

노무 종사자에서 '광공업'에 종사하는 분포 비중도 21.9%(05)→16.0%(14)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이들 직종에서 '공공·개인·사회서비스업 및 기타'와 '부동산 임대업 및 기술, 사업지원 서비스' 산업에서의 구성비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아울러 산업 내 직업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관측할 수 있다. 농·림·어업, 광공업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산업 내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도매 및 소매업'에서 판매 종사자는 63.0%(05)→61.9%(14)로 구성비가 감소한데 반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0.9%(05)→6.4%(14), 단순노무 종사자는 7.3%(05)→11.3%(14)로 증가세를 나타냈고, '공공·개인·사회서비스업 및 기타' 산업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42.6%(05)→44.9%(14), 단순노무 종사자는 7.6%(05)→11.2%(14)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운수업, 출판영상과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4.8%(05)→22.5%(14)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고, '숙박 및 음식점'에서 서비스 종사자는 59.5%(05)→53.8%(14)로 비중이 감소한데 반해, 단순노무 종사자는 7.3%(05)→16.7%(14)의 비중으로 급증세를 나타냈다. 한편,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 임대업 및 기술, 사업지원 서비스'에서는 사무 종사자가 각각 49.4%(05)→51.3%(14), 17.5%(05)→25.3%(14)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직업별 산업구성에서 '광공업'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감소하고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증가하는 양상이 관측되었으나, 산업 내 직업구성으로 다시 살펴보면 농·림·어업과 광공업, 건설업의 1,2차 산업 내에서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관측할 수 있다.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개인 및 공공 서비스업 분야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의 구성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고, 생산자 서비스업 분야에서 '사무 종사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결국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서비스 산업의 유형에 따른 직종별 변화

추세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한국 직업구조 및 직업분포 변화에 나타나는 특성

1) 직업 제 속성과의 상호관계에 나타는 직업구조 변화

직업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 여러 요인 가운데 직업 자체의 변화요인으로 직업의 성원(成員)인 취업자의 인구통계학적 속성과 취업자의 산업·지역적 속성과의 관계 변화를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직업 제 측면의 속성과 직업과의 관계 변화에 있어 상관관계에 대한 변화 정도를 동시배치를 통해 시각적으로 비교하여 볼 수 있는 대응일치분석⁸⁾을 사용하였다.

대응일치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은 다차원척도(Multidimensional Scaling, MDS) 분석법의 하나로 저차원(2차원 또는 3차원)의 공간에서 대응일치표를 사용하여 다변량의 범주형(categorical) 자료, 특히 명목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동시에 각 변수의 범주 관계를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다시 말해, 행 변수와 열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최소한의 차원으로 나타내려는 분석으로 요인분석과 마찬가지로 90도씩 회전시키면서 관성(inertia)의 설명 정도를 산출하는 기법이며 대응분석에서 차원(dimension)은 요인분석의 요인(factor)과 유사하다(SPSS통계패키지22, 도움말), 요인특점과 같이 차원의 점수는 행과 열 변수의 점수로 산포도 상에서 좌표 값으로 나타난다. 즉, 산포도 상의 동시배치로 각 변수별 범주들의 공간상의 상대적 위치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이점이 된다(노형진, 2011). 좌표 값의 위치가 근접할수록 연관성이 높고, 멀수록 연관성이 낮은 범주가 된다.

대응분석에 투입된 행 변수는 1995년과 2014년 기준 전국 취업인구의 성, 연령, 학력수준의 인구통계학적 속성과 산업별, 지역별(시군구) 취업인구의 경제·지리적 속성이고 열 변수는 전국 취업인구의 직업으

로 9개의 직업대분류를 투입하였다⁹⁾. 행과 열 사이의 거리측도는 카이제곱거리로 설정하였고 정규화는 두 변수 범주간의 차이와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칭적정규화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모델에서 각 차원의 독립성을 검증하는 카이제곱 값은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취업인구의 성/연령 속성과 직업 간의 대응일치분석의 결과를 공간상에 포지셔닝한 산점도를 나타낸다. 관성비율은 각 차원의 설명력으로 1995년의 경우 1차원에서 56.4%, 2차원에서 24.3%로 두 차원에서 전체 고유치의 80.6%를 설명하였고 2014년도 1차원 55.5%, 2차원 31.2%로 두 차원에서 전체 고유치의 86.6%를 설명하였다. 비정칙값은 행과 열 점수의 상관관계수로 각 차원의 상대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척도로 성/연령 속성과 직업 간의 상관관계수는 1차원에서 각각 .516(95년), .494(14년)의 값을 나타냈다.

행과 열의 각 변수의 범주별 대응관계의 변화를 보면, 지난 20년간 성/연령 속성과 직업과의 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찾을 수 있다. 15-19세 취업인구의 경우 1995년 여성은 '사무 종사자'에 남성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근접하였으나 2014년 15-19세 남녀 취업인구는 모두 '서비스 종사자'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9세의 남성 취업인구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여성은 '사무 종사자'와 관련성을 보였고 30-39세 취업인구 중 여성은 '서비스, 판매 종사자'와 매우 근접하였고 남성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연관성을 보였다. 그러나 2014년 20대와 30대 남녀 취업인구는 모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와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40대의 남성 취업인구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취업인구는 '서비스, 판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와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59세, 60세 이상의 여성 취업인구는 '농림업 숙련 종사자'와 높은 연관성을 보였고 60세 이상 남성 취업인구도 '농림업 숙련 종사자'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全)연령층의 여성 취업자에서 직업구조의 매우 두드러진 변화를 관측할 수 있고 젊은 연령층의 생산관련 직종으로의 취

업기피현상도 엿볼 수 있다.

직업 간의 관계도 보다 근접해졌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가 서로의 거리가 가장 근접해졌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관리자’가 서로 근접해지면서 직업분포의 연관성이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은 성/학력 속성과 직업과의 대응일치분석의 결과를 포지셔닝한 산점도이다. 성별/학력별 취업인구와 직업 간의 관계는 1995년의 경우 1차원 62.0%, 2차원 19.1%로 두 차원에서 전체 고유치의 81.2%를 설명하였고 2014년에는 차원 1이 64.3%, 차원 2가 21.7%로 두 차원에서 누적설명분산은 86.6%로 나타났다.

행과 열의 각 변수의 범주별 대응관계의 변화를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1995년과 2014년 모두에서 대졸 이상의 남녀 취업인구와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고 ‘관리자’는 대졸 이상의 남성과 상호관계를 나타냈다. ‘사무 종사자’의 경우 1995년만 해도 고졸 여성 취업자와 근접하였으나 2014년 여성취업인구 중 고졸학력자는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와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무 종사자’는 대졸 이상의 남녀 취업인구와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기능원 및 관

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1995년과 2014년 모두에서 고졸의 남성 취업인구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취업인구 중 중졸 이하의 학력자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연관성을 보였는데 2014년에는 두드러지게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직업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의 여성 취업인구는 1995년과 2014년 모두 ‘서비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난 20년간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각 직업을 활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직능수준보다 높은 학력 수준의 취업인구가 분포하는 직업군이 증가하였다. 직업 간의 관계만을 보면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가장 인접하여 유사성을 띠며 분포하고 있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도 서로의 거리가 더 근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리자’는 성/연령 속성과 직업과의 대응관계에서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및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인접하여 유사성을 띠었으나 성/학력수준 속성과 직업과의 대응관계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와 더 높은 연관성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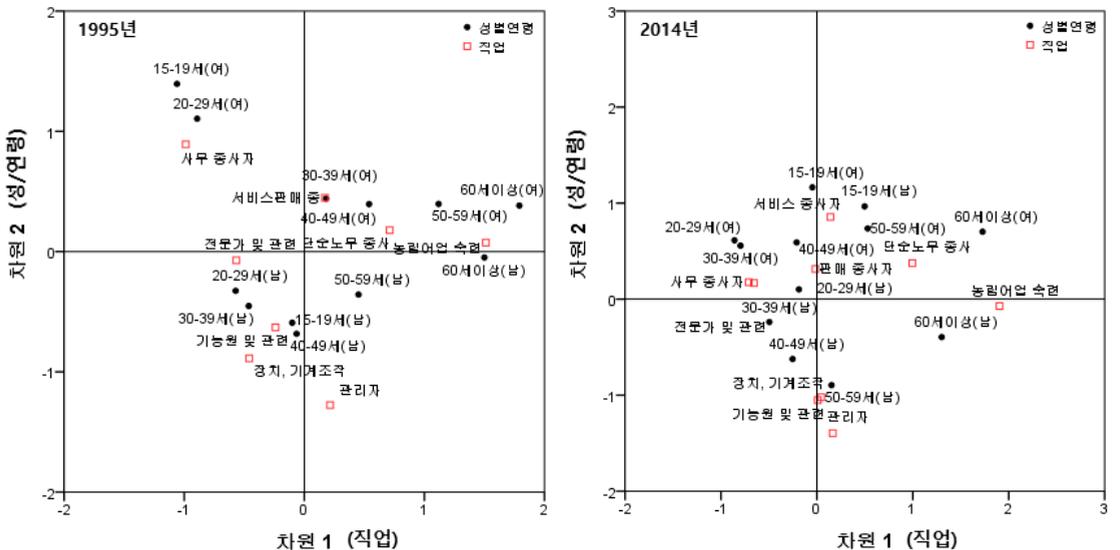


그림 2. 성, 연령과 직업 간의 관계 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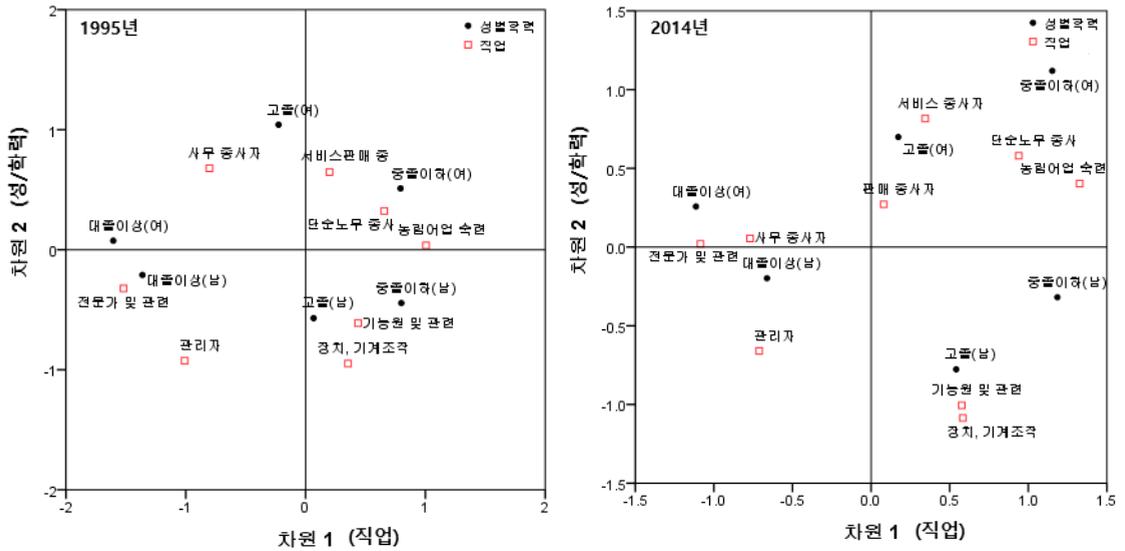


그림 3. 성, 학력과 직업 간의 관계 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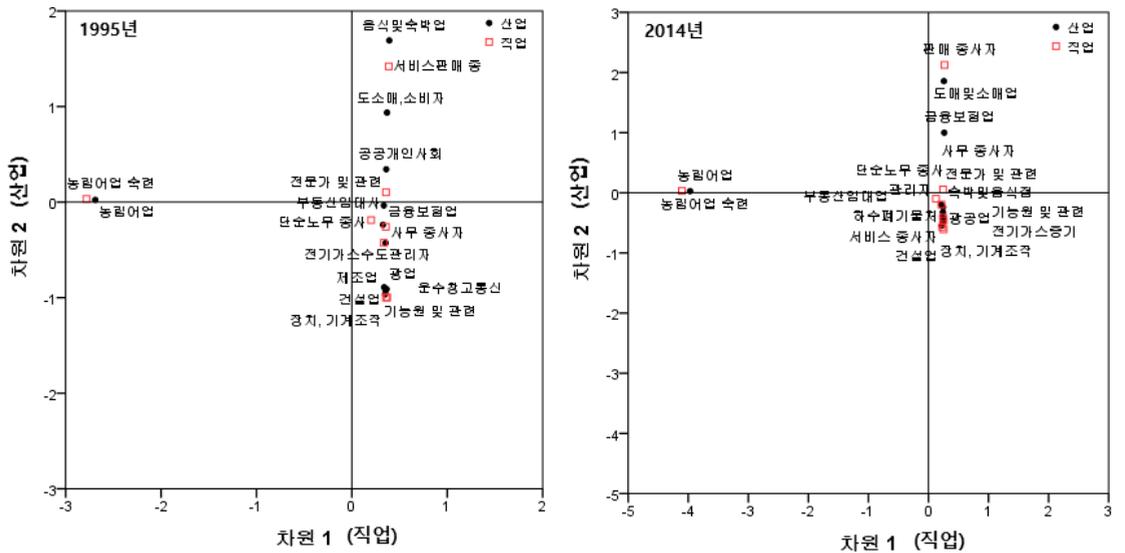


그림 4. 산업과 직업 간의 관계 형상

대응분석 결과에서 성/연령 속성과 직업과의 대응 관계에서 1차원 비정칙값은 .516('95년), .494('14년) 이었으나 성/학력의 속성과 직업과의 대응관계에서 1차원 비정칙값은 .639('95년), .634('14년)로 산출되었다. 성/연령 속성보다 성/학력 속성이 직업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상관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변화 가운데 취업인구의 학력 변화는 지속적인 고학력화 추세가 전(全)직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반면 인구고령화로 노년층의 재취업 증가, 청년층의 생산관련 직종 기피 현상 등 취업연령층의 확대와 연령층별 직업분포의 분리로 연령 세분화에 따른 직업구성과 분포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경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다음 그림 4는 취업인구의 산업과 직업 간의 대응 일치분석의 결과를 포지셔닝한 산점도이다. 1995년의 경우 1차원에서 55.5%, 2차원 23.8%, 3차원 14.2%로 3개 차원에서 전체 고유치의 93.0%를 설명하였고 2014년에는 1차원에서 41.8%, 2차원 21.3%, 3차원 19.7%로 3개 차원에서 총 누적 82.8%를 설명하였다.

1995년과 2014년 모두 기준점을 중심으로 좌측 중간에 농·림·어업이 위치하고 있고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인접 분포를 보이고 있다.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판매 종사자'와 인접하여 위치해 있고 그 외 1995년에는 음식 및 숙박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인접하여 분포하고 있다. 금융보험업은 '판매 종사자'와의 거리에서 1995년보다 2014년에 더 근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광공업(제조업 포함)과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기술, 사업지원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수도사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산업과 나머지 직업군은 우측 하단(제4사분면) 공간상에 모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비정칙값은 .965('95년), .949('14년)로 산업과 직업의 관계는 매우 강한 것으로 확인된다. 산점도에서 기준점으로부터 산업과 직업변수의 좌표 값(차원의 점수)의 분산

정도를 보면 1995년보다 2014년이 보다 더 조밀한 분포를 보이며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2) 직업의 공간적 분포 변화

마지막으로 직업분포의 공간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변화를 파악하고자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취업인구의 지역분포와 직업과의 대응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포지셔닝한 산점도는 그림 5와 같다. 상관계수를 의미하는 비정칙값은 각각 .609('00년), .502('10년)로 나타났다.

시군구 수준에서 취업인구의 지역분포와 직업 간의 관계는 2000년에 차원 1에서 80.0%, 차원 2에서 11.0%로 두 차원에서 전체 고유치의 91.0%를 설명하였고 2010년에는 차원 1에서 73.9%, 차원 2에서 15.8%로 두 차원에서 누적설명분산은 89.7%이다.

2000년과 2010년 모두 직업 간 관계만을 볼 경우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가 연관관계를 갖는 그룹으로 묶이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가 서로 연관성을 띠며 인접하여 있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단독으로 위치하고 있다. 직업 간 거리는 '사무 종사자'와 '판매 종사자'가 가장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공간상에 단독 위치하고 있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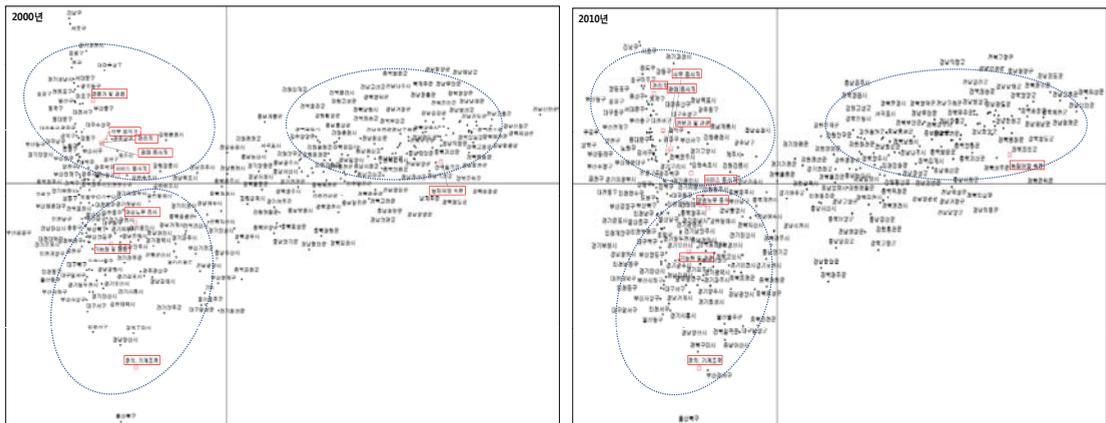


그림 5. 지역(시군구)과 직업 간의 관계 형상

자'와 연관성 있는 지역으로 전남(해남군, 담양군, 함평군, 곡성군, 고흥군, 신안군, 진도군, 장성군, 나주시, 완도군, 보성군, 강진군, 구례군 등), 전북(남원시, 부안군,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 장수군, 진안군 등), 경북(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영양군, 군위군, 봉화군, 청도군, 예천군, 상주시, 영덕군 등), 경남(산청군, 남해군, 합천군, 의령군, 하동군, 거창군, 의령군, 창녕군, 밀양시 등), 충남(홍성군, 태안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논산시, 공주시 등) 지역 등이 인접하여 위치해 있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가 좌측 하단인 제3사분면의 공간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와 상관관계 보이는 지역으로 부산, 인천, 경기, 경남 등의 산업단지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부산 강서구, 경북(구미시, 칠곡군) 충남 아산시, 대구 달성군, 울산(동구, 울주군), 경남 양산시, 충북 진천군 등이 매우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경기(오산시, 광주시, 김포시, 양주시, 평택시, 파주시, 화성시 등)와 인천(서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등), 경북(포항시, 경산시 등)지역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직업 가운데 서비스 종사자와의 거리가 더 근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경우 광역시도별 CBD지역과 CBD와 인접한 지역이 위치하고 있고, '관리자'의 경우 점차 서울 내 행정구와의 연관성이 높은 방향으로 위치가 강화되었다. '사무, 판매 종사자'와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와 전북(전주시 등), 충남(계룡시 등)의 일부지역이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강원(속초시, 춘천시, 강릉시, 태백시 등)지역과 제주도 등 일부지역이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제4사분면을 중심으로 일부 도서지역과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에서 높은 분포를 보이는 충남, 경남, 경북, 강원지역 가운데 대도시지역과 인접해 있는 일부 시군 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직업구조의 변화로 공간재배치 과정 중에 있는 지역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직업과의 관계에서 뚜렷한 그룹으로 묶이지 않았던 제4사분면의 일부지역의 경우 별도의 입지계

수 분석을 통해 지역별 직업집중도의 변화를 파악해 본 결과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에서 다른 직업군의 상대적 집중도가 높아지는 지역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⁰⁾.

한편, 대응일치분석결과에서, 차원 1의 비정칙값을 통해 본 직업과의 대응관계는 산업, 성/학력수준, 지역, 성/연령 속성 순으로 연관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직업의 지역분포를 통해 직업의 공간구조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정리하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경우 광역시도별 CBD지역과 CBD인접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관리자'는 점차 서울지역과의 연관성이 높은 방향으로 위치가 강화되었고, '사무, 판매 종사자'와 연관성을 보이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와 전북, 충남의 일부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경기지역과 강원, 제주 지역의 일부 시군이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가 공간상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이와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역으로 경남, 부산, 경기, 인천 등의 산업단지지역이 인접 분포를 나타냈다. 그 외, 직업구조의 변화로 공간재배치 과정 중에 있는 지역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우세했던 충남, 경남, 경북, 강원지역에서 대도시지역과 인접한 일부 시군지역과 도서지역이 하나의 유형으로 공간상에 위치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1970년대 이후 급진적인 산업화과정과 IMF외환위기, 금융위기, 탈산업화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등 사회경제적 격동기를 거쳐 온 한국의 직업구조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였다.

산업화과정기인 1980년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로의 취업인구 분포가 두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후 첨단산업의 발달 등 지식정보화로 200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취업인구의 직업 분포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노무 종사자'는 2000년대부터 지속적인 급증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직능수준을 요구하는 직업인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가장 낮은 직능수준을 요구하는 직업인 '단순노무 종사자'는 전(全)직업에서 약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직업구조의 변화와 달리 성별, 연령별, 학력수준별 등 인구통계학적 구조에서 살펴보면 다소 상이한 직업별 취업인구 분포를 관측할 수 있다. 직업분포의 성별구조에서 남녀의 직업선호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연령별 취업인구의 직업구조에서 주요 경제활동연령층과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관측하였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은 취업인구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직업구조에서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로의 취업분포를 나타내 농촌의 고령화와 직능수준이 낮아 취업 장벽이 낮은 직업으로의 진입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업분포의 학력구조는 고졸이하의 학력계층에서 큰 폭의 변화를 나타냈다. 고졸 학력자의 경우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이 직업군에서도 대졸 이상 학력의 취업인구 증가폭이 더 커지고 있어 고학력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직업 내 산업 구성과 산업 내 직업 구성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직업별 산업구성에서 '광공업'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감소하고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증가하는 양상이 관측되었다. 그러나 산업 내 직업구조로 살펴보면 농·림·어업과 광공업, 건설업의 1,2차 산업 내에서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로 산업 내 직업구조의 고도화가 관측되었으며,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개인 및 공공 서비스업 분야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의 구성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고, 생산자 서비스업 분야는 '사무 종사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결국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서비스 산업의 유형에 따른 직종별 변화추세는 상이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직업구조의 변화요인으로 직업의 성원(成員)인 취업인구의 인구통계학적 속성과 취업인구의 산업·지역적 속성과의 관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직업 제 측면의 속성과 직업과의 관계 변화에 있어 상관관계에 대한 변화 정도를 동시배치를 통해 시각적으로 비교하여 볼 수 있는 대응일치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전(全)연령층의 여성 취업자의 직업구조에서 매우 두드러진 변화를 관측하였고 젊은 연령층의 생산관련 직종으로의 취업기피현상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각 직업을 활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직능수준보다 높은 학력수준의 남녀 취업인구가 분포하는 대응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업과 산업의 대응관계는 농·림·어업과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도매 및 소매업, 금융보험업과 '판매 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과 나머지 직업군은 모두 인접하여 위치하며 연관관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직업의 지역분포를 통해 직업의 공간구조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파악해 본 결과,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가 연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가 서로 연관성을 띠며 인접하였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단독으로 위치하고 있다. 그 외, 직업구조의 변화로 공간재배치 과정 중에 있는 지역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우세했던 충남, 경남, 경북, 강원지역에서 대도시지역과 인접한 일부 시군과 도서지역이 하나의 유형으로 공간상에 위치하였다.

대응분석 결과 산출된 차원 1의 비정칙값을 통해 직업의 분포를 설명하는 사회-인구통계적 속성 가운데 가장 높은 상관성을 나타낸 변수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산업·직업의 구성 분포에서도 확인했듯이, 직업구조의 변화에 있어 주요 동인은 산업구성의 변화이며, 산업구성의 변화는 동일산업 내 직업구성의 이질성을 통해 설명이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다.

사회구조 및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변화하는 직업구조를 분석하는 작업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직업역량과 기술수준을 갖춘 인적자원의 확보, 육성과 개발이라는 측면과도 직결된다. 직업구조에 대한 분석결과는 결국 어느 지역에 어떠한 고용 기회가 얼마나 있는지 나타내는 정보가 되며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내 또는 지역간 인구이동의 방향을 예측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직업단위의 취업자로 구성된 인력구조의 관점에서 직업의 분포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초연구의 성격과 의미를 둘 수 있으며, 직업연구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정책의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분석과 달리 직업분석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가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구득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나마 가용할 수 있는 공식자료에서도 지역단위자료의 경우 제공범위도 작고 기간별 제공되는 구축자료의 체계와 연결성도 떨어져 시계열 분석에 애로가 있었다. 좀 더 활용 가능한 체계적인 자료가 광범위하게 제공된다면 보다 면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

- 1) 직업관련 연구의 추출작업은 연구제목과 내용에 “직업”이 들어간 모든 검색자료를 추출한 후 다시 연구자가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검색 시 제목에 직업이란 키워드가 없어도 직업관련 연구내용일 경우 집계에 포함하였다. 직업성 질환, 직업관련 법, 제도 등과 관련되는 전문성이 매우 짙은 연구는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자료의 출간 연도는 2005~2015년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였고 자료범위는 학술논문, 박사학위논문, 연구기관의 보고서로 한정하였다. 검색엔진은 국회도서관 전자DB, google scholar, RISS, KISS를 이용하였다. 추출 후 분류작업은 이영대(1999)와 한상근(2005)의 분류기준을 토대로 하였다.
- 2) 고용정보원 <미래의 직업세계>, <한국직업사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의 직업지표 연구> 등 주기적으로 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 3) 실제로 직업분류 시, 관리자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직

- 능수준 상 같은 범주로 묶여 집계, 분석되는 경우가 있으나, 사무 종사자는 별도로 분류하는 게 일반적이다.
- 4)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대분류는 직능수준에 따라 총 9개의 분류로 1.관리자,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 9.단순노무 종사자로 구분되어 있다(제6차 개정).
 - 5)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에서 1980년, 1985년, 1990년은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제3차 개정의 분류체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1995년은 제4차 개정, 2000년, 2005년은 제5차 개정, 2010년, 2015년은 제6차 개정의 분류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개정된 직업분류로 인해 과거년도 기준과 연계 비교를 위하여 자료를 재구성하여 총 6개의 직업대분류 범주로 통합 재편성하였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제3차 개정을 기준으로 대분류 항목인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를 통합하여 재구성하고 제4차 개정을 기준으로 ‘서비스 종사자’와 ‘판매 종사자’도 통합하여 재구성하였다. 또한, 각 개정안마다 대분류 체계 항목의 의미는 유사하나, 항목 명칭에는 다소 차이가 있어 편의상 가장 최근 개정안인 제6차 직업분류 개정안의 항목명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직업대분류명은 ‘1.관리자’,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사무 종사자’, ‘4.서비스 종사자’, ‘5.판매 종사자’, ‘6.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단순노무 종사자’이다. 군인, 분류불능(기타, 미상)은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 6)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직능 수준은 제2직능 수준으로 이는 중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업훈련을 필요로 한다.
 - 7) 산업·직업별 구성분포도 시계열 추이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의 지면분량 상 가장 최근시점인 2014년 구성분포만 삽입하였다.
 - 8) 최적화 척도법(optimal scaling), 쌍대척도법(dual scaling), 동질성 분석(homogeneity analysis) 등 같은 기법을 일컫는 명칭이다(Tenenhaus & Young, 1985).
 - 9) 등간척도로 재구성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연령대 변수는 다시 명목형 변수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취하였다. 그리고 지역(시군구)단위의 자료는 구축 가능년도의 한계로 부득이하게 2000년과 2010년의 자료가 분석에 투입되었다.
 - 10) 예를 들어, 2000년 제4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던 충북 청원군의 경우 2010년에는 제3사분면의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와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는데 LQ지수 값을 통해 직업구조의 변화를 보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경우 3.01(‘00년)→2.06(‘10년),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서 0.61(‘00년)→0.83(‘10년),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서 1.34(‘00년)→1.87(‘10년)의 상대적 집중도의 변화를 나타냈다.

참고문헌

- 강신택, 1976, “행정조직상의 계층구조와 전문직,” 행정논총, 14(2), 2094-2099.
- 강영걸, 2012, “공공 민간 사회복지사 이직의도 비교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1), 86-100.
- 권기욱 · 조주은, 2007, “유비쿼터스 사회의 직업구조에 대한 이론적 전망,”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23, 5-38.
- 권상철 2000, “한국의 인구이동과 대도시의 역할: 지리적 이동과 사회적 이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3(1), 57-68.
- 구교준 · 조광래, 2011, “창의경제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경제 분석의 관점에서,” 한국행정학보, 45(2), 269-289.
- 김기환, 1993,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취업구조의 변화,” 경제와사회, 17, 263-285.
- 김동현 · 최예슬 · 임엽, 2013, “일반화위계선형모형을 이용한 지역 간 노동이동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28(3), 3-24.
- 김승남, 2014, “재택근무는 주거입지 선택에 있어 고용입지에 대한 중속성을 약화시키는가? -수도권의 정보화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 지역연구, 31(1), 35-62.
- 김원동, 1992, “정보화사회의 직업과 노동의 성격변화,” 한국사회학회 기타간행물, 40-63.
- 김재익 · 전명진, 1996, “직업중심지별 직주분리패턴의 비교분석,” 지역연구, 12(1), 77-91.
- 김지섭, 1994, “화이트칼라의 내적 분화와 계층론적 함의,” 한국사회학, 28, 71-96.
- 김헌재, 1989, “도시성장에 따른 직업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장안지리, 4(8), 1-52.
- 김형태, 2009, “직주균형이 통근통행에 미치는 영향 (1990-2005):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44(7), 171-184.
- 노시학, 2000, “서울시 여성 취업자의 취업형태와 통근통행패턴간의 연관성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3(1), 43-56.
- 노시학 · 손종아, 1993, “성에 따른 직주분리와 통근통행패턴의 차이 -서울의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28(3), 227-246.
- 문남철, 2010, “대학 졸업자의 지역간 취업이동과 지역발전,” 국토지리학회지, 44(4), 581-593.
- 문남철, 2011, “구직과 구인, 취업참여의 지역간 차이,”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4(2), 176-191.
- 문남철, 2013, “월경취업 노동이동과 접경지역 노동시장 조절 -유럽연합 Grande Region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2), 167-181.
- 박경숙, 2002, “노동시장의 고령화와 업종 · 직종에서의 연령분리현상,” 노동정책연구, 2(2), 69-81.
- 박삼욱 · 진중헌 · 구양미(2008), “서울의 인구고령화와 고령자 고용의 지역적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43(3), 337-357.
- 박추환 · 김명수, 2006, “지역 노동력 이동의 결정요인 연구,” 지역연구, 22(2), 97-113.
- 방하남 · 김기현 · 신인철, 2011, “한국의 직업구조 변화와 직업이동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서문기, 2004, “정보사회와 골드칼라: IT 인적자원의 가능성과 함의,” 정보통신정책연구, 11(4), 33-55.
- 서종국, 1998, “도시공간구조변화와 통행행태의 변화관계에 관한 연구 -수도권의 산업 및 직업별 인구분포와 통근행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33(5), 167-182.
- 손승호, 2015, “서울대도시권 통근통행의 변화와 직-주의 공간적 분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8(1), 97-110.
- 신광영 · 이성균, 1999, “IMF 경제위기 하에서의 계급과 실업,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57-72.
- 심규범, 2009, “건설업의 일자리 구조 변화와 정책 방향,” 노동리뷰 4월호, 42-59.
- 심윤종 · 양종희 · 김정탁, 1987, 사무직 근로자의 직업 및 직장생활에 관한 연구 -화이트 칼라의 성격규명을 위하여-, 사회과학, 27(1), 187-274.
- 안영진, 2001, “전남대학교 졸업생의 취업구조와 지역발전,” 한국경제지리학회지, 4(2), 37-56.
- 안영진, 2013, “대학 졸업생의 취업구조 및 취업이동 특성과 지역발전: 전남대학을 사례로,” 국토지리학회지, 47(3), 337-350.
- 양정미 · 정기환 · 최종률, 2011, “관광계열 학생들의 현장실습 만족이 취업결정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지리학회지, 21(4), 187-203.
- 유경희, 1985, “데이터베이스 산업 분야의 신직종, 한국통신회학회 심포지움, 111-118.
- 유규창 · 서용구 · 신도철 · 안주엽 · 문주희 · 한상근, 2005,

-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직업구조 특성과 인적자원 개발 전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기석, 1990, “후기산업사회의 고용전환과 도시구조,” 지역연구, 6(2), 107-121.
- 이원호, 2002,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지역노동시장의 임금결정과정과 소득격차,” 한국경제지리학회지, 5(2), 187-207.
- 이원호, 2016, “장소기반 정책과 도시빈곤,” 대한지리학회지, 51(1), 41-56.
- 이정현 · 이희연, 2015, “광역경제권별 구인, 구직의 지역 간 미스매치 특성 비교,” 지역연구, 31(2), 79-100.
- 이중희, 2005, “중국에서의 중간계층의 성장과 구조변화,” 국제지역연구, 9(3), 221-250.
- 이태희 · 김려은, 2011, “지리적 격리형 강원랜드 카지노 종사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소재 카지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지리학회지, 21(3), 75-85.
- 이현욱, 2013, “청년층 여성의 취업이동과 불안정 고용에 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2), 105-118.
- 이현재, 2014, “우리나라의 권역별 기대소득 격차와 노동 인구 이동에 관한 실증분석: 『5+2』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30(1), 63-80.
- 이희연, 1993, “우리나라 정보관련직종의 공간적 분포와 지역적 격차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9(1), 3-24.
- 이현영 · 임엽 · 최예술 · 김민영, 2014 “수도권 임금 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 직종 숙련특성에 따른 직종 간 임금격차와 직종 내 성별 임금격차,” 지역연구, 30(4), 3-20.
- 임창규 · 유인진, 2011, “세대 간 직업계층의 계승과 직업 지속성 간의 관계,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4(2), 127-151.
- 장창원 · 이상준, 1999, “지식·정보산업화에 따른 직종변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홍근, 2007, “직업구조와 직업선택의 변화,” 본질과 현상, 7, 71-84.
- 정근식, 1984, “화이트칼라의 성격규정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학연구, 7, 83-102.
- 정연주, 2001, “외국인 노동자 취업의 공간적 전개 과정 -경인지역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4(1), 27-42.
- 정이환, 1992, “후기 산업 사회와 직업 구성의 변화,” 사회와 역사, 38, 89-114.
- 조가원, 2014, “고급 과학기술인력 직업구조의 전환 - 이공계 박사인력의 세대별 분석,” 과학기술정책, 24(3/4), 16-28.
- 조동기 · 조희경, 2002, “지식정보화에 따른 직업구조의 변화와 특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조현미, 2007, “재일한인 중소규모 자영업자의 직업과 민족 간의 유대관계,” 대한지리학회지, 42(4), 601-615.
- 진미석 · 노일경 · 손유미, 2003, “직업지도에서 나타난 여성직업구조의 특성,” 진로교육연구, 16(1), 17-36.
- 차중천, 1998, “직업위세와 계층구조,” 한국사회학, 32, 737-756.
- 최은영 · 홍장표, 2014, “세대 간 직업계층의 이동성,” 지역사회연구, 22(1), 51-70.
- 하성규 · 김재익, 1992, “주거지와 직장의 불일치 현상에 관한 연구-도시권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27(1), 51-71.
- 한상근, 2005, “직업연구의 현황과 과제,” 진로교육연구, 18(1), 168-186.
- 한주성, 1998, “재중·재미·재일동포의 거주지 분포와 직업구성의 공간적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4(2), 219-234.
- 한주연, 1989, “서울시의 직업별 거주지 분리현상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21, 32-70.
- 홍두승 · 김병조 · 조동기, 1999, 한국의 직업구조,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총서, 13, 서울대학교출판부.
- Blau, P. M. and O. D. Duncan.,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Wiley, New York.
- Bibb, Robert and William H. Form., 1977, The effects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sex stratification on wages in bluecollar markets, *Social Forces*, 55, 974-996.
- Chan, T. W. and J. H. Goldthorpe., 2004, Is There a Status Order in Contemporary British Society? Evidence from the Occupational Structure of Friendship,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0(5), 383-401.
- Crompton, R., 1993, *Class and Stratification*, Polity Press, Cambridge.
- Eric, G. and D. Pager., 2001, The Structure of Disadvantage: Individual and Occupational Determinants of the Black-White Wage Gap, *American Sociologi-*

- cal Review*, 66(4), 542-567.
- Feser, E., 2002, What regions do rather than make: A proposed set of knowledge-based occupation clusters, *Urban Studies*, November.
- Feathermann, D. L., 1981, Stratification and Social Mobility: Two Cumulative Social Science, *The State of Sociology*, 79-100, edited by J. F. short, Sage, Beverly Hills.
- Freedman, M., 2007, *Encore: Finding Work that Matters in the Second Half of Life*, 김경숙 옮김(2009) 양코르: '오래 일하며 사느' 희망의 인생설계, 프린티어.
- Freeman, P. and W. Aspray., 1999, The Supply of Information Technology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Computing Research Association.
- Ganzeboom, H. B., Treiman, D. J. and W. C. Ultee., 1991, Comparative Intergenerational Stratification Research: Three Generations and Beyond, *Annual Review of Sociology*, 17, 277-302.
- Hirsch, B. T., Macpherson, D. A. and M. A. Hardy., 2000, Occupational Age Structure and Access for Older Worker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3(3), 401-418.
- Hodson, R., and T. A. Sullivan., 1996, The Social Organization of Work, Belmont, Wadsworth, CA.
- Hong Joon, Yoo., Tae In Chung. and Worlwha Kim., 2014, *A Comparative Study of Industry, Occupational Structure and Occupational Prestige Rankings in Korea, China and Japan*(한, 중, 일 3개국의 산업, 직업구조 및 직업위세 순위의 비교 연구), 국제지역연구, 18(1), 83-103.
- Kalleberg, A. L., 1988, Comparative Perspectives on Work Structures and Inequalit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4, 203-225.
- King, M., 1992, Occupational Segregation by Race and Sex, 1940-88. *Monthly Labor Review*, 115, 30-37.
- Markusen, A., 2004, Targeting Occupations in Regional and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0(3), 253-268.
- Massey, D., 1984, *Spatial Divisions of Labour, Social Structures and the Geography of Production*, London: Macmillian.
- Moretti, E., 2012, *The New Geography of Jobs*, 송철복 옮김 (2014), 직업의 지리학, 김영사.
- Murphy, K. M. and W. Finis., 1994, *Industrial Change and the Rising Importance of Skill, Uneven Tides: Rising Inequality in America*, edited by S. Danziger and P. Gottschalk,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01-132.
- Parkin, F., 1971, *Class Inequality and Political Order*, Paradin, London.
- Reeve, V., 1977, The Occupational Composition of American Classes: Results from Cluster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4), 783-807.
- Sewell, William H. and Robert M. Hauser., 1975, *Education, Occupation, and Earnings: Achievement in the Early Career*, Academic Press, New York.
- Tenenhaus, M. and F. W. Young., 1985, An Analysis and Synthesis of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Optimal Scaling, Dual Scaling, Homogeneity Analysis, and Other Methods for Quantizing Categorical Multivariate Data, *Psychometrika*, 50(1), 91-119.
- Thompson, W. and P. Thompson, 1985, From industries to occupations: Rethinking local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Commentary*, 9(3), 12-18.
- Zawacki, R. A., 1999, Gold-collar Standard, *Information Week*, 27 September, 320-323.
- 교신: 이금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4다길 2,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이메일: kslee@sungshin.ac.kr)
- Correspondence: Keumsook Lee, 2 Bomun-ro 34da-gil, Seongsbuk-gu, Seoul, Korea (e-mail: kslee@sungshin.ac.kr)

최초투고일 2016. 4. 5
수정일 2016. 5. 3
최종접수일 2016. 5. 29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지역발전을 위한 창조적 장소만들기

이병민* · 남기범**

Creative Place-making for Regional Development in the Era of Glocalization

Byung Min Lee* · Kee Bom Nahm**

요약 : 세계의 경제가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이라는 조건 속에서 변화하면서,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고, 도시 및 지역의 공간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으며, 관련하여 장소의 역할에 대해 장소마케팅이나 장소브랜딩 등을 통해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결과로서의 마케팅전략보다는 과정과 참여를 중요시하는 광의적 의미의 종합적인 '장소만들기'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본 논문은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발전이라는 부분에 집중하여 창조적 장소만들기의 전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재조명하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콘텐츠산업을 통한 창조적 장소만들기의 한국과 일본사례의 검증을 통하여,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 장소마케팅과 장소브랜딩, 장소만들기의 융합모델을 제시하고, 가치사슬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투입과 과정, 산출 등 각 과정의 특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문화를 기반으로 장소를 해석하고, 지역공동체에서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목표를 위해 어떻게 선순환구조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요어 : 글로벌라이제이션, 장소만들기, 장소마케팅, 장소브랜딩, 장소감

Abstract : Global society is shifting and now evolving towards glocalization, meaning the increasing role of region and multi scalar interactions between region and global social world. In this glocalization era, there has been mushrooming literature and much discussions on the impacts of place-branding and place-marketing on regional development both in academia and practical researches. The inclusive and participatory creative place-making process, however, is more quintessential than the resultant place marketing strategy. This paper tries to reassess the creative place-making based on culture-led regional development perspectives. Specifically it compares Korea and Japan's strategies and suggests a hybrid model of place-making-branding-marketing, utilizing cultural content industries. It then stresses the importance of building a virtuous circle of sustainable regional cultural industrial ecosystem including culture-based interpretation of places and improvement of community quality of life.

Key Words : glocalization, place-making, place-marketing, place-branding, sense of place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4S1A3A2044638).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Digital Culture and Contents, Konkuk University), yurifin@konkuk.ac.kr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Sociology, The University of Seoul), nahm@uos.ac.kr

1. 들어가는 글

지난 20세기를 거쳐 산업시대의 발전을 이끌었던 핵심적인 생산요소는 노동과 자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후 20세기 말 급속히 진행된 정보통신기술의 도입과 확산은 지식경제로 산업패러다임을 변화시켰고, 지식이 사회적 부의 원천으로 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뒤이은 21세기는 지식경제가 진화하여 소위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이 시작되었고, 세계화와 함께 지식에 창의성과 상상력을 융합하는 인간의 창조성이 지역과 사회의 핵심으로 부상하였다.

이렇듯, 창의력이 중요시되면서 지역의 경쟁력에도 변화가 생기고, 세계의 경제가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이라는 조건 속에서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음에 따라,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고, 도시 및 지역의 공간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진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자본의 전지구적 이동성과 세계화의 확대에 따라 장소에 대한 중요성이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는 시-공간 압축을 통해 지역을 균등하게 만들려는 공간의 동질화로서의 '탈영역화(deterritorialization)'와 다른 지역과 차별적인 장소특성을 구축하려는 장소의 '영역화(territorialization)'라는 두 개의 힘이 동시에 빚어내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Brenner, 1999; 김형국, 2002). 이와 같이, 경제 중심의 지구적 통합이 지역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있으나, 경쟁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지역의 생존과 활성화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지역의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음에도 일각에서는 이분법적 논리를 따라 여전히 20세기 글로벌 시대의 표준화에 대한 논리 혹은 지역의 국지적인 특성으로서의 로컬리티만 강조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읽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비추어본다면, 지구적 경쟁심화에 따른 장소생존 수단의 강구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맥락에서 전략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지역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하여 또는 지역발전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기 위해 '장소만들기'라고 하는 개념을 유의미하게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선행연구 등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지리학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과 관련하여 소위 장소에 대한 매력을 어떻게 발산시킬 것인가 하는 '장소마케팅'에 치중해왔지만, 효율적인 성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 1980년대 이후 서구사회 중심의 도시재생 기반 장소마케팅 전략은 많은 논의와 비판을 불러왔으며,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지역발전에 있어서의 문제는 누가 이러한 문제를 다시 디자인하고 이미지를 창출하고, 문화적으로 포장하느냐 하는 것인데, 특히 지역의 주체들이 접하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 도시재생의 문제 등과 관련하여 지역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도외시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때, 장소는 단순히 공간적인 대상으로서뿐 아니라, 이미지를 창출하는 근원이자, 마케팅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주체들이 장소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하는 '참여'와 '활용'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장소의 특성이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한다. 관련하여, Knox(2005)는 세계화시대에 장소만들기를 통한 장소감(sense of place) 자체가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조명래(2011)의 경우는 문화적 도시재생의 결과가 도시의 경쟁력이자 브랜드로 남기 위해서는 창조적 상상력이 바탕이 되어 도시의 일상성을 바탕으로 한 생활관계가 문화적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장소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강조하는 장소브랜딩이나 도시설계의 입장에서 공공공간의 설계에 집중하는 협의적 의미의 장소만들기도 많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들이 부분적인 전략으로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지 못한 한계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결과로서의 마케팅전략보다는 과정과 참여를 중요시하는 광의적 의미의 종합적인 '장소만들기'를 통해서, 장소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집중하려고 하며, 구체적으로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례를 통한 창조적 장소만

들기의 전략이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 보려고 한다. 나아가 지역의 공동체와 삶의 질이 투영 되는 장소성의 특징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대한 관찰을 통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장소만들기’란 무엇인가를 규명하려고 하며, 특히, 문화적인 특징을 고려하고, 지역발전의 연성적 특징을 반영하여, 실제 지역에서 장소만들기를 어떻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자 한다.

2. 장소마케팅, 장소브랜딩, 그리고 장소만들기

최근 문화와 지역의 관계를 살펴보면, 문화의 혼종성과 상호 연결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많다. 현대의 지방성과 토착성이 문화적 조우를 통해 보완적, 상호 침투적으로 형성되며, 세계의 지역화(global localization)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로컬 단위의 문화가 글로벌 스케일과 조응하며, 그 형태를 새로이 하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수정·신지연, 2015).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지역을 주변부로 규정해 온 의식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많은 지역들은 역사와 문화를 담은 장소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체제의 변화로 도시 간 경쟁 심화에 따른 이러한 분위기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장소가 살아남기 위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며, 지역의 정체성 확인을 통한 전략이 단계별로 구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Relph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소감(sense of place)은 인간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겪게 되는 지역에 관한 다양한 경험, 감정과 사유를 통해 생겨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ph, 1976). 이러한 특성은 지역발전의 시발점이 되며, 장소와 관련된 주

체들이 장소성에 근간하여, 체험을 통해 애착을 느끼게 되고, 한 장소에 고유하면서 동시에 다른 장소와는 차별적인 특성으로서의 장소성(placeness)을 강조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백선훈, 2004, 890).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장소의 개념이 이전의 물리적, 환경적 요소로서의 경성요소 이외에 중심부의 특징을 고려하여 상권 등의 유무를 다루는 상대적인 요소로서의 연성적 요소가 고려되었으나, 최근에는 생활양식과 역사, 문화에 대한 인적·문화적인 요소 이외에 장소감과 장소애착, 장소정체성, 장소이미지 등의 정서적·상징적 요소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이다(어정연·여홍구, 2010). 이러한 요소들은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이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장소자산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으며, 보다 인간이 장소에 친숙하게 다가가는 이미지와 가치의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권고, 실행 등의 결과로 ‘장소마케팅’이 전략적으로 실시되어왔다. 그러나 많은 장소마케팅 관련 연구들이 경제적인 영향력만을 고려하여 상품이나 축제 등에 집중하고, 구체적인 과정과 모델 및 시사점을 뽑아내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는 장소에 대한 과정이나, 거주민들과의 상호작용, 문화적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장소를 상품으로서 마케팅 대상으로만 간주한 까닭이 크다.

장소마케팅을 위한 장소들 간의 지나친 경쟁에 집중하여 성장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지역주민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이무용, 2006). ‘마케팅’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단일 목적으로 결집되기에는 국가, 지자체, 지역의 유관기관 등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다양한 조직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특수한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이다(Robert & Frank, 2009). 중국에 이러한 특성은 장소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장소를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영역으로 만들면서 장소의 영역화를 가속화시키는 특징을 낳게 되기

도 한다(박배균, 2010). Harvey(1989)의 논의를 따르면, 장소마케팅은 도시 및 지역의 지배엘리트를 위한 전략으로 그로 인한 성장과 발전이 선택적인 이익으로 부분적인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되며,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의 실체를 가리게 된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장소마케팅을 하나의 정책적 활용 도구로 인식하지 말고, 장기적이고 포괄적이면서 과정을 중요시하는 도시발전 전략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장소마케팅은 장소를 상품화해 지역의 경쟁우위를 도모하는 전략이며, 이때, 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있는 곳으로 '장소를 형성하는 일(place making)'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소에서 무엇을 생산하는 것보다 장소 자체의 형성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장소의 매력인 '장소자산(place assets)'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소성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장소자산을 고려하지 않은 장소마케팅의 경우 왜곡된 장소의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가 있다. 상품으로서의 좋은 이미지만 상징적으로 조작됨으로써, 지역발전의 지속가능한 원천으로서의 문화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무용, 2005).

관련하여 김현호(2003)는 장소마케팅의 전략 유형에 따라 각각의 전략 유형에 주로 필요한 장소자산의 내용을 표 1과 같이 3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는데, 이를 통해 장소마케팅의 새로운 방향으로서의 장소만들기에 대한 단초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적 장소마케팅의 경우에는 당연히, 문화자산이 가장 중요한 반면, 생태적 장소마케팅의 경우는 물리적 자산이 중요한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겠으며, 산업적 장소마케

팅의 경우에는 모든 자산이 필요하거나, 중요성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자산은 문화 배태적 자산과 문화 자본적 자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생활 방식이나 신뢰, 인간 관계 등은 전자의 자산에 속하는 반면, 예술 등은 후자에 속한다. 제도·정치자산은 제도적 두터움 혹은 제도적 역량을 지칭하며 관계 자산을 포함한다. 물리적 자산은 발전 인자의 유치, 성장에 필요한 물질 인프라나 건조 환경 등을 의미한다. 이때, 문화자산은 외부적으로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며, 내부적으로는 도시 구성원들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문화자산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경쟁력을 키울 것인가 고민해 볼 수 있겠다(정수희·이병민, 2016).

또한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장소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명소화전략을 꾀한다는 뜻이기도 한데, 이는 장소브랜딩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고민과 관련되어 있다. 몇몇 연구에서는 시대의 발전에 따라 장소마케팅이 장소브랜딩으로 서서히 변화해가는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장소마케팅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Kavaratzis(2004)는 '장소브랜딩(place branding)'의 개념을 가져왔다. Kavaratzis는 장소브랜딩의 핵심을 도시의 외형적 측면(external city)과 내적 측면(internal city) 간의 상호작용으로 보았는데, 장소브랜딩은 도시이미지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도시의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리하며 보다 효과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소브랜딩은 경제 구조화보다는 경제·사회·문화 등 지역

표 1. 장소자산의 분류

장소자산의 내용	하위 개념	예시
문화 자산	문화 배태적 자산	생활 방식, 신뢰, 인간관계
	문화 자본적 자산	문화, 예술, 콘텐츠
제도·정치 자산	관계 자산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자발적 협력과 도움, 제도적 역량
물리적 자산	-	발전인자의 유치, 성장에 필요한 물질 인프라, 건조환경

출처: 김현호, 2003, 88에서 인용 정리; 장신영, 2008에서 재인용

의 현안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종합적 지역재생 전략으로서, 경제 발전과 함께 사회적 목표의 달성(예컨대 지역의 자긍심 부각, 공동체 의식 함양)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장소 마케팅과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장소브랜딩은 사람들의 인식과 이미지에 중요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하여 장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Musterd & Kovács, 2013). 이런 의미에서 발전적인 장소마케팅 전략은 장소성(place identity) 기획 전략이어야 할 것이며, 장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며, 뒤이어 장소마케팅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브랜딩하는 구체적인 전략들이 되어야 한다(이무용, 2006).

이러한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장소브랜딩 전략은 융합적 의미로서의 장소만들기 전략의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장소만들기 전략을 통해서 장소의 브랜드의 본질을 찾고, '장소감'이 어떻게 형성 되어왔으며, 발전해왔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훈(2008)의 정리에 따르면, 장소브랜딩은 도시정체성의 개발과 창출, 도시브랜드 리더십의 구축, 도시브랜드 아키텍처의 구축, 도시브랜드 자산 평가 및 피드백 모델 구축 등 다양한 영역과 관련이 되며, 장소브랜딩 연구를 통하여 지역 정체성 분석, 지역성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의 인식과 소비행태, 지역의 문화적, 심미적 개발, 이야기 부여 등 다양한 학문과 이론의 융합 속에서 경계를 넘어서는 담론이 창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장소를 변화시키는 전략으로서 역동성이 부족하거나, 과정에 대한 부분이 좀더 강조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좀더 나아가 장소만들기의 측면을 보다 깊게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실, 장소만들기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1970년대부터 건축학자들, 도시계획자, 도시디자이너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본격화되어, 이후 공공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계획자들이 '장소만들기'란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빈도가 높아졌다. 관련하여 제인 제이콥스와 윌리엄 H. 와이트 같은 전문가들은 장소만들기를 통해 사람들

을 위한 도시 디자인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다. 자동차와 쇼핑센터뿐 아니라, 공공장소와 공간에서 사회적, 문화적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사회를 활기차게 만들 수 있을가에 집중하면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때의 주요 원칙들은 (1) 일관성 있는 비전을 통한 다양한 의견들의 통합 (2) 합의된 비전을 실행가능한 사용 계획 및 프로그램으로 전환 (3) 계획의 지속 가능한 구현보장 등이다¹⁾.

이러한 배경을 통해 보자면 본래 장소만들기의 의미는 '장소로 생성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지닌 잠재력을 찾아 그 요체들을 조합하거나 혹은 그 잠재력을 발휘시키는 일련의 정식적·물질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이석환, 1997, 218). 그래서, 장소만들기의 역할은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해 긍정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미래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그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최강림, 2008, 47-48). 정리하자면, '사람들이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쉬고 싶고, 배우고 싶은 질적 공간을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으며(Wyckoff, 2014),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많은 지역발전 전략의 대안으로서의 장소만들기는 사회적 구성이자 액션플랜, 실행계획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장소만들기는 도시공간을 그 도시에 살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되돌려주어, 친숙하고 자주 찾는 공공장소로 만들어 가는 것이며, 도시정체성을 회복하고 확립할 수 있게 만드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최강림, 2007). 이를 통해 긍정적인 장소성을 창출하여, 장소의 거주자와 이용자들이 장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방지하며, 장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개발과정과 문화의 향유과정에서 실제 이용자인 주민들이 계획과 향유의 주체로서 당연히 참여해야 하며, '장소만들기'의 과정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최근 대부분의 장소만들기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참여는 공통적인 주제가 되고 있다.

장소만들기란 유의미한 존재로서의 인간과 그들이 거주하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역의 역사·문화·정체성에 대한 고려, 도시의 매력성·장소성·차별화된 도시 커뮤니티의 구현, 보행자를 우선

하는 장소, 기존 장소에 대한 고려 및 장소활성화 등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최강림, 2006).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보자면, 장소만들기를 통해서, 우리는 장소에서 찾을 수 있는 이익과 가치, 문화적 규범 및 지역 사회의 모든 요소들(이해관계, 문화, 다양한 실습과 때로는 저항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특성 등)이 때로는 충돌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의식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Hamdi, 2010).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논의가 도시설계와 관련된 용어의 변환이나 일반적인 명사화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 또한 지적할 수 있는데,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도시설계를 강조하며, 도시설계라는 용어를 단순히 장소만들기로 바꾼 의미로 통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소만들기’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조정 분야에서 소개되고 있으며, 최근 도시디자인(뉴어바니즘, 어반빌리지, 콤팩트 시티, 스마트 성장, 지속가능한 개발 등)에서 나타나는 장소만들기 관련 계획 요소들도 이러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면, 소위 신도시주의(新都市主義) 또는 뉴어바니즘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교외화에 따른 기존 도심의 쇠퇴, 무분별한 개발, 인종간·소득계층간의 공간분리, 대기·수질 오염, 농업용 토지 상실, 동식물 서식지 상실 등의 사회문제가 무분별한 도시의 확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도시개발에 대한 접근 방법의 전환과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도시재생 등에 집중하고 있다(서수정, 2007; 이범훈·김경배, 2010).²⁾

문화를 기본으로 하여 이러한 장소만들기에 대한 개념을 장소마케팅이나, 장소브랜딩과 비교를 해

볼 때, 실제 ‘만든다’는 것에 집중하면서도 창조적인 변화에 주목하는 움직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Markusen, 2015).

미국의 경우는 세계경제의 통합, 기술적 변화 등 다양한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의 대응책이 필요했는데, 다양한 파트너들이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장소를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들에 투자를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업체를 육성하고,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다양한 실험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지역 장소 부흥의 시작점으로서, 문화콘텐츠산업과 창조적인 경제활동 등을 연계함으로써, 빈 자동차 공장 과 창고, 호텔 등이 예술가들의 작업실과 주거지로 변모하는 등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창조적 장소 디자인 개발은 새로운 사회 기반 시설과 기존의 사회 기반 시설을 활성화하며, 클러스터 형성과 함께, 경제의 활력과 살기 좋은 환경, 지속 가능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그림 1). 따라서, 도시설계로서 뿐 아니라 문화연구라는 의미에서의 창조적 장소만들기는 커뮤니티를 창출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기업가정신을 권장하고, 혁신을 이끌어내며 인간애를 배양하는 잘 조성된 문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창조적 장소 만들기를 위한 도전과제들로서, 제휴 관계의 구축과 유지, 지역 사회 회의론에 대한 대응, 충분한 자금 조달, 장애물 규제 처리, 유지와 지속 가능성 확보, 이주와 고급 주택화 방지, 성과 및 평가 측정법 개발 등 도시 계획적 시각을 견지하면서도 사회적 자본에서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한 특성들도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으로 본다면, ‘창조적 장소만들기’는 도시계획적인 운동과 그 결과라기보다는 장소성에 기반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을 통해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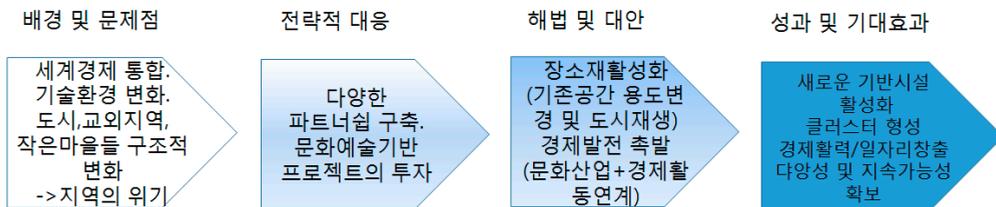


그림 1. 미국의 창조적 장소만들기 과정(예)

소의 이미지와 차별적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소 안에서,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실천의 재구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박배균, 2010). 이런 의미에서 장소만들기는 과정적인 측면과 철학적인 측면의 특성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장소와 사람들 간의 관계성이 중요한 종합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좁은 의미로서의 장소마케팅(marketing)과 장소브랜딩(identity), 부분적인 과정으로서의 장소만들기(process)가 다시 합해져서 광의적인 의미로서의 ‘장소만들기’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가 가능할 것이다.

관련하여, Wyckoff(2014)는 장소만들기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일반적인 유형뿐 아니라,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장소만들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근거로 공공과 민간영역의 활력을 북돋는 창조적 장소만들기, 점진적으로 장소의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면서,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전술적 장소만들기 등으로 나누었다. 물론, 이러한 유형의 분류가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기대효과의 창출, 자원의 활용 등에 있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프라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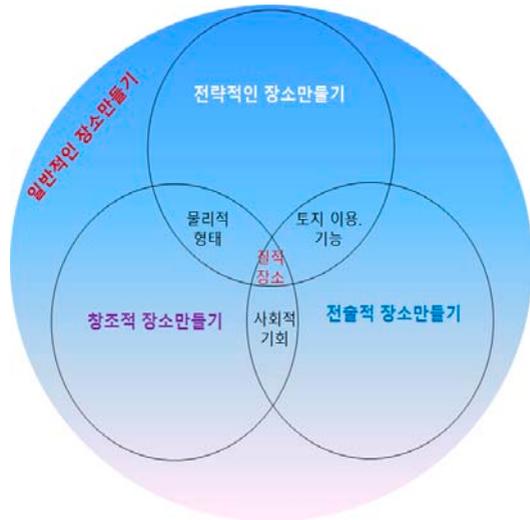


그림 2. 장소만들기의 유형분류

출처: Wyckoff, M. A., 2014, 3.

따라서, 광의적인 의미에서 장소만들기의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통합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 간의 관계, 산업의 육성, 장소의 문화적 조성, 이미지 창출, 정체성의 확보 등이 모두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이영민, 2001). 단순히 장소를 상품화하는 특성뿐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소브랜딩과 적극적인 장소만들기의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표 2. 장소마케팅, 장소브랜딩, 장소만들기의 특성 비교

구분	장소마케팅	장소브랜딩	장소만들기
핵심자본	경제적 장소자산	헤리티지/문화자산	장소자산(문화)+사회적자본/관계자산
주요 목적	경제구조화, 장소의 상품화, 경제기능의 장소적 고착화	장소정체성 확립, 이미지 제고 사회적 목표의 달성	장소와 내생적 발전, 매력적 장소자산 만들기
평가/가치	자산적 가치, 산출물	상징이미지, 가치창출, 명성, 경쟁력	과정, 참여, 상호작용
관계의 방향성	내부 ↔ 외부 마케팅의 관계성 요구분석 우선	외부 → 내부 주민의 평가 우선	내부 → 외부 주민의 합의가 중요
장소의 의미	장소의 영역화	장소의 인식, 홍보	공공공간의 활성화

출처: 박배균, 2010; 이무용, 2006; 이정훈, 2008; Markusen, A., 2010 등을 토대로 기존의 논의와 선행연구를 통해 필자가 정리

커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장소만들기는 시간과 공간 뿐 아니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이범훈·김경배, 2010).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보다 생산적인 개념의 도출과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협의적인 의미로서의 장소마케팅과 장소브랜딩, 장소만들기의 주요 특성을 비교해보았다(표 2 참조).

핵심자본의 특성을 비교해 볼 때는 장소마케팅의 경우,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경제적 장소자산에 집중하는 경향이 크지만, 장소브랜딩의 경우에는 문화자산을 근거로, 장소의 역사성, 의미창출에 보다 집중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태계적 관점에서의 장소자산은 ‘문화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의 행동을 통해 축적되어가는 자연스러운 삶의 양태와 결과물을 뜻한다고 할 수 있으며, 문화적 가치가 있는 역사와 스토리텔링, 가치로서의 이미지 등이 모두 결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이병민, 2016)

반면, 장소만들기의 경우에는 관계자산의 특성이 가장 강하면서 장소자산이 문화자산으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보다 더 큰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전략적 목적과 평가의 기준에서 다소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는데, 장소마케팅의 경우 궁극적

으로 경제의 구조화와 상품화를 통해서, 자산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출물에 집중하는 반면, 장소브랜딩은 장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상징적 이미지에 집중하며, 장소만들기의 경우는 내생적 발전과 과정, 참여 등에 보다 더 큰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이는 관계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마케팅의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와의 쌍방향 관계에 따라 요구분석이 우선시되는 반면, 장소브랜딩의 경우 지역주민 등의 고객의 평가에 우선적으로 집중하여, 누군가에 의해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된다. 반면, 장소만들기의 경우 내발적인 특성에서 발산되는 과정이 우선시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합의가 보다 더 우선시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하나의 클러스터를 지향하면서, 장소의 영역화를 피하는 장소마케팅과 홍보 전략이 우선시되는 장소브랜딩, 궁극적으로는 공동체가 개방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장소만들기까지 그 특성이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장소마케팅에서 이야기하는 장소자산으로서 장소적 고정성과 정형성을 지닌 부동산적 가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프트웨어, 문화 서비스적 특성, 과정으로서의 장소만들기 등을 이해해야만 종합적 특성으로서의 지역발전에 대한 방향성의 정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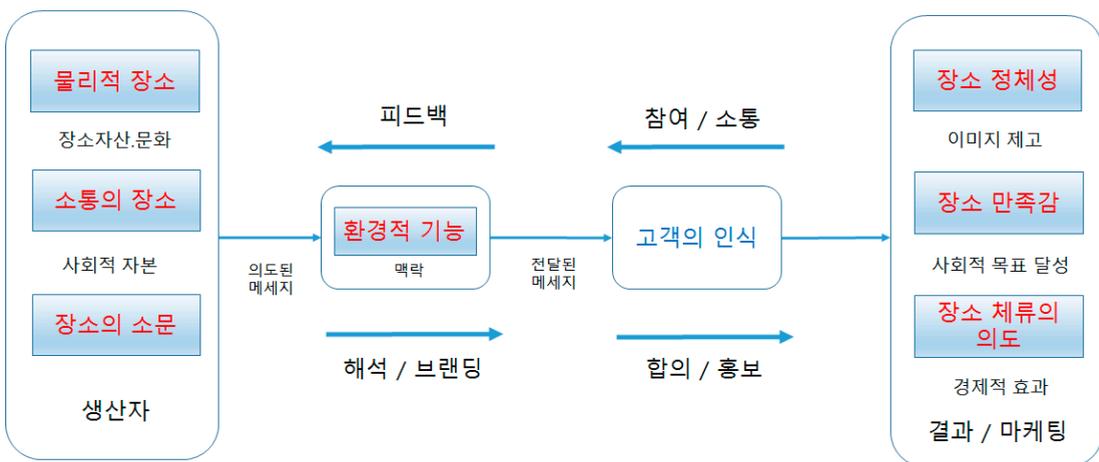


그림3. 광의적 의미에서의 장소만들기에 대한 통합적 인식 모델(안)

출처: Zenker, S., Jacobsen, B. P. (Eds.) 2015, 5를 토대로 필자가 추가 수정 제시

이를 통해 종합적 의미로서 광의적인 장소만들기의 통합적 인식관계를 지역주민 등 고객의 인식이 장소에 대한 태도와 행태로 이어지는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하는 모델로 정리가 가능하다(그림 3). 이때의 장소만들기는 생산과정에 대한 문제이며, 장소감은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장소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게 된다. 고객은 내부의 고객을 기본으로 하여 외부 고객들의 인식으로까지 확산되는 관계의 정립이 중요하다. 장소의 생산적인 특성으로 보자면,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의 물리적 장소와 소통의 장소, 장소의 입소문 등이 중요하지만, 단순한 장소마케팅의 차원이 아니라, 장소브랜딩과 장소만들기를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관계에서 메시지의 전달과 합의를 통한 장소의 정체성 확인, 만족감 등이 사회적 목표의 달성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이 선행되어야 장소마케팅을 통해 장소감은 장소의 중요한 자산과 문화가 되고, 지역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전체적으로는 피드백의 관계에서 더 좋은 장소를 만들려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원하는 성과에 다가갈 수 있다.

이렇듯 장소만들기라는 특성으로 해석해보자면, 장소에 대한 인식이 전체적인 '과정'과 연결되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지역의 발전에 한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겠다. 이때, 장소감의 형성이 생산자와 소비자, 내·외부 고객들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관계와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3. 문화콘텐츠산업을 통한 창조적 장소만들기: 사례의 적용 및 검토

장소의 특성과 관련하여 결과나 성과지향보다는 과정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면서, 최근의 실제 이루어지는 정책기조들은 환경변화에 따라 삶의 질이나 공간, 주민들과의 소통에 보다 많은 무게를 두고 있는 측면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서울시시기본계획의 기조를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개념이 반영된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2020 서울시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계획의 기조가 '성장관리, 삶의 질 향상'이었던 반면, 2030 서울시시기본계획의 경우 '시민참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놓았으며, 도시의 미래상도 이전 계획에서는 '자연과 인간, 역사와 첨단이 어우러진 세계도시 서울'로 놓은 반면, 후자의 계획에서는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로 바뀌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관련 제도의 경우에도 이전에는 지구단위계획 등에 집중한 반면, 2030 계획의 경우에는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개발의 관점이 새로운 공동체적 관점에서의 목적 달성이라는 측면으로 바뀐 점에 주목할 만하다³⁾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기반 창조적 장소만들기의 효율적인 검토와 적용을 위하여 Matter Carmona 등(2010)의 논의와 다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① 영역적 차원 ② 인식적 차원 ③ 사회적 차원 ④ 문화적 차원 ⑤ 경제적 차원 ⑥ 시간적 차원으로 특성을 구분하여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3. 창조적 장소만들기의 특성 구분에 따른 주요 키워드

구분	키워드	주요 내용
영역적 차원	배태성	공간적 네트워크, 도시의 경관, 형태, 시설, 건축물, 공공성, 글로벌라이제이션(이동성과 고정성) 등
인식적 차원	장소성	장소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정체성, 장소브랜딩, 고유한 이미지 등
사회적 차원	공동체성	과정으로서의 장소만들기, 사회적 자본, 참여 및 합의, 파트너십, 주체들간의 관계성, 활동
문화적 차원	고유성	지역발전의 목표와 비전(행복), 스토리텔링, 삶의 질
경제적 차원	기능성	장소마케팅, 장소자산의 활용성, 문화콘텐츠산업, 관광전략 등
시간적 차원	연속성	역사와 보전, 헤리티지, 공간의 지속가능성, 변화의 관리

자료: Matter Carmona 등, 2010; 이무용, 2006의 분류 특성 등을 토대로 필자가 수정 정리 제시

영역적 차원은 물리적 대상으로서의 공간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이루고, 공공 공간, 시설, 건축물들이 글로컬라이제이션 시대 탈배태성과 고정성 등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이며, 인식적 차원은 장소성의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인문학적 의미의 장소브랜딩과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다. 사회적 차원은 다양한 주체들간의 관계성 및 활동으로 나타나는 과정에 주목하며, 문화적 차원은 주민의 목표와 삶의 질,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고유한 특성 등에 집중한다. 경제적 차원은 기능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산업과 관광 등 다양한 변수를 통해 장소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며, 시간적 차원은 문화의 확장된 개념으로 역사와 보전, 지역의 헤리티지, 지속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며, 미래 지향적인 변화의 관리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표 3).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 한국과 일본에서 문화콘텐츠산업, 특히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꾀하는 2개의 사례를 통해 창조적 장소만들기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가능성을 검토해보기로 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도야마현 난토시의 ‘True tears’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이러한 관계망을 구성하고 있는 특성을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한국의 경우는 서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CGI창조센터³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일본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함의점을 최대한 찾고자 하였다.³⁵⁾

1) 일본의 사례: 도야마현 난토시 ‘True Tears’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일본 도야마현의 난토시는 2016년 3월 현재 52,945명 인구(17,760세대)의 작은 지역으로 고령화율(65세 이상) 35.67%, 3차산업 고용자수 비중이 54.6%에 이르는 작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도시로서의 지역의 일반적인 특성에 비해 도야마현 난토시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고카야마 합장취락」을 비롯하여, 전쟁에서 저 도망가는 헤이케 사람들의 애수를 노래하는 「무기야부시」나 1,400년 전부터 계속 불리고 있는 「고키

리코」 등의 「고카야마 민요」, 세계적 관화가 무나카타 시코가 살았던 「류가사이」(7년간)와 그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후쿠미쓰미술관」, 「아이제엔(愛染苑)」 등 유명한 역사·문화유산이 풍부한 문화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³⁶⁾

특히 장소브랜딩의 특성으로 보자면,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의 성지, 야구베트 생산량 일본 최고 (최고 점유율 60%), 세계적인 가극 「TOGA」, 일본 최고의 목각산지(이나미 마을)(목수 조각사 200명, 118개 사업소)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 명소로서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장소마케팅의 주요 원천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애니메이션인데, 2008년에 방송된 고등학교생의 청춘 애니메이션 『true tears』의 무대가 도야마현 난토시 조하나 지역이기 때문이다. 애니메이션 속에 사실적으로 그려진 조용한 지방 도시를 한 번 보려고 애니메이션 팬이 잇따라 방문하여 난토시에 문화콘텐츠산업의 불이 일어나고, 새로운 성지로서 주목을 모으고 있는 상황으로 명소화의 확장가능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제주도의 사례와 비교하여, 창조적 장소만들기의 특성 구분에 따라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영역적으로는 도야마현 난토시(富山県南砺市)의 조하나(城端) 지역이 애니메이션 ‘True tears’ 배경이 되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작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성이 뿌리내려져 있는 지역이지만, 대중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입소문이 나고, 다양한 매니어 층들이 방문하면서, 국제적인 명소화가 이루어지고, 고정성을 탈피하여 탈배태성의 특징도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는 실제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P.A. Works의 본사 위치가 작은 시골마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데, 특히, 관련 회사의 입지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주차장과 연결된 지역진흥시설로 지역과 외부와의 연결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간적 네트워크의 확장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두 번째, 일본의 대표적인 농·산촌으로서 옛 풍정이 남아 있는 지역이며, 내부 주민들과 외부 방문객들에게도 시골마을로 인식되고 있지만, 10여년 전 아이

노쿠라(相倉)·스가누마(菅沼)의 합장취락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면서, 장소브랜드의 명소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까지 배경으로 성공하면서, 지역의 이미지가 젊어지고, 젊은 관광객들이 증가하여, 장소성에 대한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사회적인 특징을 보자면, 전통적인 일본의 장소만들기 전통과 유사하게, 지역의 주민, 지자체, 관련 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역의 발전과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초기부터 노력했다는 점이 특이할만 하다. 실제로 난토시를 배경으로 하는 “True tears”의 제작사인 P.A. WORKS는 지역과의 연계를 실제 실천한 모범 제작사라고 할 수 있는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본사를 위치하고, 모든 활동을 지역내에서 고수하여, 지역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사회적자본이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네 번째, 문화적인 특징은 지역의 고유한 색깔 및 세계문화유산의 고장에 대한 장소성을, 문화를 토대로 하여 그대로 잘 살렸다는 점이다. 실제, 애니메이션 제작 이외에도 이와 관련한 애니메이션 체험 교실 등이 기업과 함께 진행되는 등 전통과 현대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문화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4. 난토시의 세계문화유산 - 합장취락

다섯 번째, 경제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애니메이션 산업의 효과가 관광으로 바로 연계되며, 확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애니메이션의 브랜드 효과에 힘입어 이후 스핀오프 및 후속작들이 나오고 차기작이 기획되고 있으며, 지역단위 애니메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 관광상품의 성과를 살펴보면, 약 85% 이상의 현 외 지역에서 방문하고 있으며, 2~30대 참가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1/3 이상의 방문객이 처음 방문객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효과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⁷⁾ 또한,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2008년 4월에 패널 전시 및 관련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조하나상공회가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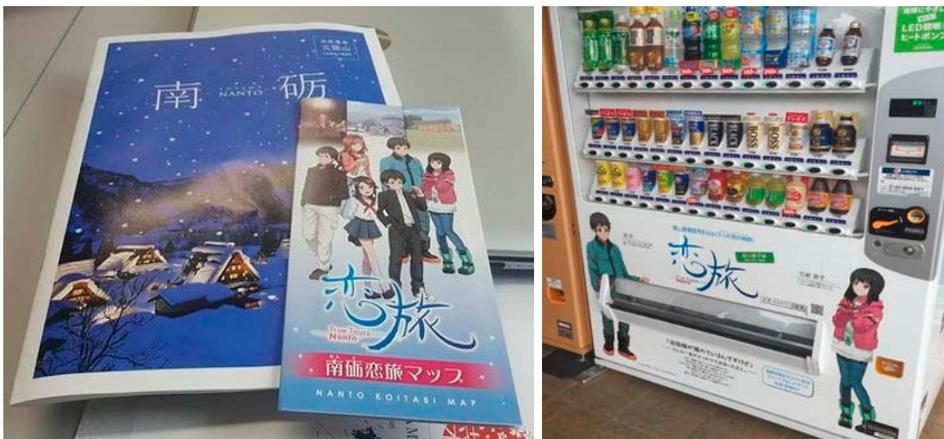


그림 5. 난토시 배경 애니메이션 ‘True tears’와 경제적 활용

자료: 2016. 4. 29 필자가 직접 촬영

행한 관광 팸플릿에서는 ‘조하나를 무대로 그려진 청춘연애 애니메이션’이라고 작품을 소개하고, 연계상품으로 온천여행, 음악 CD 패키지, 여행 티셔츠, 다양한 간식류 등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간적인 특성을 보자면, 세계문화유산이라는 헤리티지를 토대로, 문화적인 배경이 애니메이션으로 이어지고, 관광상품으로까지 연계된다는 측면에서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버넌스 및 지속가능한 관계망에서 보자면,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P.A. Works가 실제 지역에 입지할 때 지자체로부터 폐병원을 개축한 건물을 알선 받았고, 케이블 TV 이용이나 광대역 인프라 등의 지원을 받고, 직원 기숙사를 정비해 직원의 근로환경 향상을 추구하는 등 관리가 철저했으며, 향후에도 입지의 지속성이 보장되었다는 측면에서 역사와 활용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보자면, 난토시의 경우, 애니메이션 제작 및 문화콘텐츠상품의 개발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의 협의를 거쳐 장소마케팅, 장소브랜딩의 목표를 정확히 만들어갔으며, 지역의 정체성 기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소규모 지역단위 매니아 층을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탈영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브랜드로의 확대 등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소만들기의 방향성 정립과 전략적 접근, 내부적, 외부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장소명소화의 정교한 전략, 내부의 정체성 인식을 토대로 한 외부적 관계망의 확장, 글로벌 수준에서의 시각 등이 향후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한국의 사례: 서귀포시 아시아CGI창조센터를 중심으로

잘 알려진 대로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3대 국정기조 중의 하나로 삼아 ‘문화가 있는 삶’, ‘콘텐츠산업 발전전략’, ‘관광 진흥 방안’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의 문화예술 관람율

(70%대 진입), 콘텐츠 수출 증대(53억불), 방한 관광객 증가(1,420만명)등의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에 의거하여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2015),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중앙정부와 제주도는 애니메이션산업의 메카로 발돋움 할 ‘아시아CGI창조센터’를 제주도에 설립하고 2016년 5월 19일 개소하였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50억 원, 지방비 50억 원, 총 100억 원의 규모이다.

해당 장소는 서귀포시 구 평생학습관(서귀포시 동호로 41)이며, 부지 3235㎡ 연면적 2,338㎡ 규모로 설립되었으며, 한국·중국·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애니메이션의 기획·제작·유통 등 관련 산업의 숲분야에서 상호 협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주요 사업은 창작·제작 지원, 초·중·고급 전문 인력 양성, 종합컨설팅 지원, 기업지원 사업 추진, 제작 장비 대여, 전시실 운영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지역은 애니메이션 산업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창조센터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 중섭 거리 등 주변 문화공간 및 관광지와 연계된 애니메이션 테마거리 조성도 가능한 특성이 있으며, 건물이 넓은 여유 공간을 갖춘 유흥건물로서 향후 리모델링 및 확장 증축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아시아 CGI창조센터에는 공동제작실, 기업입주시설, 창업보육 공간, 인력양성시설, 캐릭터 전시실 및 체험실 등 CGI 공동제작환경이 구축되어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산업 기획·제작·유통지원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 양성의 중심지로도 자리매김할 예정인데, 향후에는 애니메이션 전용관 설립, 애니메이션 뮤지엄 설립, 애니메이션 페스티벌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⁸⁾ 이와 관련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아시아 CGI 창조센터와 연계, 총 사업비 410억 원을 투입하는 ‘서귀포시 원도심 문화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서귀포시민회관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000㎡ 규모의 애니메이션 복합 체험관을 건립하고, 센터의 파급효



그림6. 아시아CGI창조센터 공간의 이전/이후 모습
 자료: 제주레저뉴스 2016년 5월 19일자 기사

과를 확산하기 위해 인근지역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을 잇는 320m구간에 애니메이션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인접한 동홍천은 사업비 115억원을 투입해 매립된 부분을 철거한 뒤 하천의 옛 모습을 복원해 생태공원으로 만드는 등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⁹⁾ 특이사항으로 개관 시 한국과 중국의 제작사·배급사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중국 최대 애니메이션 방송사인 후난TV의 썬잉카툰, 동영상 사이트 아이치이(Iqiyi), 유쿠 투도우(Youku Tudou), 중국 애니 완구사인 알파 등 중국의 애니 제작·유통·투자과 관련된 19개 기업 41명이 대거 방한해 기대를 모은바 있다.

제주도의 이러한 실험은 장소만들기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는 사실, 산업의 측면에서 장소마케팅과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한다는 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장소브랜드의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는 점들로 인해 과도기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실제, 2015~2016년 아시아CGI창조센터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글로벌 공동제작센터 운영 및 제작 지원, 애니메이션 CGI 인력양성, 한중 공동프로젝트 등 종합 컨설팅 지원, 투자자원 확보,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 입주사 모집, 센터 홍보 등 부분적인 전략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초·중·고 전문 인력 양성이나 센터 견학프로그램 및 체험교실 운영, 지역축제와 연계한 애니메이션·캐릭

터 축제 개최, 전문 전시공간을 이용하여 국내외 관계자 및 관광객 방문 유도 등 공간정책으로서의 노력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장소만들기를 위한 주력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는다고 있다는 사실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과제가 많다고 할 수 있다.¹⁰⁾

이를 창조적 장소만들기의 특성 구분에 따라 다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영역적 특징으로서는 서귀포라는 단위지역을 토대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지원하여, 지역발전의 허브로 삼으려는 공공 지원형 정책이 주가 됨을 알 수 있다. 장소적 특성으로는 서귀포의 구 평생학습관을 재활용함으로써 도시재생의 특성도 가지고 있으며, 배태성과 함께, 아시아를 중심으로는 탈영역적인 특성이 조화를 이루게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때,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제주테크노파크 등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성을 고민하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전문적인 문화콘텐츠산업 지원기관의 신규 설립도 검토하고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 이는 문화콘텐츠산계에 중심을 둔 창의도시로서 글로벌 인식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특히 중국과의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협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인식적 특징으로는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대해 갖고 있는 문화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이러한 장소마케팅과 장소만들기의 정책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를 단순한 관광지에서 '희망의 섬'으로 보는 시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주민들과 유입인구, 특히 한류효과에 따른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으로 제주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사회적 특징으로는 최근의 제주도에 대한 인식 변화로 30-40대 젊은 창조계급을 중심으로 한 제주 이주 현상이 붐을 이루고 있으며, 외부인식의 긍정적 변화로 인해 외부 인력의 유입 증가, 특히 전문성을 지닌 청장년층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다만, 장소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이 유입된 인구들이 일부 갈등을 빚거나, 서귀포 지역 내 사회적 자본이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주도의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주체들 간의 관계성 및 장소만들기의 활동이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네 번째, 문화적 특징 관련해서는 제주의 경우 문화 자원이 풍부하고, 지역문화자본에 대한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어 기대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 제주도내 풍부한 문화콘텐츠산업 자원으로 제주 신화, 설화 등 인문학 자원뿐 아니라, 해양자원, 산, 오름 등 천혜의 자연경관, 박물관, 미술관, 테마파크 등 다수의 문화예술 기관 등이 포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잠재력은 높으며, 활용연계성의 기대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을 어떻게 연계하여 해당 지역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인가는 숙제라고 하겠다.

다섯 번째,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보자면,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화두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애니메이션 분야 외부 기업 유치를 통한 전문 인력 확보 및 경제적 이윤 순환, 중국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와의 연계성 확보, 다음, 넥슨, CJ 등 대기업들의 제주 연계 사업 확장 등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역내 콘텐츠 관련 기업의 양적 빈곤 및 영세성, 지역 내 문화콘텐츠산업의 긍정적 경쟁구도 미성립 등 생태계 자체가 현재 상태로서는 미흡한 점이 문제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적인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정부

의 창조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 발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러한 고려가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미흡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의 거버넌스 관계도 정립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제주테크노파크 방송통신 사업팀에서 아시아CGI창조센터 건축 및 일반 관리를 담당하는 수준이며, 자립화 방안도 아직까지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아시아CGI창조센터의 경우 제주도라고 하는 명소의 브랜드 이미지를 토대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접목하여 마케팅을 꾀하고 새로운 장소브랜드를 시도하고 있으나, 문화적인 배경 및 기반이 미흡한 상황에서 우려되는 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 장소만들기의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회적 과정이 생략된 채, 공공주도형 장소만들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성에서 볼 때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다소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발전의 목표가 지역의 명성에 힘입어 경제적인 결과물에만 집중하고, 자연관광을 대치할 콘텐츠의 창출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탈영역적인 장소브랜드를 꾀한다고 할지라도, 수익은 증가할지 모르지만, 지역주민과 관련된 주체들이 모두 합의하는 장소만들기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데에는 다가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4.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문화기반 창조적 장소만들기의 전략방향

2개의 지역분석을 토대로 소위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창조적 장소만들기의 단초를 찾을 수 있었다. 한국의 사례가 공간적으로 광역지자체로서의 도내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과 프로젝트가 연계되는 공공주도형 장소마케팅사업이 주라고 한다면, 일본의 사례는 작은 단위 지역내 민간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실제적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장소브랜드를 통하여 명소화전략을 펴가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표 4).

궁극적으로는 장소명소화를 위한 장소브랜딩과 효과성 증진을 위한 장소마케팅, 참여를 목표로 함께 장소를 만들어가는 장소만들기의 과정이 두 지역 모두 모양새는 다르지만, 장소자산의 형성을 통해 글로벌 시대 보다 심화되어가는 경쟁 속에서 지구적 이동성과 지역기반의 고정성을 함께 다루는 고민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7).

이러한 고민을 토대로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관련된 문화기반 창조적 장소만들기의 전략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첫번째, 거버넌스의 관계이다. 장소마케팅과 장소브랜딩, 장소만들기의 다양한 관계적 특성, 맥락에서 나타나듯이, 영역성의 강화와 탈배태성, 지역의 발전은 지역내부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및 공간적인 영역을 토대로 한 인근지역 및 광역지역과의 협력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역할분담은 역사, 문화적인 배경을 토대로 기반을 갖추지 않고, top-down 형태의 하달식 구조가 강요되었을 때는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자산을 근간으로 하는 장소만들기에서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

표 4.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문화기반 창조적 장소만들기의 실제 사례 적용

구분	일본(난토시 사례)	한국(서귀포시 사례)
영역적 차원	국지적인 지역에서 장소브랜딩 통한 명소화 전략	구 평생학습관 활용 장소마케팅 허브로 활용
인식적 차원	오래된 시골마을에서 젊은 이미지변신	관광지로부터 문화콘텐츠 중심지로의 인식과 장소성의 변화
사회적 차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파트너십과 활동	이질적인 집단의 참여가 관건
문화적 차원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장소성 반영	문화관광 토대 스토리텔링 고민
경제적 차원	애니메이션 토대 콘텐츠투어리즘 기대	중국중심 아시아연계 수익성기대
시간적 차원	기업의 고정성 등 통한 지속가능성 큼	헤리티지와 지속가능성 연계 중요
글로벌라이제이션 특징	지역마을 → 세계문화유산의 장소성+문화콘텐츠산업 (장소브랜딩 기대)	관광명소+문화콘텐츠 → 아시아 → 글로벌 문화의 중심 발전 기대

자료: 지역방문 인터뷰 및 문헌 자료 등을 토대로 필자가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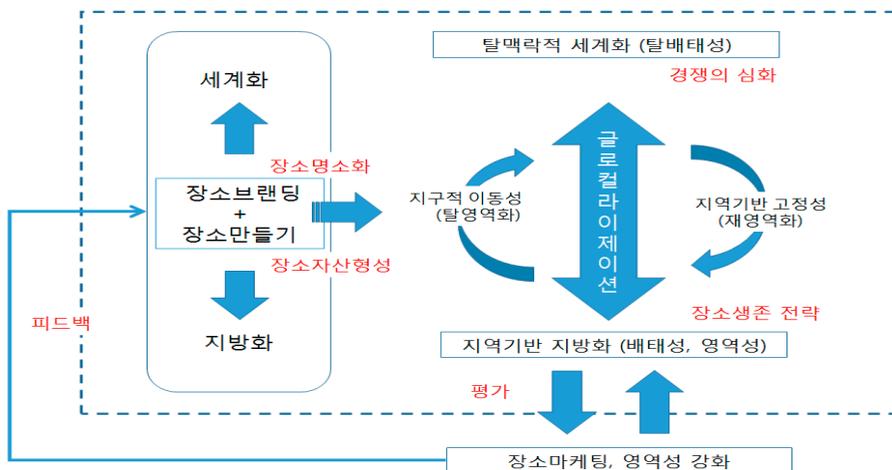


그림 7.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장소마케팅, 장소브랜딩, 장소만들기의 특성과 순환

출처: 김형국, 2002, 40을 토대로 필자가 수정, 보완하여 제시

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문화콘텐츠산업이 창조적 장소만들기의 원천이 될 경우는 지역실정에 맞는 콘텐츠,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내부자원이 외부로 발신되며, 궁극적으로 장소브랜딩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소위 맞춤형 콘텐츠가 아니라면, 성공을 거두기 어렵게 된다. 많은 문화콘텐츠산업 전략들이 지역에서 실패하는 이유들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등의 적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발신을 위한 원천소스, 문화유산을 기본으로 하는 헤리티지 등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서울과 동경스타일이 아닌, 서귀포와 난토스타일이 필요한 이유이다. 장소브랜딩의 원천으로서의 콘텐츠가 충분히 성공을 거두어야 규모의 경제로서의 장소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점을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장소만들기로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기반의 배태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적자원의 육성이 절대적이다. 이는 장소를 만들어가는 원천이자, 창조적 장소만들기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단순한 1회성 이벤트와 마케팅에 집중하는 전략이 아닌 긴 호흡으로서의 재영역화를 위해 많은 투자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네 번째, 가능한 다양한 전략의 혼합적 적용과 융합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발전의 목표가 단순히 수출 얼마, 고용 몇 명의 계량적 수치가 되어서는 곤란하며, 정성적 특성과 정량적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장소브랜딩의 관점으로 보자면, 외부에서의 평가에서 좋은 장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 난토시의 경우, 지자체의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의 목적이 산업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젝트 지원이 아닌 관광 홍보 사업 목적의 보조금 형태지원이라고 나타나고 있다.¹¹⁾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장소의 명소화와 주민의 행복이 우선시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선행되어야, 장기적으로는 관광산업 등 수의 모델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략방향과 활동은 일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평가와 공정한 피드백을 통해

선순환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간의 연속성은 변화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의해 좌우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목표와 비전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5. 나오는 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생존과 자립이 중요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역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단순한 장소마케팅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여건변화에 따른 조건들을 어떻게 충족하는가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수요 맞춤형 전략은 비전과 과정, 성과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라이제이션시대 지역의 발전은 가치사슬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투입과 과정, 산출 등 각 과정의 특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적 발전목표에 집중해야만 한다. 이런 측면에서 삶터로서의 도시공간은 특정한 삶의 맥락이 관련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문화를 기반으로 장소를 해석해야 하고, 최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도시재생의 경우에도 경제적인 목적이 우선시되는 장소마케팅의 관점이 아닌 사회적 자본과 관계가 우선시되는 ‘장소만들기’의 과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Markusen(2010)은 창조적인 장소만들기의 성공적인 요소들로서, 창조적인 기획자, 지역의 특수성에 맞춘 설계, 지역주민 등의 대중의 의사동원, 민간 부문의 지지,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공동체의 참여, 다양한 참여인자들의 제휴관계 등을 지목한 바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어우러질 때, 지역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독특한 특성과 자원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한편으로는 방문객들과 새로운 사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결과로서의 마케팅전략

보다는 과정과 참여를 중요시하며, 광의적 의미로서의 ‘장소만들기’를 통해 장소성을 어떻게 회복하며, 어떻게 창조적 장소만들기의 전략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사실을 고민해 보았으며, 특히,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장소만들기’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2개 사례를 통해서 시설과 프로젝트를 통한 다양한 특성이 지역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장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브랜딩과 과정으로서의 만들기, 함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마케팅의 작업들이 별개의 요소가 아닌 유기적인 관계성을 이루어갈 때, 세계와 지역의 간극도 좁아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창조적 장소만들기의 중요성은 선행연구와 사례조사 등을 통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나, 답론에 따른 실질적인 지역의 사례가 이러한 과정으로서의 장소만들기 특성을 충분히 담기에는 구체적인 분석의 틀과 모델이 더 정교해야 한다는 점과 특히, 한국의 사례 경우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서 구체적인 분석의 내용이 미흡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대되어 다양한 사례분석과 모델링, 분석과 평가가 실제 지역의 현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의적 의미로서의 장소만들기가 본래 장소가 갖고 있는 장소성의 복원과 문화의 재현이 현실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장소만들기’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장소브랜딩 전략과 결합하여, 거기서 얻어지는 이윤을 다시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장소마케팅 과정에 연결하여 어떻게 선순환구조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궁극적인 고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

- 1) http://www.pps.org/reference/what_is_placemaking/를 참조하여 장소만들기에 대한 주요 원칙을 정리
- 2) 뉴어바니즘은 미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도시계획운동으로,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 등으로 빚어진 도시문제를 진

- 단한 뒤 새로운 도시적 삶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며, 도시문제의 해결 방법으로서 공공 공간의 부활, 보행자 위주의 개발, 도심활성화 등을 주장하고 있음. [네이버 지식백과] 뉴어바니즘 [New Urbanism]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1333&cid=43667&categoryId=43667>
- 3) 서울특별시, 2014,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플랜,’ 29쪽을 참조하여 볼 때, 과정으로서의 도시계획과 공동체의 특성에 더욱 주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 4) CGI는 컴퓨터가 생산한 이미지라는 의미의 ‘computer generated imagery’ 내지는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뜻하는 ‘computer graphic image’의 약어로 통상 완전히 컴퓨터 내부에서 생산된 2D(two-dimensional, 2차원) 혹은 3D(three-dimensional, 3차원) 이미지를 일컫음. 일반적으로 영화 제작자들에게 CGI라는 용어는 3차원 이미지를 뜻함. 이하 CGI로 표기함 [네이버 지식백과] CGI (명화를 만든 10가지 시각효과, 2015. 5. 20., 커뮤니케이션북스)
- 5) 이를 위해 제주도 사례의 경우 2015년 10월 22~23일, 난토시의 경우는 2016년 4월 28~30일 현지 방문을 통하여, 지자체, 업체관계자, 인근 대학관계자와의 심층인터뷰가 이루어졌음.
- 6) <https://www.city.nanto.toyama.jp/webapps/www/korean/index.html> 도야마현 난토시 안내 홈페이지를 참조로 난토지역의 문화적인 기반과 특징을 정리함.
- 7) 난토시 크리에이터플라자 준공기념 국제포럼(2016.4.29.) 발표자료(“난토시 True Tears 사례, 山口泰弘”)를 참조하여 정리함.
- 8) 제주레저신문 2016년 5월 19일 기사를 토대로 정리함.
- 9) 서귀포신문 2015년 8월 4일자 기사를 참조함.
- 10) 재단법인 디지털애니메이션진흥센터의 ‘아시아CGI창조센터 위탁운영 추진현황 보고’(2015) 자료를 참조 정리함.
- 11) 2016년 4월 28~30일 난토시 현지 방문과 지자체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수정·신지연, 2015, “글로벌시대 초국가 기업의 장소마케팅이 지방도시의 로컬리티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스타벅스 코리아’의 로컬화 전략을 사례로,” 로컬리티 인문학 14, 257-292.
- 김현호, 2003, “장소판촉적 지역발전을 위한 장소자산형성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36, 77-95.

- 김형국, 2002. 고장의 문화관측: 세계화 시대에 지방이 살길, 학교재.
- 박배균, 2010. “장소마케팅과 장소의 영역화: 본질주의적 장소관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3), 498-513.
- 백선희, 2004. “소도시의 문화예술축제 도입과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 대한지리학회지, 39(6), 888-906.
- 서귀포신문 2015년 8월 4일, “아시아 CGI창조센터 일대 문화광장 들어선다”.
- 서수정, 2007. “지속가능한 개발과 뉴어바니즘 이론의 적용에 의한 영국 버밍햄시 도시재생의 특성,” 국토계획, 42(7), 125-143.
- 서울역사박물관, 2014.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성수동: 장인, 천번의 두들김.
- 서울특별시, 2014.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 플랜.
- 어정연·여홍구, 2010. “장소개념에서의 장소가치에 대한 논의,” 국토계획 45(6), 21-34.
- 이무용, 2005.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장소마케팅 전략, 논형.
- 이무용, 2006. “장소마케팅 전략의 문화적 개념과 방법론에 관한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14(1), 39-57.
- 이범훈·김경배, 2010. “인천 개항장의 『장소만들기』실태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1(5), 95-112.
- 이병민, 2016. “문화자산을 토대로 한 도시재생과 지역발전 -〈서울동화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1), 51-67.
- 이영민, 2001.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장소의 역사, 지리적 의미의 재구성 - 인천 구도심지를 사례로 -,” 한국도시지리학회지, 4(2), 1-12.
- 이정훈, 2008. “연성軟性) 지역개발의 주요수단으로서 장소브랜딩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과제,” 대한지리학회지, 3(3), 873-893.
- 장신영, 2008. 서울 도심 역사·문화 환경의 장소자산적 가치와 기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수희, 이병민, 2016. “에코뮤지엄의 속성을 통해 본 도시의 문화적 지속가능성 연구: 한국 경기도 광주 시와 일본 가나자와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23, 171-192.
- 제주레저신문 2016년 5월 19일, “아시아 CGI에니메이션 센터 드디어 오픈”.
- 조명래, 2011. “문화적 도시재생과 공공성의 회복: 한국적 도시재생에 관한 비판적 성찰,” 공간과 사회, 21(3), 39-65.
- 최강립, 2006. 신도시 개발과정에서의 『장소만들기』에 관한 연구: 수도권 ‘평촌신도시’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강립, 2007. “도시정체성과 장소만들기-‘장소만들기’를 통한 도시정체성 확립의 방향,” 도시문제 42, 20-30.
- 최강립, 2008. 신도시개발과 장소만들기, 한국학술정보.
- Brenner, Neil, 1999. Globalisation as Reterritorialisation: The Re-scaling of Urban Governance in the European Union, *Urban Studies*, 36(3), 431-451.
- Carmona, M., Heath, T., Oc, T., Tiesdell, S., 2010, *Public Places Urban Spaces: The Dimensions of Urban Design*, Routledge.
- Govers, R., and Go, F., 2009, *Place Branding: Global Virtual and Physical Identities, Constructed, Imagined and Experiences*, Palgrave Macmillan.
- Hamdi, N., 2010, *The Placemaker's Guide to Building Community* (Earthscan Tools for Community Planning), Routledge.
- Harvey, D., 1989, From Managerialism to Entrepreneurialism: The Transformation in Urban Governance in Late Capitalism,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71(1), 3-17.
- Kavaratzis, M., 2004, From city marketing to city branding: Toward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developing city brands, *Journal of Place Branding*, 1, 58-73, Palgrave.
- Knox, Paul L. 2005. Creating Ordinary Places: Slow Cities in a Fast World, *Journal of Urban Design* 10(1), 1-11.
- Markusen, A., 2010, *Creative Place Making*, Markusen Economic Research Services Metris Arts Consulting.
- Musterd, S., and Kovács, Z., (ed.), 2013, *Place-making and Policies for Competitive Cities*, John Wiley & Sons, Ltd.
-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ondon.
- Tayebi, S., 2006, *How to design the brand contemporary city*

(<http://www.urbanitude.com/citybranding.pdf>).
Wyckoff, M. A., 2014, Definition of Placemaking: Four Different Types, MSU Land Policy Institute.
Zenker, S., and Jacobsen, B. P. (ed.) 2015, *Inter-Regional Place Branding Best Practices*, Challenges and Solutions, Springer.

교신: 남기범, 02504, 서울시 동대문구 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도시사회학과(이메일: nahm@uos.ac.kr)

Correspondence: Kee Bom Nahm, Department of Urban Sociology, College of Urban Sciences, University of Seoul, 02504, Korea (e-mail: nahm@uos.ac.kr)

최초투고일 2016. 6. 3

수정일 2016. 6. 20

최종접수일 2016. 6. 25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

이전*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Rural Housing in Ulleungdo Mountains

Jeon Lee*

요약 : 이 연구는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에 초점을 두고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을 고찰하는 연구이다. 그리고 울릉도 산지의 촌락 가옥 유형을 제주도과 경남의 촌락 가옥 유형과 비교하면서 그 특성도 논의한다.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형태를 보면, 팔작지붕(42.1%)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는 맞배지붕(25.8%), 우진각지붕(11.8%), 단순평지붕(10.7%) 등이 많이 나타난다. 지붕 재료를 보면, 컬러강판(69.1%), 아스팔트싱글(11.8%), 시멘트(10.7%) 등이 많이 나타난다. 컬러강판을 지붕 재료로 사용한 가옥이 압도적으로 많고, 기와나 슬레이트를 지붕 재료로 사용한 가옥은 한 채도 없다. 그리고 외벽 재료에서는 시멘트(27.5%), 사이딩(21.3%), 합석(16.8%), 목재(6.7%) 등이 많이 나타난다. 지붕 형태와 지붕 재료의 결합 관계로 본 가옥 유형에서는 팔작지붕-컬러강판 가옥 유형(73채; 41.0%)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지붕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지붕 재료와 외벽 재료의 결합 관계로 본 가옥 유형에서는 팔작지붕-컬러강판-시멘트 가옥 유형(32채; 18.0%)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외벽 재료로 합석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 기와나 슬레이트를 지붕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것, 적벽돌이나 석재를 외벽 재료로 사용하는 빈도가 낮은 것 등은 건축 자재의 운송비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 팔작지붕, 합석.

Abstract : This study deals with the contemporary rural hous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roof types/materials and the outer wall materials in Ulleungdo Mountains. The most frequent roof type of rural housing is the hip-and-gable roof type(42.1%); and the next, the gable roof type(25.8%). For the roof materials, the precoated steel plate(69.1%), the asphalt shingle(11.8%), and the cement(10.7%) are the most frequent but the roofing tile and the artificial slate are not used. And for the outer wall materials, the cement(27.5%), the siding(21.3%), the corrugated galvanized iron(16.8%), and the lumber sheet(6.7%) are the most frequent. It is the hip-and-gable roof housing type with the precoated steel plate(roof materials)(41%), or the hip-and-gable roof housing type with the precoated steel plate(roof materials) and the cement(outer wall material)(18.0%) that is the most frequent type of rural housing in Ulleungdo Mountains. For the roof/wall materials, the ratio of the corrugated galvanized iron is high probably due to the relatively low cost of transport, and the ratio of the roofing tile, the artificial slate, the red brick, and the building stone is very low probably due to the relatively high cost of transport.

Key Words : roof type, roof materials, outer wall materials, hip-and-gable roof, corrugated galvanized iron

이 연구는 2016년도 경상대학교 연구년제연구교수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 of Geography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glee@gnu.ac.kr

1. 머리말

1) 연구목적

울릉도의 투방집은 매우 독특한 울릉도 전통가옥(vernacular housing) 혹은 민가(folk housing)였다. 투방집은 통나무를 우물 정(井)자로 쌓아올려 벽을 만든 집이었다. 울릉도 투방집은 못을 사용하지 않고 통나무와 진흙으로만 지었다. 통나무를 방한 칸 길이보다 조금 길게 잘라서 양쪽 끝에 아래위로 홈을 판 다음, 이 홈에 맞추어 통나무를 직교상으로 쌓아올려 벽을 만들었다. 통나무 사이의 빈 공간은 진흙으로 메워서 마무리하였다. 투방집은 강원도 산간지대에서는 귀틀집, 평안남도에서는 방틀집 또는 목채집, 평안북도 와 강원도에서는 틀목집 등으로도 불렸다(장보웅, 1977; 1996). 그런데 울릉도 촌락에서 투방집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사라졌다. 오늘날 울릉도 투방집은 나리분지에서 4~5채 찾아 볼 수 있을 뿐인데, 그것도 관광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옥이고 실제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가옥은 아니다.

울릉도의 전통가옥 혹은 민가에서는 지붕의 처마 끝 안쪽에 여러 개의 가는 기둥을 돌려 세우고 출입구만은 비워둔 채 역새로 이엉을 엮거나 목재로 막아 새로운 벽을 만드는데, 이것을 우데기라 하였다. 방벽과 우데기 사이의 공간을 축담이라 불렀는데, 이곳에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두었다. 축담은 눈이 많이 쌓이는 겨울 동안에는 작업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 출입구에는 싸리나 역새로 엮은 발을 달아서 비바람이 불 때에는 내려뜨려 비바람이 축담에 들이치는 것을 막았다(장보웅, 1996; 조성기, 2006). 그런데 울릉도 촌락 가옥의 우데기와 축담도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다. 과거의 우데기 벽에 골함석을 덧씌워서 외벽을 만든 가옥, 과거의 축담에 보일러를 깔아 방이나 저장고 등으로 개조한 가옥, 과거의 우데기 출입구에 알루미늄 새시 유리문 현관을 달아 사용하는 가옥 등은 상당수 남아있으나, 오늘날 울릉도의 촌락 가옥에서 전형적인 우데기와 축담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지리학계는 오랫동안 전통가옥 혹은 민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¹⁾ 이러한 한국지리학계의 연구 업적이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현행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 지역별 기후 조건에 적응한 생활 모습의 사례로 전통가옥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우데기가 갖추어진 울릉도 가옥, 정주간 가옥 구조를 가진 관북형 가옥, 대청마루 가옥 구조를 가진 남부형 가옥, 아궁이 방향이 다른 제주도형 가옥 등 전통가옥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가옥의 유형은 과거의 가옥 유형일 수는 있으나 결코 오늘날의 가옥 유형은 아닌 것이다(이전·이호욱, 2015). 필자는 여러 차례 울릉도를 답사하면서 울릉도 촌락 가옥에 관한 접근법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오늘날 울릉도 촌락에서 전형적인 투방집이나 우데기를 찾아볼 수 없는데, 왜 한국지리학계에는 울릉도의 투방집이나 우데기가 널리 알려져 있을까? 그렇다면 오늘날의 울릉도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을 어떻게 기술해야 할까?

필자는 한국지리학계에서 오늘날의 한국 촌락 가옥이나 경관에 관한 연구를 좀 더 많이 수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서 한국 전통가옥의 유형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한국 촌락 가옥 유형이나 촌락 경관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의 울릉도 촌락 경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울릉도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오늘날 울릉도의 촌락에는 우데기가 갖추어진 투방집들이 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유형의 가옥들이 들어서 있다. 이 연구는 오늘날 울릉도 촌락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촌락 가옥과 그 특성에 대한 연구이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울릉도 촌락 가옥의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를 촌락 가옥 경관의 가장 주요한 형태적 요소로 보면서, 울릉도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을 고찰하는 연구이다.

울릉도의 촌락 가옥을 다른 지역의 촌락 가옥과 비교하는 작업은 울릉도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 등에 초점을 두고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을 밝히는 논문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울릉도 촌락 가옥을 한국 전체의 촌락 가옥과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는 없다. 다행스럽게도 제주도(이전, 2016), 경남 고성군(이전·채민수, 2015), 경남 남해도서(이전·성화룡, 2015), 경남 함양군(이전·이호욱, 2015; 이호욱, 2016)의 촌락 가옥에 관한 연구가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울릉도 촌락 가옥을 이러한 지역의 촌락 가옥과 비교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즉, 제주도 촌락, 경남 고성군 촌락, 경남 남해도서 촌락, 경남 함양군 촌락 등의 가옥과 비교해보면서 울릉도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지역 촌락과 연구대상 가옥

울릉도는 행정구역상 독도와 더불어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고, 울릉군의 현재(2016년 3월) 인구는 10,065 명에 달한다. 울릉군의 인구는 한 때(1974년) 3만여 명에 달했다가 점차 줄어들었고, 2000년경부

터 현재까지는 1만여 명을 유지하였다. 울릉군의 행정구역은 1읍(울릉읍)·2면(서면·북면)으로 구성된다.²⁾ 울릉읍은 4개의 법정리로, 그리고 서면과 북면은 각각 3개의 법정리로 구분된다. 울릉군의 법정리는 1~4개의 행정리로 구분되는데, 울릉군 10개 법정리는 총 25개의 행정리로 구분된다. 그리고 울릉군의 행정리는 각각 1~4개의 자연마을로 다시 구분되는데, 울릉군의 25개 행정리에 소속된 자연마을은 총 57개에 달한다.

이 연구의 연구지역 촌락은 울릉군의 10개 법정리에서 멀리 떨어진 독도리, 또한 읍사무소와 면사무소가 위치하는 도동리·남양리·천부리를 제외한 6개 법정리에서 각각 1~2개 촌락을 선택하여 설정하고자 한다. 다만, 저동항·도동항·사동항·남양항·태하항·현포항·천부항 등을 비롯한 해안 취락에는 관광업·상업·교통·행정 기능 등의 도시적 기능이 비교적 발달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울릉도의 산지 촌락만을 연구지역 촌락으로 설정한다. 특정 산지 촌락의 대략적인 가옥 수를 1:25,000 지형도를 통해서

표 1. 연구지역으로 선정한 9개의 촌락

읍면	법정리	행정리	연구지역 번호: 촌락 명칭
울릉읍	도동리	도동1·2·3리	울릉읍사무소 소재지
	저동리	저동1리	적절한 산지 촌락이 없음
		저동2리	❶ 저동2리 산지 촌락
		저동3리	적절한 산지 촌락이 없음
	사동리	사동1리	적절한 산지 촌락이 없음
		사동2리	❷ 안평전
사동3리		적절한 산지 촌락이 없음	
독도리	독도리	적절한 산지 촌락이 없음	
서면	남양리	남양1·2·3리	서면사무소 소재지
	남서리	남서1리	❸ 본마을(나발등 포함)
		남서2리	적절한 산지 촌락이 없음
	태하리	태하1리	❹ 서달령
		태하2리	❺ 학포(해안마을 제외)
북면	천부리	천부1·2·3·4리	북면사무소 소재지
	현포리	현포1리	❻ 잣만등
		현포2리	❼ 평리(울릉순환로 인근 제외)
	나리	추산리	❽ 추산(울릉순환로 인근 제외)
나리		❾ 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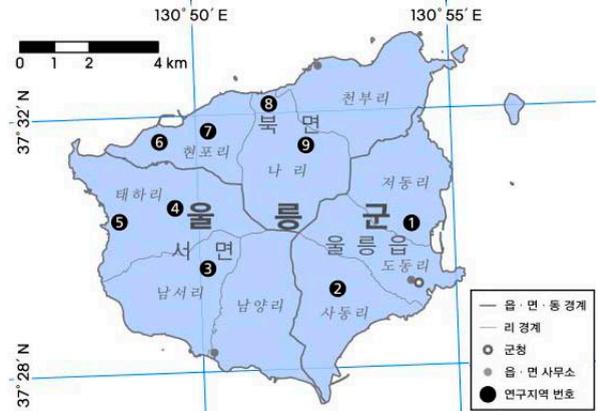


그림 1. 연구지역 촌락의 위치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지형도를 통해 연구지역 촌락을 잠정적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현지조사를 통해 9~10채 이상의 가옥을 가진 촌락으로 확인되면, 연구지역 촌락으로 확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정한 연구지역 촌락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9개 산지 촌락인데, 이 9개 촌락의 위치는 그림 1과 같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 가옥은 농가뿐만 아니라 식당, 상점, 노인회관, 교회 건물, 펜션, 민박집, 관광용 가옥³⁾등을 포함한다. 농사철에만 들어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농가도 연구대상 가옥에 포함한다. 특정한 농가의 대지에 바깥채나 부속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 취침용 방을 중심으로 한 주 건축물인 몸채만을 연구대상 가옥으로 삼고, 바깥채나 부엌·보일러·현관 등의 부속 건물은 연구대상 가옥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정한 농가의 대지에 들어서 있는 창고는 연구대상 가옥에서 제외하지만, 밭 가운데 혹은 밭 가장자리에 입지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는 연구대상 가옥에 포함한다. 가옥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오랫동안 비워둔 폐가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폐가는 연구대상 가옥에 포함한다. 폐가라고 보이는 가옥이 실제로는 농사철에 일시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특정한 가옥이 폐가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옥을 연구대상 가옥에 포함한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9개 연구지역 촌락에서 선정한 연구대상 가옥은 총 178채이다.

3) 연구방법

필자는 울릉도를 여러 차례 답사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답사를 통하여 울릉도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문헌과 자료를 수집해두었다. 다만, 이 연구를 위한 집중적인 현지조사는 2016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수행하였다. 집중적인 현지조사에서는 울릉도 9개 연구지역 촌락에서 선정한 연구대상 가옥 178채를 대상으로 해서 표 2와 같은 조사지를 통해 가옥의 주소,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 복층 여부, 측입 여부 등을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근래 도로명 주소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대다수 촌락 가옥의 입구 혹은 벽면에 도로명주소판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 가옥의 주소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경사지붕의 지붕 형태는 팔작지붕,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외쪽지붕으로 구분하였고, 맞배지붕과 우진각지붕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형태와 변형된 형태로 구분하였다. 평지붕의 지붕 형태는 단순평지붕과 눈썹평지붕으로 구분하였다. 지붕 재료와 외벽 재료는 겉으로 보이는 재료를 그대로 기입하였다. 복층 여부를 기록하는 칸에는 촌락 가옥의 대다수가 단층이기 때문에 복층의 경우에만 표시해두었다. 측입 여부를 기록하는 칸에는 가옥의 측입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외 특별한 사항은 비고란에 기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가옥 178채에 대한 조사

표 2. 연구대상 가옥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지

울릉군 _____ 읍(면) _____ 리 (촌락명) _____

번호	주소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	복층?	측입?	비고
1							
2							
3							
4							
5							
36							

결과를 분석한다. 맨 먼저 울릉도 촌락 가옥의 다양한 지붕 형태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지붕 형태 분류 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울릉도 촌락 가옥의 지붕 형태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지붕 재료와 외벽 재료를 분석하는데, 이 연구에서 재료 분류의 기준은 가장 바깥쪽의 재료(마감재)이다. 한 종류의 재료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두 종류 혹은 그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단일 재료와 복수 재료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지붕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지붕 재료와 외벽 재료의 결합 관계에 따라 촌락 가옥의 유형을 통계적으로 고찰한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는 울릉도 촌락 가옥의 특성을 제주도와 경남의 촌락 가옥 특성과 비교하여 논의한다.

2.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형태에 대한 분석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다양한 지붕 형태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이 연구에서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형적인 지붕 형태뿐만 아니라 그 변형 및 결합을 포함하는 분류 체계를 제시한다. 특정한 형태로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지붕들을 기초단위지붕이라고 한다면, 연구대상 가옥의 기초단위지붕으로는 그림 2와 같이 ‘팔작지붕(hip-and-gable roof)’, ‘맞배지붕(gable roof)’, ‘우진각지붕(hip roof)’, ‘외쪽지붕(shed roof)’, ‘단순평지붕(simple-flat roof)’, ‘눈썹평지붕(eyebrow-and-flat roof)’, ‘맞배변형지붕(deformed-gable roof)’, ‘우진각변형지붕(deformed-hip roof)’의 여덟 가지가 나타난다(이전·성화룡, 2015; 이전·이호욱, 2015).

지붕 형태는 전체 지붕을 구성하고 있는 ‘기초단위 지붕 종류’의 수에 따라 ‘단일양식지붕’과 ‘결합양식지붕’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한 종류’의 기초단위지붕으로만 구성되는 지붕이고, 후자는 ‘여러 종류’의 기초단위지붕으로 구성되는 지붕이다. 단일양식지붕은 경사요소와 수평요소를 어떻게 포함하고 있는가에

따라 ‘경사지붕’과 ‘평지붕’으로 나뉜다. 경사지붕은 경사요소로 구성된 지붕이고, 평지붕은 수평요소로 구성된 지붕이다. 또한 결합양식지붕도 경사요소와 수평요소를 어떻게 포함하고 있는가에 따라 ‘경사-평지붕’과 ‘경사-경사지붕’으로 나눌 수 있다(이전·성화룡, 2015; 이전·이호욱, 2015).

경사지붕은 팔작지붕,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외쪽지붕을 중심으로 해서 맞배변형지붕, 우진각변형지붕으로 구분된다. 우진각변형지붕, 맞배변형지붕은 근래에 신축된 가옥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지붕 형태에 속한다. 평지붕은 단순평지붕과 눈썹평지붕으로 분류된다. 단순평지붕은 지붕 난간의 유무와 관계없이 단순히 수평면으로 인식되는 지붕이다. 눈썹평지붕은 평지붕 구조에 지붕의 난간 또는 외곽 부분을 경사지게 만들어 아스팔트싱글 등으로 마감한 지붕이다. ‘눈썹(eyebrow)’이라는 용어는 건축학에서 눈썹모양의 지붕창 구조부(dormer)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눈썹평지붕의 경사부분을 지칭하는 데 사용한다(그림 2).

가옥에 따라서 단층 가옥과 복층 가옥이 존재한다. 단층 가옥은 지붕 형태를 판단하기가 단순하지만, 복층 가옥은 층간 면적이 동일하거나 다른 경우가 있어 별도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층간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상부의 지붕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고, 층간 면적이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의 용도와 상관없이 각 층의 지붕 형태를 별개의 지붕으로 모두 인정한다. 만약 모든 층의 지붕 형태가 한 가지의 기초단위지붕으로만 구성되는 지붕이면 단일양식지붕으로 분류하고, 두 가지 이상의 기초단위지붕이 나타난다면 결합양식지붕으로 분류한다. 이때, 베란다로 활용되는 공간은 지붕 형태의 분류에서 수평요소로 취급하여 단순평지붕으로 분류한다.

울릉도 연구대상 가옥 178채의 지붕 형태를 먼저 단일양식지붕과 결합양식지붕으로 분류한다. 단일양식지붕은 ①팔작지붕, ②맞배지붕, ③우진각지붕, ④외쪽지붕, ⑤맞배변형지붕, ⑥우진각변형지붕, ⑦단순평지붕, ⑧눈썹평지붕으로 세분되고, 결합양식지붕은 ⑨맞배지붕/팔작지붕, ⑩맞배지붕/단순평지붕으로 세분된다. 표 3은 9개 연구지역 촌락의 지붕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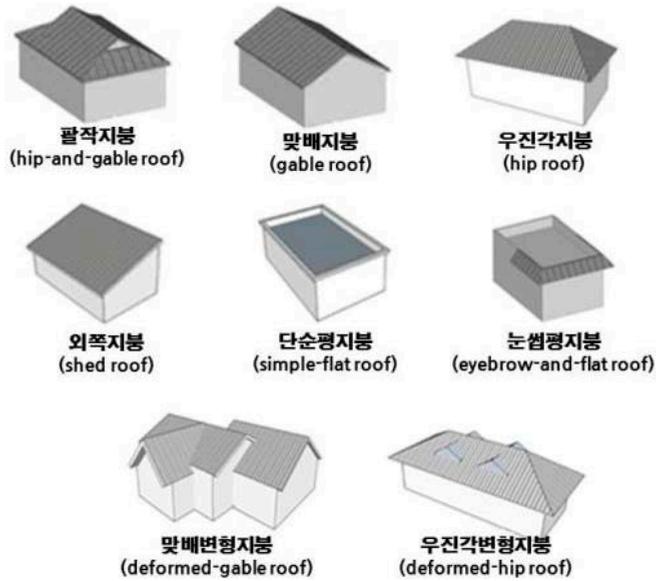


그림 2. 기초단위지붕 형태

표 3.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형태

연구 지역 번호	지붕 형태	단일양식지붕						결합양식지붕				계
		경사지붕						평지붕		경사- 경사지붕	경사- 평지붕	
		팔작 지붕	맞배 지붕	우진각 지붕	외쪽 지붕	맞배변 형 지붕	우진각변 형 지붕	단순 평지붕	눈썹 평지붕	맞배지붕/ 팔작지붕	맞배지붕/ 단순평지붕	
1	5	5	0	2	0	1	3	0	0	0	16	
2	2	3	0	0	1	0	2	0	1	0	9	
3	7	1	1	0	0	0	1	0	0	0	10	
4	10	7	0	1	1	0	3	0	1	0	23	
5	7	1	0	0	0	0	5	0	0	0	13	
6	3	4	5	0	0	0	0	0	0	0	12	
7	23	7	4	0	0	0	1	0	1	0	36	
8	9	11	7	0	2	0	2	1	0	0	32	
9	9	7	4	0	2	1	2	0	1	1	27	
계	75	46	21	3	6	2	19	1	4	1	178	
비율(%)	42.1	25.8	11.8	1.7	3.4	1.1	10.7	0.6	2.2	0.6	100	

태를 총 10개 지붕 형태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단층/복층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구대상 가옥 178채 중에 2층 가옥은 7채, 3층 가옥은 1채로 나타나고, 나머지 170채는 단층집으로 나타난다. 측입 여부를 조

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구대상 가옥 중에서 측입형 가옥은 한 채도 나타나지 않는다.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형태 중에 가장 많은 것은 팔작지붕인데, 연구대상 가옥 중에 팔작지붕 가

옥은 75채(42.1%)에 해당한다. 9개 촌락 중 6개 촌락에서 팔작지붕이 가장 많은 지붕 형태로 나타난다. 팔작지붕 다음으로 많은 지붕 형태는 맞배지붕인데, 맞배지붕은 46채(25.8%)에 해당한다. 연구대상 가옥 중에서 창고는 13채이고 식당은 6채인데, 창고 중에는 11채, 그리고 식당 중에는 5채가 맞배지붕을 갖고 있다. 맞배지붕은 창고나 식당 등의 전형적 지붕 형태라고 하겠다. 그리고 결합양식지붕의 맞배지붕/팔작지붕 가옥은 4채(2.2%)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울릉도의 연구대상 가옥 중에서 팔작지붕, 맞배지붕, 맞배지붕/팔작지붕의 가옥이 70.2%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 가옥 중에 우진각지붕 가옥은 21채(11.8%)에 해당하는데, 이 중에 9채는 관광용 가옥이기 때문에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우진각지붕 가옥은 12채(6.7%)에 불과하다. 우진각지붕 가옥은 9개 촌락 중 5개 촌락에서만 나타난다. 즉, 4개 연구지역 촌락에서는 우진각지붕 가옥이 단 한 채도 없다. 단순평지붕 가옥은 19채(10.7%)에 해당하는데, 연구지역의 9개 촌락 중 8개 촌락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연구대상 가옥 중에 외쪽지붕 가옥은 단 3채(1.7%), 눈썹평지붕은 단 1채(0.6%)만 나타난다. 연구대상 가옥 중에 결합양식지붕 가옥은 5채(2.8%) 뿐이다.

3.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재료에 대한 분석

가옥의 지붕 재료는 가옥 유형을 인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초가집·기와집·너와집과 같은 용어들은 가옥 유형을 지칭할 때 지붕 재료가 매우 중요한 지표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 지붕 재료 분류의 기준은 가장 바깥쪽의 지붕 재료(마감재)이다. 시공 절차상 사용된 부수적 지붕 재료는 지붕 재료 분류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 지붕 재료를 철거하지 않은 채로 새로운 지붕을 시공한 경우, 철거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기존 지붕의 재료도 지붕 재료 분류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지붕 재료는 마감재로 사용한 재료의 종류에 따라 단일 재료와 복수 재료로 분류한다. 전자는 ‘한 종류’의 지붕 재료만 사용한 경우이고, 후자는 ‘여러 종류’의 지붕 재료를 사용한 경우이다. 연구대상 가옥의 지붕 재료를 조사한 결과, 일곱 종류의 지붕 재료가 나타난다. 단일 재료에는 ①컬러강판(precoated steel plate), ②아스팔트싱글(asphalt shingle), ③시멘트(cement), ④너와, ⑤역세의 다섯 종류가 있고, 복수 재료에는 ⑥시멘트/컬러강판, ⑦시멘트/아스팔트싱글

표 4.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재료

연구 지역번호	지붕 재료	단일 재료				복수 재료		계
	컬러강판	아스팔트 싱글	시멘트	너와	역새	시멘트/컬러강판	시멘트/아스팔트싱글	
1	11	2	3	0	0	0	0	16
2	5	2	2	0	0	0	0	9
3	8	1	1	0	0	0	0	10
4	18	2	3	0	0	0	0	23
5	7	1	5	0	0	0	0	13
6	12	0	0	0	0	0	0	12
7	34	1	1	0	0	0	0	36
8	15	8	2	6	0	0	1	32
9	13	4	2	3	2	3	0	27
계	123	21	19	9	2	3	1	178
비율(%)	69.1	11.8	10.7	5.0	1.1	1.7	0.6	100

의 두 종류가 있다.

연구대상 가옥의 지붕 재료는 표 4와 같이 컬러강판(69.1%), 아스팔트싱글(11.8%), 시멘트(10.7%), 너와(5.0%), 시멘트/컬러강판(1.7%), 역새(1.1%), 시멘트/아스팔트싱글(0.6%) 순으로 나타난다. 연구대상 가옥 중에 컬러강판을 지붕 재료로 사용한 가옥이 압도적으로 많다. 현지조사 과정에서는 함석이 컬러강판 지붕 재료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함석은 녹슬지 않도록 겉에 아연을 입힌 강철판인데, 여기서는 물결 모양으로 골을 만든 골함석만을 의미한다. 시멘트는 단순평지붕 가옥(19채)에서만 사용되고, 시멘트/아스팔트싱글은 눈썹평지붕 가옥(1채)에서만 사용된다. 그리고 너와(9채)와 역새(2채)는 관광용 가옥에서만 사용된다. 연구대상 가옥 중에서는 기와나 슬레이트를 지붕 재료로 사용한 가옥이 단 한 채도 없다.

4.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외벽 재료에 대한 분석

외벽 재료도 가옥의 유형을 인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외벽 재료는 건물 벽면의 마감재를 의미

한다. 먼저 외벽 재료는 한 종류의 재료를 사용하는 단일 재료와 두 종류 혹은 그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는 복수 재료로 구분한다. 가공하지 않은 암석을 외벽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돌이라고 칭하고, 암석을 석판으로 가공하여 외벽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석재라고 칭한다. 적벽돌·타일·석재·돌을 외벽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흔히 시멘트를 접착제로 사용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접착제로 사용하는 시멘트는 외벽 재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시멘트만을 사용하여 외벽을 마감한 경우에만, 시멘트를 외벽 재료로 간주한다.

연구대상 가옥의 외벽 재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멘트(27.5%), 사이딩(21.3%), 함석(16.8%), 목재(6.7%), 적벽돌(3.9%), 목재/함석(3.4%), 시멘트/함석(3.4%), 목재/시멘트(2.8%) 등이 많이 나타난다(표 5). 시멘트는 외벽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복수 재료로 시멘트를 사용한 가옥(19채)을 포함하면, 총 68채(38.2%)가 시멘트를 외벽 재료로 사용한다. 사이딩은 플라스틱·세라믹·석고·시멘트·금속 등의 자재를 건물 외벽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가공한 판재를 총칭하는 것인데, 복수 재료로 사이딩을 사용한 가옥(3채)을 포함하여 총 41채(23.0%)가 사이딩을 외벽 재료로 사용한다. 복수 재료로 함석을 사용한 가옥(15채)을 포함하여 총 45채(25.3%)가 함석을 외벽 재

표 5.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외벽 재료

연구지역 번호	단일 재료(79.8%)								복수 재료(20.2%)											계	
	시멘트	사이딩	함석	목재	적벽돌	타일	석재	역새	목재/함석	시멘트/함석	목재/시멘트	시멘트/타일	목재/점토	점토/함석	시멘트/적벽돌	사이딩/시멘트	목재/사이딩	목재/석재/시멘트	돌/시멘트/점토		투방집
1	3	4	5	0	2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16
2	4	2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3	3	0	0	2	0	0	0	0	1	1	2	0	0	0	1	0	0	0	0	0	10
4	9	4	3	1	3	0	0	0	0	1	0	2	0	0	0	0	0	0	0	0	23
5	6	0	0	2	0	3	0	0	0	0	0	1	1	0	0	0	0	0	0	0	13
6	4	1	3	2	1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12
7	7	9	8	1	0	0	0	0	3	3	0	1	0	1	0	1	0	1	0	1	36
8	8	9	5	4	0	1	0	1	0	1	1	0	2	0	0	0	0	0	0	0	32
9	5	9	3	0	1	0	1	0	0	0	1	1	0	0	0	1	0	1	0	4	27
계	49	38	30	12	7	4	1	1	6	6	5	4	3	2	1	1	1	1	1	4	178
비율(%)	27.5	21.3	16.8	6.7	3.9	2.2	0.6	0.6	3.4	3.4	2.8	2.2	1.7	1.1	0.6	0.6	0.6	0.6	0.6	2.2	100

료로 사용한다. 여기서 함석은 물결 모양의 골이 있는 골함석만을 의미한다. 그리고 복수 재료로 목재를 사용한 가옥(16채)을 포함하면 총 28채(15.7%)가 목재를 외벽 재료로 사용한다. 연구대상 가옥 중에 외벽 재료로 시멘트·사이딩·함석·목재, 혹은 이들의 결합만을 사용하는 가옥이 149채(83.7%)에 달한다는 점에서 울릉도 촌락 가옥은 외벽 재료로 시멘트·사이딩·함석·목재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하겠다.

5.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의 결합 관계로 본 가옥 유형

울릉도 산지 촌락의 가옥 유형을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의 결합 관계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지붕 형태와 지붕 재료의 결합 관계만을 중심으로 가옥 유형을 고찰하고, 그 다음에 주요 지붕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지붕 재료와 외벽 재료의 결합 관계로 가옥 유형을 고찰한다. 이러한 결합 관계로 규정된 가옥 유형을 통하여 울릉도 산지 촌락에서 많이 나타나는 가옥 유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붕 형태와 지붕 재료의 결합 관계로 본 가옥 유형에서는 표 6과 같이 ①팔작지붕-컬러강판 가옥 유형(41.0%)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②맞배지붕-컬러강판 가옥 유형(17.4%), ③단순평지붕-시멘트 가옥 유형(10.7%), ④맞배지붕-아스팔트싱글 가옥 유형(7.3%), ⑤우진각지붕-컬러강판 가옥 유형(6.2%)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 다섯 가지 유형의 가옥(147채)이 연구대상 가옥의 82.6%를 차지한다. 연구대상 팔작지붕 가옥(75채) 중에서는 2채를 제외하고 모두 컬러강판을 지붕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시멘트를 지붕 재료로 사용하는 가옥(19채)은 모두 단순평지붕 가옥(19채)에 속한다. 그리고 아스팔트싱글을 지붕 재료로 사용하는 가옥(22채) 중에서 맞배지붕 가옥(13채)이 59.1%를 차지한다.

주요 지붕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지붕 재료와 외벽 재료의 결합 관계로 본 가옥 유형에서는 표 6과 같이 ①팔작지붕-컬러강판-시멘트 가옥 유형(18.0%)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는 ②-③팔작지붕-컬러강판-함석 가옥 유형(7.3%), 맞배지붕-컬러강판-사이딩 가옥 유형(7.3%), ④맞배지붕-컬러강판-함석 가옥 유형(5.1%), ⑤-⑥팔작지붕-컬러강판-사이딩 가옥 유형(4.5%), 맞배지붕-아스팔트싱글-사이딩 가옥 유형(4.5%), ⑦단순평지붕-시멘트-시멘트(3.9%) 순으로 나타난다. 이 일곱 가지 유형의 가옥(90채)이 연구대상 가옥의 약 절반(50.6%)을 차지한다.

6. 울릉도 산지와 다른 지역의 촌락 가옥 유형과 특성에 관한 비교

울릉도 산지의 촌락 가옥을 다른 지역의 촌락 가옥과 비교해서 논하는 것도 울릉도 촌락 가옥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런데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를 중심으로 수행된 촌락 가옥 유형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울릉도 촌락의 가옥 유형을 제주도 촌락이나 경남 촌락의 가옥 유형과 비교해서 고찰하려고 한다. 즉, 제주도(이전, 2016), 경남 고성군(이전·채민수, 2015), 경남 남해도서(이전·성화룡, 2015), 경남 함양군(이전·이호욱, 2015; 이호욱, 2016)의 촌락 가옥과 비교하면서 울릉도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울릉도 산지의 촌락 가옥 지붕 형태를 다른 지역의 그것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적할 수 있다(표 7). 첫째, 울릉도 촌락의 팔작지붕 가옥 비율은 제주도나 경남 남해도서의 그것에 비교하면 탁월하게 높지만, 경남 고성군 촌락이나 경남 함양군 촌락의 그것에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없다. 둘째, 울릉도 촌락의 맞배지붕 가옥 비율이 다른 어느 지역의 그것보다 높다. 창고나 식당 등의 건물을 연구대상 가옥에 포함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울릉도 촌락의 맞배지붕 가옥 비율은 비교적 높다. 셋째, 울릉도 촌락의 우진각지붕·평지붕·결합양식지붕 가옥 비율이 다른 어느 지역의 그것보다 심히 낮다. 특히 같은 도서지역

표 6.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의 결합에 의한 가옥 유형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	순위 및 점유율**
팔각지붕 (75채)	컬러강판(73채)-1순위 (41.0%)	시멘트(32채) 함석(13채) 사이딩(8채) 목재(4채) 기타(16채)	1순위: 18.0% 2-3순위: 7.3% 5-6순위: 4.5%
	기타(2채)		
맞배지붕 (46채)	컬러강판(31채)-2순위 (17.4%)	사이딩(13채) 함석(9채) 시멘트(4채) 기타(5채)	2-3순위: 7.3% 4순위: 5.1%
	아스팔트싱글(13채)-4순위(7.3%)	사이딩(8채) 기타(5채)	5-6순위: 4.5%
	기타(2채)		
우진각지붕 (21채)	컬러강판(11채)-5순위 (6.2%)	함석(4채) 시멘트(3채) 기타(4채)	
	너와((7채)	목재/점토(4채) 기타(3채)	
	기타(3채)		
단순평지붕 (19채)	시멘트(19채)-3순위 (10.7%)	시멘트(7채) 적벽돌(5채) 기타(7채)	7순위: 3.9%
기타(17채))			

* 순위는 지붕 형태와 지붕 재료의 결합에 의한 것임.

** 순위는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의 결합에 의한 것임.

표 7. 지붕 형태와 지붕 재료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 지역	지붕 형태 및 지붕 재료	지붕 형태(백분율: %)					지붕 재료(백분율: %)							
		팔각 지붕	맞배 지붕	우진 각 지붕	평지 붕	결합 양식 지붕	기타	컬러 강판	아스 팔트 싱글	시멘 트	슬레 이트	기와	복수 재료	기타
울릉도		42.1	25.8	11.8	11.2	2.8	6.2	69.1	11.8	10.7	0	0	2.2	6.2
제주도		0.5	8.8	41.4	20.2	25.2	3.9	28.1	4.5	14.8	21.0	2.1	29.3	0.2
경 남	고성군	46.0	6.5	14.7	24.6	4.2	4.0	45.0	0.2	20.2	16.0	6.0	8.6	4.0
	남해도서	18.4	15.6	24.7	21.6	19.2	0.5	28.1	5.7	18.4	22.1	2.1	20.8	2.8
	함양군	36.5	16.7	14.4	15.1	3.5	13.8	35.3	16.7	15.1	13.0	11.9	3.0	5.0

인 제주도나 경남 남해도서의 촌락과 심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재료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7). 첫째, 울릉도 촌락 가옥의 지붕 재료로 컬러강판을 사용하는 가옥의 비율이 매우 높다. 또한 울릉도 촌락에서는 컬러강판 중에서 특히 골합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컬러강판 사용과 사뭇 다르다. 둘째, 울릉도 촌락 가옥에서는 기와나 슬레이트를 지붕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지역에서는 기와나 슬레이트를 지붕 재료로 사용하는 가옥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대상 가옥 중에 기와나 슬레이트를 지붕 재료로 사용한 가옥이 단 한 채도 없다는 사실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셋째, 지붕 재료로 복수 재료를 사용하는 가옥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매우 낮다. 울릉도 촌락 가옥의 지붕 재료에서 복수 재료의 비율이 낮다는 사실은 결합양식지붕의 비율이 낮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외벽 재료 특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표 8).⁴⁾ 첫째, 다른 지역 촌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멘트의 비율이 다른 어떤 외벽 재료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 촌락과 비교하면 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다. 둘째, 사이딩을 외벽 재료로 사용하는 가옥의 비율이 다른 지역 촌락의 그것과 비교하면 높게 나타난다. 셋째, 합석을 외벽 재료로 사용하는 가옥이 매우 많은 편이다. 다른 지역 촌락에서는 골합석을 외벽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골

합석을 외벽 재료로 사용한다는 점은 울릉도 촌락 가옥의 눈에 띄는 특성이라고 하겠다. 넷째, 제주도 촌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벽돌이나 석재의 비율이 극히 낮게 나타난다. 다섯째, 제주도 촌락의 경우에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돌로 외벽을 쌓는 경우가 흔하지만, 연구대상 가옥 중에서는 돌을 주요 외벽 재료로 사용한 가옥이 단 한 채도 없다.

울릉도 촌락 가옥의 지붕 재료와 외벽 재료로 합석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 지붕 재료로 기와나 슬레이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외벽 재료로 적벽돌이나 석재를 사용하는 비율이 극히 낮다는 사실 등은 운송비용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울릉도에서는 반도부(육지부)에서 건축 자재를 들여오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운송비용이 저렴한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울릉도 산지 촌락은 교통이 불편한 데 위치한다. 울릉도 산지 촌락에서는 포장도로가 거의 모든 가옥까지 구석구석 놓여 있지만, 도로 폭이 매우 좁고 경사가 급한 곳이 많아 건축 자재의 운송에 비교적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7. 요약 및 맺음말

울릉도의 투방집과 우테기는 일찍부터 한국지리학계에 널리 소개되었고,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그런데 울릉도의 투방집

표 8. 외벽 재료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 지역	외벽 재료	단일 재료(백분율: %)								복수 재료(백분율: %)								
		시멘트	사이딩	합석	목재	타일	적벽돌	석재	현무암	기타	목재/합석	시멘트/합석	목재/시멘트	목재/타일	점토/합석	투방집	기타	
울릉도		27.5	21.3	16.8	6.7	2.2	3.9	0.6	-	0.6	3.4	3.4	2.8	2.2	1.7	1.1	2.3	3.4
제주도		50.9	3.5	-	0.5	7.4	0.5	1.0	9.7	0.0	-	-	-	9.5	-	-	-	17.0
경남	고성군	56.3	5.2	-	1.9	1.1	33.6	0.8	-	1.1	-	-	-	-	-	-	-	-
	함양군	44.4	15.1	-	0.5	-	23.3	-	-	1.1	-	-	-	-	-	-	-	15.6

과 우데기는 결코 오늘날의 울릉도 촌락 가옥의 유형이나 특성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늘날 울릉도 촌락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가옥 중에서는 전형적인 투방집과 우데기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울릉도 촌락에는 매우 다양한 유형의 가옥들이 들어서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에 초점을 두고 울릉도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 가옥은 울릉도 산지 촌락의 농가뿐만 아니라 식당, 상점, 노인회관, 교회 건물, 펜션, 민박집, 관광용 가옥 등을 포함하였다. 형태도 알아보기 힘든 폐가는 제외하였지만, 일반적인 폐가는 연구대상 가옥에 포함하였다. 또한 특정 가옥의 대지에 부속건물로 입지하는 창고는 제외하였지만, 특정 농가 대지에 입지하지 않고 별도로 존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는 연구대상 가옥에 포함하였다. 9개 연구지역 촌락에서 선정한 연구대상 가옥은 총 178채인데(표 1, 그림 1), 이 연구에서는 178채의 연구대상 가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본론을 구성하였다.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형태 특성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았다. 울릉도 산지 촌락의 팔작지붕 가옥 비율이 다른 도서지방(제주도와 경남 남해도서)의 비율보다 훨씬 높았고, 오히려 반도부(경남 고성군과 함양군)의 비율과 유사하였다. 팔작지붕 다음으로 많은 지붕 형태는 맞배지붕인데, 맞배지붕은 창고나 식당 등의 전형적인 지붕 형태로 나타났다. 팔작지붕과 맞배지붕 다음으로는 우진각지붕과 단순평지붕 지붕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재료 특성은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았다. 연구대상 가옥의 지붕 재료는 컬러강판, 아스팔트싱글, 시멘트, 너와, 시멘트/컬러강판, 역새, 시멘트/아스팔트싱글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연구대상 가옥 중에 컬러강판을 지붕 재료로 사용한 가옥이 압도적으로(69.1%) 많았다. 울릉도 산지 촌락의 지붕 재료로 사용되는 컬러강판 중에는 함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시멘트는 단순평지붕 가옥에서만 사용되었고, 시멘트/아스팔트싱글은 눈썹평지붕 가옥에서만 사용되었다. 너와와 역새는 관광

용 가옥에서만 사용되었고, 실제 촌락 주민이 거주하는 가옥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연구대상 가옥 중에서는 기와나 슬레이트를 지붕 재료로 사용한 가옥이 단 한 채도 없었다.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외벽 재료 특성은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았다. 연구대상 가옥의 외벽 재료는 시멘트, 사이딩, 함석, 목재, 적벽돌, 목재/함석, 시멘트/함석, 목재/시멘트 등의 순으로 많았다. 복수 재료 중의 하나로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면, 시멘트는 총 68채, 사이딩은 총 41채, 그리고 함석은 총 45채, 그리고 목재는 총 22채에서 외벽 재료로 사용하였다. 울릉도 촌락에서는 가옥의 외벽 재료로 시멘트·사이딩·함석·목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지붕 형태와 지붕 재료의 결합 관계로 본 가옥 유형에서는 표 6과 같이 ①팔작지붕-컬러강판 가옥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 가옥 유형에는 ②맞배지붕-컬러강판 가옥 유형, ③단순평지붕-시멘트 가옥 유형, ④맞배지붕-아스팔트싱글 가옥 유형, ⑤우진각지붕-컬러강판 가옥 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붕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지붕 재료와 외벽 재료의 결합 관계로 본 가옥 유형에서는 표 6과 같이 ①팔작지붕-컬러강판-시멘트 가옥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②-③팔작지붕-컬러강판-함석 가옥 유형, 맞배지붕-컬러강판-사이딩 가옥 유형, ④맞배지붕-컬러강판-함석 가옥 유형, ⑤-⑥팔작지붕-컬러강판-사이딩 가옥 유형, 맞배지붕-아스팔트싱글-사이딩 가옥 유형, ⑦단순평지붕-시멘트-시멘트 순으로 나타났다.

울릉도 산지의 촌락 가옥을 제주도, 경남 고성군, 경남 남해도서, 경남 함양군의 촌락 가옥과 비교해서 고찰하였다.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형태 특성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맞배지붕 가옥의 비율이 높다는 점과 우진각지붕·평지붕·결합양식지붕 가옥 비율이 낮다는 점을 들 수 있었다.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지붕 재료 특성은 컬러강판을 사용하는 가옥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과 기와나 슬레이트를 사용하는 가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었다. 그리고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외벽 재료 특성은 사이딩과 함석을 외벽 재료로 사용하는 가옥의 비율이 높다는

주

점, 제주도 촌락의 경우와 같이 적벽돌이나 석재의 사용 비율이 극히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 있었다. 울릉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골함석을 외벽 재료로 사용하는 가옥이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함석을 외벽 재료로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의 주목할 만한 특성으로 나타났다.

지붕 재료 혹은 외벽 재료 등의 건축 자재를 육지부(반도부)로부터 울릉도까지 운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또한 울릉도 산지 촌락 가옥들이 대체로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입지하기 때문에 건축 자재를 운송하는 데에도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울릉도 산지 촌락에서는 건축 자재의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비교적 운송비가 저렴한 건축 자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골함석을 지붕/외벽 재료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 기와나 슬레이트를 지붕 재료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적벽돌이나 석재를 외벽 재료로 사용하는 비율이 극히 낮다는 점 등은 운송비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촌락 가옥의 유형이나 특성을 바람·강수량 등의 기후적 조건이나 산지·평지 등의 지형적 조건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자연환경과 결부지어 촌락 가옥 유형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은 촌락 가옥의 유형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 방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촌락 가옥의 유형은 그 자체가 어떤 인간 집단의 생활양식, 즉 문화이다. 문화는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변화하는 것이기에 특정한 요인만으로 결정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앞으로 울릉도의 촌락 가옥뿐만 아니라 한국 각 지역의 촌락 가옥에 대한 연구를 좀 더 많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 촌락 가옥의 유형에 관한 연구가 좀 더 축적된다면, 촌락 가옥의 지역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을 훨씬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촌락 가옥 유형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연구는 문화지역 구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촌락 가옥 경관의 차이는 문화지역 구분에 좋은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1) 다음의 논문과 저서는 한국 촌락 민가에 관련된 한국지리학계의 논문이나 저서들이다. 한국건축학계나 한국문화인류학계에서도 한국 촌락 민가에 관해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기덕·이승호, 2001; 김종혁, 2002; 김향숙, 1991; 박병석, 2000; 박태화, 1998(a); 1998(b); 2002; 2008; 신화경, 1996; 이승호, 2002; 이진, 2011; 이찬, 1975; 임화영, 2009; 장보웅, 1974; 1977; 1978; 1980; 1996; 최영준, 1997; 홍경희, 1985.
- 2) 울릉군 서면에 속하는 태하리는 남양리 서면 면사무소로부터 지형적 장애로 인하여 상당히 격리되어 있는 편이다. 그래서 태하리에는 서면 태하출장소를 두고, 이 출장소가 서면 면사무소의 행정업무를 대신에 처리하게 하고 있다.
- 3) 여기서 관광용 가옥이라 함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가옥이 아니라 관광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옥을 말한다.
- 4) 고성군의 경우, 가장 주도적으로 사용된 외벽 재료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단일 재료의 통계만을 얻을 수 있고 복수 재료의 통계는 얻을 수 없다. 남해도서의 경우, 지붕 형태와 지붕 재료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외벽 재료에 대한 통계는 얻을 수 없다.

참고문헌

권동희, 2012, “울릉도 지형지”, 한국지형학회지, 19(4), 39-57.

김윤화, 2013, “농촌마을 지붕경관 특성에 관한 조사 연구: 가로변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5(3), 17-24.

김찬영, 2004, “울릉도 민가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5(5), 107-118.

김창환, 2013,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의 현황과 개선 방안”, 한국사지리학회지, 23(4), 177-190.

김향숙, 1991, 강원도의 곽집 유형과 그 분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병석, 2000, 중부형 민가 평면 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태화, 1998(a), “맞배지붕 민가의 발달과 구조”, 국토지리학회지, 32(2), 59-86.

박태화, 1998(b), “맞배지붕 민가의 사진에 의한 연구”, 한국사지리학회지 7, 105-115.

박태화, 2002, “한국·중국·일본 3국 지붕의 변천,” 한국 도시지리학회지, 5(1), 35-47.

박태화, 2008, 동족촌락의 전통민가: 지리학적 고찰, 경북대학교출판부.

박희두, 1997, “울릉도의 자연지리,” 지리학 연구, 31, 27-40.

오남현, 2001, “울릉도 자연환경자원보호구역에서의 난개발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7(3), 14-28.

이승호, 2002, “한국 다설지역의 가옥 특성: 민가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37(1), 1-14.

이전, 2011, 촌락지리학, 푸른길.

이전·성화룡, 2015, “경남 도서지역 촌락의 가옥 유형에 관한 연구: 지붕 형태와 지붕 재료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4), 660-672.

이전·이호욱, 2015, “경남 함양군 촌락 가옥의 유형에 관한 연구: 지붕 형태와 지붕 재료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7(3), 70-83.

이전·채민수, 2015, “경남 고성군 촌락 가옥의 유형에 대한 연구: 지붕 형태, 지붕 재료, 외벽 재료를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5(3), 51-61.

이전, 2016, “제주도 촌락 가옥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2), 369-382.

이찬, 1975, “중부지방의 민가형태 연구 개요,” 지리학과 지리교육, 4(1), 27-40.

이혜은, 2009, “1882년의 울릉도의 지리환경,”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지, 21(2)(통권 38호), 117-131.

이혜은, 2012, “개척기 울릉도의 지리경관,”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2(4), 13-23.

이혜은·이형근, 2006, “만은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일기,” 독도연구 2006-0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호욱, 2016, 경남 함양군 촌락 가옥의 유형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화영, 2009, 전통가옥의 유형별 분포 권역에 관한 연구: 논산시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보용, 1977, “울릉도 나리동의 투방집 연구,” 지리학, 16, 25-34.

장보용, 1980, “한국의 민가형 분류와 문화지역구분,” 지리학, 22, 41-58.

장보용, 1996, 한국민가의 지역적 전개, 보진재.

조성기, 2006, 한국의 민가, 한울.

최영준, 1997, 국토와 민족생활사: 한국역사지리학 논고, 한길사.

홍경희, 1985, 촌락지리학, 범문사.

황상일, 2012, “울릉도·독도 관광의 현황과 생태관광 기반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5(1), 189-210.

교신: 이전, 52828,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이메일: gglee@gnu.ac.kr)
Correspondence: Professor Jeon Lee,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daero 501, Jinju, Gyeongnam, 52828 (e-mail: gglee@gnu.ac.kr)

최초투고일 2016. 5. 19
수정일 2016. 5. 30
최종접수일 2016. 6. 2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한 지리교육과정의 재개념화

김갑철*

Re-conceptualization of the Geography Curriculum Towards Global Citizenship

Gapcheol Kim*

요약 : 본 연구는 세계 시민성 함양과 관련하여 보다 정의로운 지리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과정 재개념화에 관한 것이다. 우선, 세계 정의의 관점에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비판적 세계 시민성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후기 구조주의적 세계 시민성 관점이 세계 '타자'에 대한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세계 정의를 보다 더 잘 지원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둘째, Carr의 논쟁적 교육과정이라는 이론적 분류법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3가지 주요 교육과정 관점으로 해체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교육과정 관점들이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 함양에 있어 윤리성 및 정치성의 관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셋째, 예측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세계의 '타자'를 보다 공평하게 고려할 수 있는 후기 구조주의 교육과정 관점을 논의한다. 끝으로, 세계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 시민성을 함양할 미래 지리교육과정 구성의 함의를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주요어 : 세계 시민성, 정의, 교육과정 관점, 지리교육과정, 후기 구조주의 교육과정

Abstract : This paper aims to theoretically discuss the re-conceptualization of the school geography curriculum toward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 achieve this goal, post-structural global citizenship is introduced as an alternative notion of global citizenship by revealing some limits of the existing postcolonial global citizenship studies for global justice. Based upon Carr's(1996) idea of curriculum typology, three major curriculum perspectives are theoretically evaluated to see if they implicitly or explicitly undermine the citizenship of global 'others' ethically and politically. Post-structuralist ideas are then suggested as an alternative approach. With reference to this standpoint, this paper concludes by providing practical implications for a more just school geography curriculum towards global citizenship.

Key Words : global citizenship, justice, curriculum perspective, geography curriculum, post-structuralist curriculum

1. 서론

오늘날 세계 시민성 개념은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교육의 담론 속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다 (Marshall, 2009). 교육 분야에서는 세계 시민으로서

학생들이 함양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를 포함한 “보다 더 세계 지향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Marshall, 2009, 262). 비록 ‘세계 시민’이라는 구체적인 교과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은 다양한 세계 시민성 프로

* 동변중학교 교사(Teacher, Dongbyun Middle School), gapcheol.kim@gmail.com

그럼, 예를 들어 방과 후 교육 활동, 통합 교과 활동, 비정부 기구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 활동 등을 통해 세계 '타자'에 대한 공평한 지식과 이해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영국의 Global Learning Programme(Hopkin, 2014), 호주의 Australia Tanzania Young Ambassadors(Haigh *et al.*, 2013), 캐나다 앨버타주 교육과정(Pashby, 2015),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개정 교육과정(Staheli and Hammett, 2013) 참조). 한국 역시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이후 세계 시민성 함양을 미래 한국 교육의 중요 의제로 설정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부, 2015). 2009 개정 교육과정(2009, 24)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세계 시민으로서 한국 학생들이 세계 '타자' 및 그들의 차이에 대해 스스로의 편견을 극복함과 동시에 다른 문화에 대해 개방성, 민감성, 성찰적 태도를 함양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학생들이 세계 공동체의 논쟁적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인류애를 바탕으로 세계 '타자'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배려와 나눔의 자세를 함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세계 시민성 교육 담론은 세계의 '타자'에 대한 보편적인 '인간에'를 강조함으로써 외관상으로는 이상적이고 정의로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Andreotti(2006)나 Staheli and Hammett(2013)의 주장처럼, 기존의 세계 시민성 개념이 암묵적으로 세계 '타자'에 대한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오히려 세계 불평등을 강화할 역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즉, 정치적 책임과 관련하여 Andreotti(2006)는 기존의 교육과정 정책들이 서구 중심의 전체화된 담론에 매몰되어 세계 '타자'와 관련된 불평등한 권력 관계와 같은 정치적인 본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윤리적 책임과 관련하여, Staheli and Hammett(2013)은 다양성, 인권과 같은 세계 시민성 교육의 요소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전체화된 정체성을 위한 도구로 이용됨으로써 인종, 계층, 젠더, 민족 등 세계 '타자'를 둘러싼 다양한 차이를 배제하고 무시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교육 이론가들은 보다 정의로운 세계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써 세계 '타자'와 그들의 차이를 윤리적, 정치적으로 공평하게 다룰 수 있는 세계 시민성

개념들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관점들 중에서 Derrida(1997)의 '해체'(deconstruction)에 천착한 김갑철(2016)의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 관점에 의거하여 미래 지리교육과정의 대안적 구성 방안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다.

교육과정¹⁾은 학생들이 세계 시민성을 함양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세계 시민성에 대한 사회, 학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관점 및 구체적인 교육과정 재개념화²⁾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 것이 사실이다(Biddulph, 2014; Marshall, 2009; Yates, 2009). 이와 관련하여 Marshall(2009, 263)은 최근의 시민성 담론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은 불평등한 세계 권력 관계에 의해 초래되는 세계 부정의의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Yates(2009)는 호주의 새로운 직업교육 이념에 대한 교수법 연구에서, 미래 시민의 방향성에 맞는 새로운 교육과정 관점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영국의 지리교육학자인 Biddulph(2014, 9) 역시 최근 지리교육의 목적과 지리교육과정 관점 사이의 정합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오늘날처럼 세계화되고, 불평등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학교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지리교육 전문가들)의 답변에 근거하여, 이러한 세계에서 지리교육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수한 지리 교육과정에 대한 탐구는 반드시 이러한 중요한 질문들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Biddulph(2014)의 문제제기는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지리교육과정 연구에 있어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즉, 세계 시민성과 같은 교육 의제에 적합한 지리교육과정 관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지리 교과교육을 통해 본래의 세계시민교육의 목적은 변형,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어떠한 교육과정 관점들이 세계 시민성을 보다 더 잘 함양할 수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세계 시민성을 지향하는 구체적인 지리교육과정, 교과서,

교수법 개발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연구일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 시민성을 보다 더 잘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관점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지리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함의를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³⁾. 이를 위해 우선,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비판적 세계 시민성 담론의 주요 특징과 한계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주장되고 있는 후기 구조주의 담론(김갑철, 2016)을 소개할 것이다. 한편 세계 시민성과 같은 교육 목적은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재현될 수 있다. 두 번째 절에서는 교육과정을 둘러싼 3대 교육과정 관점들을 소개하고, 지리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이들 교육과정 관점들을 반영할 경우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 함양에 있어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고찰한다. 다음 절에서는 Biesta(1995)와 Säfström(1999)의 교육과정 접근법이 세계 ‘타자’에 대한 차이를 정치적, 윤리적으로 다룸으로써 기존 교육과정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제시할 것이다. 끝으로, 대안적 교육과정 관점에서 지리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함의를 논의한다. 본 연구는 미래의 지리교육과정이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 ‘타자’를 둘러싼 윤리적, 정치적 질문들을 허용하도록 해체적, 민주적, 숙의적으로 개발될 것을 주장한다.

2.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은 10여 년 전부터 후기 식민주의 이론에 천착한 영미권의 비판 교육학자들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담론이다(Kapoor, 2004; Passiby, 2015; Bourn, 2014; Martin and Griffiths, 2012; Schmidt, 2011). Kapoor(2004, 627)는 인도의 제국주의에 대한 마이크로 내러티브를 해체한 Spivak(1988)의 연구를 바탕으로 탈식민지화의 장치로서 “초자아적 성찰”(hyper-self-reflexivity)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Andreotti(2006, 49)는 Spivak(1988)과 Bhabha(1994)의 해체적 연구를 참고하여, 세계 정의를 지원하는 시민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써 세계

‘타자’에 대해 학생 스스로가 갖고 있는 관점들의 가정, 결과, 한계점에 대해 “비판적 문해력”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Bourn(2014, 6)은 Andreotti(2006)의 이론을 바탕으로 타자를 향한 정의를 위해 서구 중심의 인식론에서 벗어나 “세계를 다른 시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들의 연구들은 세계 시민성의 조건으로써 현대 세계의 부정의를 초래한 ‘비정치성’에 주목하고 있다. 즉, 세계 ‘타자’와 관련하여 과거 서구 중심의 식민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상상적’, ‘근대적’, ‘편파적’ 언어가 현대의 세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한다(Jazeel, 2012a; 2012b). 연구자들은 이러한 서구 중심의 담론 틀은 세계 ‘타자’를 향한 우리들의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방해하거나 왜곡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Andreotti, 2006). 나아가 서구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치된 지식과 이해는 세계 ‘타자’의 현실과는 무관하게 그들의 실제 목소리들을 소외시키거나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치환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Martin and Griffiths, 2012; Winter, 1996). Winter(1996)는 영국의 지리교과서 텍스트 분석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장소 및 사람들에 대한 재현이 실제 그들의 현실 혹은 서구에 의한 과거 식민지 역사를 배제한 채 서구 백인 중심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Martin and Griffiths(2012)는 영국의 (지리)교육과정 정책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 담론 속에 지배적으로 내재해 있는 유럽중심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 이들은 영국 정부에서 최근 세계 ‘타자’-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보다 공평한 이해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들이 오히려 ‘결핍’ 혹은 ‘원조’로 대변되는 고정관념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다(Martin and Griffiths, 2012, 912). Martin and Griffiths(2012)와 Winter(1996)의 연구들은 지리교육과정을 통해 교수-학습되는 전체주의적 지리 지식들로 인해 세계 ‘타자’를 향한 공평한 대화 혹은 상호 주관적 이해를 위한 노력 자체가 어찌면 불가능하며, 나아가 지리교육과정이 세계 부정의와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Andreotti(2006)와 Bourn(2014)은 정의로운 세계를 위해 교사 및 학생들이 탈식민주의 담론을 통해 서구

에 의해 지배되어온 세계 내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비판적으로 도전할 것을 강조한다.

후기 식민주의적 담론은 세계 '타자'에 대한 우리의 주관성이 서구 중심의 근대적 담론에 의해 이미 왜곡되어 있으며, 세계시민교육이 오히려 세계 '타자'와의 불평등한 관계를 지속·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통찰을 제공한다. 하지만 김갑철(2016)은 Allan(2013)과 Mannion *et al.*(2011)의 논의에 근거하여 이러한 후기 식민주의적 통찰 역시 세계의 '타자'들을 배제하지 않고 공평하게 고려하는데 있어 일부 한계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그는 비판적 교육학자들이 서구 대 비서구의 구조적 권력 관계에만 지나치게 매몰된 나머지 세계 '타자'를 둘러싸고 있는 다층적이고 복잡한, 동시에 맥락화된 전체주의적 사고-예를 들어 인종, 민족, 종교, 장애/비장애, 계층, 젠더 등-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Allan(2013)의 지적처럼, 서구/비서구의 이분법적 합리성이 세계 '타자'에 대한 오늘날의 부정의를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김갑철(2016)은 후기 식민주의 담론의 전체화된 시도를 보완하는 시민성 담론으로써 Derrida의 '해체'(deconstruction) 개념에 주목한다. 해체는 단어와 의미 사이의 불완전한 관계에 주목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전체화하려는 것이 불가능함을 강조하는 철학적 개념이다(Derrida, 1997; 김갑철, 2016). 즉, 세계를 설명하는 언어의 의미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세계 '타자'를 일반화 혹은 재현하려는 모든 시도는 세계 '타자'를 불공평하게 배제, 소외, 치환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세계 '타자'에 대한 전체화된 담론을 벗어난 관점들 내에서도 '타자'의 목소리는 그러한 관점을 탄생시킨 집단 안/밖에서 또 다른 잠정적인 전체화된 담론들에 의해서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해체적 접근은 기존의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전제들을 완전히 거부하는 '파괴' 혹은 모든 관점들을 수용한다는 상대주의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해체는 세계의 '타자'에 대한 언어적 재현들에 내재된 불안정성, 비논리성을 밝힘으로써 지금까지 배제되고 소외된 세계 '타자'를 정의를 통해 초대하고자 한다(Winter, 2014). 해체는 모든

전체화된 이데올로기적 시도에 의해 세계 '타자'에게 가해진 과거/현재의 상처들을 치료하려는 정치적·윤리적 방식의 책임이며, 정의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보다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시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계 정의를 지원할 수 있는 세계 시민성을 기존의 교육과정 접근법으로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러한 세계 시민성을 보다 더 지원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과정 관점은 어떤 것인가?

3. 교육과정 관점

'교육과정'(Curriculum)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4가지 질문과 연관되어 있다-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Carr, 1996). 이러한 설명은 자칫 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이 가치중립적이고 고정 불변의 성격을 가진 '객관적 실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Carr(1996)가 강조하듯이, 교육과정은 교육 연구자 혹은 관련 실천가들이 갖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전제, 신념, 경험 등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되고 실천될 수 있는 개념이다. 즉, 우리들이 당연시 하고 있는 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은 사실 논쟁적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담론들 중의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최근 교육계에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즉, 교육과정 담론에 따라 세계 시민성과 같은 교육 의제가 교육 현장에서 다양하게 재현·실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절은 교육과정에 관한 Carr(1996)의 교육과정 범주화⁴⁾-기술로서의 교육과정; 실천으로서의 교육과정; 비판으로서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필자가 천착한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이 각각의 교육과정 관점에 따라 어떻게 구체화, 실천될 수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1) '기술'로서의 교육과정

교육과정 관점과 관련하여 현대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교육학자를 꼽는다면 Ralph Tyler일 것이다. Tyler는 1949년에 출간한 책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을 통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학자이다 (Carr and Kemmis, 1986). 그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4가지 질문들을 제기한다-‘학교는 어떠한 교육 목적을 추구할 것인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떠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이러한 교육 경험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직할 것인가? 교육 목적 달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Tyler, 1949, 1). 이러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그는 오늘날 잘 알려진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4대 기본 원칙들을-명시적인 내용 및 행동으로 구성된 ‘교육 목표’; 교육 목표에 의거하여 적절한 행동을 달성할 가능성을 고려한 ‘학습 경험의 선정’; 연속성, 연계성, 통합성의 기준을 고려한 ‘학습 경험의 조직’,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변화에 집중한 ‘평가’-제시한다.

Tyler식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들로 인하여 오늘날 많은 국가의 학교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하나의 지배적인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Carr and Kemmis, 1986; Scott, 2006). 우선, 교육과정 개발의 과학성과 논리성을 강조한다(Scott, 2006). Tyler는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교육 목표의 설정에서부터 교육 평가의 실행에 이르는 각 단계에 적합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노력한다(Carr and Kemmis, 1986). 예를 들어, Tyler(1949)는 ‘교육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세 가지의 자원들을-학습자에 대한 연구; 학습자가 속한 사회; 교과 전문가의 제안들-반드시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나아가 이렇게 만들어진 교육 목표는 교육철학 및 교육 심리학적 해석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정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교육과정에 대한 Tyler의 이러한 논리적, 과학적 접근법은 20세기 행동주의 심리학의 발달과 더불어 교육과정에 대한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로써 간주되면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어 나간다.

둘째, Tyler식 모델은 교육 목표를 준거로 한 ‘선

형적’이며 ‘기술적’ 교육과정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Cornbleth, 1990; Hunkins and Hammill, 1994). 전술한 바와 같이 Tyler(1949)는 교육과정의 개발에 있어 4가지 주요 교육과정 요소들을 강조한다. 나아가 교육과정 개발의 시작은 학습 내용 및 학습자 행동의 측면을 반영한 ‘교육 목표’ 설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Tyler(1949, 5-6)는 교육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대목에서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교육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교육은 인간의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 교육 목표는 인간의 행동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넓은 의미로 인간의 사고, 감정, 명시적인 행동으로까지 확장 된다”. Tyler(1949)에 따르면, 교육 목표는 학습자의 행동 변화를 포함하며 동시에 학습자의 학습 경험의 선정, 조직 및 평가를 위한 핵심 기준으로써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러한 선형적, 기술적 접근은 오늘날 범교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하나의 규칙으로 간주되고 있다(Cornbleth, 1990).

정의 지향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하여 Tyler의 교육과정 관점은 몇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Tyler의 교육과정 관점이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이 강조하는 ‘윤리적’, ‘정치적’ 공간을 제공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한다. 정치성과 관련하여, Tyler의 기술적 교육과정 관점은 교육과정이 국가 및 일부 이익집단이 지향하는 특정 사회를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일 수 있음을 간과한다. Tyler 모델에서 지리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전문가 집단-예를 들어 특정 정치인, 소수의 교육 정책 전문가, 지리교과 전문가-에 의해 이미 개발된 것이며, 정해진 결과를 향해 작동하고 있는 존재로 간주된다(Carr, 1996). 이러한 교육과정 관점 내에서 지리교사는 주어진 교육과정 목표들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사명이며, 학생들은 정해진 교육과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한다(Eisner, 1984). 하지만 비판적 교육학자인 Apple(1996)과 Carr and Kemmis (1986)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일부 이익 집단이 추구하는 불평등한 교육 결과를 생산,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일 수 있다. 이 말은 장차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 개념이 한국의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교육의

제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일부 교육과정 이익집단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한적, 왜곡된 형태의 세계 시민성 개념만이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Tyler가 강조한 교육과정 개발의 4대 요소들은 세계 ‘타자’와 관련하여 선택적인 사회 현실만을 설명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로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비록 영국적 맥락이지만 Morgan (2000)의 영국 국가지리교육과정 연구는 기술주의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는 영국의 지리교육과정이 국가들 간 혹은 국가 내 불평등한 경제적, 사회적 개발을 ‘불가피한’ 현실로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리교육과정 개발자들이 서구 자본주의적 관점만을 당연한 것으로 재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Tyler의 교육과정 관점은 지리교육과정 속에 내재해 있을지도 모를 세계 ‘타자’와 관련된 지리지식과 권력, 지리교육과 사회 사이의 불공평·비이성적인 이데올로기적 관련성에 침묵하고, 세계 ‘타자’의 존재를 배제함으로써 지리교육과정을 비정치화³⁾할 수 있다.

윤리성과 관련하여 Tyler의 교육과정 관점은 지리교사 및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맥락들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Schwab, 1969). 기술주의 교육과정 관점은 주어진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중립적’ 과정으로써 교육과정, 교수-학습을 암묵적으로 전제 한다(Carr, 1996). 즉, 교사와 학생은 자신들의 사회적, 정치적, 제도적, 집단적 맥락과 관계없이 사전에 설정된 교육 목표의 이상들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Buckingham, 1996). 하지만 Schwab(1969)은 교육과정은 다양한 지역, 사회, 문화적 맥락들 속에서 실천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비록 교실 공간에 있는 지리교사와 학생이 일반화된 존재인 것 같지만 이들은 사회·경제적 환경뿐만 아니라 인종, 민족, 젠더, 종교 혹은 비/장애 측면에서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다. 만약 일부 지리교사나 학생이 세계 ‘타자’에 대한 지리지식과 관련하여 성차별주의, 인종주의 혹은 계층주의와 같은 논쟁적인 이슈를 제기한다면, Tyler식의 교육과정 모델 하에서 이들의 생각이나 의견은 정해진 교육 목표를 근거로 비이성적, 편파적 문제제기로 치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세계시민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지리교육과정의 이익집단이 “서구, 남성, 백인, 중산층, 크리스티교, 건강한 신체”를 기준으로 교육과정 요소들을 구성할 경우, 지리교사와 학생은 주어진 교육과정 요소들을 당연시함으로써 교육과정 속에 착근해 있을 지도 모를 “서구 중심주의,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계층주의”를 비윤리적, 무비판적으로 강화해 나갈지도 모르겠다(Ellsworth, 1989, 304). Tyler의 교육과정 모델은 논리적, 과학적 설명으로 인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어 있다. 하지만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이 강조하는 윤리성과 정치성의 관점에서 기술주의적 관점은 한계를 내포한다. 특히 윤리성과 관련하여 Tyler식 접근법은 세계 시민성 함양의 중요한 교육적 동력이라 말할 수 있는 지리교사와 학생의 다양한 실천적 맥락들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Tyler주의의 맹점은 다음의 ‘실천’적 교육과정 관점을 통해 보완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실천’으로서의 교육과정

‘실천주의’ 교육과정은 Tyler의 교육과정 모델을 비판한 Schwab(1969)의 저서 『The Practical: A Language for the Curriculum』에서 제안되었으며, Stenhouse(1975), Reid(1978), Eisner(1984)와 같은 교육학자들에 의해 지원되면서 하나의 관점으로 정착한다. Schwab(1969, 1)은 “교육과정 영역은 빈사 상태에 있다”라는 다소 급진적인 말을 하면서 미국의 교육이 지나치게 기술주의 교육과정에 함몰되어 있음을 비판한다. 그는 많은 교육학자들이 행동주의 사조에 의존함으로써 교육이 가진 다양성과 특수성보다는 일반화와 규칙성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말한다. Schwab은 ‘실천적’ 교육이 이론적 교육과는 다르다고 강조한다. 즉, 교육은 추상적이거나 이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관심을 기존의 이론적인 것에서 실천적인 것으로 이동할 것을 제안한다.

Schwab(1969)에 따르면 실천적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제거하는 것이다. 즉, 교육현장에서 그 동안 이론에 의해 무시되어 온 다양한 관점

들, 교육 실천에 근거하여 기존의 교육 이론들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Schwab에 따르면 교수활동은 이미 정해져 있는 교육 자료들을 학생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 속에서 교육의 가치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숙의’(deliberation)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Schwab은 이러한 교육 활동을 위해서 ‘실천적인 기술’은 필수적이며 4가지 요소들로-현재 교육 상태에 대한 지식 갖기; 현 교육 상태가 직면한 문제를 확인·명료화하기;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숙의 사용하기-구성될 것을 제안한다.

Eisner(1984)가 지적하듯이, Schwab(1969)의 실천적 교육과정 관점은 Aristotle과 Dewey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다음의 특징들로 인해 Schwab의 아이디어는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 교육과 관련하여 주목할 가치가 있다. 첫째, 실천적 교육과정 관점에서는 교육과정을 하나의 ‘실험’으로 간주한다(Stenhouse, 1975). Tyler식 모델에서 교육과정은 전문가에 의해 주어진 결과물이며, 교수-학습은 정해진 결말을 향해 수행되는 교육 활동으로 간주된다. 기술주의 교육 실천가들은 교실 내의 다양성, 교사와 학생의 상호 관계, 학생의 특징과 같은 교육적 맥락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실천적 교육과정 관점은 주어진 교육과정 목표 및 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와 관련하여 Schwab(1969)은 교육과정을 ‘선택’의 문제로써 재평가한다(Carr and Kemmis, 1986). 즉,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에서 교사는 자신의 교육적 가치에 적합한 행위를 선택해야 하며 전술한 실천적 기술을 통해 이러한 교육적 가치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지역 맥락에서 교사, 교실, 학교에 따라 유연하게 개발·적용되어야 하며,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듯 교실 실천을 통해서 교육적 가치들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실천적 교육과정은 윤리적 가치와 목표 달성을 강조한다(Carr and Kemmis, 1986; Eisner, 1984). 전술한 바와 같이, Tyler의 모델은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주어진 교육 목표들을 강조한다. 하지만 실천적 관점은 교육과정을 윤리적 가치들이 교수활동을 통해 실천되는 것으로 본다. 즉 교사의 전문지식은 주어

진 교육과정 원칙들을 명료화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윤리적 관점에 근거하여 교육 실천과 관련된 자신의 결정들을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능력에 있다고 본다(Carr and Kemmis, 1986, 30-31). 또한 교사는 도덕적 개발자(moral developer)로서 ‘숙의’를 통해 교육적 가치들을 성취할 수 있는 적합한 대안들을 취사선택하는 존재로 간주된다. Eisner(1984, 204)는 숙의를 “인류가 가진 가장 최상위 단계의 지적 힘”이라고 말한다. 또한 교사는 질문들-윤리적 가치들을 실천하는데 있어 어떤 문제가 제기되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없는가?; 만약 대안이 있다면 이러한 대안들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을 통해 숙의함으로써 교육과정 실험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숙의 과정에서 교사는 교육적 가치와 관련하여 스스로의 가정에 대해 명료화할 수 있어야 하며 동료교사나 학생들과 함께 스스로의 결정에 대해 반성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Schwab(1969)의 실천적 교육과정 관점은 반성적, 상호 호혜적 윤리에 기반을 둔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Stenhouse(1975, 92)의 평가처럼, 정해진 교육 목표의 성취 보다는 탐구 활동, ‘타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교육적 가치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는 과정 지향 교육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천주의는 기술적 교육과정 관점과 비교하여 교육과정의 실천적 측면, 교사 및 학생을 둘러싼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이 강조하는 ‘정치성’의 공간과 관련하여 실천주의 교육과정 관점 역시 몇 가지 제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실천주의 교육과정 관점은 교육과정을 둘러싼 정치적 권력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Schwab(1969)과 Stenhouse(1975)는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이 교육과정의 개발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한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많은 국가에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실천 과정은 교육 당국의 통제 하에 있다. 이 말은 지리교육과정 개발을 주도하는 일부 이익집단에 의해 현장 지리교사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교육적 가치 및 목적이 평가 절하, 치환,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대훈(2006)

은 한국의 지리교육과정 정책 및 교육과정 개발이 특정한 이익 집단-예를 들어 일부 정치가, 교육부의 정책 전문가, 대학의 지리학자 및 지리교육학자 등-의 관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실을 문제시한다. 사실, Schwab(1969)과 Stenhouse(1975)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특별히 논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리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당국 및 일부 이익 집단의 통제에 인해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을 지향하는 실천적 교육과정 운동은 일정 부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실천주의 교육과정 관점은 지식과 권력 사이의 공모 관계를 간과하고 있다(Beane and Apple, 1999; Giroux, 1992). Schwab(1969)의 아이디어는 지식이 권력에 의해 통제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지 않고 있다. 실천주의 이론가들은 교육과정을 주어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본다. 이 말은 기술주의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지식에 대한 접근법이 상대적으로 유동적임을 의미한다(Scott, 2006). 하지만 지식 자체가 특정 이익 집단이나 제도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Jazeel(2012a; 2012b)은 지리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세계 '타자'에 대한 지식은 '서구'와 '비서구' 사이의 현존하는 식민지 사회 구조 담론을 강화하거나 재생산할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을 지적한다. 또한 실천주의 교육과정 관점은 (지리)교사들을 전문가나 도덕적 개발자로 평가하고 있지만, 세계 '타자'와 관련하여 지리교사들의 도덕성 자체가 편파적 지리 지식을 강화할 매개체로서 작동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Foucault, 1991; Rose, 1990). 요컨대 실천주의 교육과정 관점은 지리적 지식에 대한 제한적인 전통에 의해 지리교육과정, 실천들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따라서 실천주의 교육과정은 정의 지향 세계시민성이 강조하는 '정치적' 공간을 충분히 구성하는데 있어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판적' 교육과정 관점에 의해 일부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3) '비판'으로서의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이데올로기적 왜곡 가능성에 대한 비

판은 브라질의 교육자 Paulo Freire(1972)의 책 『Pedagogy of the Oppressed』의 출간 이후, Giroux(1980), Apple(1996), McLaren(1998)과 같은 교육 이론가들의 연구들을 통해 '비판적' 교육과정 담론으로써 정착하게 된다. Freire(1972)는 현대 교육을 '뱅킹'(banking) 시스템으로 정의함으로써 교육은 선택적인 사회를 재생산하고 있으며, 피억압자에 대한 억압자의 지배를 유지시켜 주는 도구라고 주장한다. 즉, 이러한 '뱅킹' 교육 하에서 학생들은 억압자에 의해 제공된 선택적인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수동적인 수용자로 간주된다. Freire는 주어진 교육 시스템 하에서 학생들이 지식과 권력 혹은 학교 교육과 사회 사이의 공모 관계에 대해 학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비판한다.

Freire(1972)는 피억압자들의 해방을 위해 '의식화'(conscientization)과 '실천'(praxis)라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대안적 교수법으로써 '대화'와 '문해력' 교육을 강조한다. 의식화는 양심의 발달적 과정으로써 이데올로기적 억압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깨달음은 문해력과 대화 교육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데 문해력 교육을 통해 피억압자는 특정 집단, 제도,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지식, 교육, 사회가 지닌 억압적 특징을 비판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한편 대화를 통해서도 피억압자가 소외되어 온 상황을 인식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반성하게 된다. Freire는 의식화가 반드시 억압적인 현실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실천을 통해 억압자로부터 피억압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Freire(1972)의 교육철학 및 교수법을 반영한 교육과정 관점은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의미한 특징이 관찰된다. 첫째, 비판적 교육과정 관점에서는 교육과정을 정치적 도구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즉, 교육과정은 국가를 포함하여 특정 이익 집단에 의해 선택적 사회를 재생산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Tyler식 접근법에서는 정치가, 교육 정책가, 교과 교육 전문가와 같이 교사보다 '뛰어난'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된 이상적인 결과물으로써 교육과정을 일반화하였다(Carr, 1996). 그 결과 교사의 역할은 주어진 교육과정을 문제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목표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비판적 교육학자들은 불공평한 교육 결과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장치로서 교육과정을 평가한다(Apple, 1996). 즉, 교육과정은 교육적 가치나 목적보다는 국가 및 특정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데에 더욱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과 같은 가치는 실제 교육과정 속에서 왜곡된 형태로 재현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의 원칙들은-교육 목표, 학습 경험, 평가-교육과정 속에서 선택적 사회 현실만을 반영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비판적 이론가들은 교육과정 원칙들이 중립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한다. 그들은 비판적 교육과정을 통해 지식과 권력 혹은 교육과 사회 사이의 불공평하고 비이성적인 이데올로기적 공모 관계를 표면화하고 도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비판적 관점은 교육과정 내 교사들의 역할을 ‘이데올로기 비판’으로 간주한다(Carr and Kemmis, 1986). 실천적 교육과정 관점에서는 숙의를 위한 존재로서 교사들을 평가하였다. 즉, 교사들은 지역 맥락에서 스스로의 교육적 가치와 목적을 반성하는 헌신적 존재로 본 것이다(Schwab, 1969). 하지만 Carr (1995, 50)는 실천적 교육과정 관점에서 말하는 교사의 자기반성은 “해방된”(emancipated) 것이 아니라 “계몽된”(enlightened) 결과임을 강조한다. 이 말은 자기반성이 다양한 교육적 맥락 속에서 교사 스스로가 갖고 있는 교육적 가치에 대한 자기 지식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교사들이 자신들의 지식이나 신념이 특정한 담론적인 전통, 이데올로기에 의해 이미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을 반드시 인식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판적 교육학자들은 교사들이 “비판적 반성을 통한 교육 이론을 정립하기 위하여...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자율성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한다(Carr, 1995, 41). 다시 말해 보다 정의롭고 이성적인 사회를 위해 교사들은 실천적 교육과정 관점에서 강조하는 개념인 도덕적 개발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소위 Carr(1996, 17)가 말하는 “이데올로기 비판”을 통해 교육과정 속에서 스스로의 교육적 신념과 가치를 비판적으로 검

토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들은 이데올로기 비판을 통해 교육과정 실천들이 어떤 이익 집단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역사적, 문화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인식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교육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왜곡을 의식화할 수 있도록 가르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다.

비판적 교육과정은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 개념을 학교 현장에서 구체화하는 데 다소의 긍정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육과정 관점은 특정한 형태의 지리 지식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예를 들어, 세계 불평등의 재생산과 연계된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계층주의, 자본화 중심주의-실존하는 다른 목소리를 소외시킬 지리교육의 공모관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Giroux, 1992). 비판적 교육과정 관점은 지리교사와 학생들이 세계 ‘타자’를 향한 불공평하고 비민주적인 권력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회적으로 왜곡된 지리 지식들을 분명히 밝히도록 허용할 것이다. 나아가 특정한 지리교육과정 지식이 누구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도 질문을 허용할 것이다. 하지만 Morgan(2000)의 지적처럼, 비판적 교육과정 관점은 정의 지향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우선, 비판적 교육과정은 합리주의에 근거하고 있다(Ellsworth, 1989, 304). 비판적 교육과정 관점에 따르면 학생들은 다양한 도덕적 관점들을 반성적으로 검토하여 스스로의 이성적 자율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본다. 나아가 중국에는 사회정의 및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한다(Carr, 1995).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합리주의의 우월성에 근거하고 있다. 이 말은 학생은 이성적인 존재이며, 인류의 진보나 민주적인 공동체와 같은 인류의 보편적인 전제들을 수용해야만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비판적 전통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제도적, 집단적 맥락에 관계없이 사회 정의 및 정치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존재로 간주한다(Buckingham, 1996). 하지만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계층주의와 관련하여 일부 학생들이 정치적 이슈를 제기한다면 이들의 의견은 합리주의에 근거하

여 편견, 편파, 비이성적인 사건으로 치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Ellsworth, 1989). 따라서 비판적 교육학자들이 강조하는 해방(empowerment)이라는 개념 속에는 지리교사, 학생들이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서구중심주의,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세계의 '타자'를 또 다시 배제, 소외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비판적 교육과정 관점은 지리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존재하는 제도화된 비대칭적 권력 관계를 재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Ellsworth, 1989). Carr and Kemmis(1986)에 따르면, 교사는 해방자(emancipator)로서 교육의 이데올로기적 왜곡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이다. 이 말은 지리교사는 세계 '타자'와 관련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내부화된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계급주의적 사고방식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세계에 대한 지리교사들의 이해도는 학생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하지만 Ellsworth(1989)는 비판적 교육과정의 이러한 전제를 비판한다. 그녀는 자신의 교수활동에 대한 반성을 통해, 인종주의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은 백인 중산층 여성이라는 스스로의 맥락적 구성요소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따라서 Buckingham(1996)이 지적하듯이, 비판적 교육학자들은 지리교사들의 인식과 경험이 학교 내의 제도화된 규칙들에 의해 이미 통제되어 있을 여지를 간과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지리교사들이 자신의 맥락적 구성요소들에 의해 세계 '타자'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무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과 대안적 교육과정 관점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은 가치중립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이한 철학적 전제와 상황적 맥락에 따라 기술적, 실천적, 비판적 관점으로 진화해 온 불안정한 존재이다(Hartley, 1997). 특히, 최근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정

의 지향 세계시민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교육과정 관점들은 부분적으로 '비정치성' 혹은 '비윤리성'이라는 한계로 인해 세계 '타자'를 공평하게 인식하는데 있어 제한이 뒤따른다. 본 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과정 관점으로써 후기 구조주의 교육 이론가인 Biesta(1995)와 Säfström(1999)의 아이디어-교육과정은 개방성, 비결정성의 '정치적 공간'이며, 차이를 공평하게 취급하는 '윤리적 공간'이다-에 주목한다.

1) 정치적 공간으로서 교육과정

Biesta(1995)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항상 권력 관계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인 활동이다. Tyler의 모델에서는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지식, 가치, 태도가 '정의로운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가 이미 상호 '동의'한 결과물임을 전제한다. 하지만 Biesta는 '정의로운 미래', '동의'라는 용어를 중립적인 존재로 당연시 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동의'라는 단어는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해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누가 무엇을 누구를 위해 결정하는가? 비록 교육과정은 동의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가치중립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정치인, 정책 전문가, 교과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에는 이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교육과정의 원칙들은 선택적인 사회의 재생산과 연관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을 통한 교수-학습은 세계의 '타자들'에 대한 배제, 소외로 귀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Biesta(1995, 175)는 모든 동의는 "지역적, 맥락적, 상황적이며 따라서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Biesta(1995, 170)에게 있어 교육과정은 진리의 정치학이며 교육과정을 통한 앎은 "정치적 사업"(political enterprise)으로 간주된다.

Biesta(1995, 177)는 학생들의 자아 정체성을 "대화적, 상호 주관적인 그래서 정치적인" 실체로 다룰 것을 강조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의 결정은 항상 권력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교육과정의 원칙들은 일부 이익 집단 혹은 국가의 특정 이상에 맞추어져 있으며, 필수 불가결하게 학생들의 주관성에

간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Biesta는 학생들의 인격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수정이 가능하고 파편적인 것으로 이해할 것을 강조하면서, 교육과정을 통한 자기창조의 과정은 ‘타자’에 대한 배제와 소외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한다. 비록 개인의 인격은 정치와는 동떨어져 있는 사적 영역으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항상 일부 이익 집단의 이데올로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은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Biesta(1995)는 학생들의 인격을 정치의 중심 영역으로 간주하면서, 특정 이데올로기에 의해 배제될 수 있는 ‘타자’들을 초대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 대화할 것을 강조한다. 즉, 교육과정은 ‘개방성’과 ‘비결정성’의 정치적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윤리적 공간으로서 교육과정

Säfström(1999, 230)은 교육과정을 진리를 전달하는 활동이라기보다는 차이들을 정당하게 다룸으로써 정의의 조건들을 창조하고 실천하는 공간이 될 것을 강조한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교육과정 관점들은 공통적으로 합리주의 및 보편주의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즉 기술적, 실천적 교육과정 관점은 ‘외부로부터’ 온 중립적인 진리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고, 비판주의 교육과정 관점은 광범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를 하나의 중심 담론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세 가지 교육과정 관점들은 공통적으로 교사와 학생을 진리를 습득하는 이상적, 이성적 존재로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Säfström(1999)은 이러한 교육과정 관점들이 실존하는 ‘타자’의 ‘차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을 경고한다. 즉, 차이들을 일시적인 상태로 평가함으로써 극복, 통합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의 과정에서 ‘무엇이 배제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부차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Säfström(1999, 224)은 “모든 구성과 안정은 무엇인가를 배제하며 이는 곧 억압, 부정의, 폭력을 초래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Säfström(1999, 225)은 교육과정을 지식의 정치학으로 간주하면서 “진리 혹은 반대 진리를 정립하기 보다는 차이들을 다루는 정의의 문제가 될” 것을 강조한다.

Säfström(1999, 228)은 ‘타자’에 대한 무한한 책임의 일환으로써 ‘타자’가 도래할 수 있는 윤리적 공간을 정의로운 교육과정으로 규정한다. Tyler의 기술주의 관점에서는 교사나 학생이 ‘타자들’과 관련된 사고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연시한다. 즉, ‘타자’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타자’가 마치 나와 ‘동일한’ 존재로 환원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학생들이 ‘타자’를 향한 대화의 윤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세계 내에서 이미 특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인식아(knower)로서 교육과정 내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는 존재(monologic speaker)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Säfström(1999, 227)은 주체들 간의 관계를 허용하는 전제 조건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강조한다—“타자와의 관계에 있어 자아와 동일시한다든지 혹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Säfström은 “타자는 주체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 있는 주체는 … 타자와의 관계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Levinas(1998)의 철학을 바탕으로 Säfström(1999)은 타자와의 관계는 전체주의적인 언어로 재현되는 사고, 개념 혹은 일련의 주어진 범주를 통해 마련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오히려 Säfström(1999, 228)은 “‘나에게’ 도래할 그리고 ‘나를 정의할’ 타자”를 통해 이러한 관계가 가능함을 강조한다. 이 말은 주체들 간의 관계는 언어를 통해 구성되며, 언어를 통한 도덕적 관계를 통해 주체는 타자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Säfström(1999, 228)에 따르면, 이러한 관계는 “통제가 결여된 선행적인 존재론이며 일반화나 개념화를 위한 모든 시도를 거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은 보편주의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차이를 ‘동일한 것’으로 환원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타자’와 그들의 차이들에 대해 대답할 능력이 필요하다.

Biesta(1995)와 Säfström(1999)의 아이디어는 교육과정을 정치적, 윤리적 실체로써 새롭게 접근하고 있다. 즉, 교육과정을 불공평한 권력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배제의 정치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상이한 ‘타자’와 그들의 차이들을 공평하게 취급할 윤리적 공간으로써 교육과정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

다. 이러한 교육과정 접근법은 앞서 논의한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을 구체화 하는데 적합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 개념은 세계 '타자'에 대한 학생들의 상상력이 특정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될 수 있으며, 따라서 세계 정의를 위해 학생 스스로가 갖고 있을지도 모를 왜곡된 재현에 도전할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이다(김갑철, 2016). 대안적 교육과정은 전체화된 근대적 구조를 벗어나 타자의 도래를 향한 통로로써 보다 정의로운 공간을 열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관점은 세계 '타자'에 대한 지리 지식을 현재 진행형인 생명의 상태(Massey, 2004)로 간주함으로써 정의 지향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은 세계 시민성 함양에 기여할 지리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 어떠한 시사점은 제공하는가? 다음은 Biesta (1995)와 Säfström(1999)의 정치성 및 윤리성의 관점에서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을 지원할 수 있는 지리교육과정의 구성방안을 이론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5. 보다 정의로운 지리교육과정 구성하기

지금까지 본 연구는 정의 지향 세계시민성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정 관점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대안적 교육과정은 모든 전체화된 이데올로기에 의해 배제, 소외, 치환되어 온 세계 '타자'와 그들의 차이들을 공평하게 다룰 수 있도록 '정치성' 및 '윤리성'의 공간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Biesta(1995)와 Säfström(1999)의 교육과정 관점-정치성과 윤리성의 공간으로써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미래의 지리교육과정은 세 가지 측면에서-세계 '타자'에 대한 지리 지식, 지리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의 네트워크, 지리교육의 가치에 대한 논의-다음과 같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1) 지리적 지식

미래의 지리교육과정은 세계 '타자'와 관련된 지리적 언어 즉, 지리적 지식 및 개념과 관련하여 '해체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지리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 해체적 접근을 허용한다는 것은 세계 '타자'를 향한 전통적 지리교육 목표, 지리적 지식, 개념 구성과 관련된 전체주의적인 틀 속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배제되어 온 관점들을 교육과정 안으로 공평하게 다룰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김갑철, 2016). Winter(2006; 2007)는 영국의 국가지리교육과정에 대한 해체적 연구에서 지리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지리적 지식의 부정의함을 지적한다. 즉, 영국 국가교육과정이 전통적인 지리적 지식, 개념-예를 들어 개발, 지도, 지속가능한 개발-의 객관성, 가치중립성, 과학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이들 전체화된 지식에 의해 배제된 다양한 관점들의 실존을 억압, 배제, 치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보다 정의로운 학교지리 즉, '타자'와의 평등한 관계를 형성할 지리교육과정 위하여 기존 지리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전통적 지리 지식 개념과 더불어 배제된 관점(목소리)들-예를 들어 '개발' 개념과 관련하여 생태운동, 여성운동에 근거한 Escobar의 후기 개발주의(post-developmentalism)(Winter, 2006, 227-228)-을 향한 통로를 개방할 것을 주장한다.

정의 지향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지리교육과정에 대한 해체적 사고는 교사 및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 내/간 혹은 타자들 내/간 사이에 존재하는 특정 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된 세계 '타자'에 대한 이해와 지식에 도전할 정치적, 윤리적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영국 정부가 시행중인 Global Learning Programme(GLP)은 정의 지향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하여 미래 지리교육과정 구성에 있어 참고할만하다. 영국의 국제개발부(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2013년부터 '정의로운' 세계 시민성 개념을 개발 교육의 새로운 의제로 설정하고 GLP라는 새로운 학교 교육과정 프로젝트를 시행 중에 있다. GLP의 목적은 영국의 교육과정 내에서 세계 '타자'와 관련된 지리적 이슈-예를 들어 개발, 기아,

상호의존, 지속가능성, 세계화 등-학습을 통해 세계의 당면한 문제를 균형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통해 현재보다 정의로운 세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리)교사와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GLP, 2015).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세계 타자에 대한 개발 이슈, 지리 지식과 관련하여 기존의 국가교육과정에 착근되어 있는 비윤리적, 비정치적 관점과 태도-예를 들어 서구 중심의 전체주의적 사고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자선'(charity)적 태도-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근대적 개발개념과 관련하여 배제되어 온 세계 '타자'의 실제 목소리, 다양한 관점들-예를 들어 글로벌 '남국' 내에 존재하는 젠더화, 자생적 개발개념, 이를 위한 맥락적 실천 등(김갑철, 2016)-을 공평하게 인식하고자 한다. 비록 영국적인 맥락이지만 GLP를 통한 지리교육과정의 해체는 기존의 전통적인 지리지식과 더불어 지금까지 배제되어 온 세계 '타자들'을 대등하게 인정함으로써 윤리적, 정치적으로 보다 정의로운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해 고민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 네트워크

이제봉(2001), 신현석 외(2013)는 한국의 교육과정이 오랫동안 제한된 네트워크-예를 들어 정치적, 정책 전문가, 교과 전문가 등-에 의해 하향식으로 개발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이 말은 앞서 제안한 해체적 사고만으로는 세계 '타자'에 대한 획일적, 전체주의적 틀을 벗어나 보다 정의로운 지리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록 해체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지리교육과정이 세계 '타자'에 대한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과거보다 유연적, 개방적 공간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지리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의사소통이 폐쇄적이라면 또 다른 비정치적, 비윤리적 지리교육과정으로 환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래의 지리교육과정 역시 특정 지리 전문가들의 권력에 의해 제한적이며, 수용 가능한 세계 '타자'만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필자는 풀뿌리 지리교육 주체들-예를 들어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관점들이 세계시민성을

함양할 지리교육과정 개발에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Geographical Association (GA)의 역할과 기능은 참고할 만하다. 필자는 2014년 GLP 연구를 위해 GA의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기간 동안 GA가 현장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조직으로써,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풀뿌리 지리 전문가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 심지어 외국의 전문가들의 이야기까지 수용하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또한 다양한 의사소통의 통로(홈페이지, GA 학술대회, 각 지역 협회, 정부 프로젝트 참여 등)를 통해 영국 내 지리 전문가들 사이에서 세계시민 교육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보다 발전적인 세계 시민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다른 관점을 가진 전문가들(대학교수, 정부 정책자, 비정부 기구 담당자)을 배제하지 않고 그들 사이의 공개 토론 또한 장려하고 있었다(Martin *et al.*, 2015). 나아가 영국 국가 지리교육과정 정책 개발 과정에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현장의 다른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둘째, 지리교사들은 보다 정의로운 지리교육과정 구성의 동반자로 학생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비록 미래의 지리교육과정이 전술한 관점을 반영하여 세계 '타자'에 대한 보다 공평한 공간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현장 지리 교사의 권위적인 태도에 의해 비정치적, 비윤리적 지리교육과정으로 환원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지리교사들이 교실 공간 속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의 사적 지리들을 공평하게 다룬다면, 세계 '타자'를 향한 전체화된 지리적 지식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윤리적, 정치적, 역사적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배제된 목소리를 통해 교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세계 '타자'를 고려함으로써 과거 혹은 현재보다 더욱 정의롭고, 창의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리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GA의 Young People's Geographies 프로젝트⁶⁾는 참고할 만하다.

3) 교육적 가치

Ball(2003)에 따르면, 수행성(performativity)⁷⁾과 같은 기술은 정의와 같은 교육적 가치에 대한 교육자들의 이해, 관심을 마비시키고 있다. 한국은 오랫동안 타자와의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 시스템이 강조되어 왔다(유현옥, 2009; 정용교·백승대, 2011). 그 결과 세계 정의, 세계 시민성과 같은 교육적 가치에 대한 관심보다는 효율성, 탁월성, 우월성을 강조하는 수행성의 기술에 집중해 왔다. 비록 전술한 논의들을 반영하여 세계 '타자'와 그들을 차이를 공평하게 다룰 수 있는 지리교육과정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하는 교육의 왜곡된 구조 하에서는 정의 지향 세계시민교육이 외면 받거나 혹은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40여 년 전 Stenhouse(1975)가 제안한 아이디어인 '숙의적' 사고의 공간이-교육과정이란 지역 맥락에서 교육적 가치들이 심사 숙고되는 활동-미래의 대안적 지리교육과정 구성을 위해 필요조건임을 주장한다. 숙의적 사고는 세계 '타자'를 향한 정의로운 세계시민이라는 교육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 주체들-지리교사, 시민성 전문가, 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여 공평하고 심도 깊게 논의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숙의는 교육과정의 '정치성'을 함께 반영하는 개념이다. 즉, 특정한 이익집단(정치가, 교육 정책가, 지리학자, 교육학자)의 이데올로기에 통치되지 않도록 전술한 민주적 네트워크 하에서 모든 지리교육 관계자들이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교육적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지리교육과정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민주적 네트워크 속에서 끊임없이 재정지화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지리교육과정 개발의 관리자가 아닌 중재자로서 다양한 채널의 네트워크 설립,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샵 등의 개최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지리교육의 주체들이 정의로운 지리교육과정에 대해 숙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6. 결론

본 연구는 세계 정의의 관점에서 세계 시민성 교육을 보다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정 관점을 이론적으로 논의한 후, 미래의 보다 정의로운 지리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함의를 고찰하였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얻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적 관점은 교육과정에 대한 과학적, 논리적 접근법으로 인해 주요 교육과정 담론으로써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지리교육과정과 관련된 일부 이익집단의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되거나 치환된 세계 '타자'를 재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실천적 관점은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과 같은 교육적 목적과 가치에 대해 지역적 맥락에서 숙의함으로써 세계 '타자'에 대한 맥락적, 상호 주관적 이해의 장을 마련할 수 있지만, 지식과 권력의 공모 가능성을 간과함으로써 지리교사들의 주관성이나 지리교육과정 실천들이 이미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될 수 있음을 무시하고 있다. 셋째, 비판적 관점은 교육과정을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간주하면서 세계 '타자'를 향한 비정치적 권력 관계를 드러내고 서구 중심의 왜곡된 지리 지식에 도전할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합리주의에 근거한 근대적 개념의 '해방' 교육에 천착함으로써 지리교육과정의 복잡성과, 맥락성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체주의적 사고에 함몰될 역설도 내포하고 있다. 넷째, 대안적 관점은 불공평한 권력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모든 전체화된 구조에서 벗어나 세계 '타자'와 그들의 차이들을 공평하게 취급할 정치적, 윤리적 공간을 강조한다. 따라서 대안적 지리교육과정은 민주적/숙의적 공간을 통해 세계 '타자'에 관한 전통적 지리 지식을 해체하여 배제된 타자의 목소리를 공평하게 대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보다 '정의로운 지리교육과정'으로의 재개념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닦는 연구로서,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지리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론적 논의 결과처럼 각 교육과정의 관점에 따라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이 예측대로 실천될 수도 있지만, Todd

주

(2001)의 지적처럼 특정한 지리교육과정 메시지가 지리교사 및 학생의 주관성에 따라 있는 그대로 수용될 수도 혹은 일부 수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나아가 지리 교실 수업 안에서 교사와 학생은 협력적 상호 작용을 통해 세계 시민성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타자’들의 도래를 얼마든지 관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리교육과정 구성을 둘러싼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들—예를 들어 지리교사 및 학생의 주관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부모의 주관성과 태도, 지역 사회 프로그램 등—을 고려한 보다 실천적인 연구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의 지리교육과정과 지리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은 지금까지 배제, 소외, 치환되어 온 세계 ‘타자’를 공평하게 인식함으로써 지금보다 더욱 정의로운 세계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과 관련하여 필자는 서구의 이론인 Derrida(1997)의 해체주의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본인의 논의를 절대시하고, 이미 존재하지만 학문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타자’를 배제, 억압하는 역설을 초래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해체는 정의를 지향하며 예측하지 못한 ‘타자’의 도래를 위한 공간을 허용한다. 필자는 세계시민교육 및 이를 위한 지리교육과정 관점의 재개념화와 관련하여 본 연구가 갖고 있는 전체성을 다른 연구자의 진보적인 연구에 의해 지속적으로 해체되기를 기대한다. Bidulph(2014)의 지적처럼,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지리교육과정 개발에 앞서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과 이러한 교육적 목적에 적합한 지리교육과정 관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선행된다면 미래의 학교지리는 세계 정의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교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사사

본 논문을 위해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주신 익명의 세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1) 3절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교육과정은 Tyler식 교육과정 관점,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 층위 체계—정부 주도로 개발된 교육과정 정책에 따라 학교 및 교실 수준의 구체적인 교육과정 실천들이 통제되는 하향식 체계—가 하나의 지배적 담론으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교육과정’이라는 용어가 가진 불안정성에 천착하여, 교육과정 관계자가—예를 들어 교육 정책 전문가, 교과교육 이론가, 학교 교육 실천가 등—처한 상황적 맥락에 따라 교육과정에 대한 상이한 관점들이 병치되고 있으며, ‘세계 시민성’과 같은 교육적 이상에 따라 현재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본문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교육과정 층위(국가수준, 학교수준, 교사수준) 및 상황(교수-학습, 평가 상황 등)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대한 관점에 따라 관련 층위 및 상황을 일부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가 한국의 교육과정 맥락을 엄격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한계점이다.
- 2) 본 논문에서 필자가 사용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재개념화’라는 표현은 학교 및 지리 교사 수준에서 단순히 국가 지리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표현은 세계 정의를 지향하는 시민성이라는 최근의 교육 의제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과정 관점을 찾고, 이러한 관점에 따라 지리교육과정이 보다 ‘정의로운 지리교육과정’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 3)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계 시민성’ 교육은 최근 한국 및 세계 여러 나라 초, 중등 교육과정에서 교육의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논의하는 ‘세계 시민성’ 역시, 지리교육만의 고유 영역이라기보다는 일반교육 전반의 지향점 중의 하나임을 전제로 한다. 학교 지리는 세계 ‘타자’ 및 그들의 장소, 공간을 다루는 교과라는 측면에서 세계시민성 함양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본문에서 논의한 것처럼, 기존의 지리교육과정 및 관점이 특정 교육과정 이데올로기(기술주의적 관점)에 천착함으로써 세계 타자를 향한 정의로운 공간을 제대로 열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 4)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육과정 관점들은 Carr의 분류법(typology)에 따른 것이다. Carr(1996)는 서로 다른 교육 철학적 전제 혹은 실천들을 고려하여 기존의 교육과정 개념을 문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3가지 논쟁적 관점들로 해체하였다. 하지만, Carr도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이러한 분류법이 교육과정 관점들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 학교 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서는 각각의 관점이 서로 보완적,

- 유동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류법은 정의 지향 세계 시민성이라는 교육적 의제를 보다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교육과정 관점을 논의하기 위한 하나의 이론적 도구임을 밝힌다.
- 5) Biesta(1995, 170)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일부 이익 집단의 권력 관계와 연관된 정치적 활동이며,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지식은 '진리의 정제(regime of truth)', 즉 진리의 정치학이다(정치성). 이 말은 개방성과 비결정성이라는 내재적 특징을 갖는 교육과정을 외부에서 주어진 가치중립적인 실체로 간주할 경우, 실존하는 '타자'의 도래를 부정의하게 방해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비정치성). 따라서 Biesta는 교육과정을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의 공간으로 재개념화할 것을 요구한다(재정치화).
- 6) Young People's Geographies(YPG)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영국 Geographical Association에서 수행된 지리교육과정 개발 프로젝트로써, 지리학자, 지리교육자, 지리교사와 학생이 상호 협력하여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생활 지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리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시도하였다. YPG의 핵심은 학생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지리교육과정에서 배제되어 온 학생들의 살아있는 지리 지식들을 고려함으로써 학생들의 지리 학습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기존의 대학 지리와 학교 지리의 경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있다(YPG, 2016).
- 7) Ball(2003, 215)에 의하면, 수행성은 어떤 목표, 성취 기준, 평가와 관련된 기구, 제도를 통해 모든 개인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국가에 의한 규제 기술을 말한다. Ball은 보다 좋은 결과를 생산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개인의 정신에 안착할 경우—혹은 개인의 자존감의 일부라고 느낄 경우—, 이러한 수행성의 기술은 개인의 행동과 정신을 통제하는(통치성)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말한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고등학교교육과정해설,”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 김갑철, 2016, “글로벌 시민성 담론과 해체적 학교 지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2), 17-31.
- 김대훈, 2006, “지리 교사들의 국가교육과정 참여와 앞으로의 과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4(2), 181-190.
- 신현석·이준희·정용주, 2013, “제도화된 국가주의와 교육에서 국가의 역할,” 교육문제연구, 26(3), 53-79.
- 유현옥, 2009, “이명박 정부 교육경쟁력 강화 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교육철학, 45(0), 175-198.
- 이제봉, 2001, “한국의 국가적 특성과 교육,” 사회과학논집, 11(2), 137-148.
- 정용교·백승대, 2011, “경쟁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안: 현장 사회과교육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18(2), 91-106.
- Allan, J., 2013, Foucault and his acolytes, In M. Murphy (Ed.), *Social theory and education research: understanding Foucault, Habermas, Bourdieu and Derrida*(pp.21-34), Routledge, London.
- Andreotti, V., 2006, Soft versus critical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olicy & Practice: A Development Education Review*, 3(1), 41-50.
- Apple, M., 1996, *Cultural politics and education*, Open University Press, Buckingham.
- Ball, S. J., 2003, The teacher's soul and the terrors of performativity, *Journal of Education Policy*, 18(2), 215-228.
- Beane, A., and Apple, W. (Ed.), 1999, *The case for democratic schools*, Open University Press, Buckingham.
- Bhabha, H. K.,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Routledge, London.
- Biddulph, M., 2014, What kind of curriculum do we really want? *Teaching Geography*, 39(1), 6-9.
- Biesta, G., 1995, Postmodernism and the repoliticization of education, *Interchange*, 26(2), 161-183.
- Bourn, D., 2014, *The Theory and Practice of Global Learning*, London: Development Education Research Centre,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 Buckingham, D., 1996, Critical pedagogy and media education: a theory in search of a practic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8(6), 627-650.
- Carr, W., 1995, *For education: towards critical educational inquiry*, Open University Press, Buckingham.
- Carr, W., 1996, *The Foundation Module, Thinking about the Curriculum*, Division of Education, Sheffield, University of Sheffield.

- Carr, W., and Kemmis, S., 1986, *Becoming Critical*, The Falmer Press, London.
- Cornbleth, C., 1990, *Curriculum in Context*, The Falmer Press, London.
- Derrida, J., 1997, The Villa Nova Roundtable: A Conversation with Jacques Derrida, In J. D. Caputo (Ed.), *Deconstruction in a nutshell*(pp.3-28), Fordham University Press, New York.
- Eisner, E., 1984, No Easy Answers: Joseph Schwab's Contributions to Curriculum, *Curriculum Inquiry*, 14(2), 201-210.
- Ellsworth, E., 1989, Why Doesn't This Feel Empowering? Working through the Repressive Myths of Critical Pedagogy, *Harvard Educational Review*, 59(3), 297-324.
- Foucault, M., 1991, Governmentality In G. Burchell, C. Gordon & P. Miller (Eds.),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Harvester Wheatsheaf, Brighton.
- Freire, P., 1972, *Pedagogy of the oppressed*, Penguin, Harmondsworth.
- Giroux, H., 1980, Critical Theory and Rationality in Citizenship Education, *Curriculum Inquiry*, 10(4), 329-366.
- Giroux, H., 1992, *Border crossings: cultural workers and the politics of education*, Routledge, London.
- GLP., 2015, Global Learning Curriculum Framework: overview Retrieved 01 October, 2015, from <http://globaldimension.org.uk/glp>
- Haigh, Y., Murcia, K., and Norris, L., 2013, Citizenship, civic education and politics: the education policy context for young Australian citizens, *Journal of Education Policy*, 29(5), 598-616.
- Hartley, D., 1997, *Re-schooling Society*, London: Routledge.
- Hopkin, J., 2014, Global learning and the Global Learning Programme, *GA magazine*, 26, 24-25.
- Hunkins, F. P., and Hammill, P. A., 1994, Beyond Tyler and Taba: Reconceptualizing the Curriculum Process, *Peabody Journal of Education*, 69(3), 4-18.
- Jazeel, T., 2012a, Postcolonialism: Orientalism and the geographical imagination, *Geography*, 97(1), 4-11.
- Jazeel, T., 2012b, Postcolonial spaces and identities, *Geography*, 97(2), 60-67.
- Kapoor, I., 2004, Hyper-self-reflexive development? Spivak on representing the Third World 'Other', *Third World Quarterly*, 25(4), 627-647.
- Lévinas, E., 1998,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 Duquesne University Press, Pittsburgh.
- Mannion, G., Biesta, G., Priestley, M., and Ross, H., 2011, The global dimension in education and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genealogy and critique, *Globalisation, Societies and Education*, 9(Nos.3-4), 443-456.
- Marshall, H., 2009, Educating the European citizen in the global age: engaging with the post-national and identifying a research agenda,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41(2), 247-267.
- Martin, F., and Griffiths, H., 2012, Power and representation: a postcolonial reading of global partnerships and teacher development through North-South study visits,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8(6), 907-927.
- Martin, F., King, R., and Standish, A., 2015, Debate-What should teachers' priorities be in global learning? Sheffield: Geographical Association, Retrieved from <http://geography.org.uk/cpdevents/annual-conference/manchester2015/#8>
- Massey, D., 2004, Geographies of Responsibility, *Geografiska Annaler*, 86(1), 5-17.
- McLaren, P., 1998, Revolutionary pedagogy in post-revolutionary times: rethinking the political economy of critical education, *Educational Theory*, 48(4), 431-462.
- Morgan, J., 2000, Critical pedagogy: the spaces that make the difference, *Pedagogy, Culture & Society*, 8(3), 273-289.
- Pashby, K., 2015, Conflations, possibilities, and foreclosure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a multicultural context, *Curriculum Inquiry*, 45(4), 345-366.
- Reid, W. A., 1978, *Thinking about the curriculum*,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 Rose, N., 1990, *Governing the soul: the shaping of the private self*, Routledge, London.
- Säfström, C. A., 1999, On the Way to a Postmodern Cur-

- riculum Theory: Moving from the Question of Unity to the Question of Difference, *Studies in Philosophy and Education*, 18(4), 221-233.
- Schmidt, S. J., 2011, Making Space for the Citizen in Geographic Education, *Journal of Geography*, 110(3), 107-119.
- Schwab, J. J., 1969, The Practical: A Language for Curriculum, *The School Review*, 78(1), 1-23.
- Scott, D. (Ed.), 2006, *Six curriculum discourses: contestation and edification*, Routledge, London.
- Spivak, G., 1988, Can the subaltern speak? In C. Nelson, L. Grossberg, C. Illinois University, Unit for & T. Interpretive (Eds.),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Urbana.
- Stachel, L. A., and Hammett, D., 2013, 'For the future of the nation': Citizenship, nation, and education in South Africa, *Political Geography*, 32(0), 32-41.
- Stenhouse, L., 1975, *An Introduction to Curriculum Research and Development*, Heinemann Educational Books, London.
- Todd, S., 2001, 'Bringing more than I contain': Ethics, curriculum and the pedagogical demand for altered egos,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3(4), 431-450.
- Tyler, R., 1949,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Yates, L., 2009, From curriculum to pedagogy and back again: knowledge, the person and the changing world, *Pedagogy, Culture & Society*, 17(1), 17-28.
- Young People's Geographies, 2016, About YPG, Retrieved 01 January, 2016, from <http://www.young-peoples-geographies.co.uk/>
- Winter, C., 1996, Challenging the Dominant Paradigm in the Geography National Curriculum: reconstructing place knowledge, *Curriculum Studies*, 4(3), 367-384.
- Winter, C., 2006, Doing justice to geography in the secondary school: deconstruction, invention and the national curriculum,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54(2), 212-229.
- Winter, C., 2007, Just maps: the geography curriculum in English schools, *Oxford Review of Education*, 33(3), 349-366.
- Winter, C., 2014, Curriculum Knowledge, Justice, Relations: The Schools White Paper (2010) in England,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48(2), 276-292.
- 교신: 김갑철, 41414, 동변중학교, 대구 북구 동변로 14길 (이메일: gapcheol.kim@gmail.com)
- Correspondence: Dr Gapcheol Kim, Dongbyun Middle School, 14-gil Dongbyun-ro Buk-gu Daegu, South Korea, 41414 (e-mail: gapcheol.kim@gmail.com)

최초투고일 2016. 2. 23
수정일 2016. 4. 26
최종접수일 2016. 5. 30



사람과 공간, LX로 잇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믿고 공감할 수 있는 열린 사고로
국토정보의 발전된 내일과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새로운 국민행복이 시작됩니다

행복주택으로부터! 주거복지로부터!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집 없는 서민들의 울타리가 되고

소외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국민주거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주택사업

오류·가짜·공릉·고잔·목동·잠실·송파 등 수도권 도심 7곳에 임대주택 1만호와 업무·상업기능과 도심재생을 연계하여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

서민임대주택사업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우리나라 장기임대주택의 84%인 66만호를 시세의 30~60%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주거복지사업

취약계층과 소년소녀가정 등을 위해 긴급주거지원과 전세주택지원하고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로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주거복지를 지원.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 30대 임원(2015.1.1 ~ 2016.12.31)



회 장	양보경(성신여대)		
부 회 장	박병익(서울대)	이정훈(경기개발연구원)	강창숙(충북대)
감 사	이상석(순천대) 오정준(대구대)		
지리연구소장	강영옥(이화여대)		
지리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민부(한국교원대)		
지리학발전위원회위원장	이용우(국토연구원)	김용창(서울대)	
총무이사	박선미(인하대)	정재준(성신여대)	최진무(경희대)
학술이사	황철수(경희대)	김영훈(한국교원대)	이승철(동국대)
국제이사	최영은(건국대)	박선엽(부산대)	이태수(전남대)
홍보이사	박수진(서울대)	조철기(경북대)	이종원(이화여대)
편집이사	박승규(춘천교대)	정희선(상명대)	전종한(경인교대)
이 사	권상철(제주대)	김민호(상명대)	김선기(쑤푸른길)
	김성중(극지연구소)	김성환(신라대)	김종수(도서출판 한울)
	김학훈(청주대)	김회환(전남대)	남호엽(서울교대)
	노영순(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경(성신여대)	박숙희(여성지리학회)
	박윤자(대구동부교육청)	박지훈(공주대)	배선학(강원대)
	백선혜(서울연구원)	서민철(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손명원(대구대)
	손용택(한국학중앙연구원)	송언근(대구교대)	심광택(진주교대)
	오충원(남서울대)	위상복(소선여중)	윤옥경(청주교대)
	이간용(공주교대)	이강원(전북대)	이정환(전주교대)
	이보영(경북대)	이상균(동북아역사재단)	이상일(서울대)
	이용균(전남대)	이재덕(서원대)	이정운(부경대)
	이종호(경상대)	이지선(한국교통연구원)	장동호(공주대)
	전병운(경북대)	전보애(가톨릭관동대)	전영권(대구가톨릭대)
	주성재(경희대)	홍금수(고려대)	홍인옥(도시사회연구소)
고 문	권용우(전 성신여대)	권혁재(전 고려대)	김일기(전 한국교원대)
	류우익(전 서울대)	박삼옥(전 서울대)	박영한(전 서울대)
	박찬석(전 경북대)	서찬기(전 경북대)	손 일(부산대)
	이기석(전 서울대)	이민부(한국교원대)	이정록(전남대)
	이철우(경북대)	이현영(전 건국대)	장보웅(전 전남대)
	최형규(성지문화사)	허우궁(전 서울대)	형기주(전 동국대)
	황재기(전 서울대)		
사 무 장	박선영		

학회비 납부 및 회원 가입 안내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비납부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은행 : 841-25-0006-810 [예금주 : (사)대한지리학회]

본 학회의 회원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한지리학회 사무실(geography77@hanmail.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위원회

위원장	최재현(건국대)		
부위원장	박승규(춘천교대)	정희선(상명대)	전종한(경인교대)
편집위원	김숙진(건국대)	김진관(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희순(고려대)
	이용균(전남대)	전보애(가톨릭관동대)	정현주(서울대)
	조창현(경희대)	최광용(제주대)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홍금수(고려대)	홍일영(남서울대)	
	Heejun Chang (Portland State University)		
	Jeong Chang Seong (University of West Georgia)		

대한지리학회지

제51권 제3호(2016년 6월 30일)

발행인 : 양보경

발행처 :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

©04376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213-12, 1413호

전화 : 02) 875-1463, 팩스 : 02) 876-2853

e-mail: geography77@hanmail.net

http://www.kgeography.or.kr

조판·인쇄 : (주)푸른길

전화 : 02) 6942-9570-2, 523-2907 팩스 : 02) 523-2951

Copyright © 2016,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

본지에 게재된 논문, 기사, 도표 등의 저작권은 본 학회가 갖는다.

* 이 학술지는 2015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